

2023년 5월

인구클러스터

1차 연도 결과보고서

연구책임자 | 이철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 강상경(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홍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권정현(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약

1. 연구의 배경과 개요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이다. 가파른 출생아 수의 감소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는 노동의 양적·질적 감소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예컨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대학들이 재정적인 위기와 군입대 연령 남성인구의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도 심각해질 것이다.

인구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파급효과가 우려되면서 인구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책 수립 논의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변화의 요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문분야별로 파편화된 기존의 인구 관련 연구 경향을 지양하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의 인구문제는 매우 여러 분야에 걸친 복잡하고 다양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연구팀이 모든 이슈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클러스터는 자원과 연구역량을 둘로 나누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새롭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코어연구(Core Research)”와 학내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인구 관련 이슈들에 관한 최신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는 “네트워킹사업”을 추진하였다. 코어연구는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서비스 수급불균형 문제 연구를 주된 연구주제로 설정하였다. 제1차 연도에는 현재의 정책적인 수요와 인구클러스터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인구변화가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초래할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1차 연도의 코어연구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초래할 돌봄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전망하고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문제는 인구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지만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가 제공하는 성별·연령별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여성의 경제활동, 고령층의 인적자본 및 건강수준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의 질적 변화를 고려해야만 정확한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장애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및 확대를 요구한다.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여, 제1차 연도 코어연구는 가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질적 변화를 고려한 장래 돌봄 서비스 수요의 양적, 질적 변화를 정확하게 전망함으로써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1차 연도의 네트워킹 사업은 학회, 언론기관, 교내 및 교외의 인구문제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코어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더 넓은 범위의 인구문제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인 네트워킹 사업으로, 경제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인구변동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석학(미국 브라운 대학의 David Weil 교수) 강연 및 해외 연구자들의 발표를 포함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인구변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포럼을 준비하였으며, 교내외의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2. 코어연구 성과

(1) 미래사회 인구·가구구조·노동공급 변화와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

현행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수급 범위 및 수급률은 아직은 낮은 편이나, 장래 인구구조 및 가구 구조 등의 변화는 돌봄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영유아 돌봄서비스는 제도 확대를 통해 현재 만 0~5세에 해당하는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돌봄 수요 측면에서, 영유아의 인구수는 출산율 및 혼인율 하락 등으로 2030년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영유아 돌봄서비스 이용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수요를 결정하는 영유아 가구의 특성의 변화를 고려하면 보육·교육시설 등의 비공식 돌봄서비스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영유아를 포함하는 가구의 유형 중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 교육시설의 양적·질적 제고에 따라 시설보육에 대한 선호도 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영유아 돌봄유형별 수요는 인구변화만을 고려했을 때와는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대상인 영유아의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돌봄 수요를 분석하고자, 영유아의 장래 가구구조 변화를 맞벌이 여부를 고려하여 추계하였다. 또한, 영유아의 돌봄 유형 결정이 아동의 특성, 부모 및 가구의 특성과 관련 있음을 고려하여 돌봄유형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돌봄 유형별 선택 확률을 계산하여, 향후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이용규모 등의 변화를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추산하여 제시하였다.

영유아 인구수는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248.7만명에서 계속 감소하다 반등하여 2036년에는 218.2만명(2021년의 87.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의 가구 분포는 이 연구의 추계에 따르면,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중이 2021년 78.9%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036년 79.5%~89.8%로, 해당 가구유형의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동 기간 24.2% 수준에서 30.3%~약 45.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로 영유아 수의 감소, 특히 먼저 영아가 줄어들고 이후 유아의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져서 2036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돌봄 서비스 이용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가구구조 변화의 효과를 반영하면,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부모 돌봄 외의 보육·교육시설 및 친인척 등의 돌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공식 돌봄 수요의 감소폭은 인구변화만을 고려했을 때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증가하지만 비맞벌이 가구는 감소하면서 시설보육기관의 수요 증가에 대한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돌봄 서비스 수요의 규모는 각 가구 유형의 비중 변화 외에도, 보육·교육기관 및 친인척 및 돌보미 등 개인 양육제공자의 돌봄의 질적 수준, 돌봄 시간, 돌봄 비용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수요변화 추계를 위해서는 돌봄 수요결정과 돌봄 유형 간의 대체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추가 요인을 고려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2) 미래사회 인구·건강 변화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 초고령자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인구변화로 인해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구 구성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기회 확대 등 사회적 변화로 가족 구성

원에 의한 비공식 돌봄이 공식적 돌봄으로 대체되면서 공식적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한 공식적 노인돌봄서비스에 주로 한정되며 지역사회 내 생활 지속과 본격적인 돌봄 진입 지연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 및 의료와 연계를 통한 통합적 돌봄 체계 마련 등 다면적인 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의 확충과 다양화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미래의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고 고령자의 다면적인 돌봄 필요 정도를 파악해 노인돌봄서비스 유형 다양화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의 수급 기준을 완화하고 다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규모를 추정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노인돌봄의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인돌봄 필요 유형을 제도적 기준, 신체기능, 인지·정신건강 및 의료의 필요도에 따라,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기준 ②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제약 ③ 치매 의심, 인지기능 제한 등 인지기능 저하 ④ 복합 만성질환 보유 ⑤ 요양병원 입원 경험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각 돌봄 유형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돌봄 필요의 복합성이 확인된다. 특히 인지기능 저하와 복합 만성질환은 모든 돌봄 필요 유형의 고령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초기 고령기부터 40% 이상의 고령자가 경험한다. 반면 신체기능 저하와 본격적인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75세 이상 연령대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 돌봄 필요 유형의 분포 차이는 연령별, 대상별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인 건강 증진 및 신체기능 지원과 같은 본격적인 돌봄 필요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건강 전이(health transition)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지기능 저하 및 중증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경험이 이후 신체기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신체기능 저하의 심화는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의 필요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건강지원 및 예방적 관점에서 노인돌봄의 대상 범위를 확대 시에 고령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돌봄 유형별 수요 전망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며 특히 인지·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확대 시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는 제도의 변화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 중 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미이용자가 20% 이상 존재하며, 이들은 인지기능 저

하자와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 미이용은 적합한 서비스의 부재에 기인하며, 이러한 미충족 돌봄 수요는 결국 노인의 기능 악화 가속화, 가족의 돌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고비용의 시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복합적 서비스 필요 대응 방안 마련, 의료-돌봄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 현재 공적 서비스의 미이용 원인에 대한 파악 및 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 및 서비스 다각화, 공적 돌봄 진입 전 단계 노인에 대한 웰에이징(well-aging) 지원을 위한 예방적 노인돌봄 정책의 수립, 노인돌봄 정책과 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지속적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3) 미래사회 인구·가족구조 변화와 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필요성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소득, 의료, 복지, 돌봄 보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금, 의료보장, 장기요양 제도 등을 확충하면서 꾸준히 인구사회변화에 대응해 왔다. 노인인구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 대상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자기의사결정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노인장기요양급여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립적인 일상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서비스 전달 체계는 아직 치매노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체계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사회 변화와 의사결정능력장애 노인인구 추계를 통해 의사결정지원제도 구축 필요성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지원제도 구축 및 발전방안을 위한 후속연구 방향을 탐색하였다. 2020년과 2050년을 중심으로 살펴본 미래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차 전체인구는 감소하지만(2020년 51,836,239명 → 2050년 47,358,532명: 약 8.64%인 4,477,707명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하고(2020년 8,151,867명 → 2050년 19,003,889명: 약 133.1%인 10,852,022명 증가)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은 급증할(2020년 781,582명, 전체 노인인구의 9.6% → 2050년 4,408,337명, 전체 노인인구의 23.2%)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가구 변화 측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증가하고(2020년 1,617,739가구 → 2050년 4,670,693가구, 약 188.7% 증가),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1인 가구는 급증(2020년 184,136가구 → 2050년 1,343,577가구, 약 629.7%)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치매 유병률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65세 이상 치매인구수는 증가하고(2020년 840,192명 → 2050년 3,023,404명, 약 258.9% 증가),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치매인구는 급증(2020년 303,816명 → 2050년 1,667,901명, 약 44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65세 이상 치매 노인 1인 가구는 증가하고(2020년 187,366가구 → 877,499가구, 368.3% 증가),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치매 1인 가구는 급증(2020년 71,279가구 → 2050년 553,839가구, 약 667.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 치매 1인 가구 증가는 의사 결정지원제도의 잠재적 수요를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사 결정지원제도의 정착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3. 네트워킹 사업 성과 요약

(1) “인구변화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비교적인 시각”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인구클러스터는 2022년 8월 26일 경제사회학회와 공동으로 “Population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Comparative Perspectives”를 주제로 한 비대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석학 기조강연과 6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된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 사회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David N. Weil 브라운대 교수가 ‘The Population Dimension in East Asian Development’를 발표하였다. David N. Weil 교수는 동아시아가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성장과 동시에 저출산 및 고령화와 같은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원인과 함의를 분석하였다.

(2) 2022 동아일보 뉴센테니얼 포럼 공동 조직 및 참여

인구클러스터는 2022년 10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구 감소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개최된 2022 동아 뉴센테니얼포럼을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준비하였고,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과 김홍수 클러스터 참여교수가 참여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 포럼은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개회사와 윤한홍 국회의원회 간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4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 감소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조 강연에서는 David N. Weil 브라운대 교수가 ‘동아시아 인구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철희 서울대 인구클러스터장은 ‘인구변화와 노동시장 파급 효과와 대응’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고, 김홍수 인구클러스터 참여교수는 ‘인구변화와 장기요양인력 수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 외에,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 연구실장은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개혁 방향’을 발표하였다.

(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저출산 문제 관련 포럼 개최

인구클러스터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가? -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파른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포럼의 발표 논문들은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발간하는 경제논집 특집 정책논단(2022년 12월 61권 2호)으로 발간되었다.

주제 발표는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주거비용과 저출산”을,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자녀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을,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가치관과 저출산”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진미정 서울대 아동학교 교수,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식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전 국회의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4)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돌봄 서비스 관련 포럼 개최

인구클러스터는 2023년 4월 3일 “인구변화와 돌봄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윤영호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코어연구자들이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연구의 결과를 담은 3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인구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 가구구조, 여성의 노동공급, 건강상태의 변화와 같은 인구의 질적인 변화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과 이지혜 인구클러스터 연구원은 “미래사회 인구·가구구조·노동공급 변화와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를,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사회 인구·건강 변화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를,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사회 인구·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신경인지장애(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환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4. 향후 연구 계획

2차 및 3차 연도에도 1차 연도와 마찬가지로 코어연구와 네트워킹 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코어연구는 8인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인구변화 전망 및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급 문제,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 출생아 수 감소 속도 완화 방안, 여성 및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인적자원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내 및 교외의 전문가 및 타 기관과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 고용연장, 청년정책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정책적 제안을 공유함으로써 심층연구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각 연도별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목차

요약

사업의 배경과 목표 1

- I. 사업의 배경 1
- II. 사업의 목표 2

코어연구 성과 4

- 1. 미래사회 인구·가구구조·노동공급 변화와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 4
 - I. 현실 진단과 평가 4
 - II. 연구 결과 5
 - III. 결론 및 정책 제언 16
- 2. 미래사회 인구·건강변화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19
 - I. 현실 진단과 평가 19
 - II. 연구 결과 21
 - III. 결론 및 정책 제언 32
- 3. 미래사회 인구·가족구조 변화와 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필요성 36
 - I. 현실 진단과 평가 36
 - II. 연구 결과 37
 - III. 결론 및 정책 제언 47

네트워킹 사업 성과 49

향후 연구계획	59
---------	----

첨부	61
----	----

1. 출간된 논문	62
2. 각 행사 프로그램과 발표자료	100
3. 기사	278
4. 사진	322
5. 동영상	339

사업의 배경과 목표

I. 사업의 배경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와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이다. 2000년대 초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가 된 후 줄곧 1.3을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했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부터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며 급속하게 감소하여 2022년에는 0.78까지 떨어졌다. 2002년 이후 2015년까지 대체로 45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는 추이를 보이던 출생아 수 역시 2015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22년에는 24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 중위추계는 신생아 수가 2024년 이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로 반등이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결혼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추가적인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파른 출생아 수의 감소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는 앞으로 노동인력 규모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노동인력규모의 지표로 널리 이용되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70년까지 현재의 46%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약 815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규모는 2024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1,74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인구 가운데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감소한다면 인구변화로 인한 실질적인 노동 투입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의 양적·질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또한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일정한 출생코호트 규모에 맞추어 형성된 제도 및 사회시스템에 심각한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이미 몇 년 전부터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추후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크게 줄면서 여러 대학들이 재정적인 위기에 빠질 위험이 높다. 20세 남성인구 향후 5년간 30% 가까이 줄어들면서 병역 자원 부족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노년부양비는 2033년까지 약 두 배, 2070년까지 약 다섯 배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파급효과가 우려되면서 인구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인구위기 대응은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저출산·고령화 관련 보도는 매일 각종 매체를 통해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한 해 50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책정하여 다양한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수립 논의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변화의 요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진단과 처방이 부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출생아 수의 저하와 인구고령화의 심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막연한 전망과 우려는 넘쳐나지만 언제, 어떤 부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문분야별로 파편화된 기존의 인구 관련 연구 경향을 지양하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II. 사업의 목표

한국의 인구문제는 매우 여러 분야에 걸친 복잡하고 다양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크게 보아도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 및 이로 인한 빠른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완화정책”에 관련된 이슈들과 인구규모 및 구조 변화가 가져올 충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기 위한 “대응정책”에 관련된 이슈들은 그 성격이 상이하다. 현재의 인구클러스터의 규모와 재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어렵다. 이에 따라 본 클러스터는 자원과 연구역량을 둘로 나누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새롭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코어연구(Core Research)”와 학내외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인구 관련 이슈들에 관한 최신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코어연구는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서비스 수급불균형 문제 연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배경에서 설명하였듯이 한국은 출산을 하락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한 인구의 규모나 구조에 맞도록 설계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제도 및 인프라에 있어서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인구변화 대응 혹은 적응에 있어서 매우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1차 연도에는 현재의 정책적인 수요와 인구클러스터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인구변화가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초래할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1차 연도 코어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목표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초래할 돌봄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전망하고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인구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지만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가 제공해주는 성별·연령별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여성의 경제활동, 고령층의 인적자본 및 건강수준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의 질적 변화를 고려해야만 정확한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장애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과 확대를 요구한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을 반영하여, 제1차 연도 코어연구는 가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질적 변화를 고려한 장래 돌봄 서비스 수요의 양적, 질적 변화를 정확하게 전망함으로써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1차 연도의 네트워킹 사업은 학회, 언론기관, 교내 및 교외의 인구문제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코어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더 넓은 범위의 인구문제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내의 하정화(사회복지), 윤영호(의대), 진미정(아동학), 황지수(자유전공학부) 교수와 교외의 이소영(보건사회연구원), 이영욱(한국개발연구원), 이승호(한국노동연구원), 한요셉(한국개발연구원) 박사 등으로 자문진을 구성하여 네트워킹 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았다. 구체적인 네트워킹 사업을 소개하면,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인구변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언론사와 공동으로 인구변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포럼을 마련하며, 교내외의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코어연구 성과

1. 미래사회 인구·가구구조·노동공급 변화와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

이철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이지혜(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I. 현실진단과 평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구구조 및 가족 기능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 변화 가능성은 돌봄, 교육, 고용, 주거 등 생애주기 전반의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설계에 도전이 되고 있다. 현행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수급 범위 및 수급률은 아직은 낮은 편이나, 장래 인구구조 및 가구 구조 등의 변화는 돌봄과 관련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최현수 외, 2015; 박세경, 2020).

영유아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돌봄 대상자인 영유아수는 출산을 하려 및 혼인을 감소 등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 돌봄 유형을 결정하는 영유아 가구의 특성도 함께 변하고 있다. 영유아를 포함하는 가구의 유형 중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가구의 시설 보육기관이나 친인척 및 비혈연 등의 돌봄 수요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영유아 돌봄서비스의 대상인 영유아의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가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돌봄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 가구의 경우에는 주된 돌봄 제공자인 아동의 어머니의 노동공급결정과 아동의 돌봄서비스 유형 결정과 동시에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의 맞벌이여부 등 노동공급 변화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의 아동돌봄서비스의 수요 추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양육지원정책의 중장기 재정 규모를 추계하고, 재정분담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져 왔다.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아동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기초로 하고, 각 서비스별 최근 이용률을 적용하여 중단기 이용자수를 산정하며 필요 재원을 추계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박진아 외, 2015; 이정원 외, 2018; 김동훈 외, 2021).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규모 및 수요 추계에 있어, 선행연구들이 가정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추가로 가구구조 변화 및 아동 어머니의 노동공급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맞벌이 여부를 고려하여 영유아의 장래가구구조 변화를 추계하였다. 그리고 영유아의 돌봄 유형 결정이 아동의 특성, 부모 및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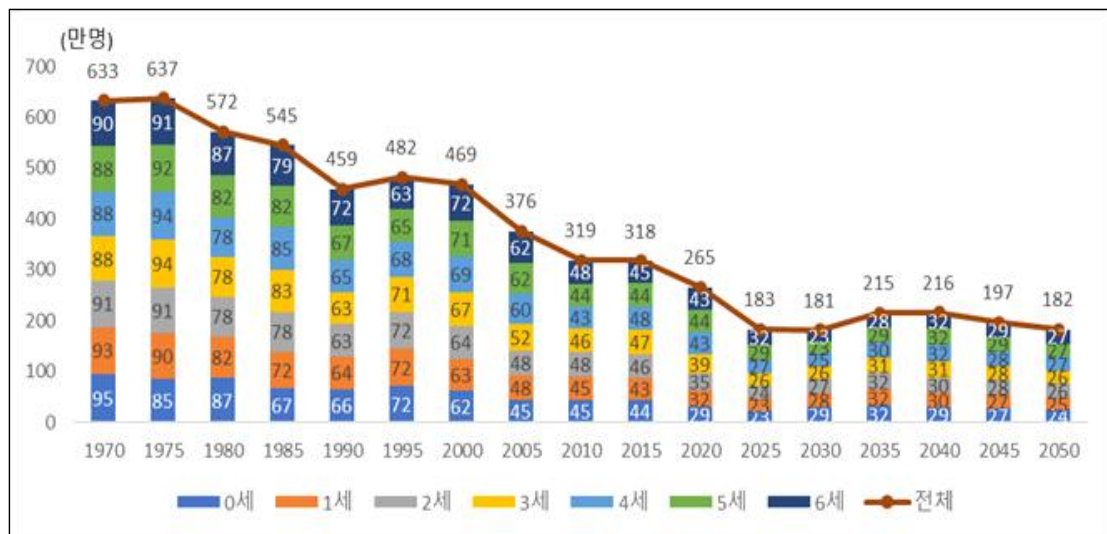
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돌봄유형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유형별 선택확률을 계산하여, 향후 영유아돌봄서비스의 이용규모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II. 연구 결과

1. 영유아수 및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6세 이하 영유아수¹⁾는 2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영유아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2030년부터 약간 반등하다가 다시 감소하여 2050년에는 182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3.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의 각세별 구성을 보면, 2020년 현재 0세가 11%, 2세가 13.1%, 4세가 16.2%, 6세가 16.3% 등으로 영아의 비중이 낮은 구조에서, 2030년부터는 0세가 16.2%, 2세가 15.0%, 4세가 13.5%, 6세가 12.6% 등으로 다시 영아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 6세 이하 영유아수(1970-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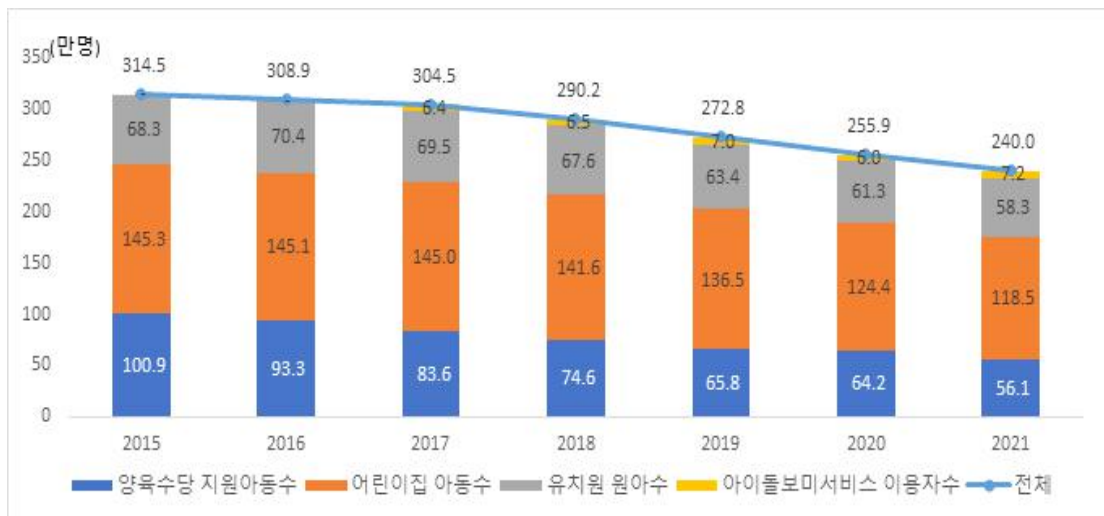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osis.kr.

1) 아동돌봄서비스의 보육대상은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연령을 구분하는데 보육연령 기준 만0세는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출생자까지로 최대 월령기준으로 23개월까지 포함함. 이후 보육연령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021년에 출생한 아동으로 만1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생일자를 의미함.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인구의 연령구분으로는 0-1세가 보육연령 만0세, 2세가 보육연령 만1세로 볼 수 있어, 연구의 분석대상인 영유아를 6세 이하 아동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영유아 대상 아동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아동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 어린이집의 아동은 보육료 지원, 유치원 원아는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현재, 아동돌봄서비스 수혜 아동수는 약 240만명(중복 포함)이며, 각 유형별로는 양육수당 56.1만명(전체의 23.4%), 어린이집(보육료지원) 118.5만명(49.4%), 유아학비 58.3만명(24.3%), 아동돌봄서비스(시간제 포함) 7.2만명(3%) 등이다.

[그림 1-2]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현황(2015-2021년)



주: 서비스별 통계 수집주체 및 기준이 상이하며, 일부 중복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포(bokjiro.go.kr), 교육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

2. 영유아의 가구수추계

영유아의 돌봄수요를 가구구조변화와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가구분포 및 장래가구추계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는 부재하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는 가구주율(Headship rate)을 기초로 작성되고 있어, 가구주의 연령, 성별, 혼인상태 등에 따른 가구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가구원이나 인구를 대상으로 가구 추계 결과를 산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유아의 가구 추계를 위해, 대안적인 방법론으로,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보조적인 추계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동태적인 모형인 가구전이율법(Household transition methods)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영유아가 속한 가구유형은 크게 부부+미혼자녀가구, 한부모가구, 3세대가구, 기타 가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맞벌이 유무를 고려하여 (1) 부부+미혼자녀-맞벌이, (2)

부부+미혼자녀×비맞벌이, (3) 한부모+미혼자녀 (4) 3세대×맞벌이, (5) 3세대×비맞벌이 (6) 기타가구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영유아가 속해있는 현재(t)의 가구 유형(h)이 i인 가구는 다음 기(t+1)에도 i유형으로 유지 혹은 j 유형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가구유형의 변화를 전이확률 P로 나타내면, 가구수(Y)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t+1) = Y(t) \times P_{t \sim t+1}$$

$$\text{where } \Pr(h_{t+1} = j | h_t = i) = P^{ij}, \quad 0 \leq P^{ij} \leq 1$$

$$P = \begin{bmatrix} P^{11} & \dots & P^{16} \\ \dots & \dots & \dots \\ P^{61} & \dots & P^{66} \end{bmatrix}, \quad \sum_{j=1}^6 P^{ij} = 1, \quad i \text{와 } j \text{는 가구유형을 나타냄.}$$

최종 가구유형별 가구수(H)에는 위에서 설명한 가구유형별 유지 혹은 전이된 가구수 외에도, 신규가구수와 소멸가구수도 고려해야 한다. 즉, 가구유형별로 신규가구(N)와 기존 가구 중 유지 및 타 유형에서 전이된 가구의 합에서, 타 유형으로 전이된 가구와 소멸가구(E)수를 제외하여 계산된다.

$$H_i(t) = H_i(t-1)P_{ij} + N_i(t) - E_i(t)$$

영유아가 속해있는 가구유형별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이행렬 구성이 가능한 패널자료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패널데이터(이하 인구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통계청은 201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기준 일반가구 대상 2% 표본(가구 382,218건 및 인구 953,430건)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가구 유형 변화의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6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는데, (1) 2018-2021 전 이행률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 이행률 유지+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 이행률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율 적용+맞벌이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1)번 시나리오가 가장 완만하게 가구유형이 변화되며, (6)번 시나리오가 부부+미혼자녀가구 및 맞벌이 비중의 변화가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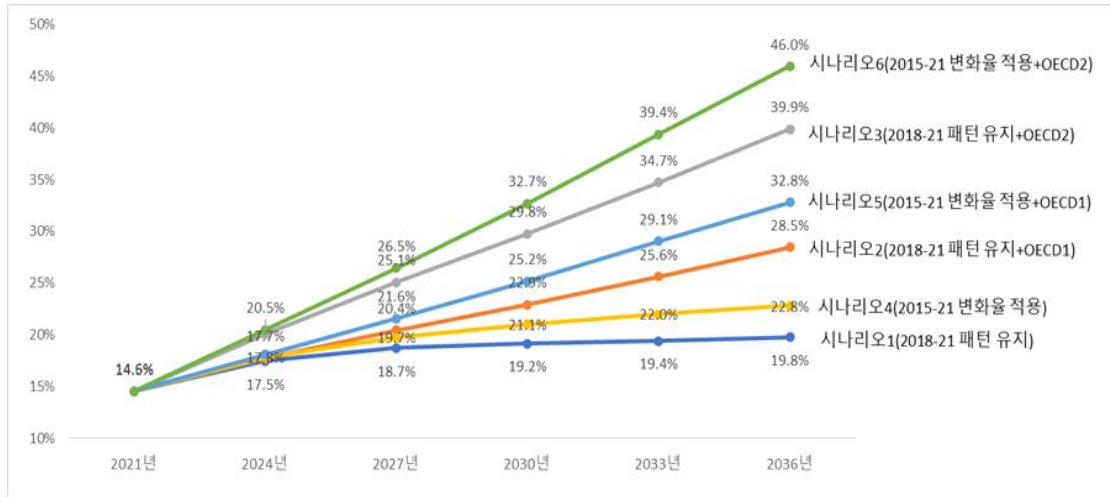
영유아는 영아(만0~2세)와 유아(만3~6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 2021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27년까지 감소하다 반등하여 2036년에는 109.0 수준으로 증가한다. 영아의 가구구조는 2021년 부부+미혼자녀가구의 비중

이 전체의 81.6%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036년 81.4%~93.8%가 되며, 부부+미혼자녀가 구-맞벌이가구의 비중은 2021년 전체의 14.5% 수준에서 2036년 19.8%~47.8%로 변화한다. 유아의 경우에는, 감소세를 보이는 영아가 이후 유아의 인구가 되면서 인구 감소 패턴이 이어져 2036년에는 2021년의 7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부+미혼자녀의 비중은 2021년 전체 가구의 77.9%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036년 78.1%~87.0%로 증가한다. 부부+미혼자녀-맞벌이가구의 비중은 2021년 전체의 22.2% 수준에서 2036년 27.2%~52.8%까지 달라질 수 있다.

<표 1-1> 영유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2021-2036년) - 시나리오1(2018-21 패턴 유지)

구분	인구수 변화	부부+미혼자녀가구			한부모	3세대가구			기타
		소계	맞벌이	비맞벌이		소계	맞벌이	비맞벌이	
<만 0~2세>									
2021년	100.0%	81.7%	14.6%	67.2%	5.7%	5.3%	2.4%	2.9%	7.3%
2024년	82.3%	83.5%	17.5%	66.0%	5.4%	4.6%	2.1%	2.4%	6.6%
2027년	83.4%	82.7%	18.7%	64.0%	5.4%	4.8%	2.3%	2.4%	7.1%
2030년	96.1%	81.5%	19.2%	62.3%	5.2%	5.3%	2.6%	2.7%	8.0%
2033년	105.1%	81.1%	19.4%	61.7%	5.0%	5.4%	2.7%	2.8%	8.4%
2036년	109.0%	81.4%	19.8%	61.6%	5.0%	5.4%	2.6%	2.7%	8.2%
<만 3~6세>									
2021년	100.0%	77.9%	22.2%	55.7%	7.6%	6.1%	2.7%	3.4%	8.4%
2024년	75.9%	78.4%	24.8%	53.6%	7.6%	5.9%	2.8%	3.1%	8.2%
2027년	62.0%	78.4%	26.1%	52.3%	7.6%	5.9%	2.9%	3.0%	8.2%
2030년	60.2%	78.2%	26.8%	51.5%	7.5%	5.9%	2.9%	3.0%	8.3%
2033년	68.9%	78.1%	27.0%	51.0%	7.5%	6.0%	3.0%	3.1%	8.4%
2036년	76.0%	78.1%	27.2%	50.9%	7.5%	6.0%	3.0%	3.1%	8.4%

[그림 1-3] 영유아 포함 부부+미혼자녀X맞벌이가구 비중 변화(2021-2036년) - 시나리오별



<영아(만 0~2세) 포함 가구>



<유아(만 3~6세) 포함 가구>

주: 시나리오(1) 2018-2021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1 변화율 적용+맞벌이 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3. 영유아의 돌봄유형 결정요인 분석 및 돌봄유형별 선택확률 추산

돌봄유형별 이용확률은, 아동의 연령 외에도 가구 및 부모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돌봄유형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가구의 영유아의 돌봄서비스 결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고, 돌봄 유형을 결정하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 소득, 조부모의 유무, 영유아수, 어머니의 취업 여부, 지역 등, 아동 특성으로는 연령, 출생 순위, 출생 분기 등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아동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거리, 비용, 운영시간, 교사 1인당 아동수 등 접근성과 서비스 질적 요인도 돌봄선택에 주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Del Boca et al., 2005; 하석철, 2018 등).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근로 여부에 따라서 아동 돌봄서비스 활용이 달라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노동공급, 근로 결정이나 전일제와 시간제 결정 등이 돌봄 방법의 선택과 동시에(simultaneously) 결정되고(Del Boca and Vuri, 2007; Van Gameren and Ooms, 2009 등) 둘 사이에는 내생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Baker et al., 2008; Blau and Currie, 2006). 국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아동의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미취업에 비해 직접 돌봄보다 시설이나 조부모 등 개인 대리양육의 가능성이 높고(김지경, 2004; 최상설·홍경준, 2012; 이정원 외, 2018), 맞벌이의 경우 시설돌봄 이용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하석철, 2018)

영유아 돌봄유형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가구원, 보육 및 교육 현황, 보육서비스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대상인 만6세 미만의 3,775명의 아동별 조사자료와 가구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어, 아동돌봄과 관련된 연구를 하기에 적합하다. 해당 자료에서 영유아를 (1) 양육수당 (2)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3) 유아학비 수급자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세분화하여 (1) 부모돌봄만 받는 경우 (2) 어린이집+부모돌봄 (3) 어린이집+개인양육(친인척, 비혈연) (4) 유치원+부모돌봄 (5) 유치원+개인양육 (6) 개인양육을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A) 양육수당 수급자 (1,013명, 26.8%)	(B) 보육료 지원 대상자 (1,753명, 46.4%)	(C) 유아학비 대상자 (1,009명, 26.7%)
3,775명 (100%)	(1) 부모 돌봄만 762명	(2) 어린이집(+학원) 1,385명	(4) 유치원(+학원) 651명
	(6) 개인양육서비스 (친인척, 비혈연) 251명	(3) 어린이집 +개인양육 368명	(5) 유치원+개인양육 358명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는 가구(i)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돌봄 방법 k개 중에서 j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모든 선택에 비해 j를 선택할 때 얻는 효용(U), 즉 자녀의 질적 수준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²⁾ 선택가능한 범주가 j=1, 2, ..., J라고 할 때, 개인 i가 선택 가능한 대안 중 잠재효용이 가장 높은 대안 돌봄유형 j를 선택할 때의 효용 Y는 다음과 같다.

$$Y_{ij} = \beta_j X_i + \epsilon_{ij}$$

where $y_i = j$ if $y_{ij} = \max U(y_{i1}, y_{i2}, \dots, y_{iJ})$

종속변수인 영유아 돌봄서비스유형은 부모돌봄 등 6가지를 고려했으며, 설명변수 X_i 는 아동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 출생분기 등의 개인 특성과, 6가지 가구유형,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 가구 및 부모의 특성을 고려했다. ϵ_{ij} 는 가구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나타내며 평균 0, 분산 1, 공분산 0인 다변량 표준정규분포로 가정한다. 모형 추정 후, 돌봄유형별 선택확률(s)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특정 설명변수(예를 들면 아동 연령)의 조건하에서의 선택확률은 다른 설명변수들이 평균값일 때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P_i^s = \frac{\exp(\beta_0^s + \beta_i^s X_i + u_i)}{\sum_{j=1}^s \exp(\beta_0^j + \beta_i^j X_i + u_i)}$$

2) 민인식·최필선(2021), pp.247-248. 참고하여 작성

〈표 1-2〉 영유아의 돌봄유형별 선택확률

연령	가구유형	(1)부모돌봄	(2)어린이집	(3)어린이집+개인양육	(4)유치원	(5)유치원+개인양육	(6)개인양육
0세	가구유형1	0.5257	0.1680	0.0223	-	-	0.2841
	가구유형2	0.9108	0.0454	0.0000	-	-	0.0438
	가구유형3	0.7060	0.0634	0.0000	-	-	0.2306
	가구유형4	0.3181	0.0606	0.1070	-	-	0.5143
	가구유형5	0.8222	0.0156	0.0003	-	-	0.1619
	가구유형6	0.7024	0.0018	0.0012	-	-	0.2947
1세	가구유형1	0.2063	0.4664	0.1435	-	-	0.1838
	가구유형2	0.6508	0.3032	0.0009	-	-	0.0451
	가구유형3	0.5459	0.3212	0.0000	-	-	0.1330
	가구유형4	0.0884	0.1952	0.3908	-	-	0.3256
	가구유형5	0.6149	0.2090	0.0117	-	-	0.1644
	가구유형6	0.3404	0.0124	0.2572	-	-	0.3900
2세	가구유형1	0.0205	0.6415	0.2980	-	-	0.0401
	가구유형2	0.2270	0.7417	0.0107	-	-	0.0206
	가구유형3	0.1097	0.8339	0.0000	-	-	0.0564
	가구유형4	0.0074	0.3062	0.6042	-	-	0.0822
	가구유형5	0.1907	0.6129	0.1006	-	-	0.0958
	가구유형6	0.2608	0.0478	0.4323	-	-	0.2591
3세	가구유형1	0.0167	0.5812	0.1547	0.1433	0.0629	0.0412
	가구유형2	0.1252	0.6108	0.0286	0.1999	0.0186	0.0170
	가구유형3	0.0908	0.6104	0.0524	0.1510	0.0953	0.0000
	가구유형4	0.0145	0.3951	0.3072	0.1230	0.1160	0.0441
	가구유형5	0.1061	0.4923	0.0929	0.2083	0.0622	0.0382
	가구유형6	0.1680	0.2953	0.3536	0.0445	0.1326	0.0060
4세	가구유형1	0.0051	0.4255	0.1710	0.2079	0.1320	0.0585
	가구유형2	0.0533	0.4884	0.0407	0.3295	0.0575	0.0305
	가구유형3	0.0517	0.3997	0.0595	0.2899	0.1992	0.0000
	가구유형4	0.0040	0.2807	0.3048	0.1506	0.2024	0.0575
	가구유형5	0.0380	0.3396	0.1019	0.3252	0.1504	0.0450
	가구유형6	0.1614	0.1918	0.3287	0.0641	0.2385	0.0155
5세	가구유형1	0.0010	0.2361	0.1656	0.2720	0.2436	0.0818
	가구유형2	0.0159	0.3053	0.0452	0.4545	0.1318	0.0473
	가구유형3	0.0240	0.2487	0.0224	0.4202	0.2848	0.0000
	가구유형4	0.0007	0.1398	0.2671	0.2201	0.3107	0.0615
	가구유형5	0.0108	0.2002	0.1140	0.3624	0.2723	0.0402
	가구유형6	0.0323	0.1013	0.3852	0.0891	0.3751	0.0170
6세	가구유형1	0.0002	0.1224	0.1433	0.2918	0.3514	0.0910
	가구유형2	0.0054	0.1797	0.0412	0.5243	0.1867	0.0627
	가구유형3	0.0008	0.1128	0.0596	0.3321	0.4947	0.0000
	가구유형4	0.0001	0.0706	0.1954	0.2275	0.4342	0.0722
	가구유형5	0.0020	0.1052	0.0872	0.4297	0.3304	0.0455
	가구유형6	0.0076	0.0432	0.2881	0.0978	0.5478	0.0154

주: 가구유형1은 부부+미혼자녀-맞벌이, 2는 부부+미혼자녀-비맞벌이, 3은 한부모+미혼자녀, 4는 3세대-맞벌이, 5는 3세대-비맞벌이, 6은 기타가구를 나타냄.

4. 영유아의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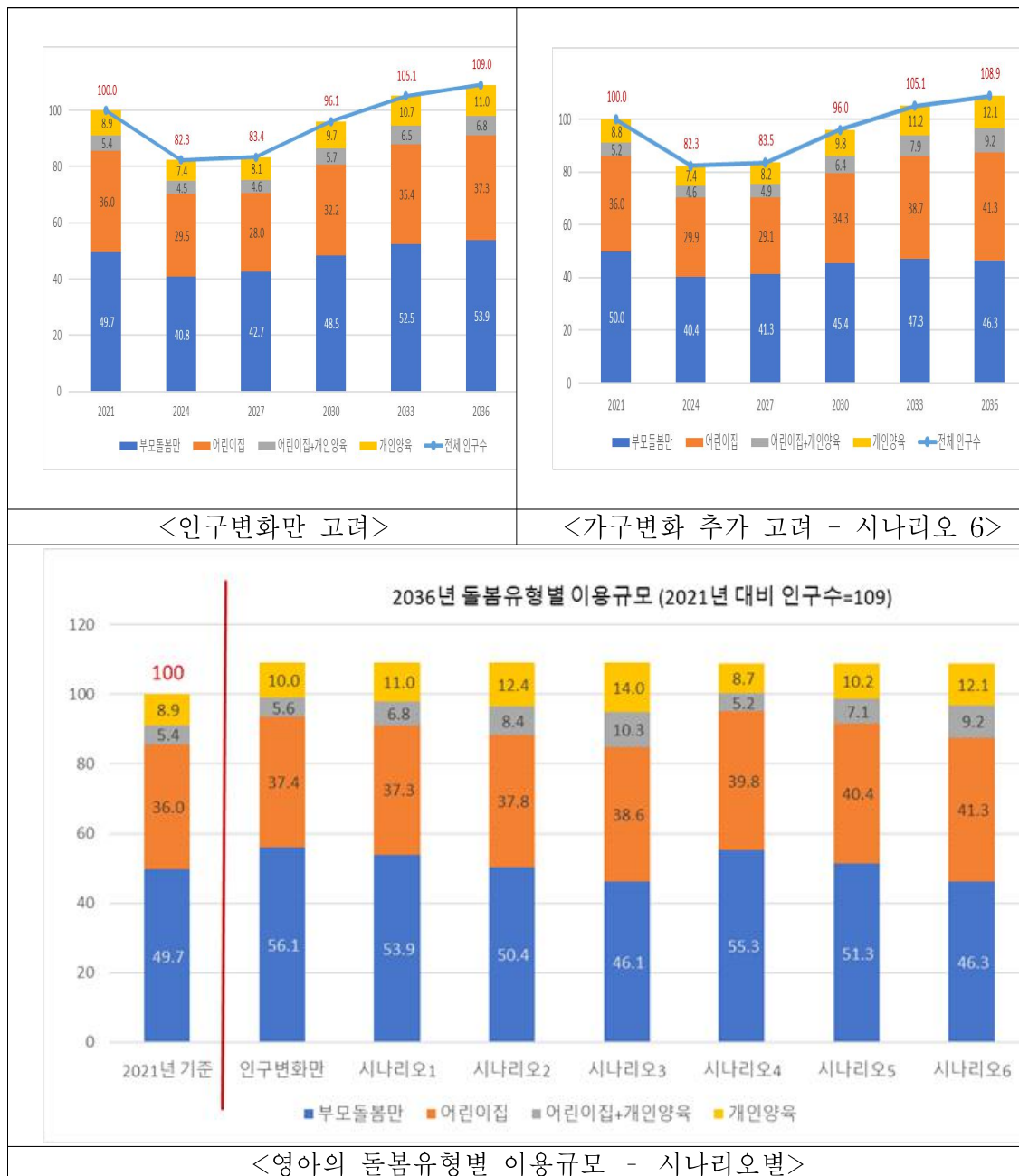
영유아돌봄유형별 이용자 규모를 앞서 추계한 연령별 가구유형별 아동수에 연령별 가구유형별 돌봄유형별 이용확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NCCS_t^j = \sum_a \sum_f P_j^{af} N_t^{af}$$

NCCS는 아동돌봄유형별 이용자수, N는 가구유형 및 연령을 고려한 아동수, P는 연령별 가구유형 돌봄유형별 돌봄이용확률, f는 가구유형(맞벌이여부 포함), a는 아동 연령, j는 영유아 돌봄서비스 유형을 나타냄.

먼저 영아(만0~2세)의 경우에는 통계청 인구변화 가정에 따라 2021년 88.4만명에서 감소하다 반등을 보여 2036년 96.4만명으로 증가한다. (1) 부모돌봄 (2) 어린이집 (3) 어린이집+개인양육 (4) 개인양육(친인척, 비혈연) 돌봄 유형의 이용규모를 2021년 인구수를 100으로 하여 추산하여 보면,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2021년 부모돌봄 49.7에서 2036년 53.9로 8.5% 증가, 어린이집(어린이집과 어린이집+개인양육 규모 합산)은 동기간 41.4에서 44.1로 6.6% 증가, 개인양육은 동기간 14.4에서 17.8로 약 24.3% 증가한다. 여기에 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맞벌이 비중이 OECD 수준까지 증가하는 시나리오 6을 기준으로 인구변화와 가구변화를 함께 고려한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부모돌봄은 49.7에서 2036년 46.3으로 6.8%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41.4에서 50.5로 22.0% 증가, 개인양육은 동기간 14.4에서 21.3으로 약 48.6% 증가한다. 시나리오 분석 비교 결과에서도, 어린이집과 개인양육 서비스의 이용규모가 가구구조 변화 및 맞벌이 비중의 변화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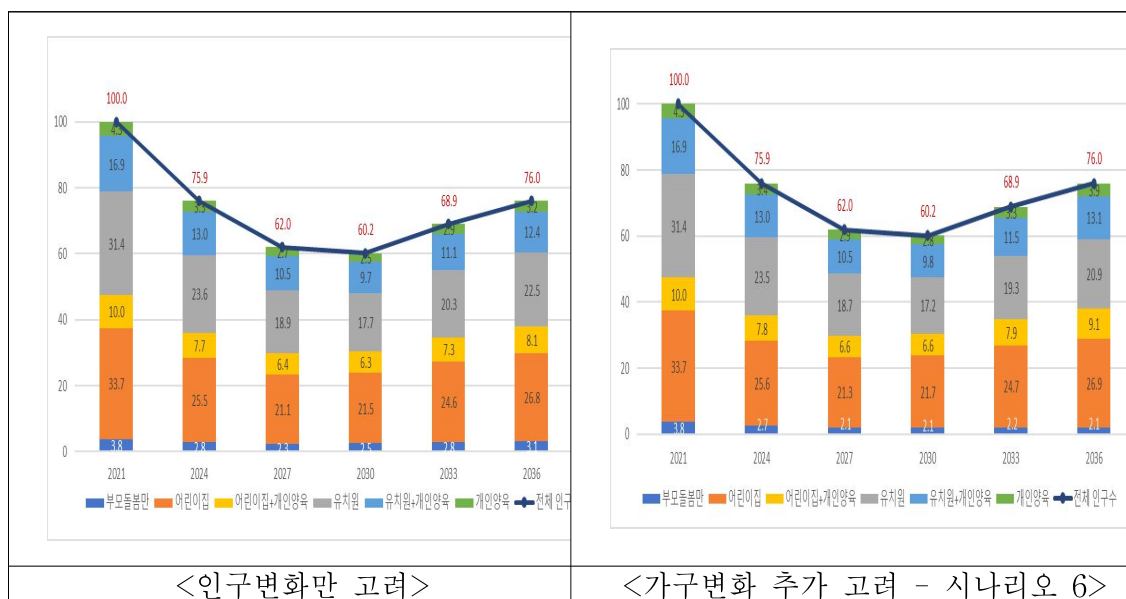
[그림 1-4] 영아의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변화 (2021년 인구수 88.4만명=100으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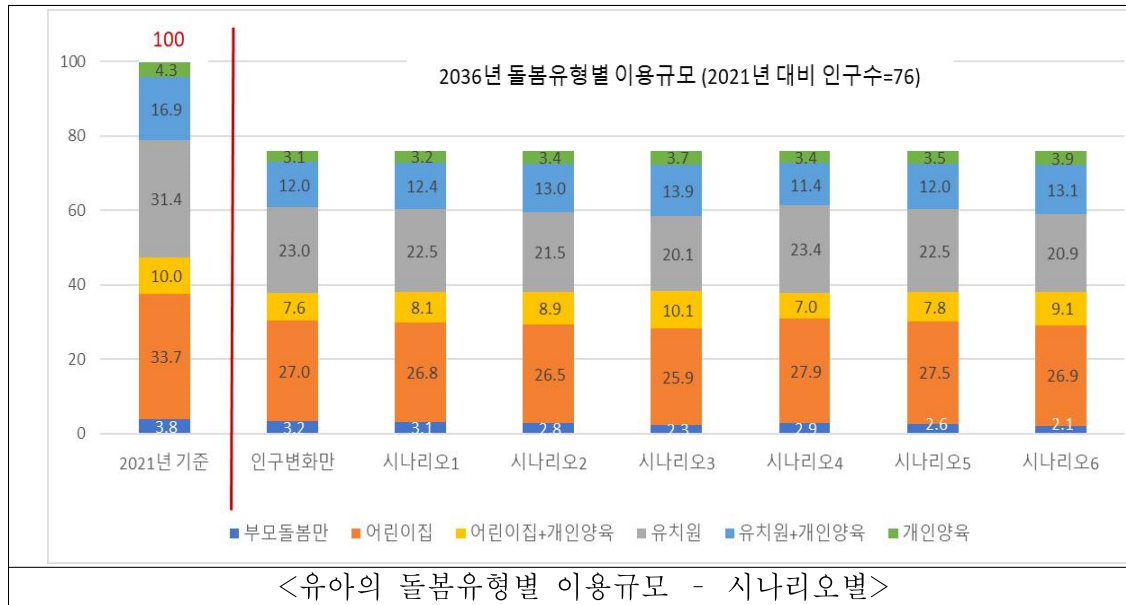


주: 시나리오(1) 2018-2021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율 적용+맞벌이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유아(만3~6세)의 경우에는 통계청 인구변화에 따르면 2021년 160.3만명에서 크게 감소하여 약간 반등하나 2036년 76.0만명으로 2021년의 76% 수준이 되어, 전체 돌봄 유형별 이용규모가 감소하는 구조이다. 유아가 활용할 수 있는 (1) 부모돌봄 (2) 어린이집 (3) 어린이집+개인양육 (4) 유치원 (5) 유치원+개인양육 (6) 개인양육(친인척, 비혈연) 등의 돌봄 유형 이용규모를 2021년 인구수를 100으로 하여 추산하여 보면, 인구변화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2021년 부모돌봄 3.8에서 2036년 3.1로 19.9% 감소, 어린이집(어린이집과 어린이집+개인양육 규모 합산)은 동기간 43.6에서 34.9로 20.0% 감소, 유치원은 동기간 48.3에서 34.8로 27.9% 감소, 개인양육은 동기간 31.1에서 23.6으로 약 23.9% 감소한다. 인구변화와 가구변화를 함께 고려한 결과를 시나리오 6(부부+미혼자녀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맞벌이 비중이 OECD 수준까지 증가)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부모돌봄은 3.8에서 2036년 2.1로 44.5% 감소, 어린이집은 동기간 43.6에서 36.1로 17.4% 감소, 유치원은 동기간 48.3에서 34.0으로 29.7% 감소, 개인양육은 동기간 31.1에서 26.1로 16.2% 감소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전체 보육교육기관 및 개인양육서비스의 규모도 감소하나, 맞벌이 비중 증가 등의 가구구조 변화도 함께 고려하면 부모돌봄 외의 돌봄유형에서의 수요 감소폭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유치원의 이용규모는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경우에 좀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구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대체정도 등을 고려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시나리오별 분석결과에서도 돌봄유형별 이용규모는 인구변화외에도, 가구구조 및 맞벌이 비중에 따라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1-5] 유아의 돌봄유형별 이용규모 변화 (2021년 인구수 160.3만명=100으로 환산)





주: 시나리오(1) 2018-2021 전이행렬 유지+맞벌이 가구 비중의 완만한 증가 (2) 2018-20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3) 2018-21 전이행렬 유지+OECD 맞벌이 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4) 2015-2021 변화율 적용+맞벌이비중 완만한 증가 (5) 2015-21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 수준으로 증가 (6) 2015-21년 변화율 적용+OECD 맞벌이비중(전일제+시간제) 수준으로 증가

III.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구조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영유아 인구수는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248.7만명에서 계속 감소하다 반등하여 2036년에는 218.2만명(2021년의 87.7%) 수준이 된다. 이를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면, 2021년을 해당 연령대 인구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36년 영아는 109로 증가하나, 유아는 76으로 크게 감소한다. 영유아의 가구 분포는 본 연구의 추계에 따르면, 부부+미혼 자녀가구의 비중이 2021년 78.9%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036년 79.5%~89.8%로, 해당 가구유형의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동 기간 24.2% 수준에서 30.3%~45.6%로 달라진다.

2020년 이후로 영유아수의 감소, 특히 먼저 영아가 줄어들고 이후 유아의 감소가 이어져 2036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돌봄서비스 이용 규모는 줄어드는 양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추가로 가구 구조 변화의 효과를 반영하면,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부모돌봄 외의 보육교육시설 및 친인척 등의 돌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공식 돌봄 수요의 감소폭은 인구변화만을 고려했을 때보다는 적어질 가능성이 나타났다. 특히, 영

아의 경우에는 인구수의 증가와 맞벌이 가구 비중의 확대에 의해 어린이집 이용자 규모가 시나리오에 따라 2021~2036년 기간 동안 9.3%~22%, 개인양육서비스(친인척 및 비혈연) 이용자 규모는 48.6%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유아의 경우에는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나지만, 어린이집과 개인양육의 이용자 감소 폭은 가구구조변화도 함께 고려할 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영유아 돌봄정책을 수립할 때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영유아 돌봄수요 감소 가능성만을 고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맞벌이 가구 비중 확대를 포함한 가구 구조 및 특성의 변화가 가져올 수요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 증가는 돌봄의 유형이나 질에 대한 수요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돌봄유형별 이용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가구의 특성에 따라 보육료 지원 및 보육교육시설의 질적 제고 등으로 비공식돌봄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 반대로 비맞벌이 가구는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수요 증가 정도가 가구유형간 변화에 따라 상쇄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 크기는 가구유형별 비중 변화 외에도, 보육교육기관 및 친인척 및 돌보미 등 개인양육 제공자의 돌봄의 질적 수준, 돌봄 유형간 대체정도, 돌봄 시간, 돌봄 비용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돌봄 수요결정과 돌봄 유형 간의 대체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추가 요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동훈 (2021):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 추계 및 분담구조 개선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초등 학령기 아동 돌봄체계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설 외 (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 김지경 (2004):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한국노동연구원.
- 박진아 외 (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예측 및 재정지출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 박세경 (2020):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9-65.
- 윤자영 (2010): 「모의 시간 배분 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3권 제2호, 한국

노동경제학회, pp.67~93.

이영옥(2014): “여성의 시간배분 결정이 보육 및 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14-11, 한국개발연구원.

이정원 외 (2018): 아동돌봄서비스 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조인경·이진화 (2017): 가구의 일반적 특성 및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과 결정요인 분석, Vol. 102, 한국영유아보육학, pp. 97-120.

최상설·홍경준 (2012): 아동돌봄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Vol. 39, No. 3, 사회복지정책, pp. 29-57.

최지은 외 (2022): 잠재계층분석 활용 비부모 돌봄유형과 예측요인 연구.

최현수 외 (2015):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수요 예측 기반마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석철 (2018): 보육 정책의 확대에 따른 아동 돌봄 유형 선택 영향 요인의 변화.

황지은·이창효·이승일 (2011): 마코프 체인모델을 이용한 수도권 장기 가구구조변화 예측 연구, 국토계획, 제46권 제6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Baker, Michael, Jonathan Gruber, and Kevin Milligan (2008): “Universal Child Care, Maternal Labor Supply, and Family Well Be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6, No. 4, 2008, pp.709~745.

Del Boca, Daniela; Flinn, Christopher, et al. (2018): “Childcare Choices and Child Development: a Cross-Country Analysis”, No.556, Carlo Alberto working paper

Del Boca, Daniela (2015): “Child Care Arrangements and Labor Supply”, IDB Working Paper Series, No. IDB-WP-569,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Del Boca, Daniela., Marilena, Locatelli, Vuri, Daniela (2005): “Child-Care Choices by Working Mother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3, 453 - 477.

James Burdumy, Susanne (2005): “The Effect of Maternal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23, No. 1, pp.177~211.

Kimmel, Jean and Rachel Connelly (2007): “Mothers’ Time Choices Caregiving, Leisure, Home Production, and Paid Work,”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42, No. 3, pp.643~681.

Rachel Connelly & Jean Kimmel (2003): “Marital status and full - time/part - time work status in child care choices”, Applied Economics, 35:7.

2. 미래사회 인구·건강변화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김홍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권정현(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I. 현실의 진단과 평가

우리나라의 공식적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구성된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의 보장성을 계속 확대해왔으며 그 결과 서비스 대상자는 지속적 확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7월 제도 도입 당시 14.6 만명 수준이었던 수급자는 2021년 65세 이상 인구의 10.7%, 95 만명에 이른다. 공적 제도를 통해 노인돌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고령 인구는 2021년 기준 155만 명(장기요양 등급인정자 105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0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17% 수준이다.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약 117만명으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약 83%가 실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약 30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인구구조와 가구의 구성, 여성의 노동시장 기회 확대와 개인의 선호 변화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변화는 공식적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 그 가운데서도 본격적인 돌봄 필요가 시작되는 초고령 인구의 절대적 규모 증가는 공적 노인돌봄제도의 보장성 확대와 같은 정책 변화가 없더라도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가구 구성의 변화와 여성의 노동시장 기회 확대로 가족 구성원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공식 돌봄으로 대체되고 있다. 공식적 노인돌봄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비공식적 가족 돌봄은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노인의 가족 돌봄은 주로 배우자의 몫이며 자녀 세대의 가족(부모) 돌봄이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낸다. 특히 과거 주요 비공식 돌봄 제공자였던 자녀의 여성 배우자에게서 비공식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감소하고 있다. 유자녀 인구가 감소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나라 가구 구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미래에는 가족에 의한 비공식적 돌봄의 가능성은 돌봄 제공 여부(extensive margin)와 돌봄 제공 시간(intensive margin) 모두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식적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의 확대는 자명하다. <표 2-1>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독일의 고령화 수준과 노인돌봄 서비스 수급자 비중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21년 기준 15.7%로 일본 28.6%, 독일 22.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해 돌봄의 필요가 본격화되는 7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은 절반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비중은 11%인데 일본과 독일 수준으로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일본 17.5%, 독일 19.6%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 국가별 비교

	한국	일본	독일
65세 이상 인구 비중(%)	15.7	28.6	22.1
75세 이상 인구 비중(%)	6.9	14.9	11.2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비중(%)			
재가서비스	7.4	14.8	15.6
시설서비스	2.6	2.7	4.0

주: 65세,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1년 기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비중(%)은 2020년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2021), OECD Health Statistics(2020), 후생노동성, “2020년 개호급부비 실태조사 통계(令和2年度 介護給付費等実態統計の概況)”

일본, 독일과 수급자 비중의 차이 외 뚜렷한 차이는 재가 급여 서비스 이용 정도에서 나타난다. 75세 이상 인구 규모가 2배 이상인 일본과 우리나라의 시설 서비스 이용 비중은 각각 2.6%와 2.7%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도 시설서비스 이용 비중이 4%로 우리나라보다 높으나, 재가 급여 서비스 이용은 2배 이상에 이른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제한적인 다양성으로 일부 설명된다.

많은 OECD 국가들은 공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연령제한이 없거나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포괄적 기준에는 본격적인 장기요양 진입 제한을 위한 예방 서비스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 예방 서비스 역할을 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및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소득 기준이 서비스 대상 기준으로 규정되어 저소득층이 아닌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에 대해서는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체 기능 중심의 요양 필요도 평가에 기반해 등급별로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수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인력을 활용한 일상생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 시행을 통해 노인이 현재 사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

속할 수 있도록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노인돌봄 서비스의 제한적인 다양성으로 인해 돌봄에 대해 다양한 욕구와 필요가 있는 고령자를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와 요양 및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노인의 경우 의료 필요가 있을 때 장기요양 서비스가 아닌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져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은 서비스 이용 욕구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포함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제도 마련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노인돌봄의 정책 방향이 지역사회 내 생활 지속과 본격적인 돌봄 진입 지연임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전 단계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필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본격적인 돌봄 진입 이전 건강 증진 및 예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양적 보완과 함께 고령자의 돌봄 필요 기준을 다면적으로 파악하고 돌봄 필요 기준에 따른 고령자 특성에 따라 적합한 돌봄 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II. 연구 결과

노후의 삶의 질은 단순히 질병 예방 및 수명 연장이 아닌 건강수명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제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필요 결정 기준은 독립적으로 활동,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신체기능 상태가 주가 된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인정 기준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기반으로 한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등급 인정 기준이 결정되며, 2018년 인지기능 등급이 공적돌봄서비스 수급 결정요인으로 포함되었다.

최근에는 신체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돌봄 필요를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 기능 상태 측정과 더불어 기능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영향 요인들에 대해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체기능의 제한이 있는 노인 인구의 규모와 함께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건강 수준에 대한 파악을 통해 잠재적인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추정하고, 대상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인 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및 다양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미래의 인구 변화에 따른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전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 필요 유형을 <표 2-2>와 같이 분류한다. 유형1은 현재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자 및 서비스 신청자이다. 유형1은 가장 직접적인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자 집단으로, 서비스 신청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점에서 등급 인정이 완화될 때 직접적인 서비스 수요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유형1에 함께 포함한다. 유형2는 전통적인 노인돌봄 필요 여부 판단 기준인 신체기능저하자로 분류한다.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한 가지 이상 제약이 있는 고령자를 포함한다. 유형3은 치매 의심, 인지기능 제한 및 중증 우울증 등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 저하자 집단이다. 유형4는 복합만성질환 보유자이다. 이들은 영양과 돌봄 필요의 위험이 높고, 질병으로 인해 돌봄 필요가 발생할 때 그 강도와 복잡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유형5는 요양병원 입원 경험자로, 요양병원 입원은 입원 경험(입원 결정)은 노인 본인과 가족이 “인지”한 만성기 의료 및 영양의 복합적 필요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현재 공적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수요자 외 돌봄 필요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잠재적 노인돌봄 필요 인구 규모를 전망하고자 한다.

<표 2-2>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분류

유형1	◦현재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 및 신청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및 등급 인정 신청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 신청자
유형2	◦신체기능 저하자 -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제한
유형3	◦정신 및 인지기능 저하자 - 치매 의심, 인지기능 제한, 중증 우울증
유형4	◦동반 질병(cormobidity)으로 인한 의료 관리 필요자 - 복합 만성질환 보유자
유형5	◦만성기 의료·영양 서비스 이용군 -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을 반영한 요양병원 입원 경험자

실제 자료에서 유형별 고령 인구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5차 연도부터 7차연도의 자료를 이용한다. 이 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에 해당된다. 이 기간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돌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 신청 여부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한 기간이므로, 분석을 이 시기로 한정한다. 조사 자료의 한계로 요양시설 입소자 등 고도의 돌봄이 필요한 조사 대상자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 인구의 비중은 7% 내외이나, 행정자료에서는 11%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

<표 2-3>은 각 돌봄 필요 유형별 비중을 나타낸다. 각각의 돌봄 필요 유형은 다른 유형의 특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노인돌봄 필요의 복합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동반하고 있는 주요 특성은 '인지기능 저하'와 '복합 만성질환 보유'이다.

요양병원 입원(유형5) 유형은 36%가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의 수요자이며 85% 이상이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을 동반하며 복합 만성질환은 73.3%, 인지기능 저하는 93.2%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 필요 요구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자 유형(유형1)의 경우에도 복합 만성질환 보유자가 67.5%, 인지기능 저하자가 82.8%를 차지하며, 요양병원 입원 경험자도 11.4%로 돌봄 필요와 함께 의료적 필요도 또한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체기능저하를 경험하는 유형2의 경우 공적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 또는 신청한 비율은 20% 수준이나 80% 이상이 인지기능 저하를 겪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 경험자도 9% 수준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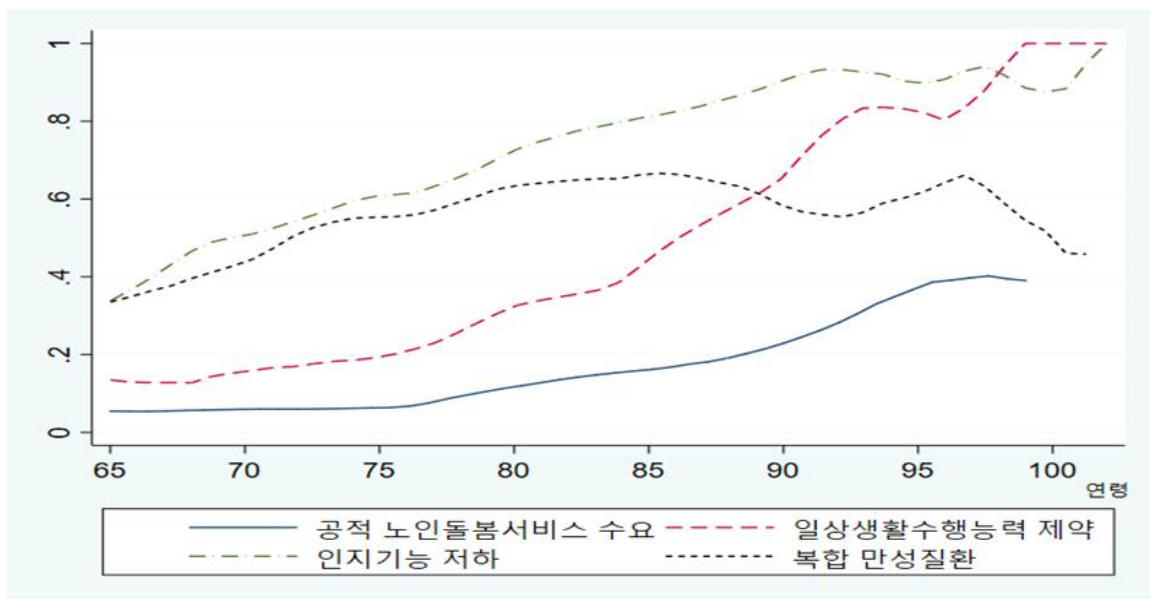
<표 2-3> 유형별 노인돌봄 필요의 복합성

	65세 이상	세부 유형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1	0.079	-	0.2	0.11	0.102	0.362
유형2	0.24	0.608	-	0.323	0.311	0.857
유형3	0.596	0.828	0.803	-	0.666	0.932
유형4	0.521	0.675	0.676	0.582	-	0.733
유형5	0.025	0.114	0.089	0.039	0.035	-

[그림 2-1]은 노인돌봄 유형별 필요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다. 초기 고령자 시기부터 인지기능 저하 및 복합 만성질환 경험 비율은 해당 연령대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일상생활수행능력 제약과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75세 이상 연령대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령별 돌봄 필요 유형 분포의 차이는 연령별, 대상별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과 효과적인 건강증진

및 돌봄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예컨대, 비교적 젊은 연령대부터 다수가 보유한 인지기능 저하 및 복합 만성질환 보유가 본격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신체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면 초기 고령자 시기부터 건강증진과 인지 기능 저하 예방 차원의 돌봄 서비스 공급을 통해 본격적인 돌봄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2-1] 연령별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분포



실제 고령자의 특성이 신체 기능 제한 및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전기의 건강 상태가 이후 상태에 미치는 건강 전이(health transit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지원 및 예방적 관점에서 노인돌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지기능저하 및 중증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경험은 이후 신체기능 저하 및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수요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낸다. 만성질환은 질환 유형에 따라 신체기능 저하 및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와 관련성에 차이를 나타낸다. 만성질환 중 뇌질환을 보유자는 이후 신체기능제한 및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이용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뇌졸중 노인환자의 경우 장애 비율이 높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외에도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에서 신체기능 제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치매 의심 및 인지능력 제한, 중증의 우울증 경험이 이후 신체기능 저하 및 노인돌봄서비스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 본격적인

돌봄 전이 이전 고령자의 정신건강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독거 여부는 등급 인정 이 필요한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이용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으나 신청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 비공식적 돌봄 획득 제한이 공식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2-4> 건강 전이(Health Transition) 결과

변수	(1) ADL 제한 3개 이상	(2) IADL 제한 3개 이상	(3) 공적노인돌봄 서비스 이용	(4) 공적노인돌봄 서비스 신청
연령	0.0501*** (0.00325)	0.0477*** (0.00224)	0.0386*** (0.00593)	0.00771** (0.00340)
가족형태 독거여부	-0.358*** (0.0722)	-0.306*** (0.0523)	0.108 (0.104)	0.156** (0.0734)
전기의 만성질환 상태				
당뇨	0.127** (0.0576)	0.0781* (0.0427)	0.205** (0.0942)	0.0988 (0.0656)
고혈압	0.0200 (0.0539)	0.0307 (0.0382)	0.0406 (0.0934)	0.0437 (0.0588)
심장질환	0.128* (0.0705)	0.124** (0.0532)	0.111 (0.114)	0.0917 (0.0828)
간질환	0.142 (0.129)	0.207** (0.0909)	-0.243 (0.248)	-0.307* (0.183)
폐질환	-0.0595 (0.124)	0.0327 (0.0904)	0.267 (0.181)	0.0650 (0.147)
암	-0.0491 (0.104)	-0.0108 (0.0731)	0.314** (0.144)	0.0300 (0.111)
뇌질환	0.651*** (0.0703)	0.586*** (0.0577)	0.317*** (0.118)	0.111 (0.0957)
치매의심	0.469*** (0.0668)	0.794*** (0.0529)	-0.221* (0.122)	-0.0886 (0.0934)
인지능력제약	-0.0506 (0.0668)	0.181*** (0.0458)	0.129 (0.104)	0.0343 (0.0731)
우울증	0.0861*** (0.0103)	0.0651*** (0.00796)	0.0401** (0.0180)	0.0517*** (0.0122)
ADL 제한1개			0.148 (0.206)	0.0413 (0.185)
ADL 제한2개			0.120 (0.273)	-0.0101 (0.255)
ADL제한3개이상			0.450*** (0.153)	0.304** (0.130)
IADL 제한1개			-0.362 (0.406)	-0.0108 (0.203)

IADL 제한2개			-0.121 (0.388)	0.271 (0.182)
IADL 제한 3개이상			0.684*** (0.129)	0.613*** (0.0927)
Observations	14,156	14,156	14,156	14,15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미래의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규모를 전망하기 위해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로 노인돌봄 필요 규모를 추계한다. 유형별로 나누어 노인돌봄 필요 규모를 전망하는 것은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고령자의 건강 상태 기준을 제도적으로 완화해 나갈 때 각각의 수요를 전망해 향후 노인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예방 기능을 강화할 때 예상되는 수요 규모를 가늠하기 위함이다.

분석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와 고령화연구패널 7차년도(2018년) 자료,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한다. 수요 추정은 기존의 장기요양 비용 추계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셀 기반 방식(cell-based approach)을 적용한다. 이 방법은 현재 고령자의 돌봄 서비스 수요, 신체 및 정신건강 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해당 유형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미래 인구 전망에 적용해, 미래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셀 기반 추정의 기본 산식은 아래의 식을 적용한다.

$$N_t^j = \sum_a \sum_s \overline{u_i^{as}} P_t^{as} \quad j = \text{서비스 종류}$$

t 연도의 j 유형의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인구 규모 N_t^j 는 연령별(a), 성별(s), 서비스 수요 정도(유형별 비율)에 각 연도 t 의 연령, 성별 추계 인구 수(P_t^{as})를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1.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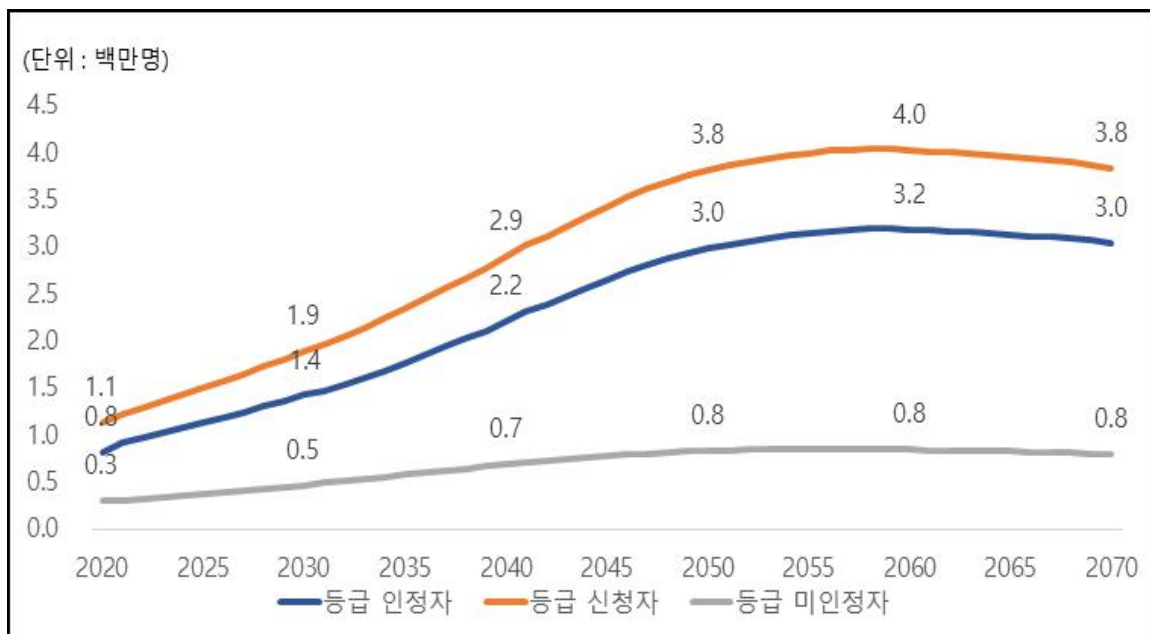
분석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를 이용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한정하여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를 전망한다³⁾.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별, 연령별 등급 인정 신청자, 등급 인정자 비율을 이용해 현재의 돌봄서비스 수요 수준이 미래에도 지속될 때 향후 인구 변화에 따른 수요자 규모를 산출한다. 등급 인정 신청자는 등급 인정을

3) 조사자료인 고령화연구패널과 실제 행정자료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 규모의 차이가 있으므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은 행정자료의 정보를 이용해 전망함.

받지 못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노인 또는 그 가족이 주관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잠재적 수요자로 판단해 서비스 신청자 규모를 함께 추산한다. 잠재적 수요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실질 서비스 수요자(이용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그림 2-2]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전망치를 보여준다. 현재의 성별, 연령별 서비스 수요 수준이 지속되더라도 고령 인구 규모가 증가해 등급 인정자와 등급 인정 신청자를 포함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요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에 등급 인정자 규모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 2040년에는 등급 인정자 규모는 2050년 298만 명으로 2021년 인정자 규모의 세 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등급 신청자 중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한 고령자는 27.2% 수준이다. 잠재적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자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신청자를 포함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급여 인정률 제고는 잠재적 수요자를 실질적 수요자로 전환해 수요 확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향후의 노인돌봄 수요 전망 시에는 정책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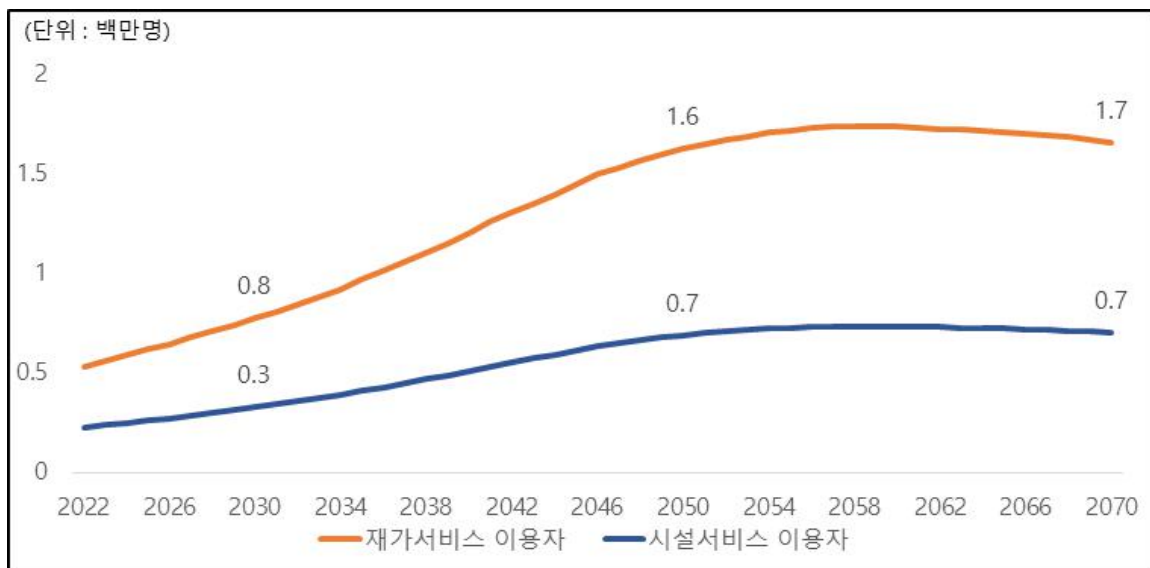
[그림 2-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전망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크게 시설 급여 서비스와 재가 급여 서비스로 나뉘며, 인정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

면서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의 확충이 노인돌봄에서 중점 과제가 되었다. 재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4년 장기요양 등급 개편 이후 등급 인정자 중 재가 서비스 대상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제도 변화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등급 인정자 대비 재가 요양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비중은 70% 내외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그림 2-3]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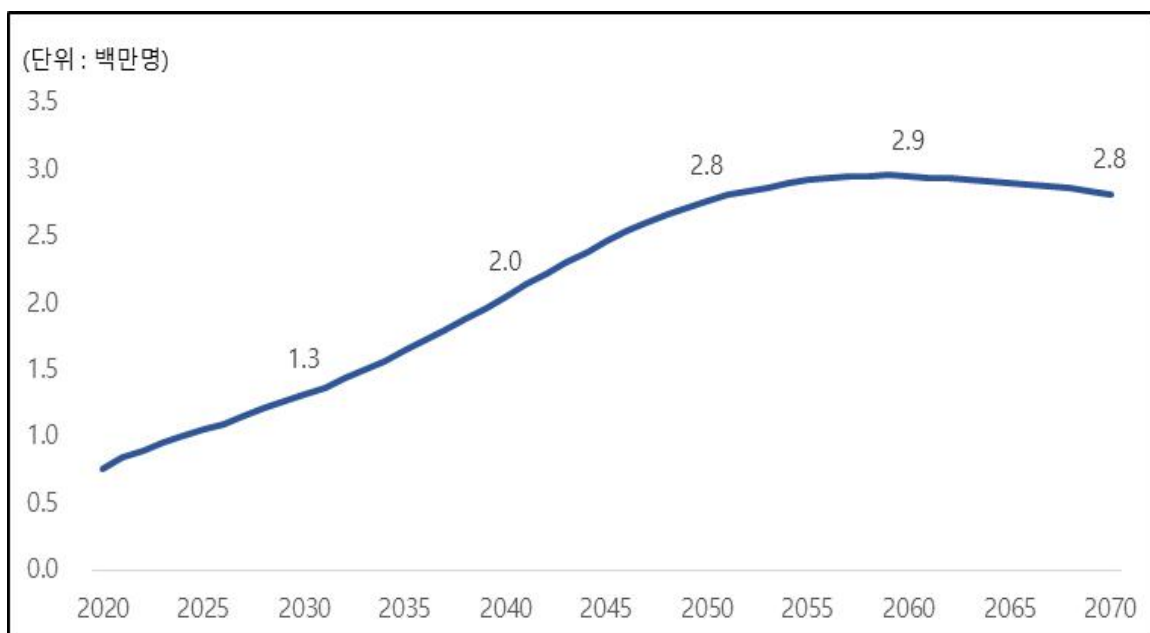
2019년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았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급 인정자는 전체 등급 인정자 중 22.5%이며, 미이용자비율은 인정 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서비스 미이용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병원 입원(30.1%), 가족 외 사람의 도움을 꺼림(23.4%), 가족 돌봄으로 충분(12.2%), 요양병원 선호(10.0%) 순으로 나타난다. 등급 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은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등급별 미이용이유에 대한 정보 파악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각 등급별 서비스 미이용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등급별 서비스 내용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지지원등급이나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5등급에서 높은 서비스 미이용률은 해당 등급 인정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으로 신체 기능이 양호한 집단인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주야간보호급여와 단기보호급여에 국한된다. 주야간보호급여의 경우 다양한 등급의 개인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중증도에 구분이 없으며, 신체기능이 양호한 인지지원등급에 대해 적합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높은 의료 필요도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1등급에서 나타나는 높은 서비스 미이용률은 의료와 요양 및 돌봄의 통

합 등 노인돌봄 서비스 내용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적합한 서비스 제공 시 이용 의사가 있는 개인의 규모가 미이용자 중 66.5%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다양한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표 2-5>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서비스 미이용자 비율

등급	비율(%)
전체	22.5%
1등급	39.66%
2등급	24.06%
3등급	19.75%
4등급	17.79%
5등급	30.18%
인지지원등급	80.99%

[그림 2-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전망



자료: 강은나 외(2020),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자료 이용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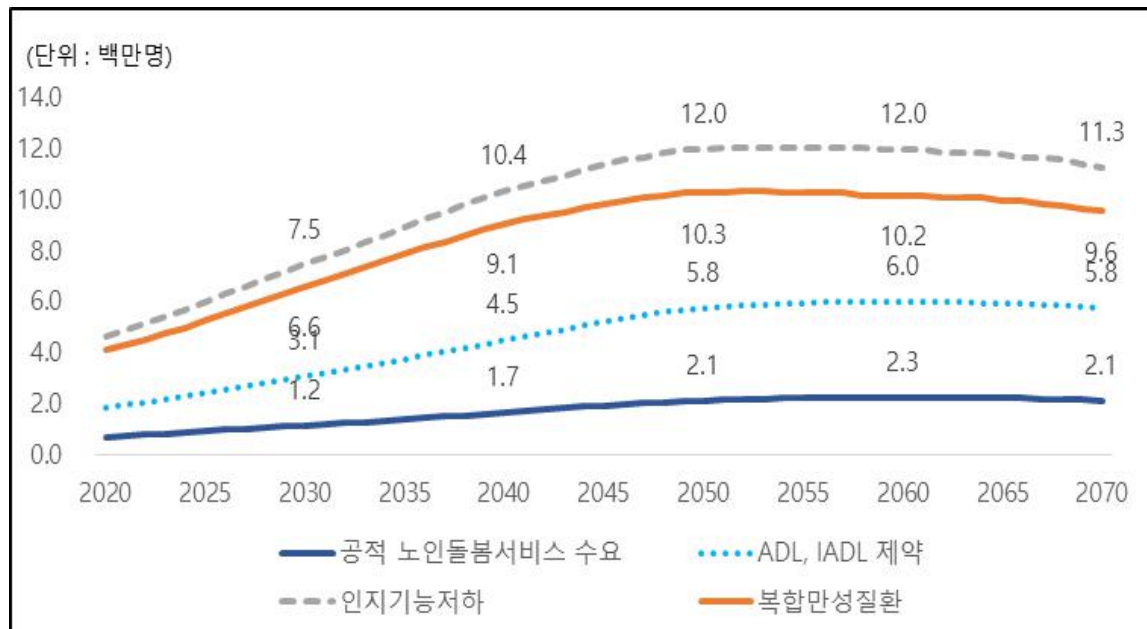
실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미이용자 중 적합한 서비스 제공 시 이용 의사가 있는 개인의 규모를 적용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실수요자 규모를 전망하였다([그림 2-4]).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이용자(77.5%)와 미이용자 중 이용 의사가 있는 66.5%를 적용해 전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2021년 84만명에서 2050년 276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수요 전망

[그림 2-5]는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로 인구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를 전망한 결과를 나타낸다. 지원 필요 정도가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 유형은 정신건강 문제 유형이다. 정신건강 문제 유형은 치매 의심, 인지기능 저하 및 중증 우울증을 포함하는 분류로 노인돌봄과 관련해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때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5]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돌봄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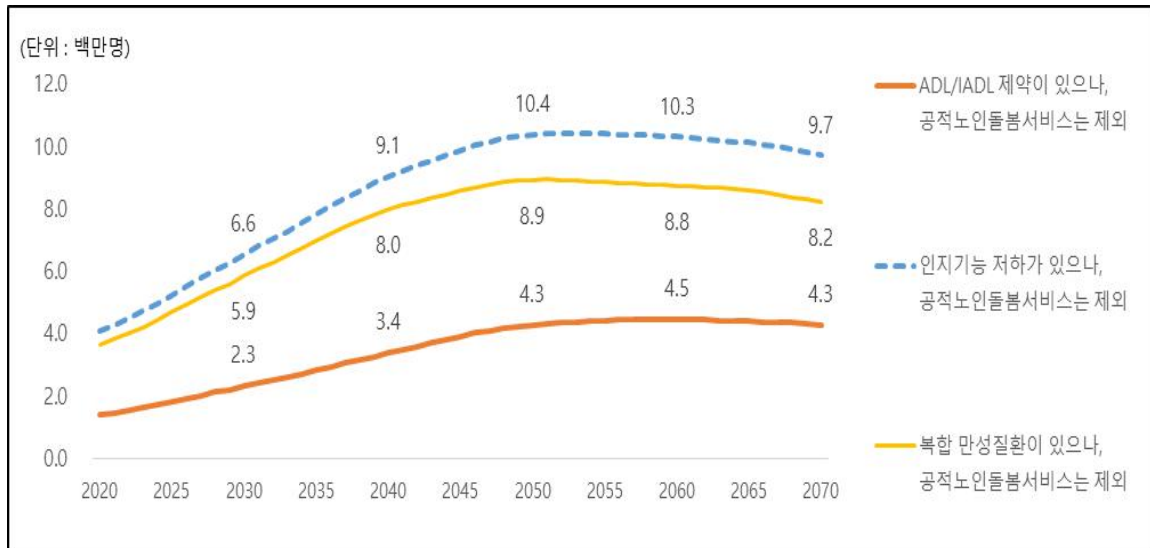
주: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고령화연구패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규모를 이용해 전망한 결과이다. 조사자료의 한계 상 행정자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서 확인되는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및 서비스 이용자 규모와 차이가 존재함.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2021년 장래인구추계

현재의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의 보장성 수준이 지속될 때, 일정 수준의 돌봄 필요가 있으나 공적인 돌봄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있는 인구 규모는 [그림 2-6]과 같다. 인지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고령자 중 8% 정도만이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 또는 신청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지기능 저하 경험 고령자에 대해 본격적인 돌봄 이전 단계의 건강 증진 등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일상생활수행능력 제약 집단에서도 20% 정도만이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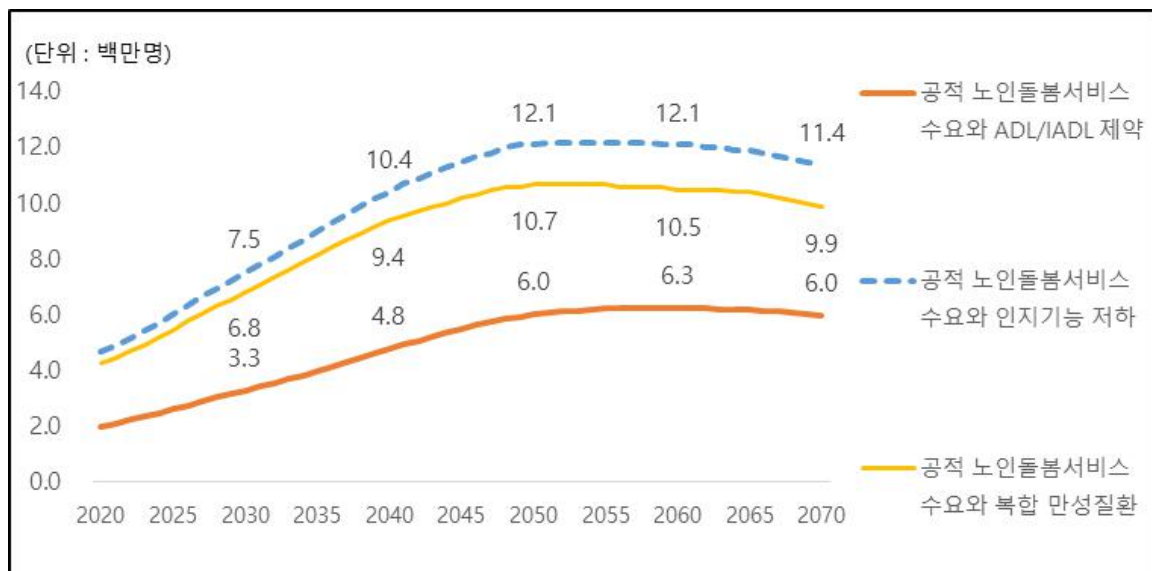
준의 돌봄 필요가 있는 고령자들이 서비스 접근의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6] 돌봄 필요 유형별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제약 인구 규모 전망



[그림 2-7]은 노인돌봄 필요 유형 각각이 복합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해 현재의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지원 수준에서 각 유형으로 노인돌봄 지원의 대상을 확대할 때 노인돌봄 수요를 전망한 결과이다.

[그림 2-7] 돌봄 필요 유형별 대상 확대 시 돌봄 수요 전망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공적 노인 돌봄 서비스 확충과 다양화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래의 인구 변화에 따른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전망을 수행하였다. 현재의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경제 수준, 가족 돌봄 가능성 등과 무관하게 기능(function) 상태 기반 독립적 생활 가능 정도에 따라 돌봄의 필요도(needs)를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현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 공적노인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으나 제도 확대 시 우선순위가 높은 신체기능 저하군, 인지/정신기능 저하군, 그리고 최근의 의료-돌봄 통합 논의를 반영한 복합만성질환군 등을 장래 돌봄 필요 세부 유형으로 정의·분석하였다. 대표성 있는 노인 표본 자료인 고령화 패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행정자료를 이용해 세부 돌봄 유형 별 및 유형 간 노인 돌봄 필요의 분포와 복잡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돌봄 세부 유형을 고려한 수요 전망을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의 몇 가지 미래 노인돌봄 정책과 서비스 개발 관련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의 복합적 서비스 필요에 대한 대응과 이를 반영한 의료-돌봄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각각의 돌봄 필요 유형군은 다른 군의 특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고, 모든 유형의 노인이 ‘인지기능 저하’와 ‘복합 만성질환’ 특성을 초기 고령자 시기부터 약 40% 이상이 공통적으로 동반하고 있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 및 중증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와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유형별 수요 규모 전망에서도 인지·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확대 시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돌봄 대상 범위를 확대할 때 이러한 대상자의 복합적 서비스 필요를 고려한 대상 범위 선정과 서비스 공급 및 실행 관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인지기능 저하자의 장기요양 진입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들을 위한 서비스 확대와 보강 검토가 필요하다. 인지(치매) 문제는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문제이고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가 필요하며 복잡성이 점차 커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기존 노인돌봄 대상 범위의 확대를 넘어 예방적 관점에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신체기능 저하나 만성질환관리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나 정신건강 문제는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미충족 의료-돌봄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이는 노인과 가족, 서비스 제공 기관·인력과 제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공식 돌봄 인력의 역량 강화와 가족 대상 교육 및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높은 장기요양 대상자의 미이용자 원인을 파악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공급 확충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전망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 등급 인정 수준이 지속되는 가정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인정자 규모가 2050년 298만명으로 2022년 인정자 규모의 세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 시 등급 인정자 규모는 더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재 장기요양 최중증 1등급자의 약 40%, 경증 인지지원등급자 81%가 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돌봄을 미이용하고 있다(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적합한 서비스 제공 시 이용 의사가 있는 개인의 규모에 대한 시나리오 적용 시 실수요자 규모는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의 높은 미이용율은 향후 노인돌봄 서비스 개편에 있어 공급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와 서비스의 다각화가 함께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적 장기요양보험 하에 이용 자격을 충족하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증 대상자의 경우는 현 장기요양제도 내의 의료서비스 미흡, 경증 대상자의 경우는 현 인지 예방 서비스가 노인과 가족의 기대와 불일치 하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충족 돌봄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실수요의 감소와 필요 재정의 축소로 보일 수 있으나, 결국 노인의 기능 악화 가속화, 가족의 돌봄 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높은 입원(소) 시설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공적돌봄서비스 기준에 해당되며 향후 빠르게 증가할 복합 서비스 수요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돌봄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 및 고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의 분절화는 꾸준히 제기되어온 정책 이슈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으로 노인 의료돌봄통합 지원 시범사업(2023-2025), 장기요양 재택의료시범사업(2023) 등이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확대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현 만성기 의료 및 요양돌봄 기관들의 분화와 전문화 전략. 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서울대산학협력단, 2019, 2020 2021, 2022).

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돌봄 인력 및 물리적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자원 마련과 실행,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익숙한 의료(medical)-돌봄(care)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하고, 노인과 가족(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개편하는 일, 나아가 새로운 의료-돌봄 서비스와 제공 기관의 돌봄 시장 진입에 따른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 등 간단치 않은 일련의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과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며 임박한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돌봄체계 구축과 운영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검토·분석한 공적돌봄 진입 전 단계의 잠재적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UN이 Decade of Healthy Ageing: Plan of Action 2021-2030(2020)에서 강조하는 바에 따라, 건강·공중보건(health) 서비스와 노인친화적환경(age-friendly environment) 조성을 통한 건강수명과 최대한의 자립을 지원하는 돌봄 정책을 제안한다. 즉 향후 노인돌봄 서비스는 현재의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최중증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국가 주도적 노인돌봄에서 정책의 목표와 범위 등에 있어 변화가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검토 및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다.

초기 신체·인지 기능저하나 복합만성질환자의 경우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노인돌봄 제공이 시급히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노인친화적 도시와 지역사회(age-friendly city and community)를 조성하여 깨끗한 물, 공기,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 사고·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기회를 지원하는 것, 노년기 소득, 일자리, 주거 보장이 강화하는 것,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유연한 돌봄 휴직과 해당 기간 적정한 지속적 소득 지원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노년기 건강-돌봄 필요를 고려한 주거 시설(e.g. 시니어타운/노인주택) 확충, 부족한 돌봄인력을 지원하고,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인과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론테크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 노년기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방안 마련 등의 사회적 환경과 사회정책 마련을 통해 초고령 사회 대응 웰에이징(well-aging)을 지원하는 예방적 노인돌봄 정책의 수립을 제안한다.

다섯째, 위에서 제안한 노인돌봄 정책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는 연구 개발과 지속적인 평가·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다각도의 정책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코호트 구축 등 장기 추적 조사를 통해 중고령자의 건강기능, 경제사회적 상태와 변화 추이, 관찰 이에 따른 돌봄 수요, 공급, 이용, 결과 등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가능한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돌봄 필요로 진입을 지연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초고령 사회 진입에 앞서 중장기적인 정책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 작업이 필요하다. 노인돌봄 정책의 복잡성과 다면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을 위한 소통과 의사결정 구조의 지속적 선진화 또한 필요하다. 나아가 해외의 노인돌봄 정책과 동향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도출, 협력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UN (2020). UN decade of healthy ageing: plan of action 2021-2023. Geneva: UN.

WHO (2015). World report on aging and health. Geneva: WHO.

WHO (2022). Framework for countries to achieve an integrated continuum of long-term care. Geneva: WHO.

서울대 산학협력단. (2019).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

서울대 산학협력단. (2020). 의료공급체계개선 이행전략 개발연구.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산학협력단. (2021).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2021-2023)-1차년도 보고서.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대 산학협력단. (2022).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2021-2023)-2차년도 보고서.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3. 미래사회 인구·가족구조 변화와 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필요성

강상경(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현실진단과 평가

인구 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에 따라 노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보장, 돌봄 보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복지제도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기초연금, 공적부조 시행,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 실시, 서비스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예,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리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국민의 돌봄부담을 급증시키고, 가족 중심의 사적돌봄의 한계로 이어져 노인돌봄에 국가 개입을 초래한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2000년대 들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상 신상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⁴⁾. 즉,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⁵⁾.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치매나 뇌혈관질환자는 신경인지장애로 인해 자기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노인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⁶⁾.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이용자가 신경인지장애로 인해 자기의사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의료, 복지, 재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해도 당사자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자기의사대로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치매 노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사회 변화와 의사결정능력장애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1항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원칙). 1항.

노인 인구 추계를 통해 의사결정지원제도 구축 필요성을 진단하고 의사결정지원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인구변화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미래 1인 가구변화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 미래 치매유병률 및 치매인구 변화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넷째, 치매 노인 1인 가구 추계를 통해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잠재적 욕구 수요를 추계한다. 다섯째, 도출된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II.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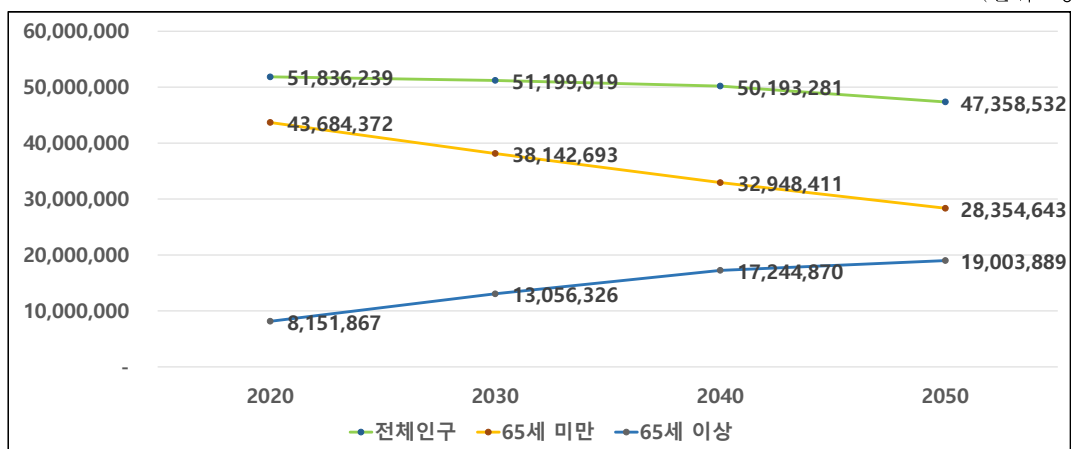
1. 인구변화

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빠른 고령화 속도는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연결된다. 통계청(2023) 인구추계 현황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다. 전체 인구는 2020년 51,836,239명에서 2050년에는 47,358,532명으로 약 8.64%인 4,477,707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체 인구변화를 65세 기준으로 고령인구와 비고령인구로 나누어서 고찰하면 흥미로운 변화양상이 관찰된다. 65세 미만 비고령인구는 2020년 43,684,372명에서 2050년 28,354,643명으로 약 35.1%인 15,329,729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1,867명에서 2050년 19,003,889명으로 약 133.1%인 10,852,02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 우리나라 인구변화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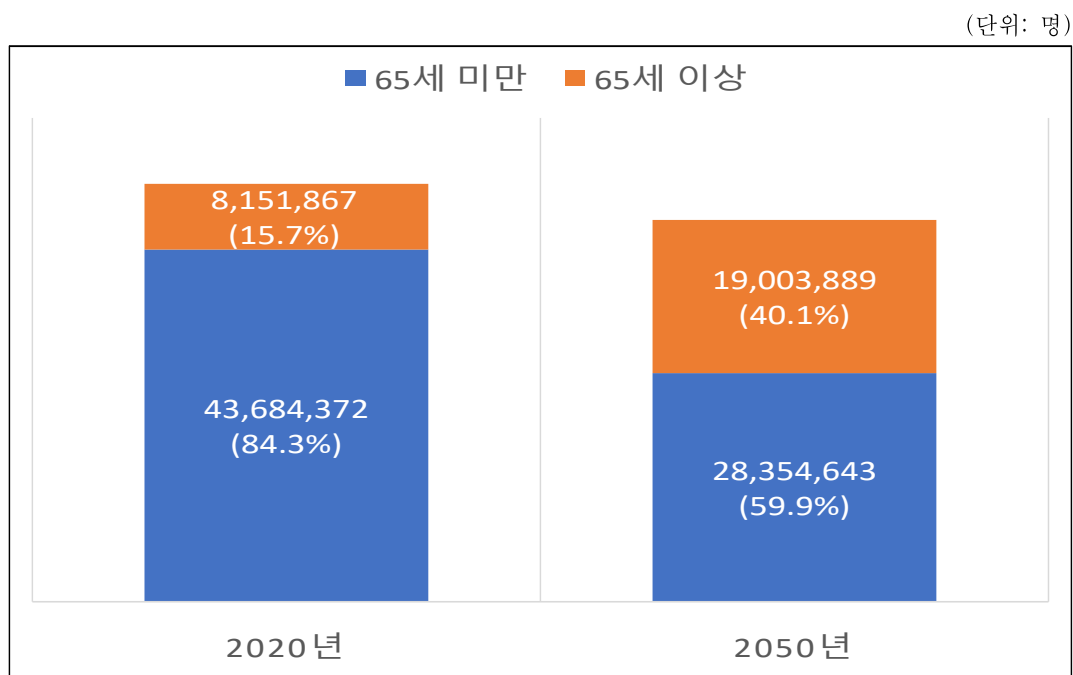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그림 3-2]는 2020년과 2050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65세 미만 인구수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2020년에는 전체인구 51,836,239명 중 65세 미만 인구수가 43,684,372명으로 전체인구 중 비고령인구가 약 84.3%를 차지하였지만, 2050년에는 전체 예상인구 47,358,352명 중 65세 미만 인구수가 28,354,643명으로 전체 인구 중 비고령 인구 비율이 59.9%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2020년에는 전체인구 51,836,239명 중 65세 이상 인구수가 8,151,867명으로 전체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약 15.7%에 불과하였지만, 2050년에는 전체인구 47,358,352명 중 19,003,889명으로 예상되어 전체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40.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구성비의 변화 추이를 요약하면, **65세 미만 인구 비율은 84.3%에서 59.9%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5.7%에서 40.1%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2] 2020년과 2050년 고령인구수 및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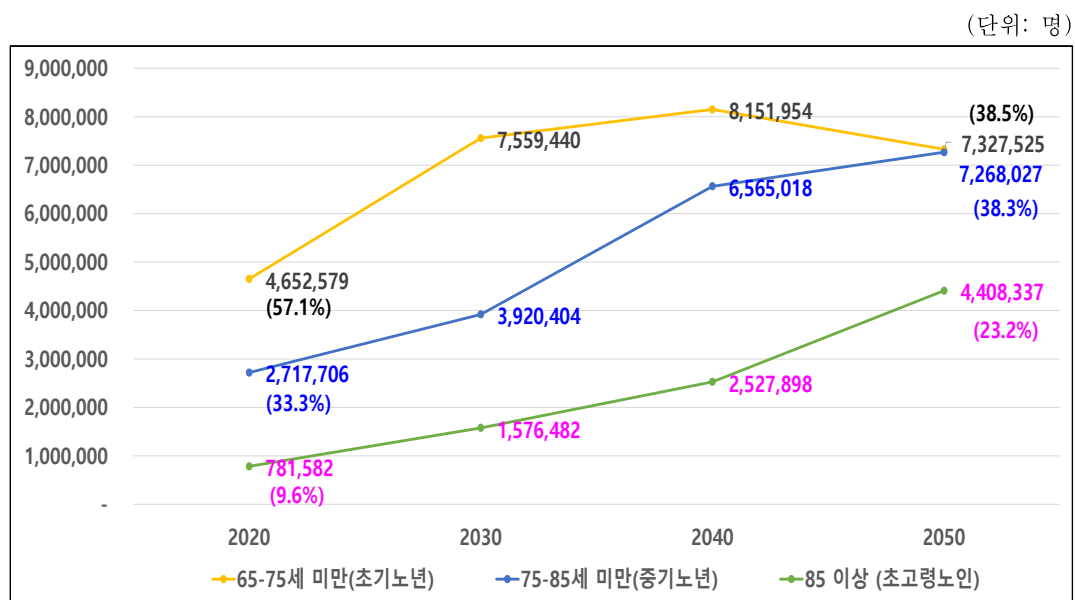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나.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급증

[그림 3-3]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고령인구 변화를 초기, 중기, 후기 초고령 노인의 세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10년 단위로 추계한 것이다. 초기 노인의 경우 2020년에는 4,652,579명이었는데, 2030년에는 7,559,440명으로 급증하고, 2040년까지는 8,151,954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가 2050년에는 7,327,52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 노인의 경우 2020년에 2,717,706명에서 2030년에는 3,920,404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2040년에는 6,565,018명으로 급증하였다가 2050년에는 7,268,027명으로 증가속도가 느려지지만 30년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5세 이상 초고령노인 인구는 2020년에 781,582명, 2030년에 1,576,482명, 2040년에 2,527,898명으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50년에 4,408,337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노인인구 중 초기노년 인구비율은 2020년 57.1%에서 2050년에는 38.5%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노년의 경우 2020년 전체 노인인구의 33.3%에서 2050년 38.3%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초고령노인의 경우 2020년 전체 노인인구의 9.6%에 불과했지만 2050년에는 23.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3] 65세 이상 노년기 생애주기별 인구변화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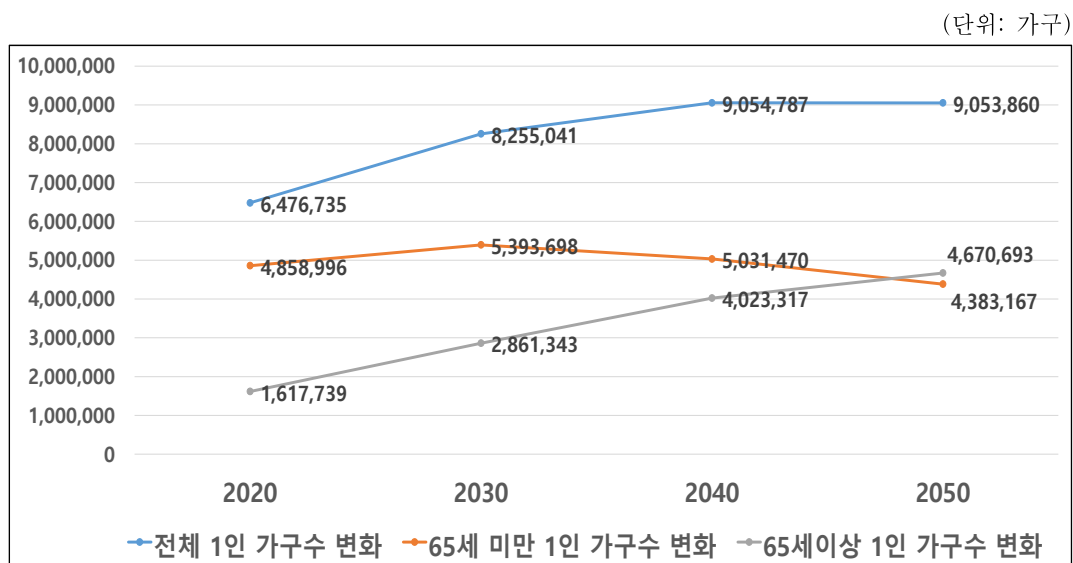
2. 가구변화

가.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증가

[그림 3-4]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 변화 추이를 10년 단위로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는 2020년에 6,476,735가구, 2030년에 8,255,041가구, 2040년에 9,054,787가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9,053,860가구로 2040년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인 가구 변화를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고찰하면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된다. 65세 미만 인구의 경우 1인 가구가 2020년 4,858,996가구에서 2030년 5,393,698가구로 증가하였다가, 2040년에 5,031,470가구로 감소하고, 2050년에는 4,383,167가구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2020년 1,617,739가구, 2030년 2,861,343가구, 2040년 4,023,317가구, 2050년 4,670,693가구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4] 1인가구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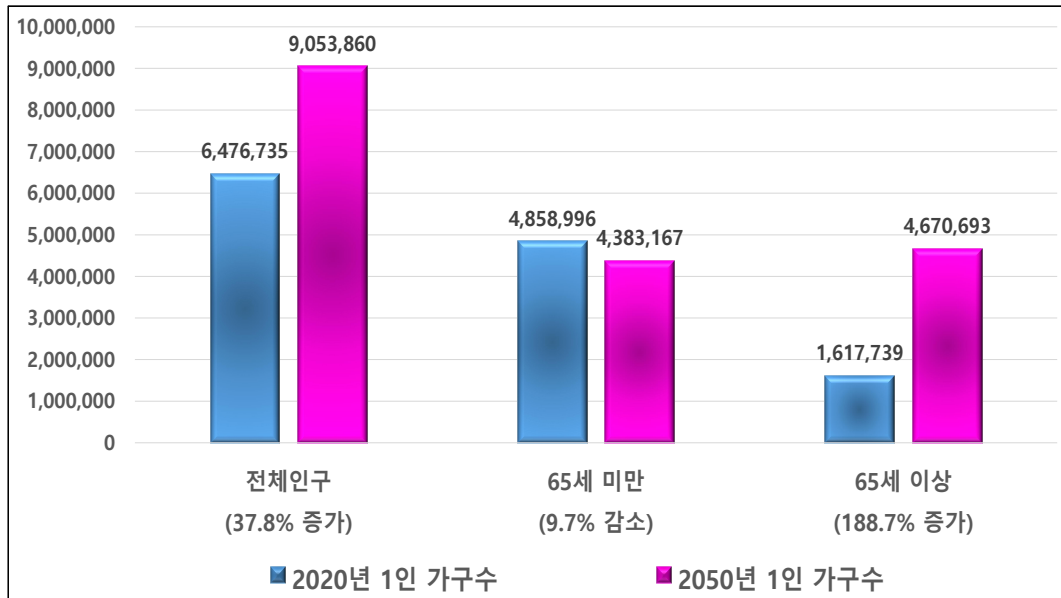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3-5]는 2020년과 2050년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비교한 것이다. 인구 전체적으로 1인 가구는 2020년 6,476,735가구에서 2050년 9,053,860가구로 추계되어 약 3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65세 미만 연령층에서 1인 가구는 2020년 4,858,996가구에서 2050년 4,383,167가구로 약 9.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에서는 2020년 1,617,739가구에서 2050년 4,670,693가구로 약 188.7%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3- 5] 2020년과 2050년 1인 가구수 비교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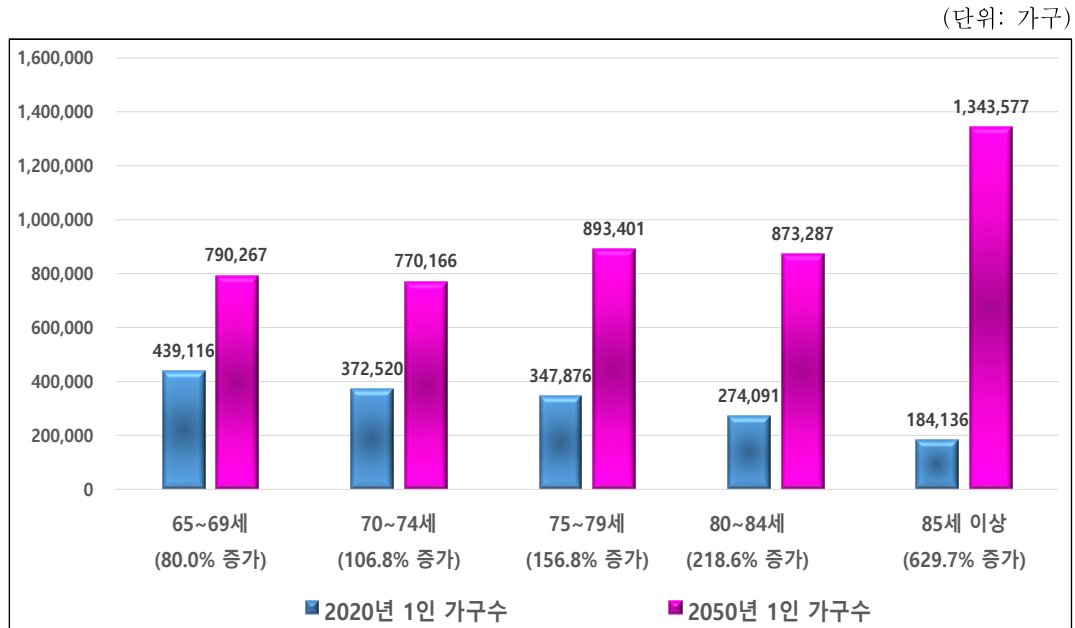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나. 85세 이상 초고령 1인 가구 급증

[그림 3-6]은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를 2020년과 2050년 두 기간 동안 변화를 추계하고 비교한 것이다. 65~69세 연령대 1인 가구는 2020년 439,116가구에서 2050년 790,267가구로 약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70~74세의 1인 가구는 2020년 372,520가구에서 2050년 770,166가구로 약 10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5~79세의 1인 가구는 347,876가구에서 893,401가구로 약 21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80세~84세의 1인 가구는 274,091가구에서 873,287가구로 약 21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1인 가구는 2020년 184,136가구에서 2050년 1,343,577가구로 약 629.7%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6] 65세 이상 연령대별 1인 가구수 변화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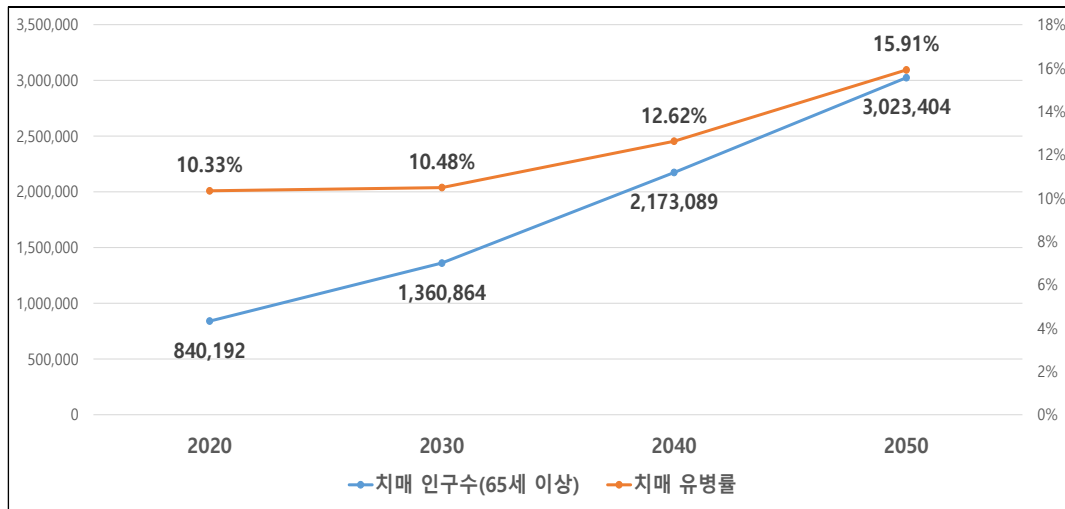
3. 치매 인구변화

가. 65세 이상 치매인구 증가

[그림 3-7]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동안 65세 이상 치매인구수와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인구 비율을 추계한 것이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환자 수는 840,192명으로 전체 고령인구의 10.33%였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치매환자수가 1,360,864명, 2040년에는 2,173,089명이 될 것으로 추계되고, 치매인구 비율은 2030년에는 10.48%, 2040년에는 12.62%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치매환자수가 3,023,404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7]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및 치매인구 변화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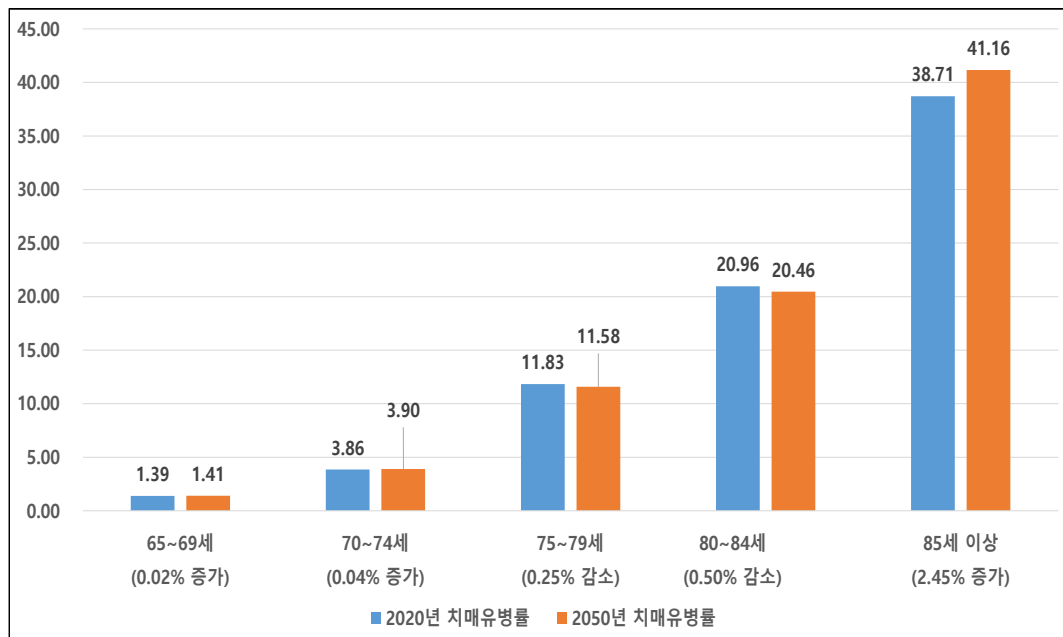
자료: 중앙치매센터

나.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치매인구 급증

[그림 3-8]은 65세 이상 연령대별 2020년과 2050년의 치매 유병률을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치매 유병률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8] 65세 이상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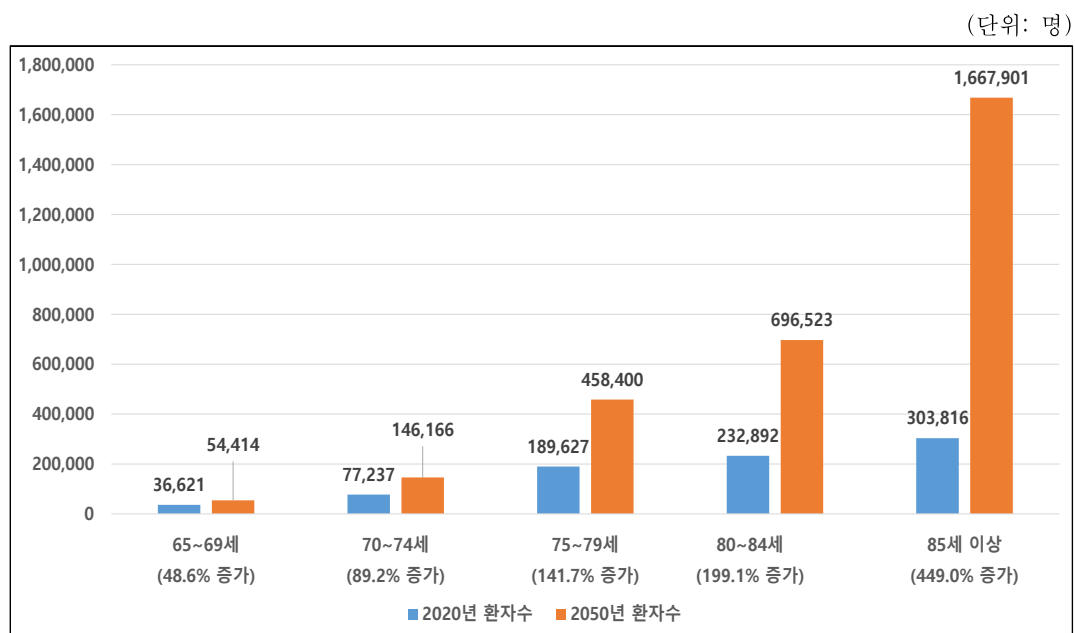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중앙치매센터

[그림 3-9]는 2020년과 2050년의 65세 이상 연령대별 치매 환자수를 비교하고, 환자수의 변화율을 추계한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2020년 치매환자는 840,192명이었는데, 2050년에는 3,023,40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2020년 대비 약 260%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과 2050년의 치매 환자수를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고찰하면, 65~69세의 경우 36,621명에서 54,414명으로 약 4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70~74세의 경우 2020년의 77,237명에서 2050년에는 146,166명으로 약 8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5세~79세의 경우 189,627명에서 458,400명으로 약 14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80~84세의 경우 232,892명에서 696,523명으로 약 19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경우 2020년 303,816명에서 2050년 1,667,901명으로 약 449.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9] 65세 이상 연령대별 치매환자 변화



자료; 중앙치매센터

4. 치매 노인 1인 가구 :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잠재적 수요

가. 65세 이상 노인 치매 1인 가구 증가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대상은 (1) 치매로 인한 의사결정장애가 있고, (2) 의사결정장애가 있음에도 주변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도움을 줄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지원 잠재적 수요는 치매가 있는 1인 가구로 추계한다. <표 3-1>은 통계청의 연령대별 1인 가구 추계 데이터와 치매안심센터의 연령대별 유병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매 장애가 있는 1인 가구를 추계한 것이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 중 2020년 1인 가구는 1,617,739가구이고 2020년 치매 유병률이 11.58%였으므로 치매가 있는 1인 가구는 약 187,366가구이다. 따라서 2020년 의사결정지원욕구가 있는 1인 가구인 치매 노인은 약 187,366명 정도로 추계된다. 2050년의 경우 1인 가구는 4,670,693가구로 추계되고 치매 유병률이 18.79%로 예상되므로, 치매가 있는 1인 가구는 약 553,839가구이다. 따라서 2050년 의사결정지원욕구가 있는 1인 가구인 치매노인은 약 877,499명 정도로 추계된다.

<표 3-1> 노인 치매 1인 가구 추계

단위: 명, %

	2020년			2050년		
	1인 가구수*	연령대별 유병률**	치매 장애 1인 가구수***	1인 가구수*	연령대별 유병률**	치매 장애 1인 가구수***
65-69세	439,116	1.39%	6,104	790,267	1.41%	11,143
70-74세	372,520	3.86%	14,379	770,166	3.9%	30,388
75-79세	347,876	11.83%	41,154	893,401	11.58%	103,456
80-84세	274,091	20.96%	54,450	873,282	20.46%	178,673
85세 이상	184,136	38.71%	71,279	1,343,577	41.16%	553,839
65세 이상 전체	1,617,739	11.58%	187,366	4,670,693	18.79%	877,499

*자료: 통계청;

**자료: 치매안심센터;

***치매 장애 1인 가구 = 연령대별 1인 가구 X 연령대별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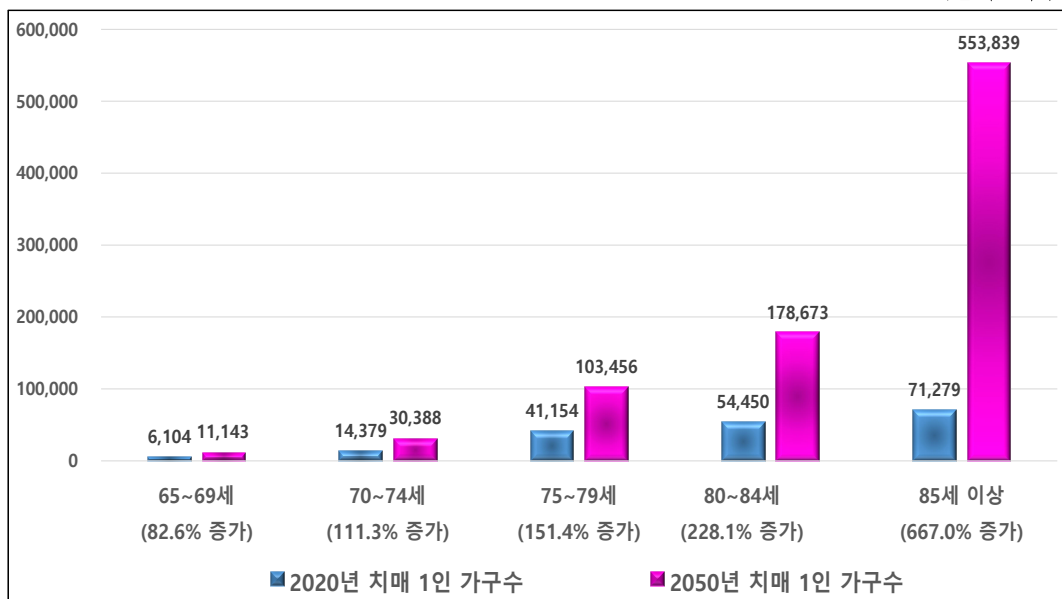
나.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치매 1인 가구 급증

[그림 3-10]은 2020년과 2050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세부 연령대별로 치매 1인 가구를 추계하고, 변화율을 살펴본 것이다. 65~69세의 경우는 2020년에는 치매 1인 가구가 6,104가구였는데, 2050년에는 11,143가구로 추계되어 약 8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70~74세의 경우 2020년에는 14,379가구였는데 2050년에는 30,388가구로 추계되어 약 1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5~79세의 경우는 2020년에는 치매 1인 가구가 41,154가구였는데, 2050년에는 103,456가구로 추계되어 약 151.4%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80~84세의 경우 2020년에는 54,450가구였는데 2050년에는 178,673가구로 추계되어 약 22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경우는 2020년에는 치매 1인 가구가 71,279가구였는데, 2050년에는 553,839가구로 추계되어 약 667.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치매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는 지금까지 사적영역에서 대응하던 치매노인 돌봄 및 의사결정 관련 서비스를 더 이상 가족이나 친지 등 사적영역에서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0] 65세 이상 노인 치매 1인 가구 연령대별 변화

(단위: 가구)



자료: 통계청, 치매안심센터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주체”⁷⁾가 된다. 우리나라 민법상 19세 이상 성인은 자신의 신상이나 재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치매와 같은 신경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들처럼, 의사결정장애가 있는 성인은 스스로 자기의사결정권을 전면 실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2006년 UN WHO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⁸⁾은 의사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당사자들이 최대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CRPD를 서명하고, 2008년 국회비준을 거쳐, 25조 마항(선택의정서)을 제외한 CRPD가 2009년에 발효되었다. 그동안 미루어오던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이 2022년 12월 1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4일부터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세계 102번째 가입국이 되었다⁹⁾. UN 회원국이자 CRPD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CRPD 이념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① 인구변화, ② 가족구조 변화, ③ 치매노인 인구변화, ④ 치매노인 1인 가구변화 등의 추계는 자기 스스로 신상관리나 재산관리 상 자기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의사결정장애 노인이 급증하고 있어 의사결정지원제도 구축의 시급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CRPD 비준 후 우리나라는 후속조치를 위한 첫걸음으로 2011년 민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민법이 기존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잔존능력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UN이 권장하는 당사자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가 아니라 의사결정 대리제도인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다. 민법 개정 후속 조치로 2013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본 연구의 대상자인 치매 의사결정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후견사업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추진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이다¹⁰⁾.

7)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8) <https://social.desa.un.org/issues/disability/crpd/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crpd>

9) <https://theindigo.co.kr/archives/43889>

1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9%98%EB%A7%A4%EA%B4%80%EB%A6%AC%EB%B2%95/\(16408\)](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9%98%EB%A7%A4%EA%B4%80%EB%A6%AC%EB%B2%95/(16408))

<표 3-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치매관리법

<표 3-2>에 정리된 치매관리법 상의 후견개시 사유를 살펴보면 ① 의사결정장애가 있는 경우, ② 의사결정 대변할 가족이 없는 경우, ③ 개입이 없을 시 권리침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즉, 치매공공후견사업의 대상은 당사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60세 이상 치매 장애인이다. 치매 장애인들도 일상생활 상의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를 이용, 부동산 계약 관련 사무, 등을 다양한 영역에서 신청, 계약, 변경, 해지 등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필요로 한다. 치매장애인들이 이러한 업무수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 대리권제도인 후견제도가 아니라 당사자의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인구 및 가구변화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 중 치매로 인한 의사결정 지원욕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기 삶의 안정성 증진 뿐 아니라 자아통합 기반 삶을 마무리하는 인생후기 여정에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미래사회 변화에 걸 맞는 한국적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확립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네트워킹 사업 성과

1. <인구변화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비교적인 시각>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인구클러스터는 2022년 8월 26일 경제사회학회와 공동으로 “Population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Comparative Perspectives”를 주제로 한 비대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석학 기조강연과 6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된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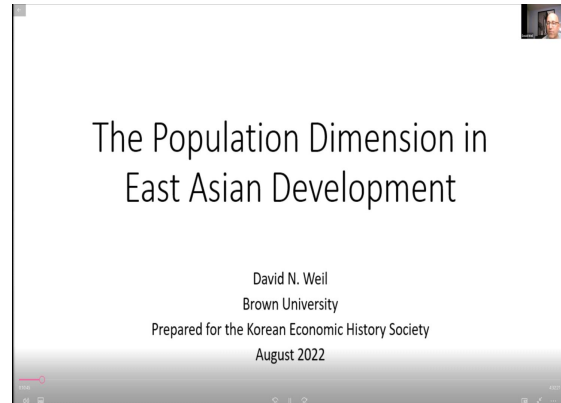
이철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David N. Weil 브라운대 교수가 ‘The Population Dimension in East Asian Development’를 발표하였다. David N. Weil 교수는 동아시아가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동시에 저출산 및 고령화와 같은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원인과 함의를 분석하였다. Weil 교수는 한국이 1961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중국이 1979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면서 강력한 정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통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낮은 출산율은 유지되었으나 현재에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의 출산율 하락이 과거의 빠른 경제성장에 공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즉 출산율의 감소가 부양비율의 감소, 생산연령 인구 증가,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숙련 개선 등의 채널을 통해 일인당 자본, 인적자본, 노동공급, 소득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가파른 인구고령화에 따라 동아시아의 인구구조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하여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우 적어도 단기 및 중기에 있어서는 19세 이하 인구가 늘어서 부양비율이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기조강연 후에는 각 세션별로 여러 국가 연구자들이 아시아의 인구 문제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경로 경북대 교수의 진행으로, 박상윤 홍콩대학 교수가 “Protestantism, Human Capital, and Femal Empowerment: Evidence from South Korea’s Past Century”를 Yuzuru Kumon 툴루즈대 교수가 “Women’s Wages and Empowerment: Japan, 1600-1910”을 Se Yan 베이징대 교수가 “The Mission to Educate Women: Protestant Legacy in China”를 각각 발표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정혁 중앙대 교수의 진행으로, Chuanlong Xiang 캠브리지대 교수가 “The Layered Colonialism and Korea’s Terms of Trad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을, Asuka Imaizumi 사이타마대 교수가 “Industrial Distric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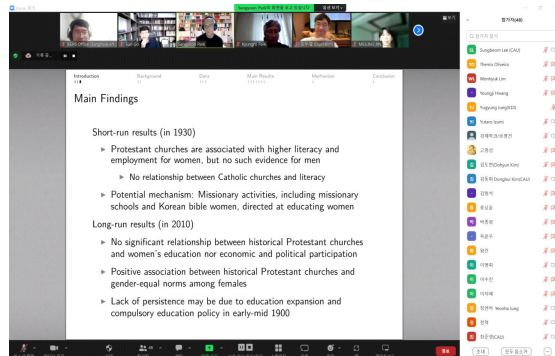
Meiji Japan”을, Cong Liu 지난대 교수가 “Military Investment and the Rise of Industrial Clusters: Evidence from China’s Self-Strengthening Movement”를 각각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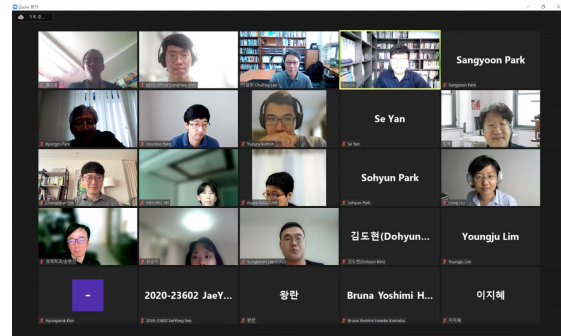
사회를 보고 있는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



David N. Weil 교수 기조강연 슬라이드



박상윤 교수 발표 모습



학술대회 진행 모습

2. 2022 동아일보 뉴센테니얼 포럼 공동 조직 및 참여

인구클러스터는 2022년 10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구 감소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개최된 2022 동아 뉴센테니얼포럼을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이철희 클러스터장과 김홍수 클러스터 공동연구원(보건대학원 교수)이 참여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 포럼은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의 개회사와 윤한홍 국회의원회 간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4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인구 감소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조강연에서는 David N. Weil 브라운대 교수가 ‘동아시아 인구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철희 서울대 인구클러스터장은 ‘인구변화와 노동시장 과급 효과와 대응’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고, 김홍수 인구클러스터 참여 교수는 ‘인구변화와 장기요양인력 수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 외에, 김영도 금융연

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개혁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철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동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청년은 낮은 반면 장년과 노년은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생산성을 낮출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래의 고령인구는 현재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전반적으로는 건강과 인적자본의 개선이 전체 노동인구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보다 노동인구가 더 느리게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적어도 15~20년 동안은 전반적인 노동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로 말미암은 출생 코호트 간 불균형과 부문 및 지역 간 불균형 심화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진단하였다.

김홍수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인구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장차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과, 가족구조 및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고령자 부양을 가족, 정부, 사회가 나누어야 할 책임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확산되는 경향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였고, 향후 점차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인력의 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중년 여성 이외의 다양한 장기요양 인력 모집 풀을 확대, 전문성, 노동환경, 임금 향상을 통한 장기요양 인력 유지, 장기요양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건강, 돌봄 결과 향상 등을 제시하였다.



개회사(박제균 논설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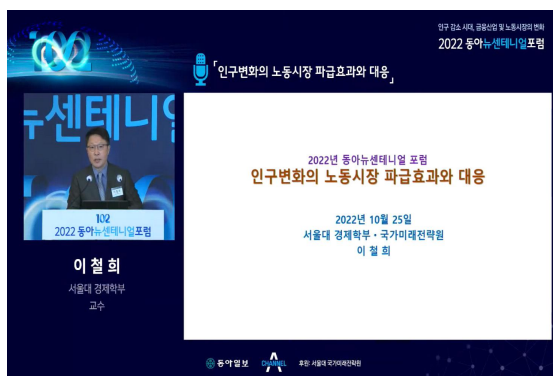
축사1(윤한홍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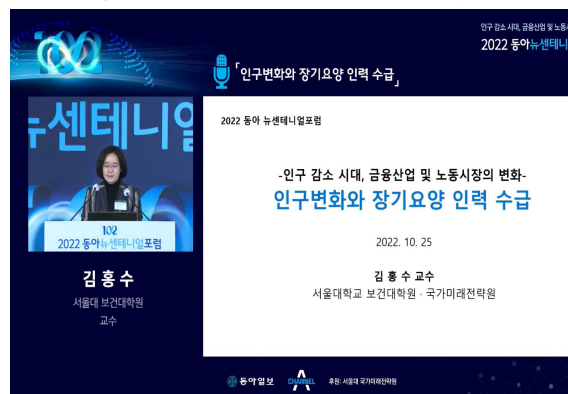
축사(이복현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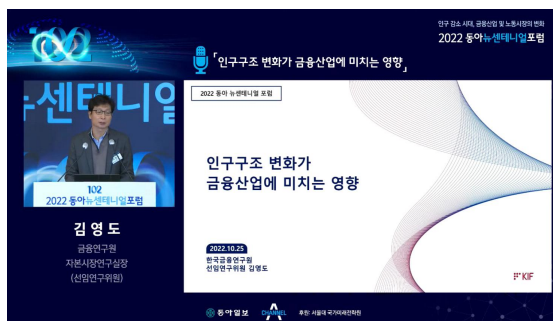
기조강연(David N. Weil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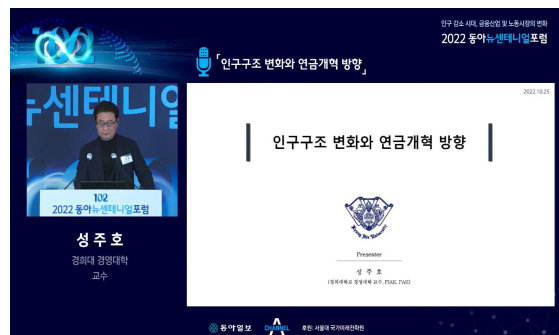
발표1(이철희 교수)



발표2(김홍수 교수)



발표3(김영도 자본시장연구실장)



발표4(성주호 교수)

동아일보 | 경제

“韓 생산인구 비중 30년간 24%p 감소… 경제성장 둔풍 끝났”

박인우 기자, 박상준 기자
입력 2022-10-26 03:00 | 업데이트 2022-10-26 03:27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
기조강연 나선 데이비드 웨일 교수
“인구 늘어 ‘환경의 기적’ 토대였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성장에 역풍”
“인구감소, 경제 잠재력 떨어뜨려 금융·공적연금 구조개혁 검토를”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 데이비드 웨일 미국 브라운대 교수가 '저출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화상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언론보도(동아일보)

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저출산 문제 관련 포럼 개최

인구클러스터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가? -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파른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포럼의 발표 논문들은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발간하는 경제논집 특집호(2022년 12월 61권 2호)로 출간되었다.

주제 발표는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주거비용과 저출산”을,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자녀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을,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가치관과 저출산”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진미정 서울대 아동학교 교수,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식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전 국회의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서울대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은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 30년 동안 결혼의 감소는 줄곧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주된 요인이었고,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달랐으며, 여성 인구 변화가 출생아 수 감소

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 유배우 비율의 장기적인 하락은 미혼/비혼 여성의 초혼율 감소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유배우 여성 이혼율의 증가 효과는 유배우 여성 사별률의 감소 효과에 의해 상쇄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유배우 여성 출산율과 30대 무배우 여성의 결혼율이 높아졌으며, 유배우 여성 이혼율이 감소하는 등 호의적인 인구변화에 힘입어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반면 최근 10년 동안은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였고, 유배우 이혼율까지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자녀가 없는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 만혼의 비혼화가 진행되고, 이혼의 증가로 유배우 여성 비율 감소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학적인 면에서 장래 출생아 수 추이 전망은 밝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이영옥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주거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거비용은 가족형성과 자녀양육에 필수적이며 규모가 큰 비용이기에 불완전한 금융시장 하에서 주택가격 변동은 청년층의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우리나라 주택매매가격 상승은 주택소유가구의 출산율을 증가시킨 반면,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은 임차가구의 출산율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는 주거비 지원을 통한 전세부담 경감이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최근으로 올수록 초등학생 자녀 등 취학 자녀에 투입되는 시간 비용이 어머니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를 자녀 보육과 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야 출산율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특히 초등학교의 질 높은 방과 후 학교와 중고등학교 단계의 교육 및 입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은 인구변동 이론을 토대로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설명하였고, 최근까지의 서베이 데이터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결혼관과 자녀관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최근의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저출산 대응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치관 변화와 같은 사회적·문화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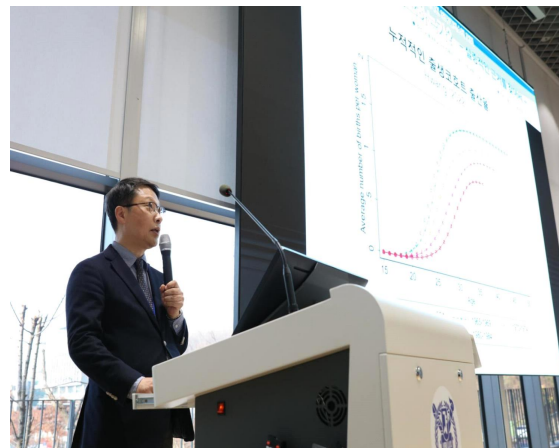
사회(황지수 교수)



환영사(김병연 원장)



축사(나경원 부위원장)



발표1(이철희 교수)



발표2(이영욱 연구위원)



발표3(김대일 교수)



발표4(이소영 연구위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개최

ⓒ 박영석 기자 · © 승인 2022.11.24 15:37 · 0 댓글 0

| 왜 출생이 수가 감소하는가?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 주제

[베리타스알파=박영석 기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24일 '왜 출생이 수가 감소하는가?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를 주제로 '인구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한다. 축사 후에는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을 통해 가파른 출생이 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는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 출생이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석을,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저임/사회정책 연구부장이 주거비용과 저출산을,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가자녀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을, 김대일 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팀장이 가치관과 저출산을 발표한다. 중점토론은 이철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진미정 서울대 아동학과 교수, 김진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식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총괄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의 인구문제 연구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는 출생이 수 감소의 인구학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의 수량적으로 추정하고,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주거비용, 보육의 기회비용, 가치관 변화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보도(베리타스 알파)



종합토론

4.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돌봄 서비스 관련 포럼 개최

인구클러스터는 2023년 4월 3일 “인구변화와 돌봄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윤영호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코어연구자들이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연구의 결과를 담은 3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인구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 가구구조, 여성의 노동공급, 건강상태의 변화와 같은 인구의 질적인 변화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과 이지혜 인구클러스터 연구원은 “미래사회 인구·가구구조·노동공급 변화와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를,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

원 연구위원은 “미래사회 인구·건강 변화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를,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사회 인구·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신경인지장애(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환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포럼의 주제발표와 토론은 인구의 양적·질적 변화가 미래 사회의 돌봄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시스템이 직면할 도전을 실증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기초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발전시킨 연구의 요약은 연차보고서의 코어연구 성과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이철희 교수)



환영사(김병연 원장)



인사말(윤영호 기획부총장)



발표1(이철희 교수)



발표2(권정현 연구위원)



발표3(강상경 교수)



종합토론



언론보도(베리타스 알파)

향후 연구계획

향후 연구도 1차 연도와 마찬가지로 코어연구와 네트워킹 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어연구는 8인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인구 전망 및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급 문제,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 출생아 수 감소 속도 완화 방안, 여성 및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인적자원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내 및 교외의 전문가 및 타 기관과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 고용연장, 청년정책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와 정책적 제안을 공유함으로써 심층연구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매 연도에 자문진과 외부 연구자와 공동으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2차 및 3차 연도의 코어연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차 연도에 수행했던 “인구변화가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초래할 불균형 문제”에 관한 연구를 심화·발전시킬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국적인 수요변화 전망에 초점을 맞추었던 제1차 연도 연구를 확장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돌봄 서비스 공급 변화를 전망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돌봄서비스 수급불균형 문제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2차 연도부터 이 주제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본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는 치매 환자의 임종기 돌봄의 질을 높이고 당사자의 가치가 반영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초기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전돌봄계획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의 임종기 돌봄 및 의료 결정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필요한 자료 및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

2차 연도부터 참여하는 다른 세 연구진은 다양한 각도에서 출산율 저하 속도 완화, 여성인력 활용 증진, 지역 간 인구불균형 완화 등 인구변화의 속도 및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 모색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인구클러스터의 연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본교 자유전공학부 황지수 교수는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결혼 및 출산 패턴의 변화를 정리하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본교 경제학부 윤참나 교수는 엄밀한 실증연구를 통해 청년층 지역 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조모형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지역 간 인구불균형 문제 완화의 구

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희대 경제학과의 김태훈 교수는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이 출산율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교육개혁을 통한 저출산 완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기대 사교육비 지출 효과에 관한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수행하고,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 정책 효과에 대한 단절적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을 수행할 것이다.



첨부

1. 출간된 논문

(1) 경제논집 특집 정책논단



경제논집 특집

정책논단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가? -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

□ 편집자 주: 이 특집 정책논단은 2022년 11월 24일 개최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개최한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가? -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라는 주제의 인구클러스터 포럼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각계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증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엄밀하게 제시해주는 연구는 의외로 부족할 실정이다. 이 특집 정책논단은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의 수량적으로 추정하고,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주거비용, 보육의 기회비용, 가치관 변화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

이 철 희

한국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2015년 이후 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 추이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2000년대 초 이후 1.3을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했던 합계 출산율은 2015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감소하여 2021년에는 0.81명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 2/4분기에는 0.75를 기록하였다. 또한, 2002년 이후 2015년까지 대체로 45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는 추이를 보이던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21년에는 26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미래를 받아들이고, 인구정책의 목표를 인구변화 대응 혹은 적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처럼 정책 목표를 전환하더라도 출생아 수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노력은 여전히 요구된다. 장래 인구변화의 양상과 추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출생아 수 변화 규모와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는 출생아 수가 2024년경 이후 반등할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이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없는 낙관적인 전망일 가능성이 높다. 출생아 수가 계속 빠르게 감소한다면, 최근의 통계청 추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장기적인 감소 추이를 반전시키지 못하더라도,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그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면 인구변화 대응 혹은 적응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출생아 수 감소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결혼과 출산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높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생애 및 다음 세대에 대한 청년들의 전망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결혼이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관한 엄밀한 실증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생아 수 감소의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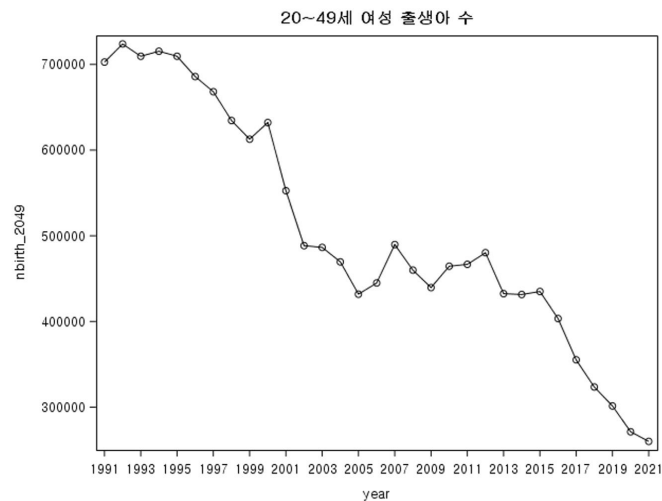
이 글은 출생아 수 감소의 근본적인 사회경제적·문화적 원인 자체를 다루기에 앞서서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세부적인 인구학적 요인들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생아 수는 출산율과 가임기 여성 인구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한국과 같이 혼외 출산이 전체 출산의 매우 작은 부분(약 2% 정도)을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유배우 비율(전체 여성 중 현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결혼한 여성들의 출산율)이 출산율을 좌우한다.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는 자녀 수에 따른 유배우 출산율, 즉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율, 다자녀 유배우 여성의 추가적인 자녀 출산율과 자녀 수별 유배우 여성의 상대적인 비중(가중치)의 변화로 분해할 수 있다. 또한, 유배우 비율의 변화는 미혼·비혼 여성의 비율, 이혼해 있는 여성의 비율, 사별해 있는 여성 비율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무배우 여성의 혼인율, 유배우 여성의 이혼율과 사별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출생아 수 감소의 세부적인 인구학적 요인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각각의 요인이 출생아 수 변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은 저출산의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에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각각의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인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미혼자들의 결혼 결정과 결혼한 부부의 출산 결정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 유배우 비율 및 무배우 혼인율은 유배우 출산율과는 횡단면이나 시계열적으로 상이한 변이를 보였다. 예컨대 연도·시군도별 데이터에 기초한 결과는 여성 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사이에 음의 관계를 보여준다(이철희 2012). 과거의 일부 기간(예컨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에는 유배우 출산율과 유배우 비율이 반대 방향으로 변화했다(이철희 2018). 현재의 가임기 여성 인구는 과거의 출산율 변화의 산물로 현재의 사회경제적 요인과는 무관하며, 사별률은 사망률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각각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각 인구학적 요인에 대해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나 보육비 지원정책은 미혼 인구의 결혼 결정보다는 유배우 인구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유배우 비율의 영향을 받는 합계출산율보다 유배우 출산율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철희 2019, 이철희·이소영 2022). 반면 청년층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정책은 결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사별이나 이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결혼이나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인구학적 요인이 출생아 수 감소의 주된 요인인지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다를 수 있다.

아래에는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1990년 이후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요인을 분해한 이철희(2022)의 결과를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990년 이후 20세 미만 여성에게서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너무 적어서 이 연령층 출생아 수 변화를 더 세밀한 요인으로 분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20세 이상 여성 인구의 출생아 수 변화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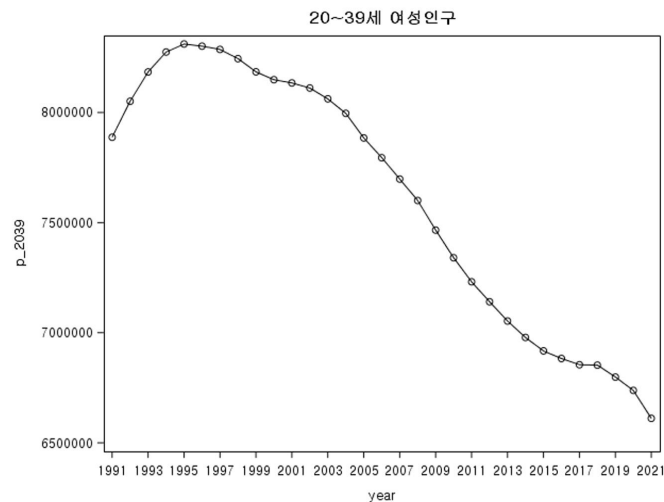


출처: 이철희(2022)

〈그림 1〉 1990년~2021년 20~49세 여성 출생아 수

〈그림 1〉은 1991년~2021년 20세 이상 여성에게서 태어난 출생아 수 변화를 보여 준다. 1990년대 초 70만 명이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1990년대를 통해 6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00년~2005년 사이 급감하여 2010년대 중반까지 45만 명 선에서 등락하였다. 2015년부터 출생아 수는 연속적으로 급감하여 2019년 3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1년에는 약 26만 명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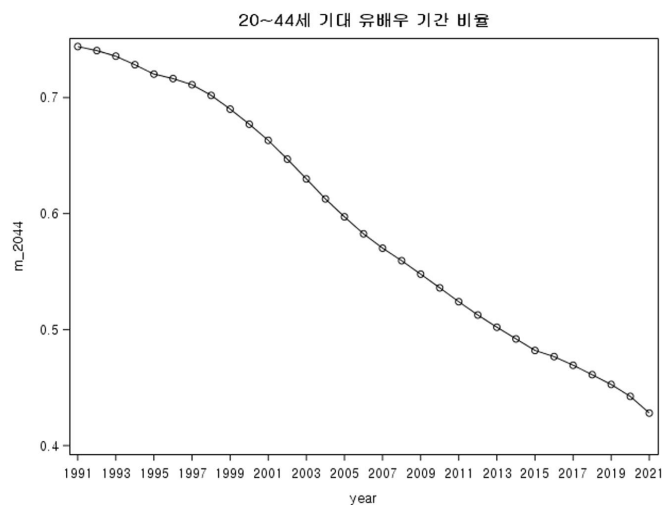
그렇다면 어떤 인구학적 요인들이 이러한 추이의 출생아 수 감소를 가져왔을까? 첫째, 1990년대 초 이후 여성 인구의 감소는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가 보여주는 것처럼 20~49세 여성 인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감소해 왔다. 따라서 이 기간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여성 인구 감소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 인구의 감소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매우 가파른 출산율 감소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나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바꿀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이철희(2022)

〈그림 2〉 1990년~2021년 20~49세 여성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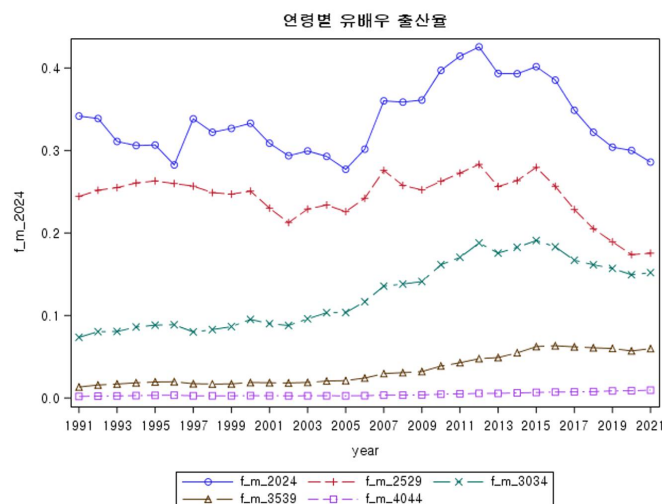
둘째, 비혼의 확산과 만혼 경향의 강화로 인해 가임기 여성 인구 중 유배우 인구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림 3〉은 각 연도별로 20세의 여성이 44세까지의 기간 중 유배우 상태에서 보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의 비율을 추정한 결과이다. 1990년대 초에는 주된 가임연령인 20~44세 시기의 70% 이상을 유배우 상태에서 보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 비율이 40%에 근접해 있다. 여전히 결혼이 출산의 전제조건인 여건에서 이러한 유배우 비율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추가적인 분석 결과는 무배우 여성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미혼·비혼 여성 인구 비율 증가가 여성 무배우 비율 증가의 주된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이철희 2022). 이혼의 증가도 유배우 비율 감소를 가져온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지만 이 효과는 사망률 감소로 말미암은 사별 여성 비율 감소 효과에 의해 대부분 상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이철희(2022)

〈그림 3〉 1991년~2021년 20~44세 기대 유배우 기간 비율

셋째,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인 유배우 출산율은 시기에 따라 다른 추이를 보이며 변화하였다. <그림 4>는 1991년~2021년 각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1991년~2005년 기간에는 20대 유배우 출산율은 약간 하락하였고, 30대 초반 유배우 출산율은 약간 증가하였다. 2005년~2012년 기간에는 20대와 30대의 유배우 출산율이 모두 높아졌으며, 2012년~2021년 기간에는 20대와 30대 초반의 유배우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2005년~2012년 기간에는 출생아 수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그 이후에는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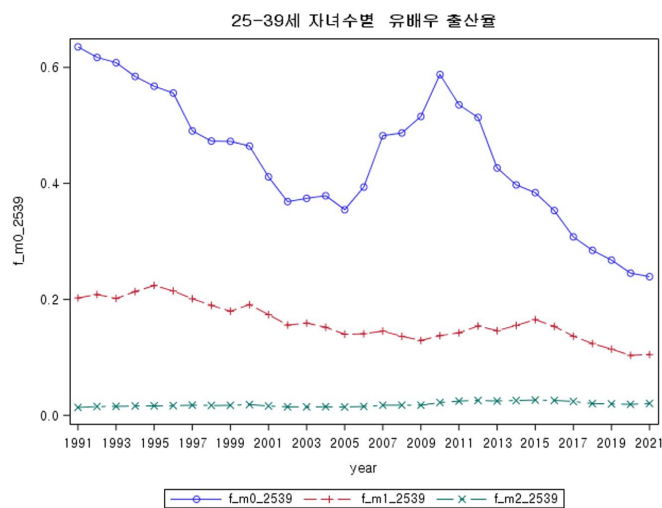


출처: 이철희(2022)

<그림 4> 1991년~2021년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넷째,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의 변화는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를 가져온 주된 요인이었다. <그림 5>는 1991년~2021년 핵심적인 가임기라고 할 수 있는 25~39세 유배우 여성의 자녀 수별 출산율 변화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유배우 여성의 추가 자녀 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 자녀 유배우 여성의 두 번째 자녀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반면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은 매우 뚜렷한 단기적 변동성을 보인다. 즉 1991년~2005년 기간에는 감소하였고, 2005년~2012년 기간에는 증가했다가, 2012년~2021년 기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이 결과는 무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변화가 1990년 이후 출산 및 출생아 수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출처: 이철희(2022)

〈그림 5〉 1991년~2021년 25~39세 여성 자녀수별 유배우 출산율

분해식을 이용하여 이상의 요인들이 시기별로 출생아 변화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 한 결과는 위의 그림들에 나타난 출생아 수 변화의 인구학적 요인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1992년~2005년 기간에는 20세 이상 여성 출생아 수가 약 292,000명 감소했는데, 그 가운데 약 24만 명(전체 출생아 수 감소의 88.7%)은 유배우 비율 감소로 설명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는 약 39,000명(14.3%),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는 약 14,000명(5.1%)의 출생아 수 감소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5년~2012년 기간에는 출생아 수가 약 48,000명 늘었다. 이 시기에도 유배우 비율은 감소하여 출생아 수를 약 104,000명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가임기 여성 인구도 줄어서 출생아 수를 약 43,000명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유배우 출산율 증가가 출생아 수를 약 178,000명 늘림으로써 다른 두 요인의 부정적인 효과를 압도하였다.

2012년~2021년 기간에는 출생아 수가 약 22만 명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는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주된 인구학적 요인이 모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유배우 비율의 감소는 약 106,000명(48.1%), 유배우 출산율은 약 89,000명(40.1%),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는 약 4만 명(18.0%)의 출생아 감소를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무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의 감소는 출생아 수를 약 129,000명(58.5%) 감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녀 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가중치)은 전 기간에 걸쳐서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1990년 이후, 출산율 수준이 가장 높은 무자녀 유배우 여성이 전체 유배우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지난 7년 혹은 10년 동안의 가파른 출생아 수 감소는 장기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의 “상수”였던 결혼의 감소에 2012년 이후 유배우 출산율(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결혼(혹은 안정적인 동거)의 감소 추이를 완화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차원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의 감소는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출생아 수 감소의 중요한 요인이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즉 과거에는 특정 연령층의 혼인율이 낮아지면 이후 더 높은 연령층의 혼인율이 높아지는 만혼화가 진행되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30대 후반의 무배우 여성 혼인율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만혼의 비혼화가 실현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여성 유배우 비율이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심한 유배우 출산율(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 첫 자녀 출산율)이 반등한다고 해도, 낮아진 유배우 비율 때문에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이혼의 증가는 결혼 감소로 인한 여성 유배우 비율 감소 추이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와는 달리 사별 위험이 이미 매우 낮아져서 더이상 사별 인구 감소가 이혼인구 증

가를 상쇄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다자녀 중심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더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만큼, 단기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의 초점을 첫 아이 출생에 맞출 필요가 있다. 다자녀 여성의 추가 자녀 출산율은 매우 낮고 변동성이 낮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는 효과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은 두 번째 자녀 및 세 번째 이상 자녀 출산율에 비해 훨씬 높고 변동성이 크다. 지난 30년 동안의 유배우 출산율의 시간적인 변동은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의 변동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현금지원과 같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가 첫 자녀 출산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이철희 2019; 이철희 · 이소영 2022). 더욱이 전체 유배우 여성 가운데 무자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져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첫 자녀 출산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이 출생아 수 감소 추이를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이다.

이 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51-74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880-6379

메일: chullee@snu.ac.kr

참고문헌

- 이철희 (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35(3), 117-144.
-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 2016년 출산율 변화 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5-42.
- 이철희 (2019):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제6장: 지자체 출산 지원금의 효과-아동수당의 기대효과에 대한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9-37.
- 이철희 (2022):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변화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 1991~2021”, 미 발표 논문.
- 이철희, 이소영 (2022):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강원도 육아기본 수당 지급 사례로부터의 증거”, 『경제학연구』, 제70집, 제2호, 61-93.

주거비용과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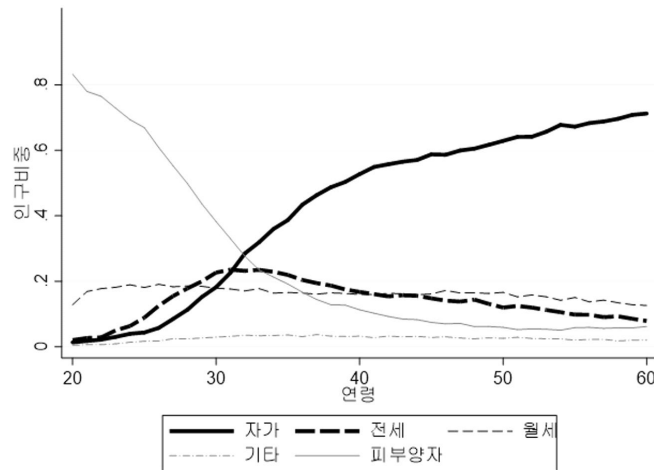
이영욱

1. 문제제기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러 출산·양육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출산양육비용 이외의 다른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출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거비용은 여러 경제·사회적 요인 중에서도 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주거는 가족 형성에 있어 필수적이며, 비용 규모도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나타난다. 상당수의 청년층이 결혼, 출산을 거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임차 또는 자가 가구로 이행하거나, 기존 임차 가구에서 주택마련을 통해 자가 가구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가운데 미래의 소득 흐름이 아직 불확실한 청년들은 불완전한 금융시장 하에서 상당한 차입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가격의 변동은 청년층의 가족 형성, 특히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생애주기별 주거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에는 월세(반전세 포함)의 비중이 가장 높게 유지되며 30대 전후로는 전세 비중이 가장 높게 관찰된다. 한편, 자가 비중은 20대 중반 이후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30대 초반 이후로 가장 높게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청년의 시기에 주거 형태 변화가 크게 관찰되고 있어 청년층의 가족 형성 결정에 주택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임차 가구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가족 형성 결정에 있어 임차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 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Han and Lee(2022)의 2015년 수치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여성에 한정하여 연령별 주거형태 비중추이를 살펴봄. 자가, 전세, 월세, 기타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여성에 한해 정의되며, 이외 여성은 피부양자로 정의,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그림 6〉 여성 연령에 따른 주거형태(2020년)

2. 주거비용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주택가격 또는 주거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선 주택 소유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가구가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며 재산 증가에 따라 자녀 출산이 증가하는 재산 효과(wealth effect)를 기대할 수 있다(Lovenheim and Mumford 2013; Dettling and Kearney 2014; Aksoy 2016).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변동에 그쳐 영구적인 재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택 소유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담보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담보가치 상승은 차입제약에 처해 있는 청년 가구의 차입 가능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출산의 제약을 완화시켜 출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Dettling and Kearney, 2014).

한편,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 소유의 어려움을 높여 가족 형성을 지연시키는 가격 효과(price effect)를 야기할 수 있다(Mulder and Billari, 2010). 이는 주택 소유 계획을 가진 임차 가구뿐 아니라 출산과 더불어 더 큰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기존 주택 소유 가구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 및 전·월세 가격 상승은 임차 가구에 직접적인 주거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주택가격과 출산에 대한 해외연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Lovenheim and Mumford 2013; Dettling and Kearney 2014; Aksoy 2016; Clark and Ferrer, 2019; Atalay et al., 2021).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매매가격 상승은 주택소유자의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된다. 또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출산확률을 감소시킴을 보여준다(Dettling and Kearney 2014; Aksoy 2016). 예를 들어 Lovenheim and Mumford (2013)은 미국 1985-2007년 PSID 자료를 활용한 개인 단위 분석에서 \$10,000의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소유자의 출산확률을 1.6~1.8% 증가시킴을 보였다. Dettling and Kearney (2014)도 미국 1990-2007년 MSA 단위 분석에서 \$10,000의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소유자의 출산확률을 5% 증가시키는 반면, 미 소유자의 출산확률을 2.4% 감소시킴을 관찰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Aksoy (2016)는 1995-2013년 county 단위 분석에서 10%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소유자의 출산확률을 2.8% 증가시키는 반면, 미 소유자의 출산확률을 4.9% 감소시킴을 보인 바 있다.

4. 주택가격의 출산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고려할 점

이러한 주택가격의 출산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 어려운 점은 주택가격과 출산 간에 양방향의 관계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나 주택가격과 출산 간의 단순한 관계 분석 하에서는 출산수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녀를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출산의향이 있는 청년들이 이동하는 경향이 높기에 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주택 수요

가 높아져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역의 인과관계 우려가 있다.

이에 여러 연구에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하거나 개인 단위 분석에서 지역 단위 주택 가격상승분을 적용하는 등 주택가격의 출산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Dettling and Kearney (2014)와 Aksoy (2016)는 지리적 특성, 주택 계획 제한 등 주택공급제약에 대한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주택가격의 출산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산과 강의 면적 비중이 높은 지역이거나 주택계획제한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주택가격 상승에 반응하여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이와 같이 주택공급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전국 단위의 주택가격 상승 시 주택공급 조정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에,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주택공급 제약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게 되면 주택 수요가 아닌 주택공급부문에 의한 주택가격 변화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앞서 우려하였던 주택 수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Dettling and Kearney, 2014).

5. 우리나라에서 주거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우리나라에서의 주거비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엄밀한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연구들과 유사하게 주택공급제약과 관련된 도구변수를 활용해 볼 수 있다. Han and Lee (2022)에서는 시군구별 개발제한구역 비중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6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지정된 후 1999년까지 변화가 없었으며, 2000년 이후로 수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이에 분석에서는 1999년까지의 개발제한구역 비중을 활용함으로써 최근의 주택 수요 변화분과는 별개로 강제 지정된 주택공급제약요인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초점을 맞춘 매매가격뿐 아니라 임차가격의 출산 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출산 시기의 청년층에서 임차 비중이 높게 관찰되기에 임차가격의 출산 효과를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다른 나라에 관한 기존 연구를 따르면, 이러한 임차가격의 출산 효과는 별도로 살펴보기 힘든데, 이는 월세 계약에 의존한 임차 비중이 높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월세 임차료의 경우 명목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해 변동 폭이 크지 않기에 임차가격이 출

산에 미치는 영향을 뚜렷하게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라는 독특한 계약형태를 활용하여 임차가격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전세 가격은 이자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월세와 비교하여 가격 변동 폭이 상당히 큰 특징을 가진다.

관련 분석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매매가격의 증가는 주택소유자의 출산확률을 높이거나 주택 미소유 가구의 출산확률을 감소시키며, 전세 가격의 증가는 전세임차인의 출산확률을 뚜렷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Han and Lee, 2022).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매매가격의 이질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앞선 기존 연구결과들과 동일하다.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을 함께 통제된 분석에서는 전세 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매매가격, 즉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분이 미치는 영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Han and Lee, 2022). 이러한 결과는 전세 가격으로 대표되는 주거비용 또는 현재의 주거 가치가 출산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의 연령별 효과를 나누어 살펴본 분석에서는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는 주거비용이 임차인의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관찰되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택소유자의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커지고 있다(Han and Lee, 2022). 이러한 분석 결과는 30대까지는 임차비중이 높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 비중이 높아지는 연령별 주거형태 추이를 반영한다.

6. 정책적 시사점

분석 결과는 출산 지원에 있어 주거비용 경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임차료 지원정책은 임차인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출산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임차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 청년층 대상 임차료 지원은 출산 지원정책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임차료를 통제하는 정책은 임차 가능 주택의 양(quantity)을 함께 축소시킬 우려가 있기에 오히려 가족 형성을 위한 주택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Han and Lee, 2022). 또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지원이 함께 요구된다.

이 영 옥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전화: 044.550.4397
메일: ywlee@kdi.re.kr

참고문헌

- Aksoy, C. G. (2016): “Short-term effects of house prices on birth rates”, EBRD working paper.
- Atalay, K., A. Li, and S. Whelan (2021): “Housing wealth, fertility intentions and fertility”,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54, 101787.
- Clark, J. and A. Ferrer (2019): “The effect of house prices on fertility: Evidence from Canada” *Economics*, 13 (1).
- Dettling, L. J. and M. S. Kearney (2014): “House prices and birth rates: The impact of the real estate market on the decision to have a bab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10, 82–100.
- Han, J. and Y. Lee (2022): “The Effects of House Prices and Rents on Birth Rates: Evidence from Korea”.
- Lovenheim, M. F. and K. J. Mumford (2013): “Do family wealth shocks affect fertility choices? Evidence from the housing marke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 (2), 464–475.
- Mulder, C. H. and F. C. Billari (2010). Homeownership regimes and low fertility. *Housing Studies* 25 (4), 527–541.

자녀 교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

김 대 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 왔고, 최근 2021년에는 0.8명으로까지 하락하였다. 1970년 4.53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불과 14년이 지난 1984년에 1.74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1970년대 당시 인구과밀을 우려한 산아제한 정책의 성공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었다. 산아제한 정책이 철폐된 이후의 합계 출산율은 다소의 등락을 거듭하며 35년 동안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8년 1.0 미만으로 하락하여 현재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인다.

현시점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70년대의 산아제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출산율을 하락시킬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여성들에게서 경제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남성 중심의 전통적 관념이 약화 되는 가치관의 변화도 있지만, 경제발전으로 인한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 확대가 과거에는 가정에 머무르던 여성들에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의 ICT 기술의 진보는 힘(brawn)보다는 사고력(brain)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냈고, 이러한 일자리에는 여성들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들의 교육 수준도 빠르게 개선되고, 학교를 졸업한 20대 미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빠르게 상승하였지만, 결혼한 여성에게는 일·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이 계속해서 사회 참여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러한 여건에서 출산을 자제하자는 산아제한 정책은, 당시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던 기혼 여성들의 수요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책이었고, “수요에 부응한” 정책은 합계 출산율을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성공을 거둔 것이다.

2022년 현시점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열망은 1970~80년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높지만,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현실은 여성들에게 일도 더하고 출산도 더 하라는 불가능한 조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여성들은 아직도 일과 가정의 상충 속에서 부득이하게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저출산은 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최근 미혼 여성들의 선택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만혼과 비혼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수준이 높고 임금 수준이 높은 취업 상태의 여성일수록 결혼할 확률도 낮고, 결혼을 한다고 하여도 출산할 확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국현·김대일, 2016). 현시점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저울질은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울 때 부득이 일을 포기하였던 1970년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지난 10년간 200조 원이 넘는 지출에도 저출산 정책이 출산을 하락추세를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간의 정책은 아동 수당, 보육료 지원 등 금전 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도와줄 육아휴직 확대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듯이, 저출산은 더이상 소득의 문제가 아니다. 표에 의하면 40~45세 기혼 여성들을 부부 소득에 따라 5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녀 수 차이가 0.16명에 불과하여 소득 수준별로 자녀 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월 784만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자녀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는, 노벨상 수상자인 Gary S. Becker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현대 사회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금전적인 비용보다 어머니들의 시간 비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 소득 수준별 기혼 여성의 자녀 수

40~45세 유배우자 기혼 여성		부부소득				
		하위 20%	차상위 20%	중위 20%	차하위 20%	상위 20%
2013년	자녀 수(명)	1.68	1.87	1.77	1.93	1.85
	소득(만원/월)	183.3	304.0	397.0	523.3	809.0
2020년	자녀 수(명)	1.69	1.75	1.88	1.77	1.85
	소득(만원/월)	247.2	390.6	484.4	606.6	1,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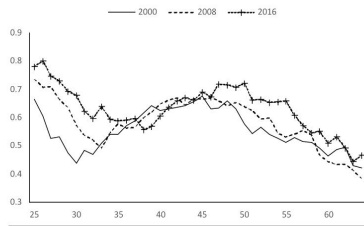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각 년도

어머니들은 사회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필요한데 정책은 금전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기존 정책은 수요에 잘 부응한 정책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저출산 추세를 둔화시키거나 반전시킬 수 있으려면 어머니들의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정책은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어머니들에게 일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돌보라는 정책에 불과하므로 현실점에서 어머니들의 수요에 제대로 부응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어머니들이 굳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즉, 어머니들을 자녀 양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어머니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녀에게서 어머니들이 일·가정 양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자녀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각 학교급별 자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자녀 유형을 파악한 결과를 제시한다.⁽¹⁾ 지금까지는 신생아와 3세 이하 영유아들에게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왔고, 이에 따라 저출산 정책도 영유아 보육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근으로 올수록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심화 되는 양상은 오히려 취학 자녀에게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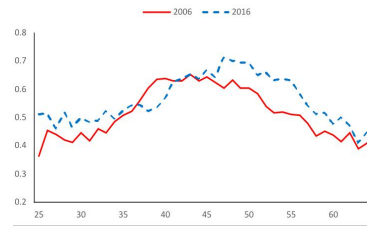
〈그림 7〉은 여성의 연령대 취업률을 비교하고 있는데, 연령별 취업률은 전형적인 M-자 형을 보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그 위치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다. 30대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을 반영하는 취업률 최저점 연령은 2000년 30세에서 2016년 38세로 증가하였는데, 동일 기간 내 초혼 연령은 26.5세에서 30.1세로 3.6세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어 최저점 연령이 증가한 것이 만혼 추세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1) 아래에 제시된 실증분석 결과는 김대일(2018)에서 인용된 것임을 밝혀 둔다.



출처: 김대일(2018)

〈그림 7〉 여성 연령별 취업률



출처: 김대일(2018)

〈그림 8〉 기혼 여성 연령별 취업률

기혼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을 비교한 〈그림 8〉에 의하면, 2006년과 2016년 기간 동안 유독 37~42세 연령층에서 취업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그림 7〉의 최저점 연령 이동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기준 37~42세 기혼 여성은 평균적으로 초혼 연령이 27~28세 수준이었던 2002~07년에 결혼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의 취업률이 감소한 것이 3세 이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결혼 이후 10년 이상 지난 여성들에게서 취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보다 연령이 높은 자녀들의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학교급별 자녀가 어머니 취업에 미치는 효과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도 어머니의 취업확률을 각 학교급별 자녀 수의 함수로 추정한 결과를 비교한다.⁽²⁾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2006년과 2016년에 관측된 25~64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자녀가 취업률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에 의하면 3세 이하 영유아가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미치는 효과의 추정계수는 2006년 -.938에서 2016년 -.685(절대값으로)로 감소하였으며, 이를 한계효과로 전환할 경우, 2006년 -.234에서 2016년 -.169로 나타난다.⁽³⁾ 즉, 3세 이하 영유아가 2006년에는 어머니의 취업률을 23.4% 낮추었지만, 2016년에는 16.9%로 그 효과가 크게 감소하

(2) 추정 모형은 로짓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자녀 변수 이외에 어머니 본인의 학력, 연령의 2차 함수 및 로그 비근로 소득을 통제하였다.

(3) 2006년과 2016년 표본의 취업률은 51.0%와 56.3%이며, 한계효과는 로짓 모형의 특성상 추정 계수에 취업률*(1-취업률)을 곱하여 추정되었다.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4~6세 미취학 자녀로 인해 어머니의 취업이 감소하는 효과를 추정하면, 2006년 11.1%에서 2016년 7.9%로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미취학 자녀들이 어머니 취업에는 아직도 부정적이지만, 그 효과는 완화된다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기혼 여성 취업에 미치는 자녀의 효과 추정(로짓 모형)

	2006년	2016년
자녀 없음=1	.324 (.095)***	.273 (.118)**
3세 이하 자녀 수	-.938 (.078)***	-.685 (.097)***
4~6세 자녀 수	-.443 (.070)***	-.323 (.088)***
초등학생 자녀 수	-.172 (.048)***	-.306 (.066)***
중학생 자녀 수	.122 (.065)*	.071 (.091)
고등학생 자녀 수	.135 (.070)*	-.001 (.089)
초졸 이상 자녀 수	.131 (.054)**	.240 (.074)***
log likelihood	-5,392.42	-3,326.3
관측치	8,400	5,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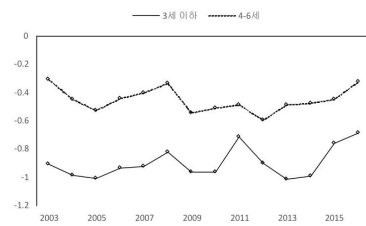
주: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 5% 수준에서 유의, ***, 1% 수준에서 유의

표본은 25~64세 기혼 여성으로 한정. 괄호 안 수치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임.

출처: 김대일(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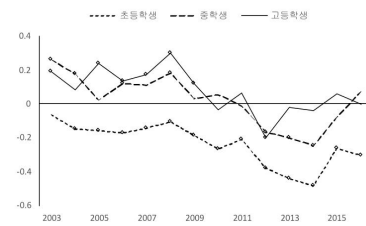
반면, 초등학생 이상 취학 자녀의 부정적 효과는 반대로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초등학생 자녀가 어머니의 취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2006년 4.3%에서 2016년 7.5%로 증가하였고, 2006년 중학생 자녀는 어머니의 취업을 3.0%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16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6년 고등학생 자녀도 어머니 취업을 3.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2016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2006년과 2016년 사이에 초등학생 자녀가 어머니의 취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심화되었고, 중고등학생 자녀가 어머니의 취업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취학 자녀들의 경우 미취학 자녀들과 반대로 어머니의 취업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효과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지 2006년과 2016년 두 시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뚜렷한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9-10〉은 연도별로 추정된 학교급별 자녀의 추정계수를 보이는데, 3세 이하와 4~6세 자녀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어머니 취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취학 자녀에서는 뚜렷하게 그 효과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심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으로 올수록 취학 자녀들이 어머니의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심화되는 추세는 함께 출산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양상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통상적으로 어머니 취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미취학 자녀의 효과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취학 자녀의 효과 변화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김대일(2018)

〈그림 9〉 학교급별 자녀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효과 추이 I



출처: 김대일(2018)

〈그림 10〉 학교급별 자녀의 어머니 취업에 대한 효과 추이 II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어머니의 시간 투입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자녀는 초등학교 생을 비롯한 취학 자녀라고 평가되며, 최근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배경에 미취학 자녀보다는 취학 자녀로 인해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지는 양상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취학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현시점에서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 방과 후 돌봄이 어머니의 시간 투입을 줄여 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교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가 취학 자녀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있어서 스위스, 칠레 등에서 방과 후 학교의 효과가 입증되었고, 멕시코와 칠레에서 학교 시간 연

장의 효과도 입증된 바가 있다.⁽⁴⁾ 특히 Takaku (2019)는 일본에서 초등학교 시간 연장이 어머니의 시간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현 임시제도로 인한 어머니의 시간 투입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맹목적인 대입 준비기관이 아니라 10대 자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화를 거치며 성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즉, 이제는 어머니들을 영유아 자녀 보육뿐 아니라, 취학 자녀의 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 당국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눈과 귀를 닫고 외면할수록, 저출산 대책에 지출되는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고 저출산 추세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 대 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880-6364
메일: dikim@snu.ac.kr

(4) Felfe et al (2016), Contreras and Sepulveda (2016), Martinez and Peticara (2017), Padilla-Romo and Cabrera-Hernandez (2019) 및 Berthelon et al (202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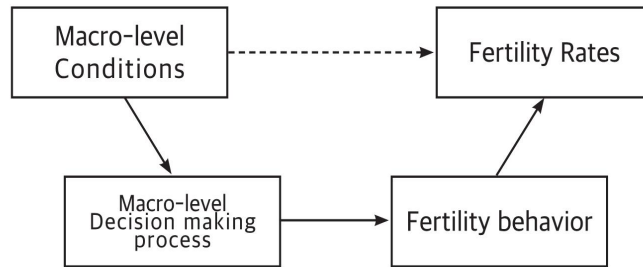
- 김대일(2018): “기혼 여성의 고용 변화와 자녀의 효과”, 『경제학 연구』, 제66권 제3호, 123-166.
- 남국현·김대일(2016):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25-52.
- Berthelon, Matias, Diana Kruger, and Melanie Oyarzun (2022): “School schedules and mothers’ employment: evidence from an education reform Review of Economics and Household”, Published online.
- Contreras, D., & Sepúlveda, P. (2016): “Effect of Lengthening the School Day on Mother’s Labor Supply”, World Bank Economic Review, 31(3), 747–66. <https://doi.org/10.1093/wber/lhw003>.
- Felfe, C., Lechner, M., & Thiemann, P. (2016): “After-school care and parents’ labor supply”, Labour Economics, 42, 64–75.
- Martínez, C., & Peticara, M. (2017): “Childcare Effects on Maternal Employment: Evidence from Chil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26, 127–37. <https://doi.org/10.1016/j.jdeveco.2017.01.001>.
- Padilla-Romo, M., & Cabrera-Hernández, F. (2019): “Easing the constraints of motherhood: the effects of all-day schools on mothers’ labor supply”, Economic Inquiry, 57, 890–909. <https://doi.org/10.1111/ecin.12740>.
- Takaku, R. (2019): “The wall for mothers with first graders: availability of afterschool childcare and continuity of maternal labor supply in Japan”,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7(1), 177–99. <https://doi.org/10.1007/s11150-017-9394-9>.

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산

이 소 영

1. 배 경

가치관이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평가의 근본적 태도를 의미한다. 인간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미래의 행위를 계획하므로 가치관은 혼인과 출산, 자녀 양육과 이주(이동)와 같은 인구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한국인구학회, 2016, p.39). 개인의 출산 행동을 설명하는 가치관은 다음의 두 이론에서 발전되어왔다. 우선, 미시·거시 관점에서의 재생산 의사 결정 모형(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project model)은 출산율(fertility rates)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거시적인 요인과 미시적인 요인을 도식화하고 있다. 출산율은 간접적으로는 거시적인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미시적인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거시적 차원의 국가 경제 상황은 개인의 경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개인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의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출산 행위에 이르게 된다. 이 모형에서는 미시 수준의 의사 결정 과정과 출산 행위를 이해하는 이론적 틀로 계획한 행위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한 행위 이론에 따라 출산의 의도(intentions)는 의사 결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며, 이는 태도(attitudes),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인지한 행위의 통제(perceived behavioural control)에 의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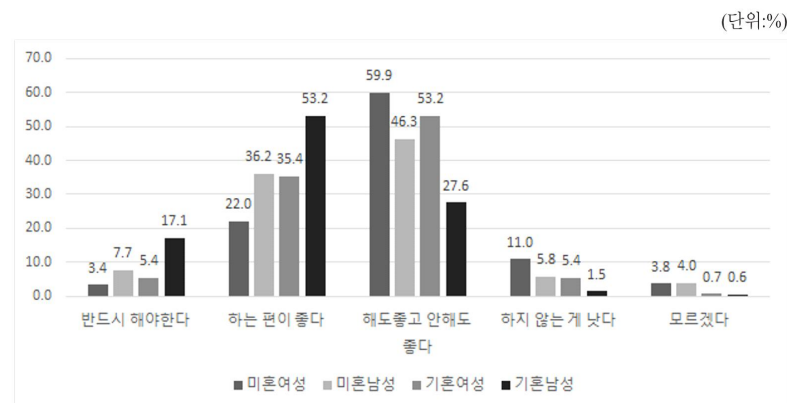
출처: Philipov 외 (2015).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European Commission; 이소영 외 (2019, p.17.)

〈그림 11〉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Project Model

또한, 가치관의 변화는 제1차 인구변천이론(고전적 인구변천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출산율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제2차 인구변천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을 통해 출산율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제1차 인구변천이론은 근대화, 산업화 이전의 고출생과 고사망의 균형에서 비약적인 인구 자연 증가 이후 저출생, 저사망이라는 새로운 균형으로의 이행을 논의한다. 다시 말해 출산율의 변동이 궁극적으로는 인구가 재생산되는 대체출산율에서 멈추어 장래에는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구 자연 증감 수준은 항상성(homeostasis)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고전적 인구변천 이론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지속적인 출산율의 하락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처럼 고전적 인구변천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인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2차 인구변천이 등장하게 된다. 제2차 인구변천이론은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사고의 전환(ideational changes)으로 인해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가설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가치관은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저출산이 지속화되고 고착화된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서 가치관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가치관의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을 주기로 수행하고 있는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복지 실태조사)는 국가 승인통계를 생산한다. 가족과 출산 조사는 결혼관과 자녀관에 관한 종단적이며 횡단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혼관과 자녀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9~49세 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혼인 상태와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특성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기혼남성에게서 가장 높았고(17.1%), 다음으로 미혼남성(7.7%), 기혼여성(5.4%), 미혼여성(3.2%)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혼여성이 11%로 네 집단 중 가장 높게 나



주: $p = .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그림 12〉 19~49세 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21

타났고 기혼남성의 경우는 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해보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강한 긍정으로 응답한 비율은 2000년 19.2%에서 2021년 5.3%로 급감하였다. 긍정(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의 응답 비율은 2000년 약 39.7%에서 2021년 40.7%로 9%p 하락하였다. 또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유보적 견해는 2000년 44.2%에서 2021년 53.1%로 증가하였다. 반면 ‘하지 않는 게 낫

〈표 3〉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00~2021

(단위: %)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	계
2000년	19.2	30.5	44.2	5.4	0.8	100
2003년	21.5	29.4	40.8	7.8	0.6	100
2006년	22.1	31.6	42.4	3.9	0.0	100
2009년	22.5	32.5	40.2	4.7	0.0	100
2012년	17.8	42.7	34.8	4.5	0.3	100
2015년	11.5	37.7	44.4	6.0	0.4	100
2018년	9.0	30.4	53.3	6.8	0.3	100
2021년	5.3	35.4	53.1	5.5	0.7	100

주: 2021년은 19~4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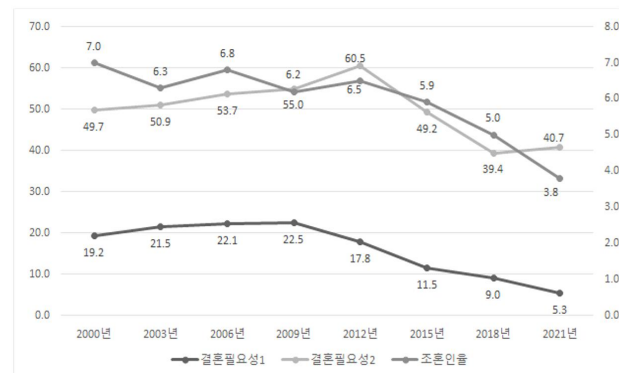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다’라는 부정의 견해는 지난 21년 동안 유사한 수준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15~49세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강한 동의(반드시 해야 한다) 및 동의(반드시 해야한다+하는 편이 좋다)의 비율과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산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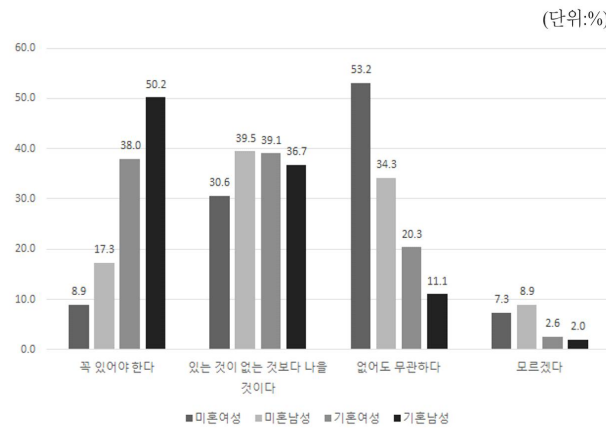
주1.: 필요성 1은 ‘반드시 해야한다’ 응답 비율, 필요성 2는 ‘반드시 해야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 응답 비율의 합.

주2: 2021년은 19~49세.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그림 13〉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과 결혼인율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출산은 법률혼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결혼관의 변화는 자녀관의 변화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나타난 19~49세 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혼인 상태와 성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이며 혼인 상태와 성별로 구분한 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꼭 있어야 한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기혼남성(50.2%)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기혼여성(38.0%), 미혼남성(17.3%), 미혼여성(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없어도 무관하다’하는 부정의 응답 비율은 미혼여성에게서 가장 높게(53.2%) 나타나고, 다음으로 미혼남성(34.3%), 기혼여성(20.3%), 기혼남성(11.1%) 순으로 나타났다.



주.: $p = .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그림 14〉 19~49세 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21

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관한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해보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강한 긍정으로 응답한 비율은 1985년 80.9%에서 2021년 38.0%로 42.9%p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없어도 무관하다’라는 부정의 응답은 1985년 8.9%에서 20.3%로 크게 증가하였다. 긍정(꼭 있어야 한다+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의 응답 비율은 1985년 90.6%에서 2021년 77.1%로 13.5%p 하락하였다.

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강한 동의(꼭 있어야 한다) 및 동의(꼭 있어야 한다+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의 비율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2015년부터 강한 동의 및 동의의 비율과 합계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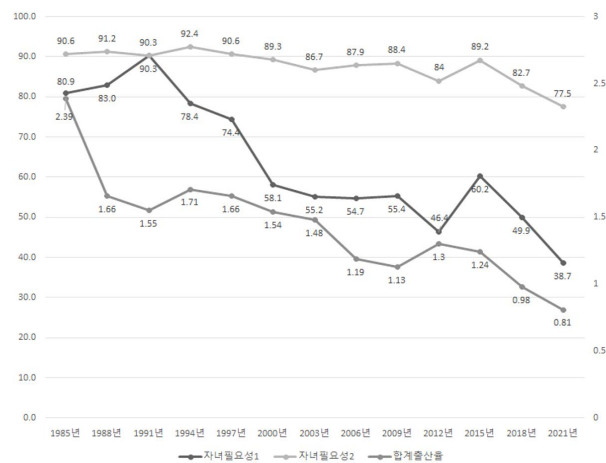
145

〈표 4〉 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1985~2021 (단위: %)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관하다	모르겠다	계
1985년	80.9	9.7	8.9	0.5	100.0
1988년	83.0	8.2	8.7	0.2	100.0
1991년	90.3	N/A	8.5	1.2	100.0
1994년	78.4	14.0	7.5	0.2	100.0
1997년	74.4	16.2	9.1	0.3	100.0
2000년	58.1	31.2	10.2	0.6	100.0
2003년	55.2	31.5	12.7	0.5	100.0
2006년	54.7	33.2	12.1	N/A	100.0
2009년	55.4	33.0	11.6	N/A	100.0
2012년	46.4	37.6	15.7	0.3	100.0
2015년	60.2	29.0	10.6	0.1	100.0
2018년	49.9	32.8	16.9	0.4	100.0
2021년	38.0	39.1	20.3	2.6	100.0

주: 2021년은 19~49세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주1: 필요성 1은 '꼭 있어야 한다' 응답 비율; 필요성 2는 '꼭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응답 비율의 합. 주2: 2021년은 19~49세.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그림 15〉 기혼여성(15~49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

3. 가치관과 인구정책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6년 국가의 중장기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을 시작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이 후 5년마다 수립되어 현재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서 드러난 가치관의 변화와 이를 바라보는 정책적 관점, 그리고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가치관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발전 가능 사회라는 비전과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영유아 보육비,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결혼 및 출산 연령층(25~34세)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의 경제적 요인,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와 같은 가치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치관을 저출산의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가치관 요인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목적을 가지로 전략적인 교육과 홍보 실시가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다. 저출산·고령화 실태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국민인식을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국민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교육과 홍보가 추진되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은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 국가로 도약이라는 비전과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으로 인구정책의 특성은 사회문화 및 가치관 변화와 연관되었다고 규정하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홍보·교육을 통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국민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정책 추진 방향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일·가

정 양립 강화, 가치관 변화 대응 등이 적절히 어우러진 정책 조합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사회적 운동과 생애주기별 교육과 홍보가 주요 과제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저출산이 초래할 심각성을 강조하는 국가적·애국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개인적·감성적 방향의 긍정적 가치관을 조성하고, 가족 및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생명 존중 의식 제고, 양성평등 의식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등의 인식과 환경 변화에 주력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과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및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인식을 전환하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 확대라는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세부 과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과 홍보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사회·지리, 통합사회, 도덕, 가정(실과) 교육 과정에 건전한 가족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인식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군 교육과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인구교육·직장교육을 통해 인식·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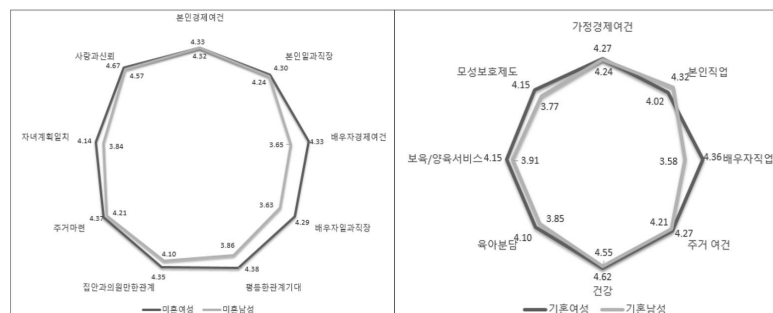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라는 비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과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 등의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전통적이며 경직적인 가족 규범과 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과 결혼과 출산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는 청년층 가치관의 변화 등을 문화 가치관 측면의 원인으로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기반 강화 영역의 정책 방향의 하나로 가치관과 관련된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 가치관 및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족관계, 부모·자식 관계와 소통 방식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가족문화를 모색하고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등 인식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를 세

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4. 시사점

2021년 수행된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19~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결정에 고려하는 항목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5점)’의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사회경제적 요인은 안정된 주거 마련(4.24점), 본인의 경제적 여건(4.18점), 본인의 일과 직장(4.17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혼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본인의 경제적 여건(4.33점)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으로 본인의 일과 직장(4.24점), 안정된 주거 마련(4.21점)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미혼여성에게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이 외에도 미혼여성의 경우는 공평한 가사 분담 등 평등한 관계에 대한 기대(4.38점),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4.33점), 배우자의 일과 직장(4.29점)을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49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자녀 출산 결정에 고려하는 항목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5점)’의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혼남성의 경우 자녀 출산 결정에 있어서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요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4.55점), 본인의 안정된 직업(4.32점), 가정의 경제적 여건(4.24점), 주거 여건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그림 16〉 결혼 및 자녀 출산의 주요 요인

(4.21점)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 출산 결정에 있어서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요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4.72점), 배우자의 안정된 직업(4.36점), 가정의 경제적 여건(4.27점), 주거 여건(4.27점), 모성보호제도의 이용 가능성(4.15점),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4.15점), 배우자의 육아 분담(4.10점), 본인의 안정된 직업(4.0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결혼과 출산의 선택은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는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결혼을 선택하고 자녀 출산을 선택하기 위해 건강 요인, 고용과 주거 등의 경제적인 여건, 보육 및 양육 서비스의 이용성과 같은 인프라 요인, 본인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이용 가능성과 같은 제도적 요인 등 사회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은 더이상 효과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 결혼과 자녀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는 개인의 결혼과 자녀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이라는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 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소: 세종시 시청대로 370

전화: 044-287-8110

메일: sylanne@kihasa.re.kr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 박종서 · 임지영 · 김은정 · 변수정 · 이소영 · 장인수 · 조성호 · 최선영 · 이해정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실태조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 장인수 · 이삼식 · 이철희 · 신손문 · 신성호 · 박현경 · 손인숙 · 손호성 · 오수영 · 최
용성(2019):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인구학회(2016): 인구대사전』, 통계청.
- Philipov, D., Liefbroer, A. C., Klobas, J. E. (2015):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Springer.

2. 각 행사 프로그램과 발표자료

- (1) “인구변화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비교적인 시각”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 (2) 2022 동아일보 뉴센테니얼 포럼 공동 조직 및 참여
- (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저출산 문제 관련 포럼 개최
- (4)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돌봄 서비스 관련 포럼 개최

The Population Dimension in East Asian Development

David N. Weil

Brown University

Prepared for the Korean Economic History Society

August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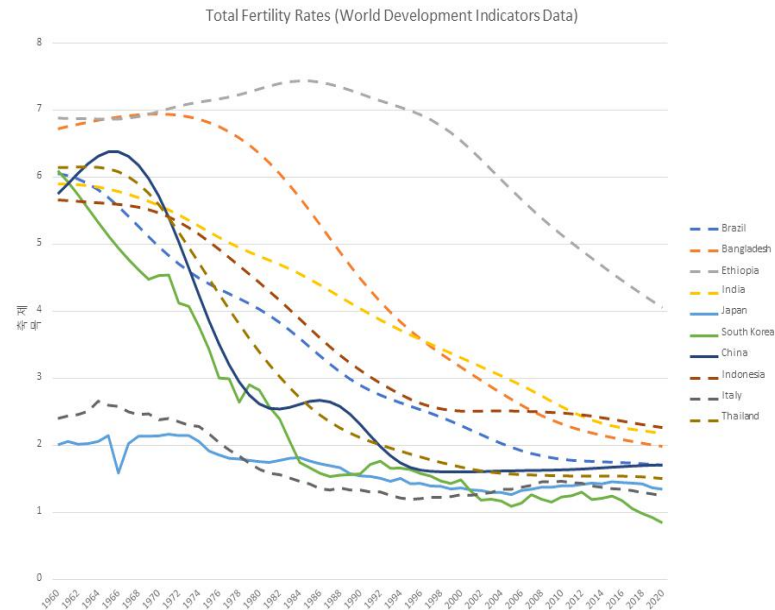
General Framing

- East Asia has an unusual history in terms of economic growth.
 - Japan, S. Korea, and China among the fastest growing large countries.
- East Asia also has an unusual population history.
 - Among the fastest fertility transitions (at least for S. Korea and China).
 - Among the lowest fertility rates.
 - Among the fastest aging.
 - High population density prior to the demographic transition.
- I want to ask what these things had to do with each other.
 - Causality one way, both ways, or from identifiable third factors?
 - I do *not* want to make any claim that fertility restriction was the key to east Asian economic success.
 - I do want to think quantitatively about how much of the rapid growth in east Asia was due to the unusual population history.

Outline

1. Fertility transition speeds and their determinants
 2. Dependency, aging, and sub-replacement fertility
 3. The contribution of fertility reduction to economic growth
 4. Quality-adjusted population density
-

Fertility Transition Speeds



Speed and Size of Fertility Transitions

- Informal econometrics: for each country, I looked at the period of largest consistent decline in the TFR.

• France (1800, 4.4) (1910, 2.6)	.16 per decade
• United States (1845, 6.1) (1935, 2.2)	.43
• United Kingdom (1880, 4.9) (1935, 1.8)	.56
• Sweden (1900, 4.0)(1935, 1.7)	.66
• Italy (1910, 4.4)(1960, 2.3)	.42
• Japan (1950, 4.0)(1960, 2.2)	1.8
• Brazil (1965, 6.0) (2005, 2.1)	.98
• S. Korea (1960, 6.3) (1990, 1.6)	1.6
• Thailand (1970, 6.0) (1990, 2.3)	1.9
• China (1970, 6.3) (1985, 2.5)	2.5
• Bangladesh (1980, 6.6) (2010, 2.5)	1.4

What Causes Fertility Transitions? (The Usual Suspects)

- Decline in mortality
 - Changes in economic structure
 - Return to human capital, social safety net
 -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culture (“modernization”)
 - Women’s rights, urbanization
 - Changes in contraceptive technology
 - Soft government persuasion
 - Propaganda, support for family planning, etc.
 - Hard government persuasion
 - One-child policy in China
-

What Causes Fertility Transitions? (The Usual Suspects)

- These factors may matter different amounts in different cases of fertility transition.
 - Vary across countries
 - Vary on average over time
- No one has a good quantitative decomposition of which factors mattered how much in any give case, much less how it varied across 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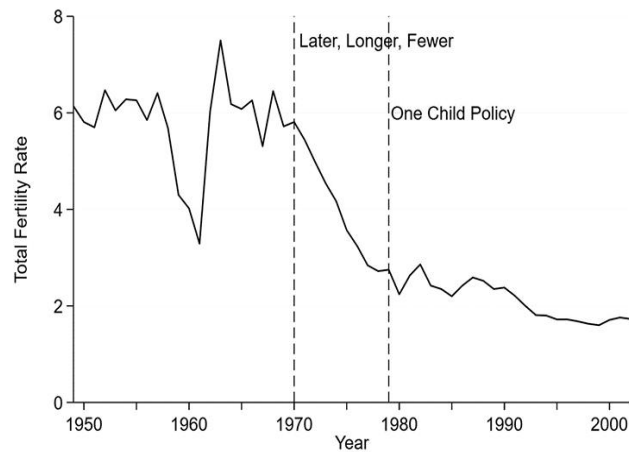
Fertility Reduction Policy in South Korea

- As of 1960: TFR 6.0
 - Starting in 1961, series of 5-year plans to promote fertility restriction
 - Female family planning workers were assigned to townships who would issue coupons to motivated couples to get free contraceptive supplies and also directed people to designated doctors for vasectomies and IUDs.
 - Priority in public housing was given to couples that accepted sterilization and had two or fewer children; also direct payments to low income people who agreed to be sterilized.
 - Income tax rules were adjusted to disincentivize children beyond two.
 - Family laws were revised to give women greater inheritance rights for family property (to counter son preference).
-

Fertility Reduction Policy in China

- “Later, Longer, Fewer” starting in early 1970s
 - *Later* women encouraged to wait until 23 in rural areas and 25 in cities
 - *Longer* spacing between births, of 3-4 years.
 - *Fewer* three in rural areas and two in cities.
 - advocacy and education, provision of contraception, incentives including higher wages, better housing, and larger allocations of staple foods.
- “One Child” policy starting in 1979
 - Rules were much more restrictive than LLF and more stringently enforced.
 - intensive mass-education programs, mandatory IUD insertion for women with one child, abortion for unauthorized pregnancies, and sterilization for couples with two or more children.
 - Incentives for compliance included preferential access to health care, housing and job assignments, while couples that did not comply faced fines and the loss of access to education and other privileges.
 - Gradually phased out starting in the 1990s. Terminated in 2015.

China



- There is a large industry devoted to estimating the path of births in the absence of these policies.
- Semi-official government estimate is 400 million averted births.
- We would like to see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that takes into account the feedback from lower fertility to higher income growth back to fertility.
- We could then compare the actual path to the counterfactual path, absent the policies.

Yi and Fang, 2021.



"Let's have two children and raise them well" (1970)



"One Household Full of Love. One Child Full of Health."
From the 1980s



"Mom! Dad! I hate being alone."

Efficacy of Policies to *Raise* Fertility

- Best policy: provision of high quality child care
- Other policies: cash payments, longer (and better paid) parental leaves, incentives to employers to provide more flexible working hours, and subsidies to assisted reproduction.
- Cost: Average estimated efficacy from various studies, applied to the US case.
- Raising the TFR from the 2019 level of 1.7 up to replacement would cost \$5,300 per year per child under 18. (total of \$387 billion, or about half of the defense budget in that year.)

Stone, Lyman, "[Pro-Natal Policies Work, But They Come With a Hefty Price Tag](#)," Blog Post,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March 5,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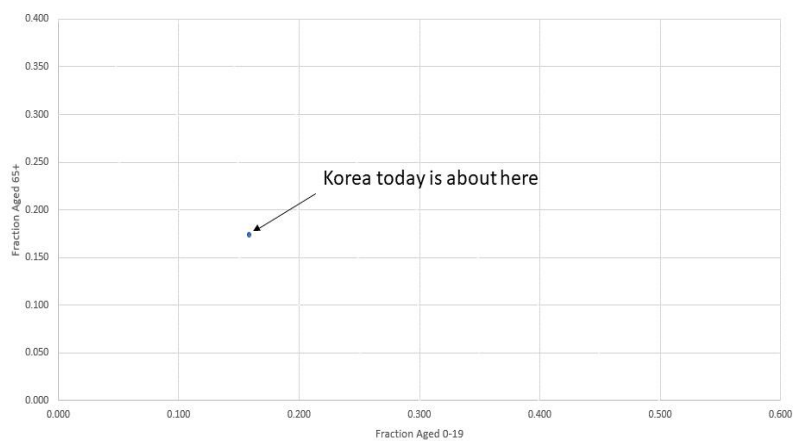
Dependency, Aging, and Sub-Replacement Fertility

Thinking About Population A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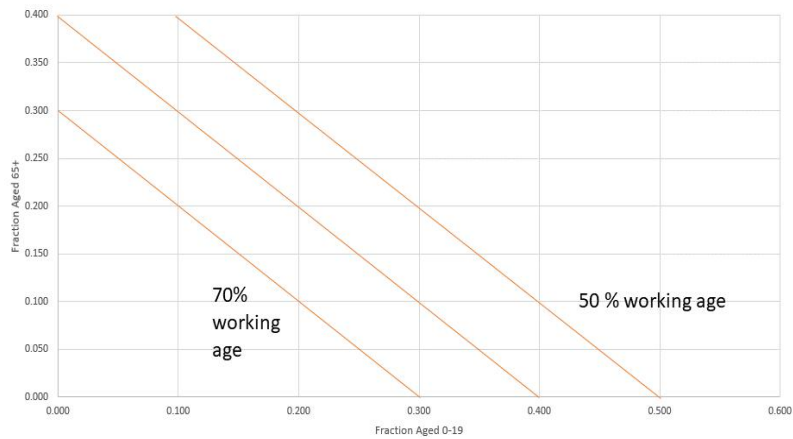
- Higher old-age dependency lowers consumption for all.
- But aging populations have fewer children, and they are dependent as well.
- We need an organizing framework to think this throu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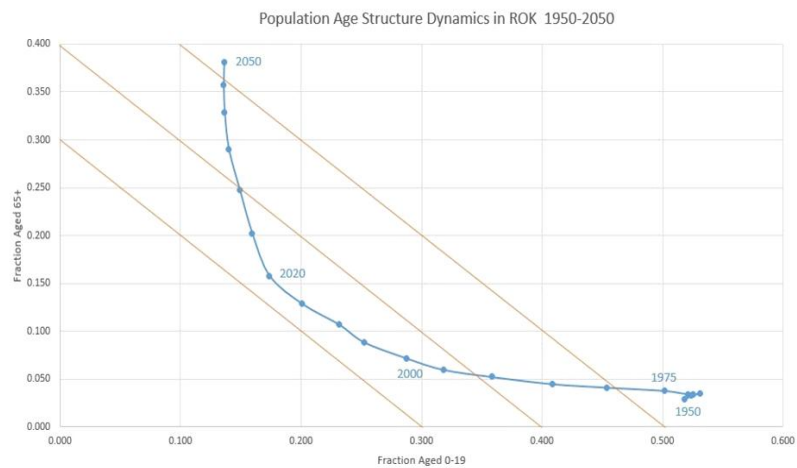
Graphing Population Dependency



Iso-Dependency Lines



Aging in Korea



Quick Calculation

- GDP per capita = GDP per worker × workers per cap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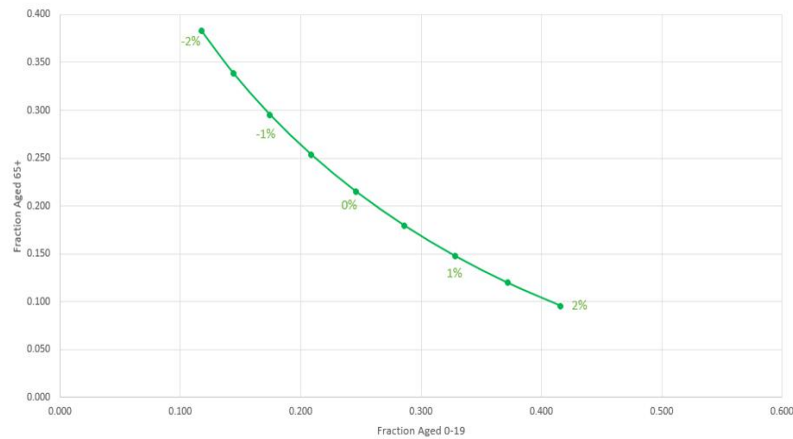
$$g_{GDP\ per\ capita} = g_{GDP\ per\ worker} + g_{workers\ per\ capita}$$

- Korea working age (20-64) share of the population
 - 1975-2000 rose from 0.46 to 0.64 → 1.3% per year “tailwind”
 - 2020-2050 will fall from 0.67 to 0.43 → -1.1% per year “headwind”
 - To be added: similar pictures for Japan, China, and a few other countries.
-

A Different Perspective

- Changes in fertility feed through to affect the population age structure only gradually.
 - The pig in the python.
- When fertility falls rapidly (as in Korea), there is a period during which both old-age and youth dependency rates are low.
 - This is often called “the demographic dividend.”
- This can’t last!
- *Stable Population*: A population in which growth rate and the shares of different age groups are constant. (Results from fertility and mortality rates being constant for a long time.)

Locus of Stable Pop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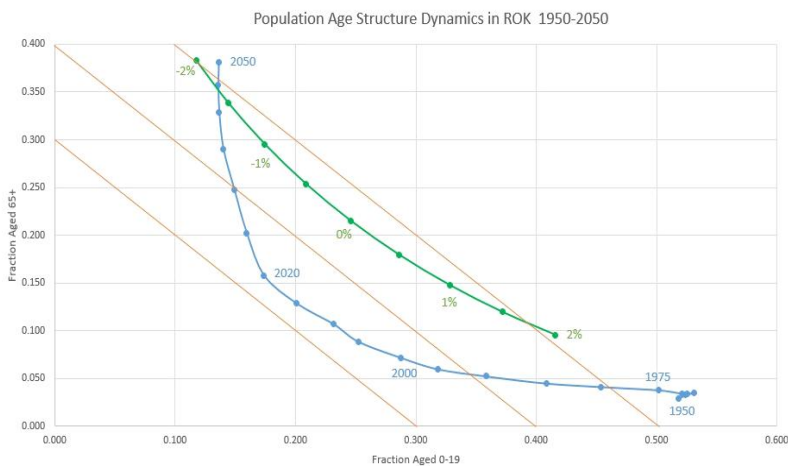
Based on Korean life table for 2020 (both sexes combined).

Labels show population growth rates.

The consumption maximizing stable population is at the tangency of this curve with the 45-degree line.

Takeaways:

- The current low level of dependency is feasible as a steady state.
- Dependency differences among different population growth rates are small relative to what Korea is going through.
- Raising fertility to achieve constant population size would mean an even bigger dependent burden for many decades!



Demographic Meltdown!

- Future aging is driven by current and recent low fertility.
- That low fertility was *not* due to slow economic growth.
- But if you thought that slow economic growth due to aging would further lower fertility, then there is the possibility of a “demographic meltdown.”

Some Nuance

- Old people may cost more than children – that would change the slope of the iso-dependency lines.
- Support for the old is done more by governments, while support for the young is done more by families. So aging raises the size of government.
- The borders of what constitutes “old” and “young” can change.
- Simple model ignores capital investment and natural resources.
 - But if you put these in, you get the conclusion that the optimal population growth rate is lower.
- I don’t think that these observations affect the basic points.
 - The end of the demographic dividend is a bad thing, but it was inevitable.
 - Consumption per capita in a stable population that is shrinking is not that different from consumption per capita in a stable population with constant size.

The Contribution of Fertility Reduction to Economic Growth

A Richer Quantitative Model

- We want to know the effect of fertility reduction on economic growth.
- Fertility rate and economic growth are both endogenous variables.
- You can't just regress growth on fertility to learn the structural effect.
- There are not good instruments at the national level.

- Ashraf, Weil, and Wild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13) use a parameterized simulation model to address this ques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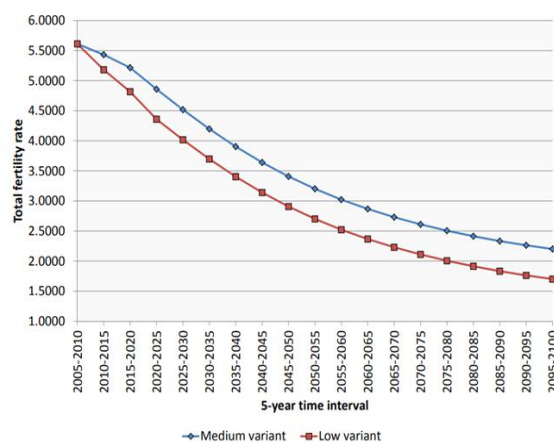
Ashraf, Weil, and Wilde

• Channels by which fertility affects output per capita:

- Dependency rates
- Solow (capital deepening)
- Malthus (fixed factors)
- Human capital (quality-quantity)
- Life-cycle saving
- Life-cycle labor supply
- Experience
- Child care time
- Boserup (omitted)

Each channel is
parameterized based
on microeconomic
ev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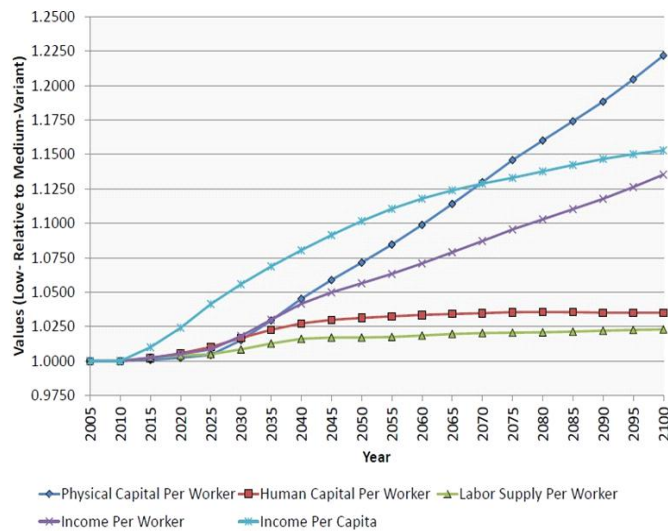
Ashraf, Weil, and Wilde (continued)



- “experiment” is a reduction in the TFR of 0.5 (relative to medium variant projection) starting in 2010 and phased in over 15 years.

FIGURE 1: The time paths of the total fertility rate by demographic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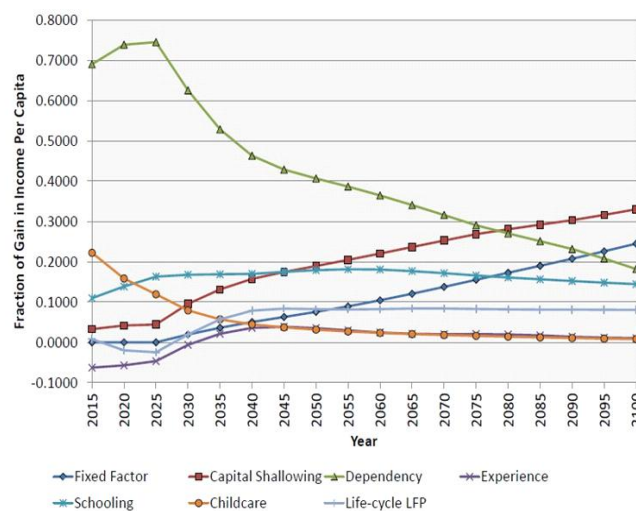
Results



Results are relative to a baseline in which there is not the extra reduction in fertility.

At a horizon of 50 years, GDP per capita is 12% higher a result of the extra fertility reduction.

Channel Decomposition



For the first 3 decades, the change in dependency is the dominant channel.

At horizon of 70 years, dependency, pressure on natural resources, capital deepening, and schooling are roughly equal in importance.

Size of the Effect

- Simulation says an exogenous reduction in TFR raises GDP per capita by 12% at a horizon of 50 years.
 - The “unexpected” amount of TFR reduction in Japan and Korea was about 1.0.
 - So that explains growth by a factor of 1.25 over a 50 year period.
 - About 0.5% per year extra growth of GDP per capita.
 - Maybe can explain 1.0% per year in China.
 - That would say that the rapid reduction in fertility is not a huge part of the east Asian story.
 - Or that the model is missing something.
-

Quality-Adjusted Population Density

Population Den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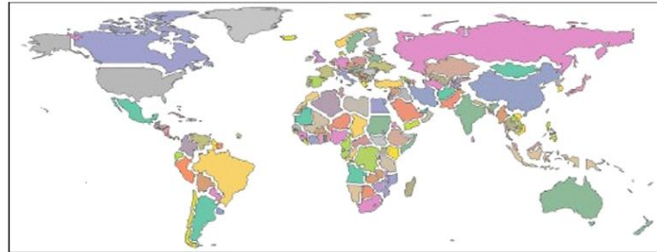
- Worries about “overpopulation” during population explosion of the 20th century focused on the ratio of people to natural resources.
 - For developed countries that trade in world markets this is less important than for poor countries reliant on peasant agriculture.
 - But we still might care.
 - Are east Asian countries particularly densely populated?
 - Conventional population density (people per square km) might be a bad measure, because land differs in characteristics.
-

Quality Adjusted Population Den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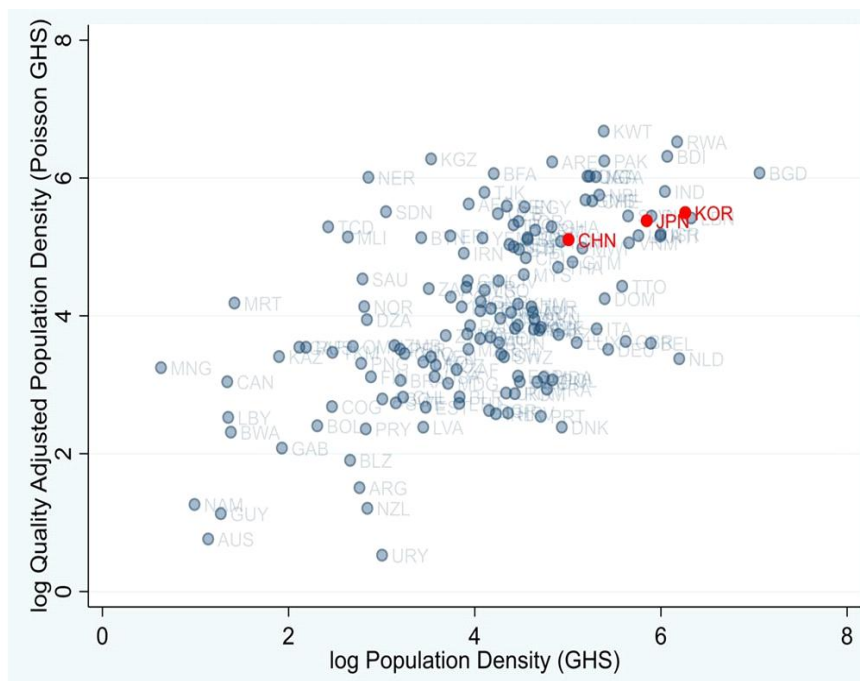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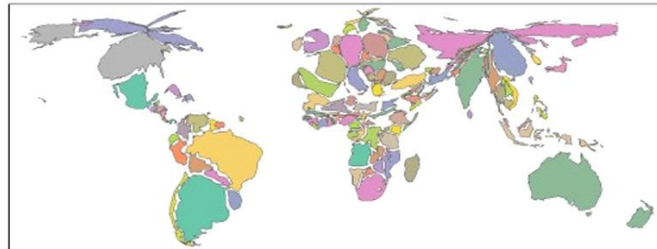
- Henderson, Storeygard, and Weil (working paper, 2022), “Land Quality”
- Estimates weights on geographic characteristics to create a summary measure of land quality.
 - Based on a regression of population density in grid squares on ge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ountry fixed effects.
- For every country, we can calculate
 - Quality Adjusted Area (QAA)
 - Quality-Adjusted Population Density (QAPD)

Figure 2. Country Level Quality Adjusted Area

A. Countries by Land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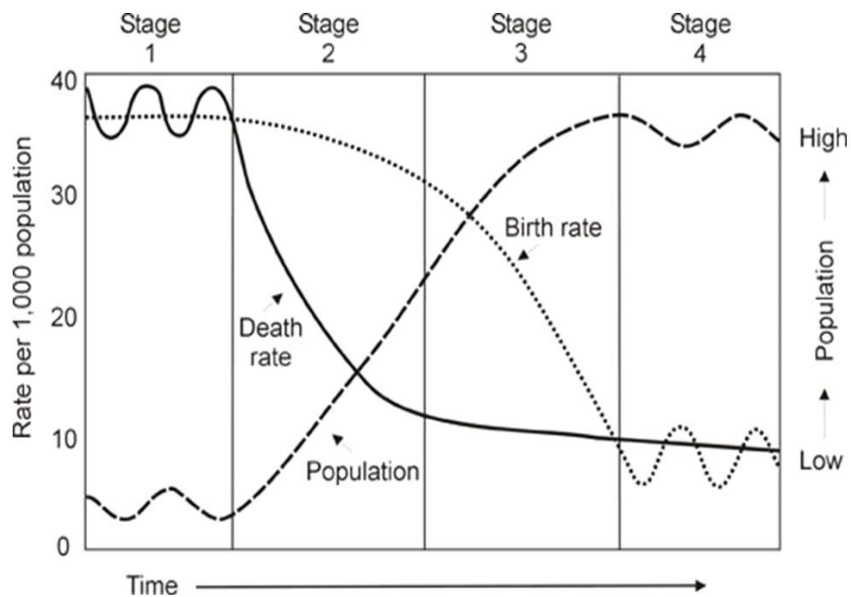
B. Countries by Quality Adjusted Area



Adjusting for land quality makes east Asian countries (particularly Korea) look less densely populated.

Another Perspective: Population Multipliers

- Population Multiplier is the factor by which population increases over the course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Multipliers 1820-2010 (Maddison data)

- France 2.0
- United Kingdom 3.0
- Spain 3.5
- China 3.6
- Japan 4.0
- S. Korea 5.3
- India 6.3
- Netherlands 7.0
- Iran 11.9
- Thailand 14.6
- Egypt 21.7
- Ethiopia 31.4

Very low values for France and UK reflect the fact that they started the demographic transition before 1820.

Overall, east Asian countries have among the lowest multipliers in the world, reflecting both lack of unused land as of 1820 and rapid fertility transitions.

Conclusions

- Conventional models say that rapid fertility transition played some role, but was not overwhelmingly important, in east Asian economic growth.
 - But maybe the conventional models are missing some channel by which fertility mattered.
- Those models also say that future aging and sub-replacement fertility will impose some moderate costs for 2-3 decades, but will not be disastrous.
 - But maybe this analysis misses some important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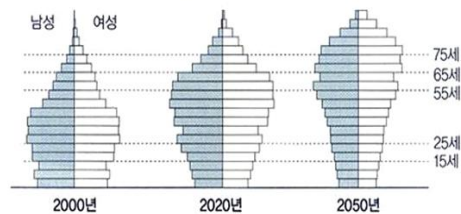
2022년 동아뉴센테니얼 포럼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대응

2022년 10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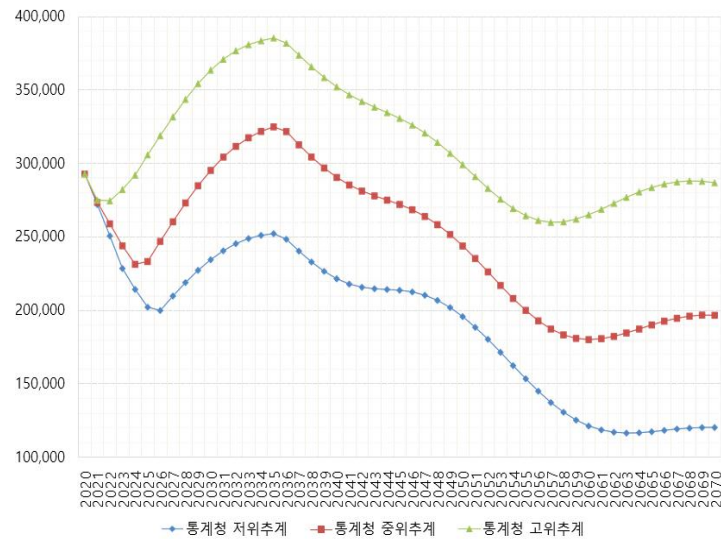
서울대 경제학부 · 국가미래전략원
이 철 희

집계적인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전망
이철희(2022b)

〈그림 1〉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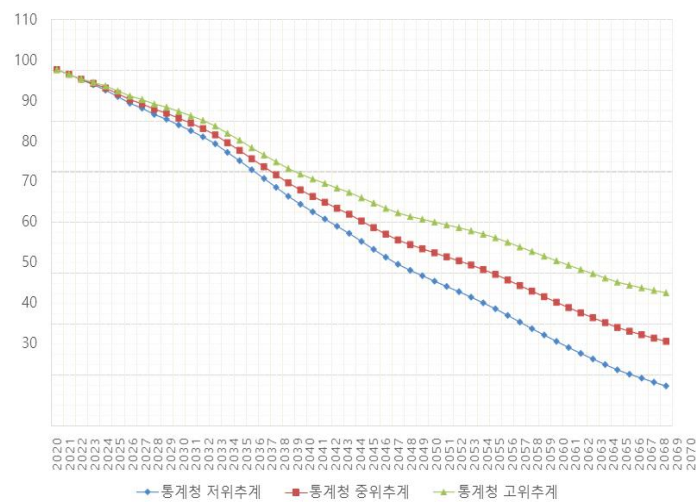
2020-2070년 출생아 수 추계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 추계

(2020년 대비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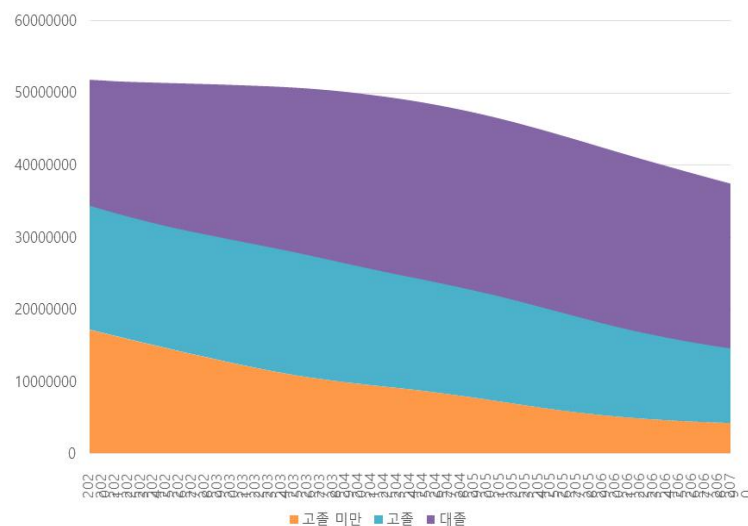
2070년 38%(저위) ~ 46% (중위) ~ 56% (고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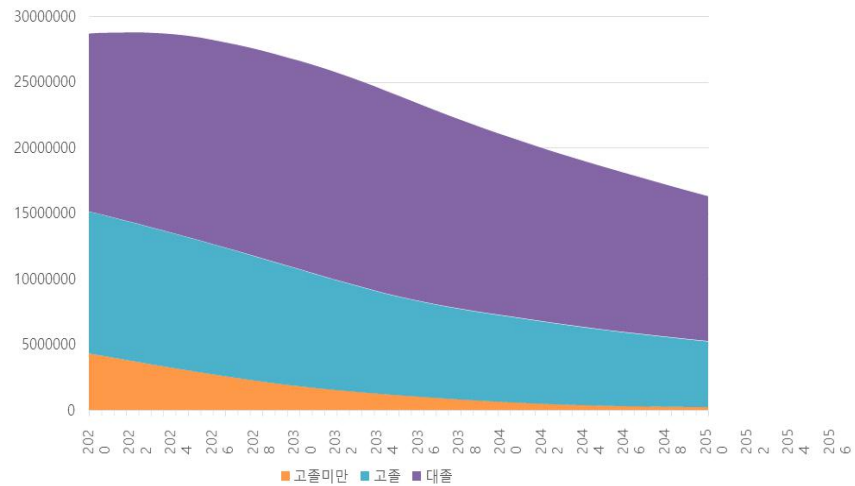
생산성을 고려한 노동투입 변화 전망

- 생산연령인구 변화는 실제 노동인구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함.
- 미래의 고령인구는 현재의 고령인구와 다름 → 생산성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 있음.
- 보다 정치한 노동인구 규모 추정
 - 고학력화의 영향을 반영 위해 교육수준별 인구 변화 추정
 -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의 장래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정.
 -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시간 당 임금을 생산성의 지표로 이용하여, 생산성 조정한 노동투입 변화 추정.
 -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이 변화하는 경우의 노동투입 변화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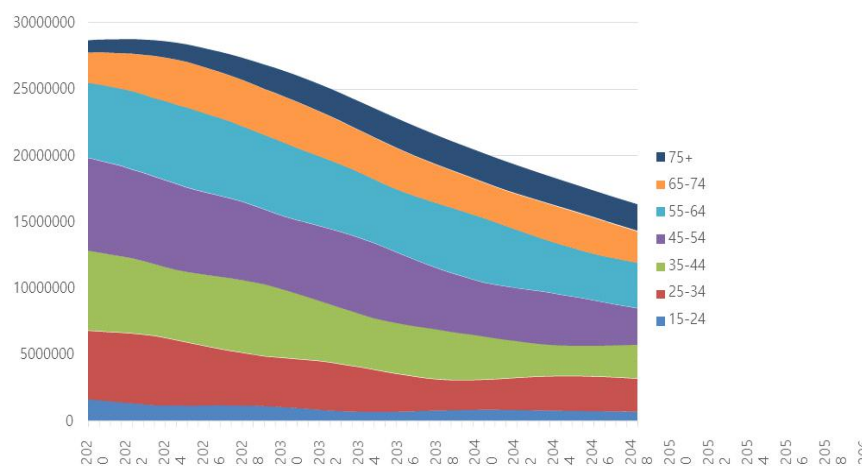
학력별 인구 추계: 2020-20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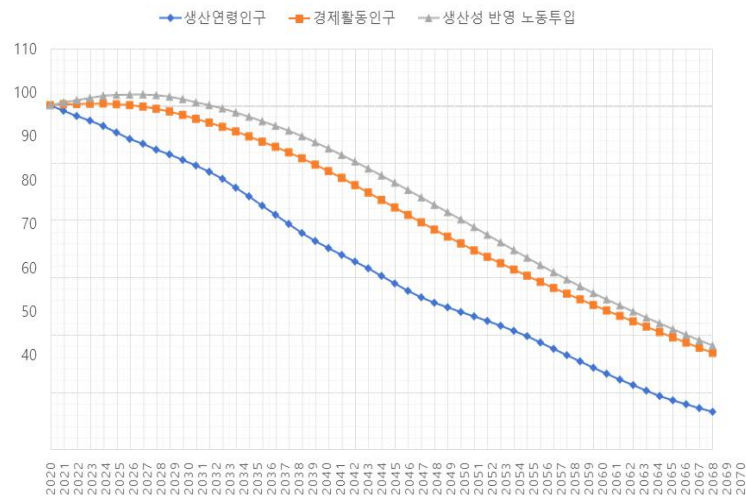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추계: 2020-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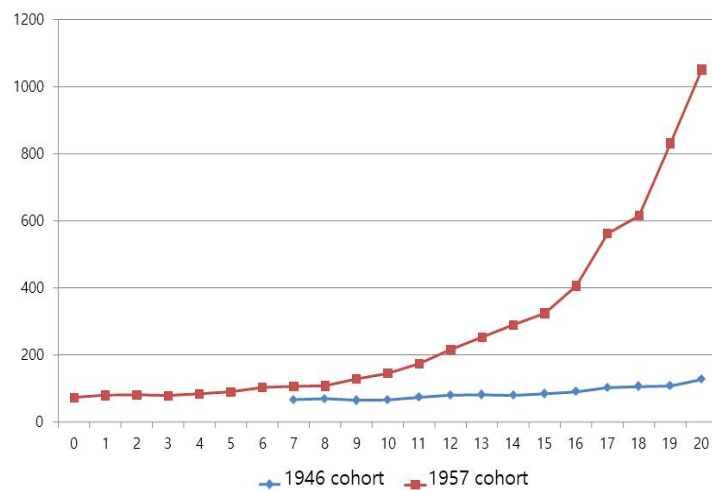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추계: 2020-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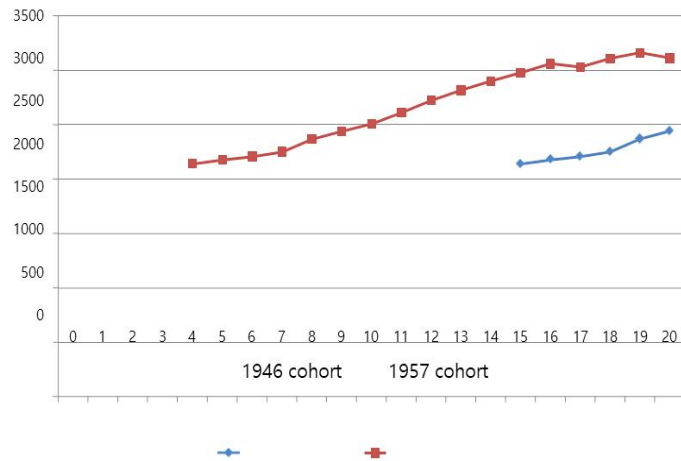
**장래 생산연령인구, 경제활동인구, 생산성 반영 노동투입
변화 추계결과 비교 (중위추계 기준, 2020=100)**
 2045년 생산연령인구 70.2; 경제활동인구 83.5; 생산성 반영 노동투입: 87.7
 2070년 생산연령인구 46.4; 경제활동인구 56.7; 생산성 반영 노동투입: 58



**1946년생과 1957년생의 각 연령별 일인당 GDP
(US Dollars in 2010 Constant Price)**



1946년생과 1957년생의 연령별 하루 일인당 평균 칼로리 섭취량



경활률 및 생산성 증가 시나리오별 노동투입 변화

시나리오	노동투입 지표	2020년 대비 퍼센트	
		2045	2070
A.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 불변	생산연령인구	70.2%	46.5%
	경제활동인구	83.5%	56.8%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87.7%	58.0%
B.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20년 일본 수준 증가	경제활동인구	87.1% (+3.6%p)	59.0% (+2.2%p)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91.2% (+3.5%p)	60.2% (+2.2%p)
C. 50~64세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020년 일본 수준으로 증가	경제활동인구	86.6% (+3.1%p)	58.8% (+2.0%p)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91.3% (+3.6%p)	60.4% (+2.4%p)
D. 여성과 장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B+C)	경제활동인구	89.5% (+6.0%p)	60.6% (+3.8%p)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94.1% (+6.4%p)	62.1% (+4.1%p)

시나리오	노동투입 지표	2020년 대비 퍼센트	
		2045	2070
E. 20~34세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이 2020년 일본 수준으로 증가	경제활동인구	87.5% (+4.0%p)	60.3% (+3.5%p)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90.8% (+3.1%p)	60.7% (+2.7%p)
F.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이 OECD 평균으로 증가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94.4% (+6.7%p)	63.0% (+5.0%p)
G. 50~64세 장년인구 생산성 개선: 생산성 감소 속도가 절반으로 감소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90.2% (+2.5%p)	60.0% (+2.0%p)
H. 모든 변화가 동시에 나타남 (B+C+E+F+G)	생산성조정 노동투입	106.5% (+18.8%p)	71.2% (13.1%p)

장래 노동투입 변화 전망: 요약

- 인구변화에 의해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의 성별·연령별·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될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생산연령인구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감소할 것.
 - 한국의 장년 및 고령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와 고학력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시간당 임금을 생산성의 지표로 본다면 고학력화의 영향이 고령화의 영향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성을 고려한 노동인력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여성과 장년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및 생산성 개선으로 인해 장래 노동투입은 더 느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부문, 유형, 지역 간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전망 (이철희 2019a, 2021b)



부문, 인력유형, 지역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함.
- 산업(직업) · ○ 교육수준 · ○ 연령별 취업자 변화 추정.
 - 최근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 및 유형별 취업자 변화를 결정하는 동학적인 파라미터(진입률, 이동률 등) 추정.
 - 이 파라미터들이 변화하지 않고 인구가 통계청 추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향후 20년 간 산업(직업) · ○ 교육수준 · ○ 연령별 취업자 수 추정 → 경직적인 노동시장 가정하고, 인구변화의 효과만을 고려.
- 시군구별 인구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장래의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 추정.
 -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에 적용된 각 인구 파라미터들의 변화율을 동일 시도 내 시군구에 적용 → 향후 20년 동안 각 시군구의 성·별연령별 인구 추계.
 - 지방재정과 교통인프라 수급 불균형에 미치는 효과 추정

산업별 20-74세 취업인력(노동공급) 규모 추정결과

순위	산업	2019	2024	2029	2034	2039	2019-2039 변화분
1	음식점 및 주점업	2,059,730	2,028,022	1,848,797	1,682,593	1,513,192	-546,538
2	소매업, 자동차 제외	2,134,341	2,010,975	1,912,193	1,795,099	1,667,105	-467,236
3	농림업	1,168,360	1,057,188	1,083,350	1,005,173	894,808	-273,552
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068,449	1,000,278	952,615	880,594	804,339	-264,110
5	기타 서비스업	695,953	606,374	563,781	512,069	459,360	-236,593
6	도매 및 상품중개업	1,259,962	1,148,833	1,128,101	1,092,324	1,036,606	-223,356
7	전문직별 공사업	1,227,131	1,322,280	1,226,065	1,123,167	1,030,836	-196,295
8	사업지원 서비스업	959,825	929,854	917,521	861,899	788,718	-171,107
9	종합 건설업	804,689	802,248	766,947	714,340	660,586	-144,103
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68,701	433,216	419,181	392,778	361,688	-107,013
11	보건업	1,034,251	1,083,549	1,047,325	996,896	936,454	-97,797
12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가죽·가방·신발 제조업	238,960	186,624	175,814	161,050	147,861	-91,099
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92,445	363,160	347,232	328,848	307,486	-84,959
14	교육 서비스업	1,846,667	1,800,641	1,841,529	1,826,990	1,762,665	-84,002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3,517	124,772	116,127	108,196	98,804	-74,713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75,536	494,491	467,378	432,917	401,574	-73,962
17	보험 및 연금업	283,966	241,484	237,702	227,840	214,937	-69,029
18	식품제조업	381,786	413,069	386,228	350,881	316,741	-65,045
19	수리업	306,221	315,744	295,092	270,307	247,135	-59,086
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81,572	505,371	482,771	455,458	423,145	-58,427
21	소프트웨어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319,924	322,129	301,703	286,506	262,276	-57,648
22	금융업	320,164	300,014	297,637	285,977	265,535	-54,629
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4,225	255,509	241,542	221,404	205,997	-48,228
24	1차 금속 제조업	145,924	125,907	120,448	112,750	104,138	-41,786
25	전기장비 제조업	262,310	278,493	262,757	246,594	229,344	-32,966

산업별 20-74세 취업인력(노동공급) 규모 추정결과

순위	산업	2019	2024	2029	2034	2039	2019-2039 변화분
26	전문서비스업	508,675	534,966	529,334	506,139	482,829	-25,846
27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90,937	324,551	304,507	285,436	265,220	-25,717
28	방송통신업	193,309	186,705	186,754	180,988	169,218	-24,091
29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1,663	129,432	123,010	113,960	108,869	-22,794
30	목재·나무제품·가구 제조업	118,362	123,254	114,296	105,001	96,191	-22,17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7,275	118,972	112,303	104,504	96,709	-20,566
3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52,670	43,958	41,379	37,765	33,993	-18,677
3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4,446	156,256	152,827	146,164	136,012	-18,434
34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61,669	161,735	157,016	150,994	143,346	-18,323
3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1,962	60,833	59,448	57,220	54,037	-17,925
36	기타 제품 제조업	98,690	95,646	93,734	89,396	83,263	-15,427
37	연구개발업	195,340	203,041	202,799	192,373	179,956	-15,384
38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화학물질·화학제품·의약품·화학제품 제조업	291,685	330,348	315,925	297,317	276,806	-14,879
3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8,762	63,338	62,175	57,851	54,380	-14,382
4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0,489	72,314	67,429	62,590	57,257	-13,232
41	어업	67,231	71,772	69,403	62,862	54,937	-12,294
4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7,455	160,749	155,569	145,990	136,237	-11,218
43	숙박업	146,499	152,337	153,224	146,591	139,566	-6,933
44	수상·항공 운송업	65,792	65,503	65,465	63,659	59,864	-5,928
45	수도·하수처리·폐기물처리·원료재생 서비스업	138,913	169,839	162,472	150,883	139,652	739
46	음료·담배 제조업	26,793	38,747	36,707	32,239	29,416	2,623
47	광업	14,857	33,930	32,752	31,013	30,693	15,836
4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92,235	257,724	247,567	227,034	211,806	19,571
49	협회 및 단체	278,516	267,642	288,110	301,412	300,472	21,956
50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01,395	1,142,073	1,153,805	1,097,749	1,025,139	23,744

산업별 20-74세 취업인력 (노동공급) 규모 추정결과

순위	산업	2019	2024	2029	2034	2039	2019-2039 변화분
5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국제기관 외 국기관	1,001,395	1,142,073	1,153,805	1,097,749	1,025,139	23,744
52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43,416	315,399	308,306	288,603	269,757	26,341
53	기록물 출판·제작·배급업	467,236	570,186	558,019	529,148	499,742	32,506
54	장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9,639	245,429	249,406	243,715	231,745	42,106
55	임대업, 부동산 제외	108,824	213,342	193,740	175,118	169,291	60,467
56	정보기술 서비스업	196,424	259,080	266,901	261,939	257,924	61,500
5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16,281	337,928	367,717	384,042	393,607	77,326
58	사회복지 서비스업	1,088,598	1,353,033	1,406,929	1,339,925	1,228,004	139,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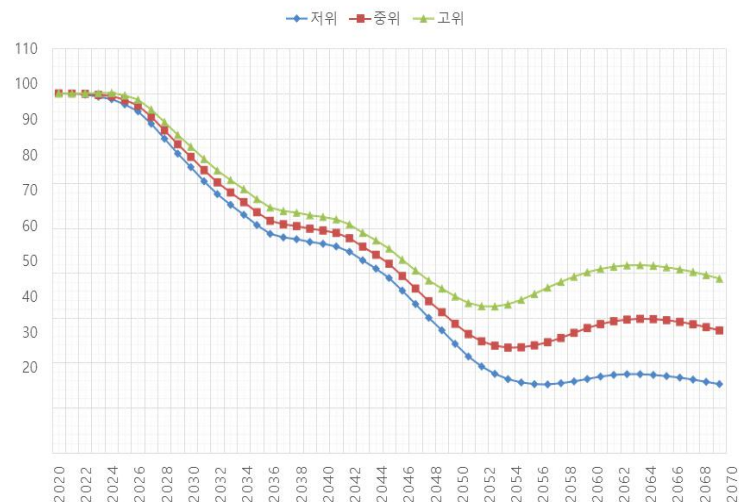
2039년까지 취업인력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는 10개 산업

	전체	고학력	저학력
전체	음식점 및 주점업 / 보건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금융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농림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농림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보험 및 연금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기타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직별 공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기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종합 건설업	1차 금속 제조업	종합 건설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교육 서비스업
20~34세	교육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보건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보건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음식점 및 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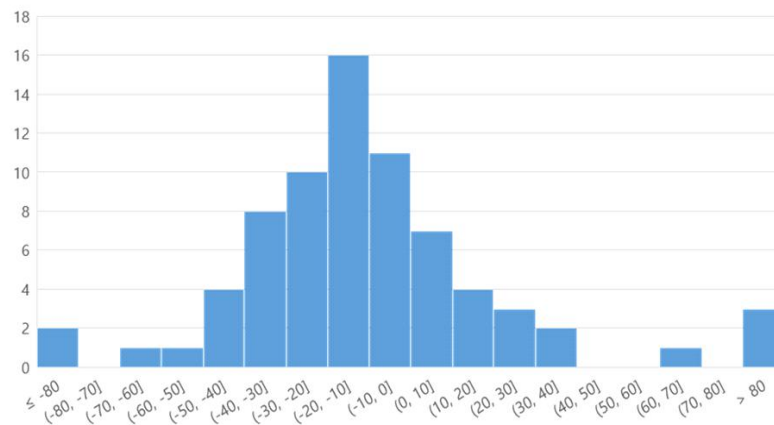
2039년까지 취업인력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는 10개 산업

	전체	고학력	저학력
35~54세	소매업; 자동차 제외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종합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보험 및 연금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전문직별 공사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종합 건설업	협회 및 단체	종합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기타 서비스업
	농림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농림업
	교육 서비스업	1차 금속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55~74세	농림업	음료·담배 제조업	농림업
	음식점 및 주점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플라스틱 및 종이제품 제조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어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가죽·가방·신발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서비스업
	식품 제조업	광업	전문직별 공사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목재·나무제품·가구 제조업	종합 건설업
	어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수리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부동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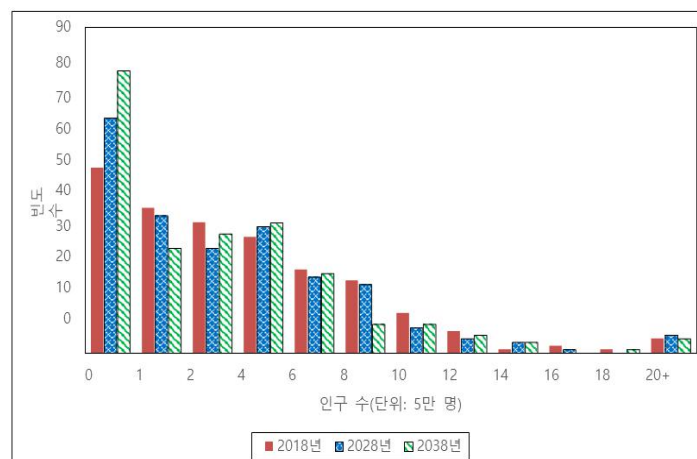
35세 미만 대졸 경제활동인구 추계결과 (2020년 대비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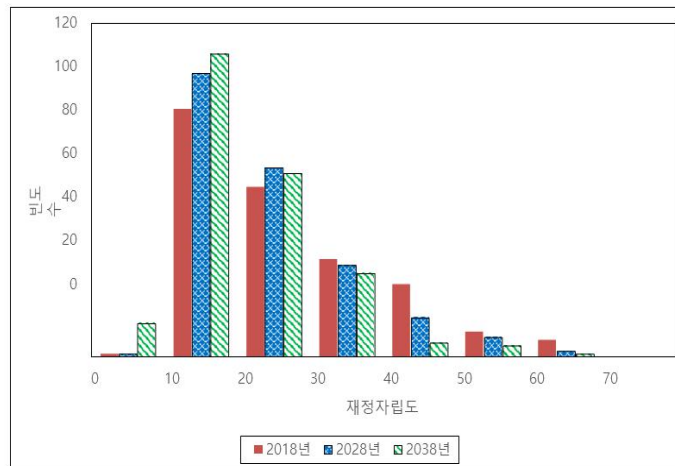
2018년~2028년 각 산업 35세 미만 취업자 비중 변화 (%p)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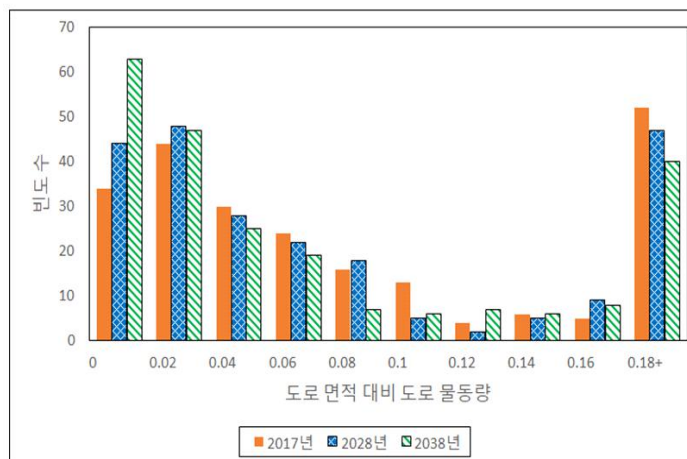
2018년, 2028년, 2038년 기초지자체 전체 인구 수 분포 추정결과 (단위: 5만 명)



2018년, 2028년, 2038년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분포 추정 결과



2017년, 2028년, 2038년 시군구별 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 에 따른 도로 면적 대비 도로 물동량 변화 추정 결과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대응 방안 모색



시기에 따른 변화 추이를 고려한 대응 전략

- 인구변화의 일반적인 방향성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른 인구변화의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대응 필요.
 - 언제 어떤 충격이 다가올지,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에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지 판단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
- 가까운 장래(향후 15~20년)에 총량적인 노동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가까운 장래의 중요한 문제는 부문 간, 지역 간, 노동유형(연령 및 숙련수준) 간 불균형의 심화일 것.
 - 인구변화는 기술변화로 인한 부문 간 불균형 심화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
 -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출생 코호트 간 불균형과 부문, 인력유형, 지역 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장기적으로는 노동인력 부족문제에 대비할 필요.

젊은 노동인력의 감소 문제 (1)

- 10년 내에 발생할 가장 심각한 노동시장 불균형은 청년인력의 급격한 감소에서 초래될 것.
 - 2002년 이후 출생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 진입하기 시작하면 신규취업 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것.
 - 청년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가까운 장래에 급격한 인력고령화에 직면할 가능성. 청년인력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인력부족에 직면할 수 있음.
- 젊은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젊은 노동인구는 최신의 인적자본과 노동시장 정보를 갖춘 인력
 -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의해 새로이 부상한 부문의 노동수요는 많은 경우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노동인구에 의해 채워짐
 - 향후 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적자본 공급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음.
 - 향후 젊은(35세 미만) 취업자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성장가능성, 임금, 일자리의 질이 높은 부문 → 인구변화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음.

젊은 노동인력의 감소 문제 (2)

- 수요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인적자본 공급과 노동의 부문간 이동이 용이한 노동시장과 교육제도의 개혁 요구됨.
 - 대학교육에 있어서 전공 간 칸막이를 낮추고, 새로운 학문 분야 혹은 과정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
 - 대학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과 일반적인 숙련(general skills)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
 - 최근 논의되는 반도체 학과 대폭 증원은 타당한가?
 - 부문 간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시장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직원의 재교육이나 타 분야 출신 인력의 충원을 통해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 및 채용시스템 구축 필요.
 - 부문 간 이동성 증가에 수반될 높은 실직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적극적인 전직 지원 정책 필요.

여성고용 여건 개선

- 여성(특히 경력단절문제가 심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고용의 확대는 인구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것.
 - 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고용확대는 장년·고령노동 고용증가보다 청년노동감소 문제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일 것.
- 여성노동여건개선(특히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 해소)은 결혼과 출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커리어에 대한 강한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있음.
 - 과거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경우 일을 포기했지만 이제는 가정(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해졌음.
 - 노동시장에서 결혼과 관련된 여성의 불이익이 큰 산업에서 30대 초반 여성의 결혼율이 낮고 이 연령층 여성 결혼율의 변화율이 낮았음(이철희 ·○ 민규량 2022).

외국인 노동 문제

-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일부 부문 및 기업(특히 중소기업)은 이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적어도 단기적인 불균형이 심하게 발생하는 일부 부문은 외국인 노동 투입이 불가피할 것
- 현재 주로 유입되는 유형의 외국인 노동은 인구변화가 야기할 노동시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기 어려움.
 - 청년노동인력이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 유입되고 있지 않음(이철희·김혜진 2020)
- 중장기적으로 현재보다는 숙련도가 높은 인력 비중이 높아질 필요.
- 국내 노동시장 수급여건에 부합되는 유형의 외국인 노동을 식별하여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
 -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원기관이 필요할 것.

고령노동 문제

- 인구변화의 시간적 패턴을 고려할 때 “노동인력규모”의 관점에서 고령노동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예컨대 정년연장)은 중장기적인 과제일 것.
 - 가까운 장래에 총량적인 노동부족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 현재의 고령노동은 몇 년 후부터 빠르게 감소할 청년노동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
 - 가까운 장래에는 “소득 크레바스 해소” 및 “고령빈곤완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5~6년 후 청년노동인구가 본격적으로 급감하는 시기에는 고용연장의 부작용(청년고용 악화 등)이 완화될 것.
-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인구 고용확대 노력 필요.
 - 출생아 수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2040년대 중반 이후 노동인구 감소는 현재의 전망보다 더 가팔라질 수 있음.
 - 건강과 인적자본이 개선된 미래 고령층의 역량 활용 필요.
 - 현재의 청·장년층부터 나이가 들어도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2022 동아 뉴센테니얼포럼

-인구 감소 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2022. 10. 25

김 홍 수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국가미래전략원

1

내용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요양 수요 변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 한국 노인장기요양 인력 현황: 구성 및 공급 추이
- 한국 노인장기요양 인력 수급: 미래 전망 주요 연구
-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 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
- 시사점 및 제언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2

인구 고령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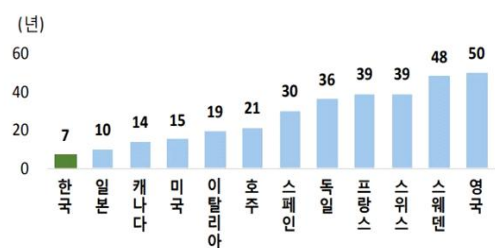
- 2022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는 901만 8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17.5%
- 고령자 인구수는 지속 증가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의 20%이 65세 이상) 진입 전망
 - OECD 주요국 중 가장 빨리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한국 7년, 일본 10년, 미국 15년)
- 노년부양비(比) 또한 2022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24.6명, 2035년 48.6명, 2050년 78.6명에 이를 전망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OECD 주요국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 >



자료: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등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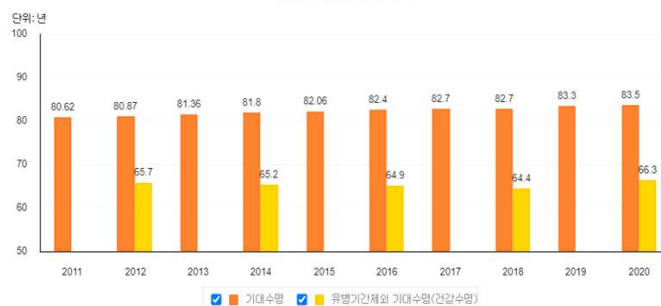
고령자통계, 2022

3

인구고령화와 건강: 고령 인구 구성비, 기대수명, 건강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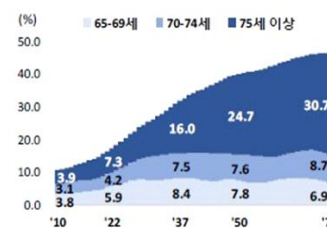
-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연령대 진입과,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서 초고령인구 규모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될
-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83.5세로 세계평균보다 월등히 높으나, 건강기대수명은 66.3세로 평균 10년 이상을 장애, 질병을 동반한 불건강상태로 생을 지속해야함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추이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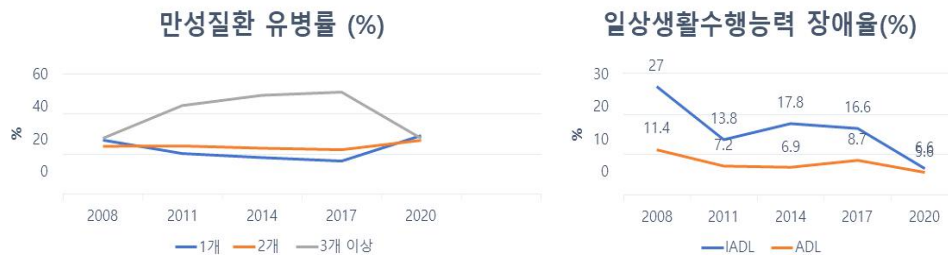


통계청, 2021; 고령자통계, 2022

4

만성질환 및 장애 유병률 추이

-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84%가 1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54.9%가 복합만성질환자(2개 이상)였음.
 - 노인 1인당 평균 만성질환 수는 1.9개
- 전체 노인의 6.6%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에 제한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5.6%는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제한까지 경험함
 - 85세 이상 초고령자 중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제한 경험 비율이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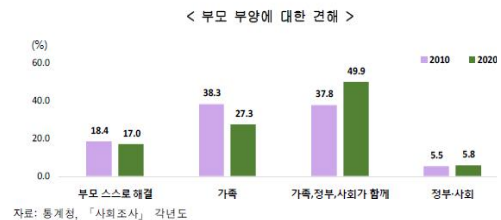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노인실태조사, 2008-2020

5

가족 돌봄 및 사회 책임

- 고령자 가구의 비중의 증가 추이
 - 특히 노인 1인가구가 36.1%, 노인부부가구가 35.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자녀와 동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단 12.8%임 (노인실태조사, 2020)
- 부모 부양에 대해 전적인 가족 책임이 아닌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으로 생각하는 추세 (2010년에 비해 12.1%p 증가)
 - 스스로 노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또한 2010년에 비해 1.4%p 감소
 - 고령자의 돌봄에 대해 사회/정부에 대한 기대



고령자통계, 2022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6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 **시작년도:** 2008년도 시행
- **대상자:** 전국민 대상 (신청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자)
- **운영주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 종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장기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 주요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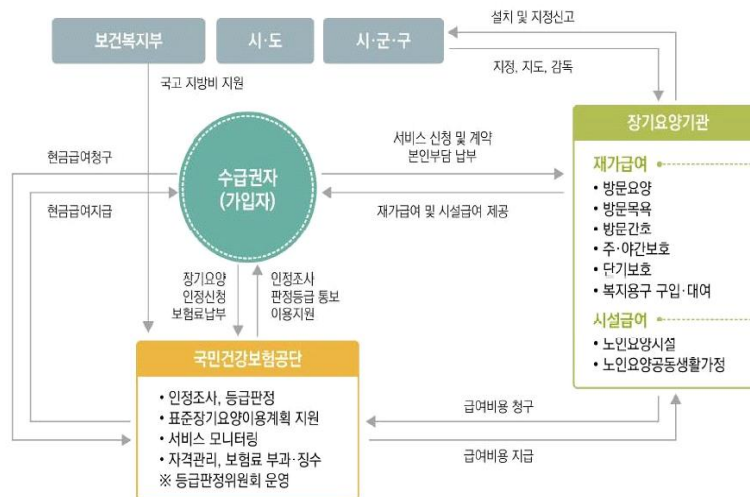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그러나 독립회계 관리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율 (2022년 기준 12.27%)
- 국가 및 지자체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지원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의료수급자 등 저소득자 40~60% 감경)**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1

7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주요 운영 주체 및 역할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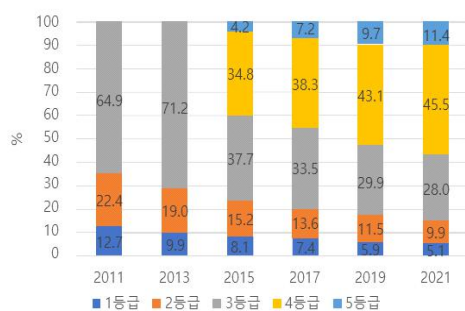
8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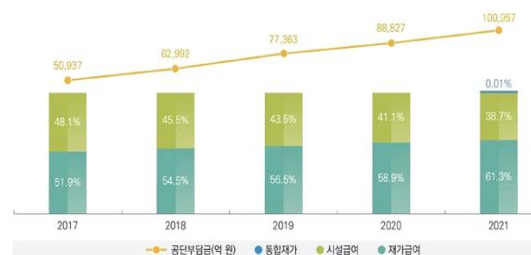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자, 급여 규모 추이

- 2021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수는 953,511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10.7%임
 - 중증도가 낮은 등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4,5등급)
- 서비스 급여는 주로 현물급여로 현금급여는 한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2008년 도입 당시 재가서비스 부족하였으나 2021년 말 기준 재가 기관 20,559개소로 2020년 대비 4.8% 증가

등급별 수급자 비율 (단위: %)



연도별 급여종류별 공단부담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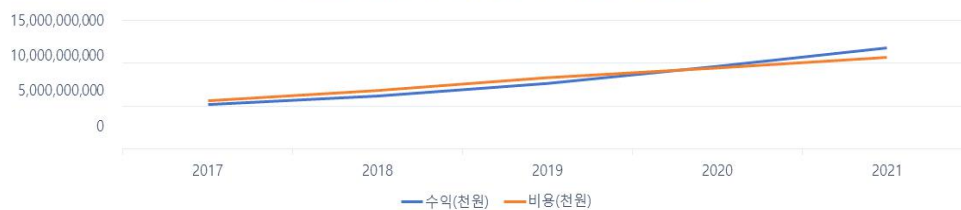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1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9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재정 추이

장기요양보험 수입지출 추이(2017-2021)



재정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익(A) (천원)	5,142,991,741	6,153,281,117	7,620,330,803	9,613,842,736	11,751,863,382
비용(B) (천원)	5,589,091,721	6,800,831,681	8,314,937,896	9,469,502,636	10,718,691,918
기타포괄손익 (천원)	3,996,137	-18,756,716	3,631,831	2,747,748	-1,629,401
총수지출(B/A) (%)	109	111	109	98	91
보험료대 급여비율(B1/(A1+A2+A3)) (%)	103	107	106	95	89
당기차액(A-B) (천원)	-446,099,980	-647,550,564	-694,607,093	144,340,100	1,033,171,464
이월금 (천원)	144,566,924	-426,807,260	-449,096,574	384,002,897	1,381,348,112
누적준비금적립금(E) (천원)	1,863,200,000	1,768,500,000	1,099,700,000	413,600,000	447,552,850
적립률(E/B) (%)	42	33	17	6	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21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10

한국 노인장기요양 인력 현황: 구성 및 공급 추이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사회복지사	18,535	22,305	26,395	30,268	33,736
	의사(특목포함)	2,198	2,210	2,358	2,312	2,349
	간호사	2,791	2,999	3,312	3,504	3,645
	간호조무사	9,845	10,726	12,054	13,221	14,196
	치과위생사	7	10	7	14	12
	물리(작업)치료사	2,024	2,122	2,350	2,558	2,723
	요양보호사	340,624	379,822	444,525	460,970	507,473
	영양사	1,160	1,132	1,131	1,136	1,147
재가	사회복지사	13,188	16,314	19,610	22,642	25,509
	의사(특목포함)	134	112	104	99	88
	간호사	1,371	1,584	1,793	1,940	2,100
	간호조무사	3,120	3,671	4,567	5,185	5,589
	치과위생사	7	10	7	14	12
	물리(작업)치료사	266	294	361	407	441
	요양보호사	284,144	319,498	377,726	381,359	434,041
	영양사	55	58	69	72	77
시설	사회복지사	5,402	6,052	6,831	7,685	8,294
	의사(특목포함)	2,161	2,179	2,334	2,283	2,322
	간호사	1,485	1,472	1,582	1,623	1,594
	간호조무사	7,460	7,806	8,301	8,932	9,495
	치과위생사	-	-	-	-	-
	물리(작업)치료사	1,861	1,937	2,114	2,276	2,416
	요양보호사	64,179	68,216	73,082	76,011	79,799
	영양사	1,111	1,080	1,067	1,069	1,075

주 1) 각 직종 내 중첩 인원 제외(의사+특목의,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급+2급))
2) 계는 급여종류별 중첩 제외

인력	정의	업무수행범
간호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 (의료법 제80조)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11

한국 노인장기요양 인력 현황: 인력 배치 법적 기준

재가 급여 제공자 인력배치 기준

구분	사실상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재활치료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주방원)
방문요양	1명	1명 (7명 이상 15명 이하)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방문목욕	1명					2명 이상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 이상 (이용자 25명 이하) (지배관할구역의 경우에는 4명 이상 1명 이하)	1명 (이용자 25명 이상)	1명	1명
단기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30명 이상 1명			1명
재가노인지원	1명	1명				1명 이상 (구강위생관리 또는 경우로 한정함)			

시설 급여 제공자 인력배치 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또는 재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재활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요양시설	임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임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임소자 100명 초과할 때부터 1명 추가)	1명 이상	1명 (임소자 100명 초과할 때부터 1명 추가)	임소자 23명 당 1명 (사원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임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회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임소자 25명 당 1명	1명 (임소자 100명 초과할 때부터 1명 추가)	1명 (임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임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1명 (임소자 25명 당 1명 (사원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임소자 23명 당 1명 (사원인원이 25명 당 1명)					

비고

- 의료기관의 일부를 사실상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는 임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해야 한다.
-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재활의사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12

한국 노인장기요양 인력 수급: 전망, 공급 현황 및 수급 불균형 원인

임정미 외 (2019)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증장기 확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경: 장기요양서비스 질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요양인력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함
- 목적: 장기요양인력별 특성, 노동환경, 수요공급불균형 현황 분석 및 증장기 대안 제시
- 결과 요약:

구분	수급전망	공급현황 및 노동환경 현황	수급불균형 원인
요양보호사	2018년 공급부족 2030년 공급부족 예상	• 여성 94%; 50-60대 81% • 재가기관 고용형태 특히 불안정 • 3년 미만 근속자 69.6% (2018년 기준) • 이직률 32.8%이나 감소추세 (2018년 시설 기준)	• 직업적 편견 및 사회적 인식 • 열악한 노동환경 및 부적절 노무관리 • 불공정 임금체계 • 업무범위 및 분담 불명확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부재, 미흡한 업무 이해, 피드백 부재 • 심신 피로
간호사	2018년 공급부족 2030년 공급부족 예상	• 여성 99% • 재가기관 고용불안정 심함 • 3년 미만 근속자 65.6% (2018년 기준) • 이직률 29.4% (2018년 시설 기준)	• 직종 간 업무범위 불명확성에 따른 갈등 • 전문성 발휘할 수 없는 노동환경 및 낮은 서비스 질 • 부적절 노무관리
간호조무사	2018년 공급부족 2030년 과잉 예상	• 여성 97% • 재가기관 고용불안정 심함 • 3년 미만 근속자 80.5% (2018년 기준) • 이직률 37.7%이나 감소추세 (2018년 시설 기준)	• 안전사고 불안 및 관계에 대한 피로감 • 불공정한 임금체계 • 장기요양 업무에 대한 교육 부재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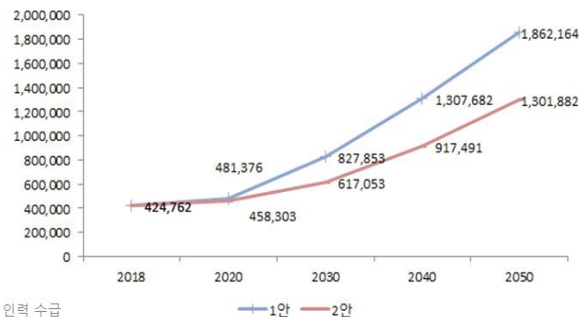
한국 노인장기요양 인력 수급 전망: 총 필요 인력* 추계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정미 외 (2019) - 노인장기요양 인력 수요 추계

- 장기요양 필요인력* 추계 방법으로 두 가지 안을 활용함 *요양 인력 전체
 - 1안: 이호용 외 (2017) 인구추계 고위 가정의 결과: 2050년 장기요양 필요 인력 약 186.2만명 예상
 - 2안: 노인실태조사 (2017) 기반 요양 필요 노인의 수 추계: 2050년 장기요양 필요 인력 약 130.2만명 예상
- 시설과 재가 서비스에 대해 필요 인력을 추계 후 추계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장기요양 필요인력 추계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14

한국 노인장기요양 인력 수급 전망: 요양보호사

임정미 외 (2019) - 요양보호사 공급 추계

- 2018년 기준 요양보호사 수요-공급 격차는 7000명 수준이나 2020년에는 2만 3천명, 2030년에는 11만1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요양보호사 공급 추계 방법

- 요양보호사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017년, 2년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책변화로 인해 유도된 공급으로 판단되어 2016년 전년 대비 증가율인 4.5%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인구감소, 자격취득자 감소, 현재 인력 은퇴 고려하여 4.5% 증가율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요양보호사 수 전년 대비 증가율: 2016년 4.5%, 2017년 2018년 11.58%]

<요양보호사 종사자 수 추계식>
 요양보호사 종사자 수 = 전년도 요양보호사 종사자 수 x (1+요양보호사 종사자 수 전년 대비 증가율)

- 인력 수요 추계 1안과 비교시 갈수록 공급격차가 심화될 것
- 수급격차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업무 전산화를 통한 노동시간 감축 및 생산성 향상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한국 노인장기요양 인력 수급 전망: 간호사

임정미 외 (2019) - 간호사 공급 추계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변화로 인한 간호사 수 확대 추이 유지를 가정하여 노인장기요양시장 진입 간호사 수를 3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추계함

시나리오 1. 간호사 종사자 수 = 인구 천명당 간호인력 수 x 1.41%
 시나리오 2. 간호사 종사자 수 = 인구 천명당 간호인력 수 x 1.45%
 시나리오 3. 간호사 종사자 수 = 인구 천명당 간호인력 수 x 1.57%

- 시나리오 1에 따르면 간호인력 수요-공급 격차는 2018년 기준 118명, 2020년 267명으로 격차가 적은 편이나 2030년에는 241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 향후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안정적 간호사 공급방안이 필요함

간호사 공급 추계

구분	인구1,000명당 간호사 공급비율	인구1,000명당 간호인력 수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18	3.9	201,266	2,881	2,881	2,881
2020	4.3	222,656	3,134	3,237	3,498
2030	4.7	244,057	3,435	3,548	3,834

주: 간호사는 요양시설,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종사자 수의 총합을 말함.
 자료: 인구 1,000명당 간호사 공급비율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2018.3.20.) 보도자료문 토대로 산출하였으며 인구 1,000명당 간호인력 수는 인구 1,000명당 간호사 공급비율과 통계청(2019b)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을 활용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간호사 수요-공급 격차 (시나리오 1)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한국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 수급 전망

권정현 (2021)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 추산 연구. 안수란 외 (편) 미래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연구.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방해요인 - 인구요인, 일자리 질 요인 중복작용 : 주요 공급원인 중장년 여성 집단의 고령화/은퇴로 인한 돌봄인구 공급 풀 감소, 교수준 향상과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여성일자리에 대한 기대 높아짐
- 노인돌봄서비스의 수요는 1) 공식적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2) 비공식적 노인 돌봄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치매국가책임제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수요 추계 방법
 - 1) 공적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서비스 이용 추이
 - 2) 고령자의 신체기능상태(ADL, IADL, 인지기능)에 따른 수요 전망
 - 기존 장기요양비용 추계연구와 동일한 셀 기반 방식(cell-based approach)적용 (분석자료: 장기요양 보험통계, 고령화패널 7차,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17

한국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 수급 전망

권정현 (2021)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 추산 연구

• 장기요양보험통계 기반 서비스 수요 전망

- 성연령별 등급 신청 및 인정비율을 통해 서비스 수요 규모 추산
- 추계결과 2027년 장기요양인정자는 108만명으로 2019년 대비 4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잠재적 수요자 고려:
 - 장기요양보험 미인정자
 - 정책변화 (이용률 개선에 따른 현재 미이용자를 실수요자로 간주)
 - 가족구조 변화 (미이용자 사유 35.6% 가족 돌봄 활용)

• 신체기능 기반 잠재적 돌봄 수요 전망

- 돌봄 및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고령인구 규모 산출
- 2개 이상 도구적 일상생활 도움 필요 인구까지 돌봄 확대 시 수요 증가
- 미래 고령인구의 건강상태 개선(healthy aging)을 가정 시 돌봄 수요 전망의 7-80% 수준 감소

건강상태 개선 반영 전적 ADL/IADL 제약 경험 인구 추계
(단위: 명)

구분	ADL		IADL	
	1개 이상 전격인 계약	2개 이상 전격인 계약	1개 이상 전격인 계약	2개 이상 일상생활계약
2019	196,756	165,073	540,660	474,532
2020	207,931	173,455	563,086	490,649
2021	214,586	180,514	572,818	503,559
2022	224,812	190,732	588,091	521,182
2023	235,054	201,126	602,812	538,550
2024	244,980	211,514	615,407	554,340
2025	257,834	224,250	631,445	573,946
2026	269,272	235,797	644,506	591,493
2027	283,483	249,765	659,481	610,476
2030	329,908	295,819	696,496	661,747
2040	525,857	503,762	803,038	814,470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7차 자료를 이용해 저자 계산

18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한국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 수급 전망

권정현 (2021)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 추산 연구

노인돌봄 제공인력 규모 공급 전망

- 인구 규모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규모 변화 추정을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적용하여 공급 규모 예측
- 현재 수요/공급 전망 지속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부담이 지속가능하지 않음
 -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 1인당 돌봄 필요 인구는 1.3~1.7 수준이나 2029년 기준 1.5~2.2명, 2044년 2.8~4.1명으로 증가 예상
- 고려사항: 생산성 저하에 따라 실제로는 인력 공급 규모가 더 낮다고 볼 필요 있음 - 제공 인력 풀의 고령화(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주로 50대 이상 중장년 여성), 인력의 업무상 부상 및 상병 증가

연도별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노인돌봄서비스업 인력 추산 (권정현, 2021)

연도	사회복지서비스업 추산 인력 규모(명)	노인돌봄서비스업 추산 인력 규모(명)	장기요양통보 요양보호사 추산 인력 규모(명)
2019년	984,381	477,425	431,241
2024년	1,235,816	599,371	541,390
2029년	1,418,376	687,912	621,366
2034년	1,509,079	731,904	661,102
2039년	1,521,133	737,750	666,383
2044년	1,432,812	694,914	627,691

주: 1) 2019년은 지역별 고용조사(하반기) micro data를 이용해 얻은 실제 수치.
 2)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의 특성상 2014년의 조사 자료와 2019년의 조사 자료를 비교해 산업 내 간 비교하는 것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산출에서 제외하였음
 3) 노인돌봄서비스업 추산 인력 규모는 2018년 보건복지산업 일자리통계조사의 노인돌봄서비스 종 48.5%를 이용하여 추정
 4) 장기요양통계연보 상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2019년 장기요양통계연보의 장기요양 전제 인력대 호사 90.32%를 노인돌봄서비스업 추산인력에 반영하여 추정함, 2019년 실제 요양보호사는 444,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 2014년 하반기와 2019년 하반기 자료를 이용해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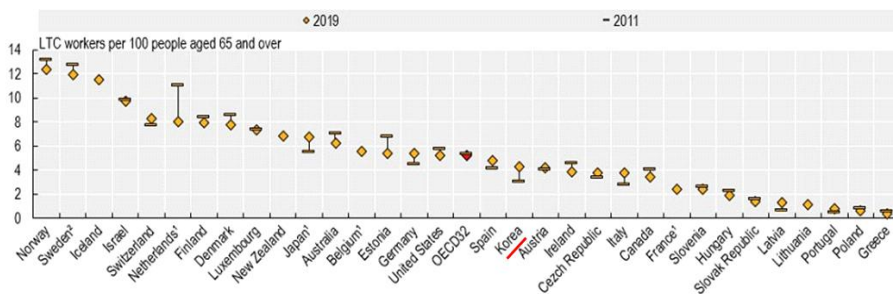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19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 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

- OECD국가 절반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장기요양 수급 증가율을 앞질렀음. 많은 국가들은 장기요양인력 수준이 침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나,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요양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임.

[OECD 주요국 65세 이상 노인 100명당 장기요양 인력 수급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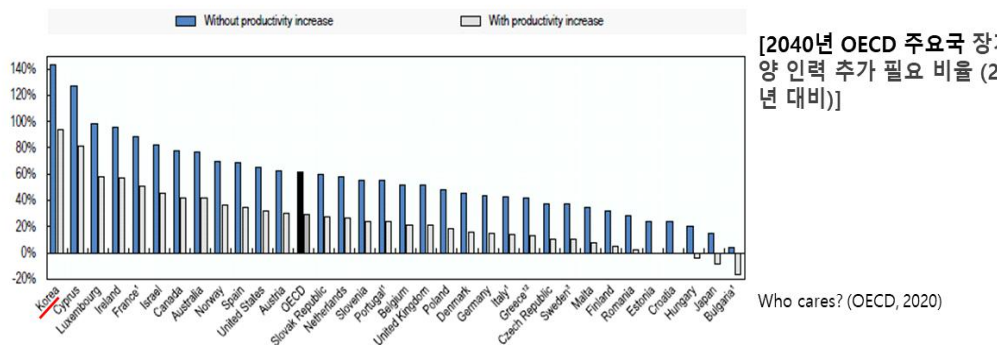
Health at a Glance 2021 (OECD, 2021)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20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 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

- 2040년에 OECD 대부분의 국가가 고령인구를 돌볼 장기요양인력 수급 문제 (부족) 을 심각하게 경험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노인 대비 장기요양 인력 비율을 유지하고자 할 때 한국의 경우 160%의 인력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생산성 증가 가정 시 인력 증가 필요를 다소 낮출 수 있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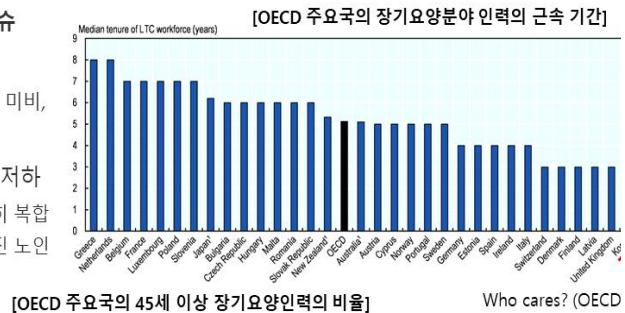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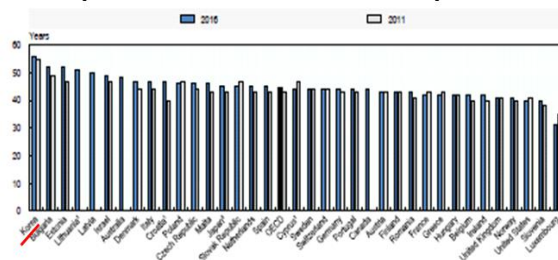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 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

• 국가 간 공통된 장기요양 인력 공급에의 이슈

- 일자리의 낮은 질적 수준에 따른 이탈
 -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진급체계 미비, 노동집약적 특성
-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
 - 업무 대비 낮은 수준의 자격요건 – 특히 복합 만성질환자와 같은 복잡한 니즈를 가진 노인의 돌봄에 있어 취약
- 장기요양 인력의 노령화



[OECD 주요국의 45세 이상 장기요양인력의 비율]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22

시사점 및 제언

- 한국은 인구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반해 인구, 일자리, 정책 요인 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질 전망
- 이는 장래 장기요양서비스 양과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
- **장기요양인력 수급 불균형(부족)**은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 사회 리스크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와 정책적 해법을 각 국가는 시도하고 사례들이 공유됨 (OECD, 2021)
- 그러나, 장기요양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 혹은 악화되고 정책의 효과는 명확치 않음 (OECD, 2021)
 - 해당 정책 이슈의 복잡성,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확보 어려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 등에 기인
- **글로벌 이슈이나 로컬 이슈** - 각 국가의 독특한 정책 및 사회문화적 맥락이 중요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23

시사점 및 제언

- 한국은 장기요양인력 정책에 있어 **인구 고령화의 빠른 속도의 영향에 대한 주목이 필요**
- **초고령사회 대응 장기요양 인력 정책은 시작 단계라 보는 것이 적절하겠음**
 - 한국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돌봄의 사회화가 본격화
 - 장기요양보험 하의 인력 정책은 요양보호사 수급과 지원 정책이 주를 이뤘으나 미흡. 지속적 노력 중
 - 지자체 별 보건복지돌봄 인력 수급과 지원 등은 있으나 편차가 크고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분석 등이
 - 사례) 서울특별시: 최근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019. 9. 26)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 (2022-2024) 등 포함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24

시사점 및 제언

- 초고령 사회는 돌봄 사회. 장기요양 인력 수급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장기요양 인력 수급 이슈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참여형 정책 수립과 실행 필요
- **Quality Work, Quality Care**
 - 좋은 장기요양 일자리가 있을 때만이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나아가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가 가능
 - 주요 과제
 - 장기요양 인력 확보 – 중년 여성 이외의 다양한 장기요양 인력 리크루트 풀 확대
 - 장기요양 인력 유지 (교육·훈련 및 근무 증가) – 전문성 향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임금 보장
 - 장기요양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건강·돌봄 결과 향상 – 기술(ICT)을 이용한 실제적 효율성 증대 방안 모색, 가족 지원, 가족과 돌봄·요양 인력 간 협력과 연계 방안
 - 여성의 의미 있는 사회 참여·일자리 확대 – 인구 고령화 중 지속 경제발전의 key (World Bank, 2015)
 -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 협업과 분업
 - 돌봄 경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25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가?

–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 –

-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14:00-17:00
-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 107호(대형강의실)
- 주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가?

–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 –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3:30 - 14:00	등 록	
14:00 - 14:15	개회식	
사회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환영사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경제학부 교수)	
축사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4:15 - 15:45	주제발표	
발표1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경제학부 교수)
발표2	주거비용과 저출산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발표3	자녀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발표4	가치관과 저출산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
15:45 - 16:00	휴식	
16:00 - 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널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식 (전 국회의원,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목 차

01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 03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경제학부 교수)

02 주거비용과 저출산 29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03 자녀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 39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04 가치관과 저출산 51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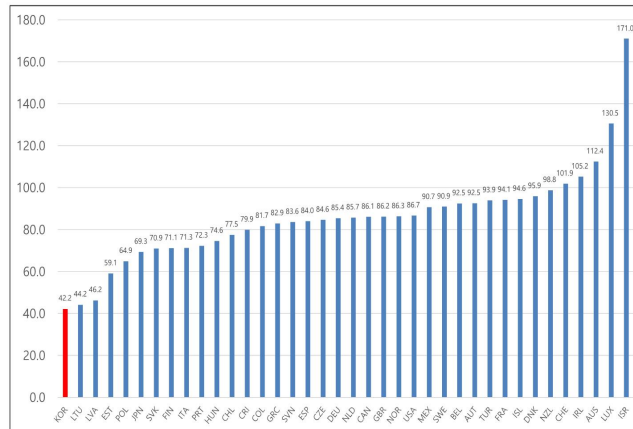
01

2022년 11월 2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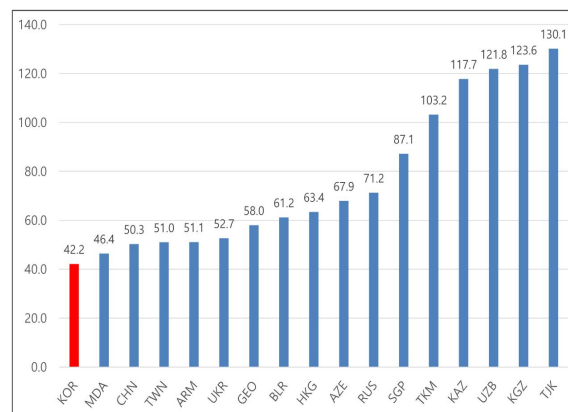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이 철 희



1990년 출생아 수 대비 2020년 출생아 수 비율:
OECD 국가들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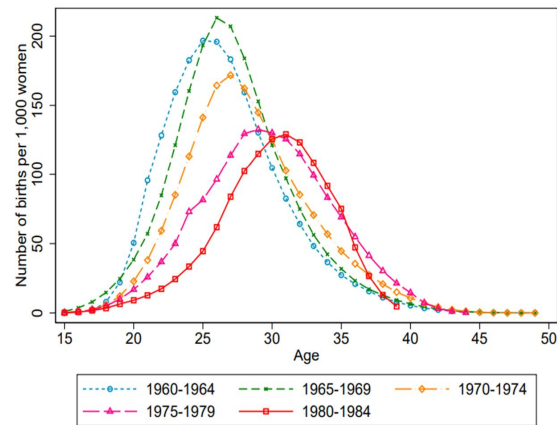


1990년 출생아 수 대비 2020년 출생아 수 비율:
비 OECD 국가들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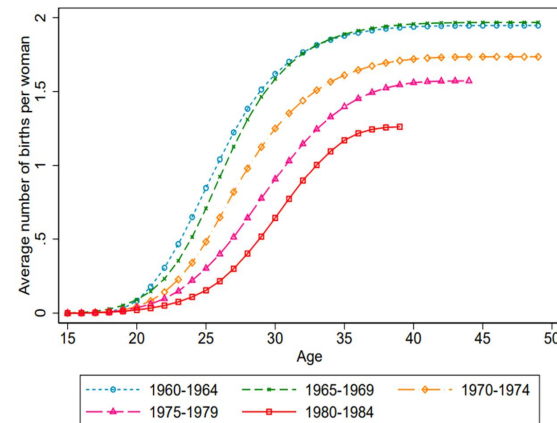
출생코호트 연령별 출산율

Hwang (2022)



누적적인 출생코호트 출산율

Hwang (2022)



발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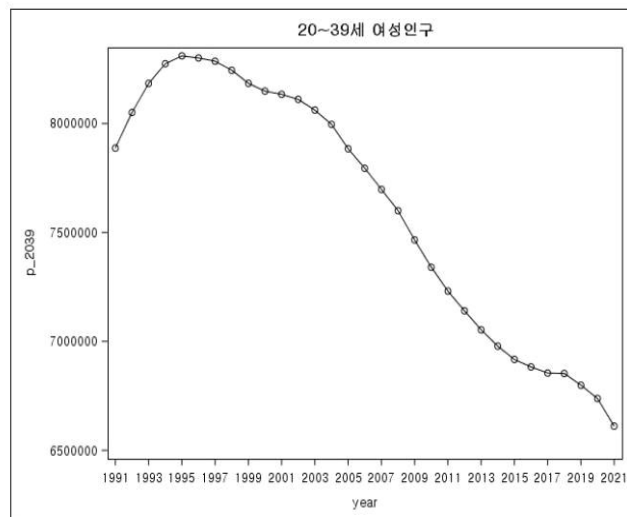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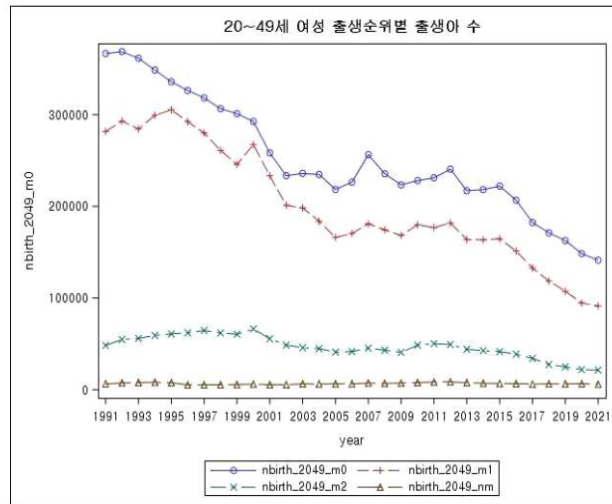
- 출생아 수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님.
- 출생아 수를 결정하는 세부적인 인구학적 요인들의 변화와 그것이 출생아 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
 - 각각의 인구학적 요소들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요인들과 상이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음 →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각각의 인구학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음 → 더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
- 특정한 행위가 가능한 인구(population at risk)를 적절하게 고려한 지표들을 이용하여 다음의 작업 수행:
 - 1990년대 초 이후 출생아 수 변화를 연령별 여성인구, 유배우 비율, 자녀수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로 분해.
 - 무배우 여성의 혼인, 유배우 여성의 사별과 이혼 등이 여성 유배우 비율 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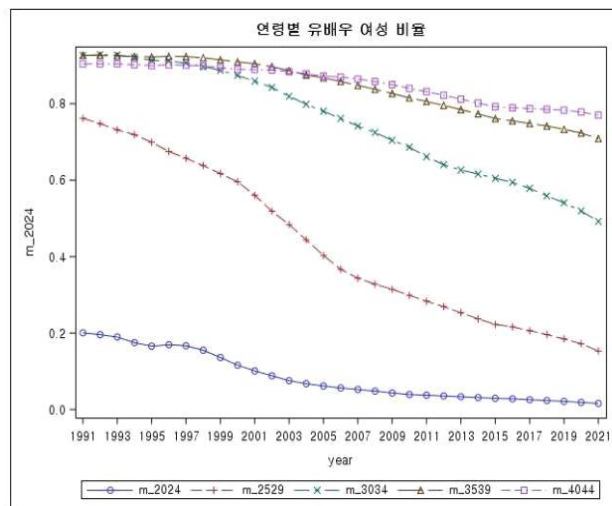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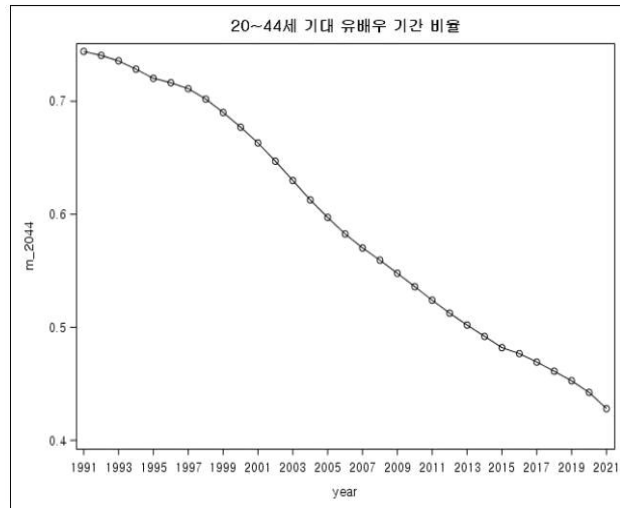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변화 분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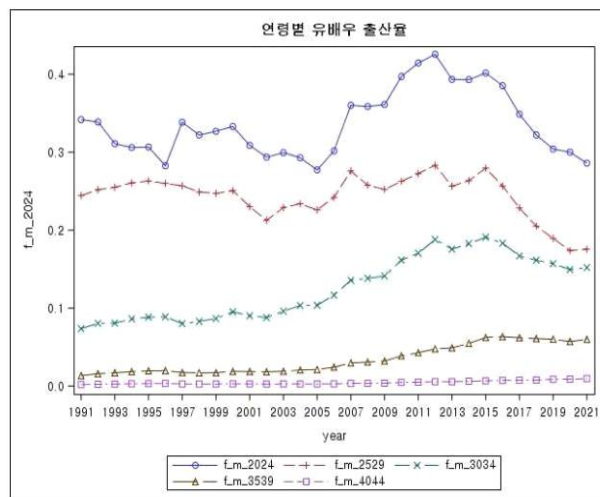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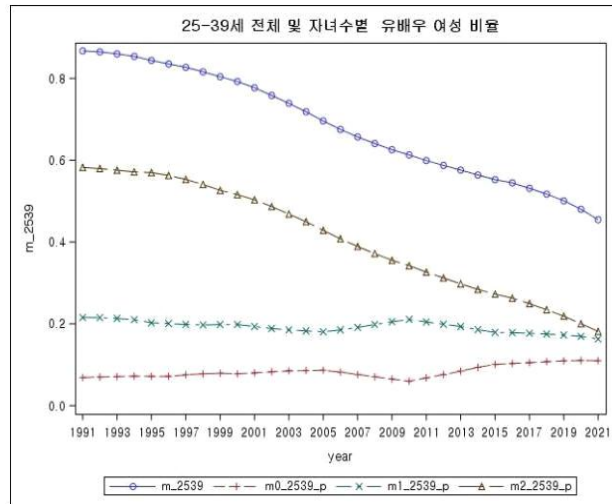
- 우리나라 출생아 수 변화는 주로 ① 가임기 여성인구, ② 여성 유배우 비율, ③ 유배우 출산율 등에 의해 결정됨
 - 여성연령별 출생아 수 = (연령별 유배우 비율 ×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 연령별 여성인구) + 무배우 출생아 수
-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은 ① 무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② 한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③ 두 자녀 이상 유배우 여성 출산율, ④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의 비중(가중치) 등에 의해 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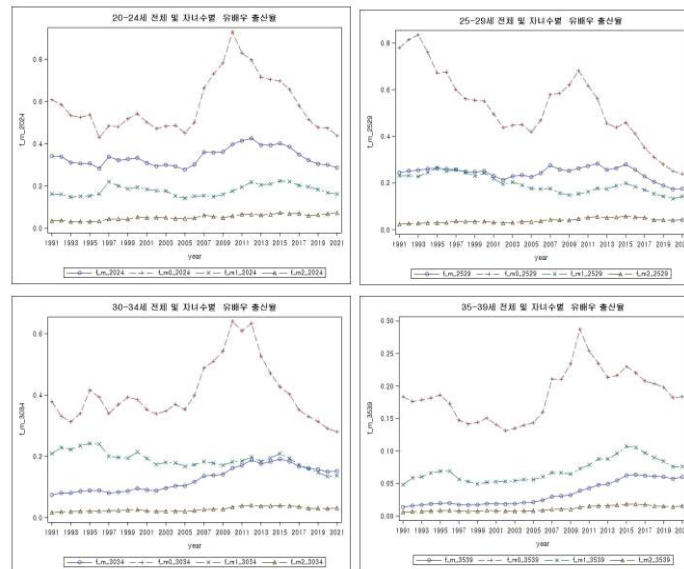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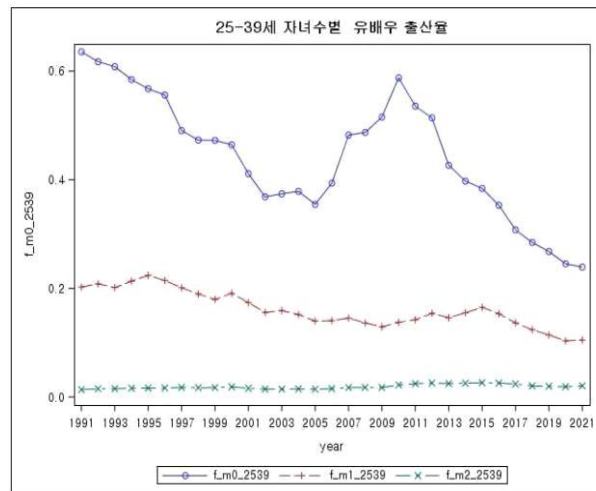
$$TB_t = \sum_{a=15}^{49} [m_t^a (\omega_{0,t}^a f_{m0,t}^a + \omega_{1,t}^a f_{m1,t}^a + \omega_{2,t}^a f_{m2,t}^a) + (1 - m_t^a) f_{n,t}^a] P_t^a$$

- TB: 총 출생아 수; P^a: 연령별 여성인구, m^a: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 ω_{0,t}^a: 연령별 ·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율, f_m^a: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f_n^a: 연령별 무배우 출산율.









1992년~2021년 20세 이상 여성 출산 신생아 수 변화 분해 (요약)

	1992~2005 (△B: -292,014)		2005~2012 (△B: +48,403)		2012~2021 (△B: -220,209)	
	△B 기여	기여도(%)	△B 기여	기여도(%)	△B 기여	기여도(%)
① 전체 가임기 여성인구	-13,886	5.12	-42,545	-87.90	-39,620	17.99
② 전체 유배우 비율	-240,214	88.65	-103,583	-214.00	-106,001	48.14
③ 전체 유배우 출산율 (④+⑤)	-38,622	14.25	167,701	346.47	-89,377	40.59
④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116,900	-43.14	59,325	122.57	64,625	-29.35
⑤ 자녀수별 유배우 출산율 합 (⑥+⑦+⑧)	-155,522	57.40	108,375	223.90	-154,002	69.94
⑥ 무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112,369	41.47	72,066	148.89	-128,671	58.48
⑦ 한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49,236	18.17	21,493	44.40	-22,888	10.39
⑧ 두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6,083	-2.24	14,816	30.61	-2,443	1.11
⑨ 무배우 여성 출산율	-8,856	3.27	475	10.98	-4,250	1.93

1992년~2021년 20세 이상 여성 출산 신생아 수 변화 분해 (1)

	1992~2005 (△B: -292,014)		2005~2012 (△B: +48,403)		2012~2021 (△B: -220,209)	
	△B 기여	기여도(%)	△B 기여	기여도(%)	△B 기여	기여도(%)
① 전체 가임기 여성인구	-13,886	5.12	-42,545	-87.90	-39,620	17.99
20~24세 여성인구	-6,482	2.39	-4,536	-9.37	159	-0.07
25~29세 여성인구	-17,780	6.56	-15,795	-32.63	1,482	-0.67
30~34세 여성인구	611	-0.23	-19,040	-39.34	-29,941	13.60
35~39세 여성인구	7,501	-2.77	-3,800	-7.85	-9,168	4.16
40~44세 여성인구	2,082	-0.77	609	1.26	-2,157	1.00
45~49세 여성인구	183	-0.06	17	0.04	5	-0.00
② 전체 유배우 비율	-240,214	88.65	-103,583	-214.00	-106,001	48.14
20~24세 유배우 비율	-65,430	24.15	-5,483	-11.33	-15,470	7.03
25~29세 유배우 비율	-141,987	52.40	-46,758	-96.60	-42,663	19.37
30~34세 유배우 비율	-30,673	11.32	-45,636	-94.28	-37,314	16.95
35~39세 유배우 비율	-2,052	0.76	-5,314	-10.98	-9,659	4.39
40~44세 유배우 비율	-71	0.03	-389	-0.80	-879	0.40
45~49세 유배우 비율	-3	0.00	-4	-0.00	-16	0.00
③ 전체 유배우 출산율 (④+⑤)	-38,622	14.25	167,701	346.47	-89,377	40.59
20~24세 유배우 출산율	-8,017	2.96	1,050	2.17	-717	0.33
25~29세 유배우 출산율	-74,151	27.37	11,833	24.44	-31,949	14.51
30~34세 유배우 출산율	33,513	-12.37	102,198	211.14	-69,821	31.71
35~39세 유배우 출산율	10,049	3.71	46,746	96.58	7,973	-3.62
40~44세 유배우 출산율	267	-0.10	5,904	12.20	5,530	-2.51
45~49세 유배우 출산율	-284	0.10	-30	-0.6	-395	0.18

1992년~2021년 20세 이상 여성 출산 신생아 수 변화 분해 (2)

	1992~2005 (△B: -292,014)		2005~2012 (△B: +48,403)		2012~2021 (△B: -220,209)	
	△B 기여	기여도(%)	△B 기여	기여도(%)	△B 기여	기여도(%)
㉠ 자녀수별 유배우 여성 비중	116,900	-43.14	59,325	122.57	64,625	-29.35
20-24세 자녀수별 여성 비중	784	-0.29	2,832	-5.85	690	-0.31
25-29세 자녀수별 여성 비중	48,577	-17.93	745	1.54	5,291	-2.38
30-34세 자녀수별 여성 비중	56,159	-20.73	41,409	85.55	30,580	-13.89
35-39세 자녀수별 여성 비중	10,045	-3.71	18,497	38.24	23,268	-10.57
40-44세 자녀수별 여성 비중	1,240	-4.58	1,480	3.06	4,720	-2.14
45-49세 자녀수별 여성 비중	94	-0.03	26	0.05	116	-0.05
㉡ 자녀수별 유배우 출산율 합(㉠+㉢+㉣)	-155,522	57.40	108,375	223.90	-154,002	69.94
20-24세 유배우 출산율	-8,801	3.25	3,881	8.02	-1,407	0.64
25-29세 유배우 출산율	-122,728	45.29	11,088	22.91	-37,200	16.89
30-34세 유배우 출산율	-22,646	8.36	60,788	125.59	-100,401	45.59
35-39세 유배우 출산율	4	-0.00	28,249	58.36	-15,295	6.95
40-44세 유배우 출산율	-973	0.36	4,424	9.14	810	-0.37
45-49세 유배우 출산율	-378	0.14	-55	-0.11	-511	0.23

1992년~2021년 20세 이상 여성 출산 신생아 수 변화 분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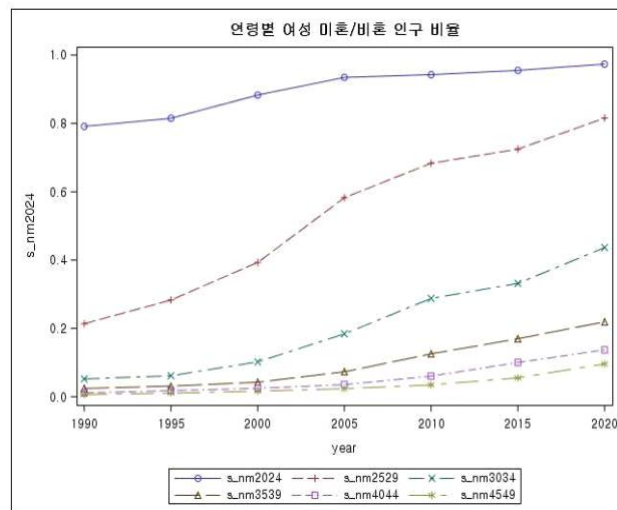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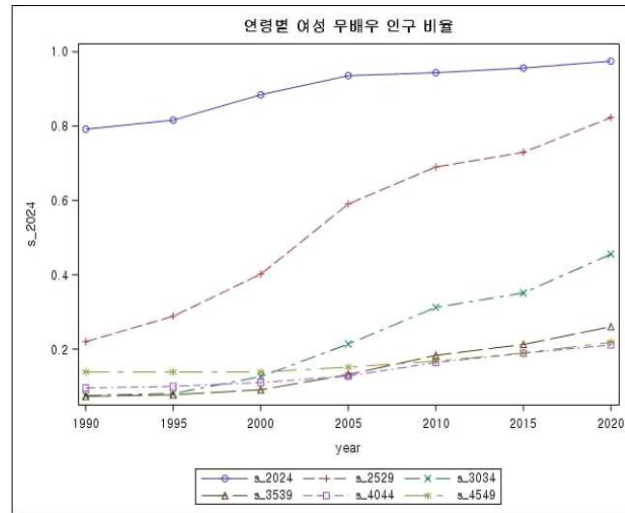
	1992~2005 (△B: -292,014)		2005~2012 (△B: +48,403)		2012~2021 (△B: -220,209)	
	△B 기여	기여도(%)	△B 기여	기여도(%)	△B 기여	기여도(%)
㉢ 무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112,369	41.47	72,066	148.89	-128,671	58.48
20-24세 무자녀 여성 출산율	-7,927	2.93	3,587	7.41	-1,578	0.72
25-29세 무자녀 여성 출산율	-107,353	39.62	13,547	27.99	-35,138	15.96
30-34세 무자녀 여성 출산율	5,395	-2.00	45,341	93.67	-81,434	36.98
35-39세 무자녀 여성 출산율	-1,989	0.73	8,633	17.84	-9,493	4.31
40-44세 무자녀 여성 출산율	-411	0.15	1,034	2.14	-550	0.25
45-49세 무자녀 여성 출산율	-84	0.03	-75	-0.16	-478	0.22
㉣ 한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49,236	18.17	21,493	44.40	-22,888	10.39
20-24세 한 자녀 여성 출산율	-997	0.37	246	0.51	113	-0.05
25-29세 한 자녀 여성 출산율	-16,809	6.20	-4,011	-8.29	-1,640	0.74
30-34세 한 자녀 여성 출산율	-30,259	11.17	11,374	23.50	-16,924	7.69
35-39세 한 자녀 여성 출산율	-190	0.07	12,098	25.00	-5,402	2.45
40-44세 한 자녀 여성 출산율	-781	0.29	1,773	3.67	976	-0.44
45-49세 한 자녀 여성 출산율	-200	0.07	12	0.03	-10	0.00
㉤ 두 자녀+ 유배우 여성 출산율	6,083	-2.24	14,816	30.61	-2,443	1.11
20-24세 두 자녀+ 여성 출산율	123	-0.05	48	0.10	59	-0.03
25-29세 두 자녀+ 여성 출산율	1,434	-0.53	1,552	3.21	-422	0.19
30-34세 두 자녀+ 여성 출산율	2,218	-0.82	4,074	8.42	-2,043	0.93
35-39세 두 자녀+ 여성 출산율	2,183	-0.81	7,518	15.53	-399	0.18
40-44세 두 자녀+ 여성 출산율	219	-0.08	1,617	3.34	384	-0.17
45-49세 두 자녀+ 여성 출산율	-94	0.03	8	0.02	-22	0.01
㉥ 무배우 여성 출산율	-8,856	3.27	475	10.98	-4,250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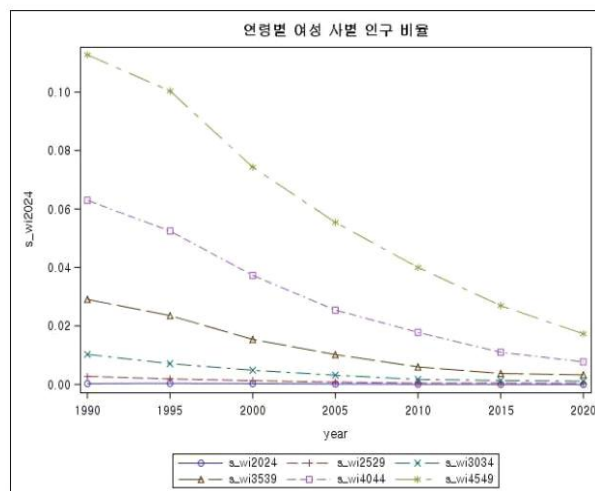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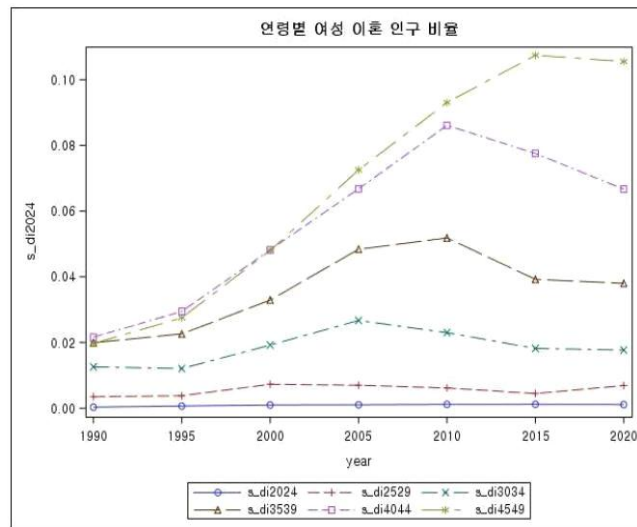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변화 분해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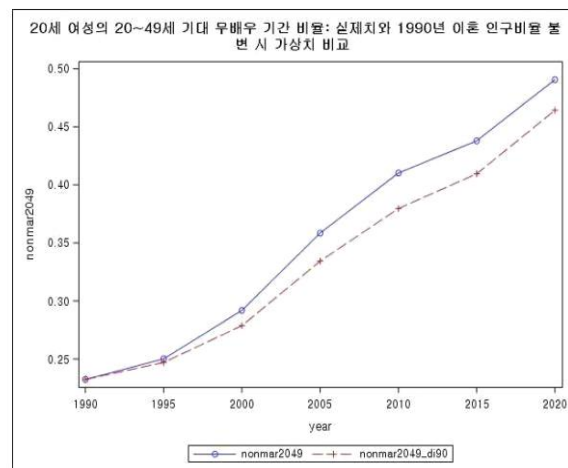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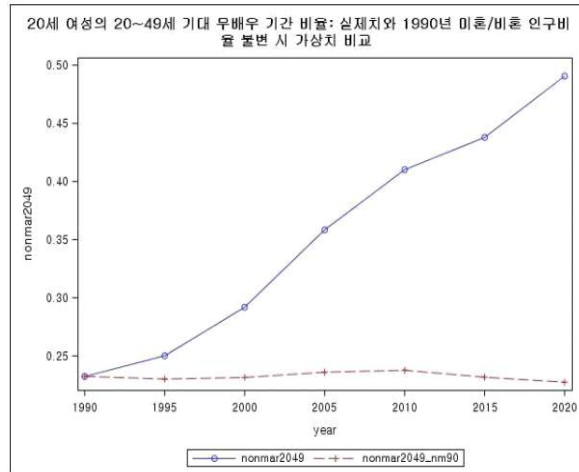
- 1990년대 초 이후 결혼(여성 유배우 비율) 감소는 줄곧 출생아 수 감소의 주된 요인.
- 가임기 여성인구 축소의 출생아 수 감소효과는 점차 증가.
- 유배우 출산율은 1992년~2005년 완만하게 감소, 2005년~2012년 급격하게 증가, 2012년~2021년 급격하게 감소.
- 2015년 이후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는 “상수”인 유배우 비율 감소와 2012년 이후 급격한 유배우 출산율 감소가 겹치면서 나타났음.
- 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율 감소가 출생아 수 변동 및 최근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 다자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임을 시사함.
 - 첫 관문(결혼)과 두번째 관문(첫아이 출생)을 넘는 사람이 크게 줄었음.
 - 다자녀 출산율은 낮고, 변동성도 적음. 정책의 영향도 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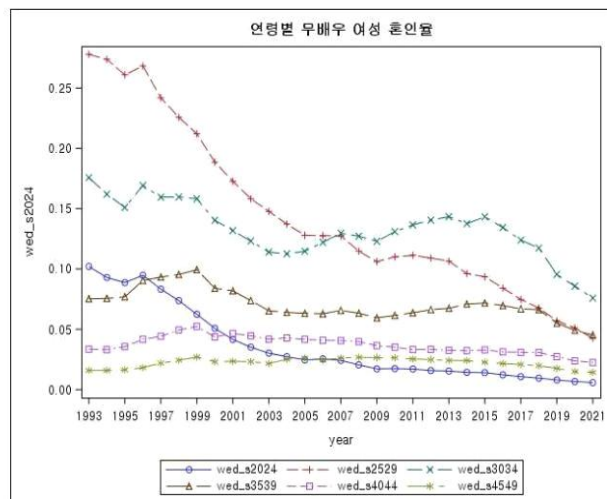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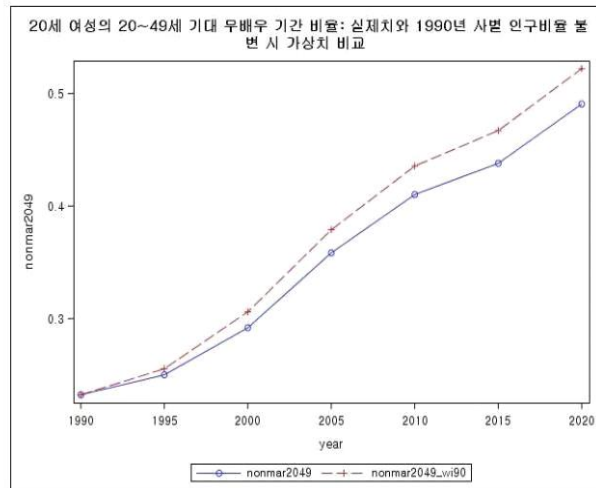
여성 인구 유배우 비율 변화 요인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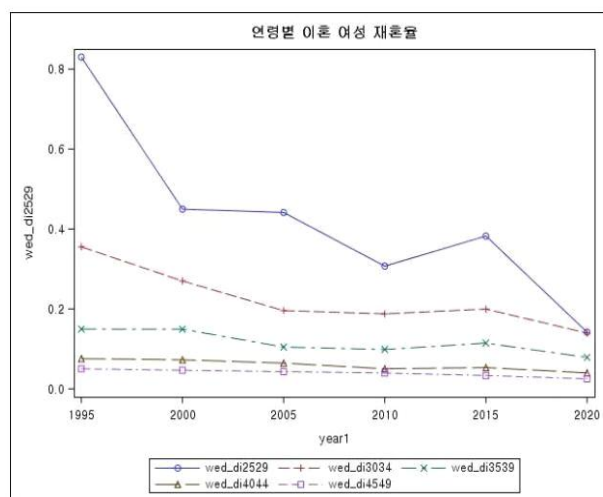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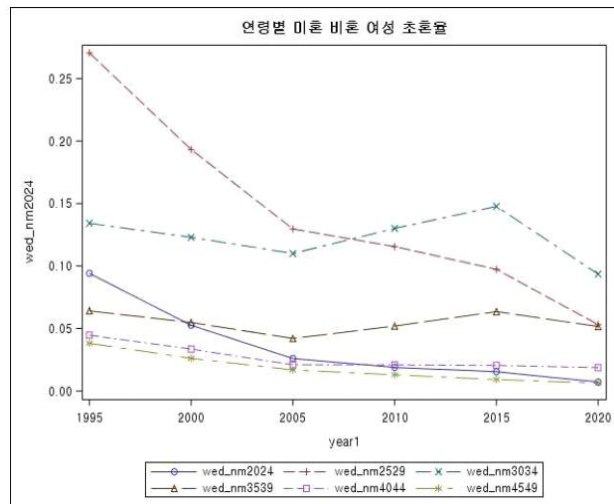
-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는 1990년 이후 장기적인 출생아 수 감소의 가장 중요한 요인.
- 여성 유배우 비율은 ① 한번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미혼/비혼)의 비율 ② 이혼 상태에 있는 여성의 비율, ③ 사별 상태에 있는 여성의 비율 등에 의해 결정됨.
- 이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동태율: ① 무배우 여성의 혼인율, ② 유배우 여성의 이혼율, ③ 유배우 여성의 사별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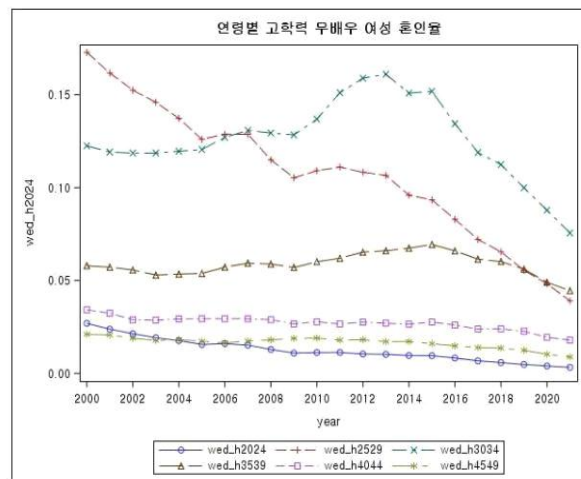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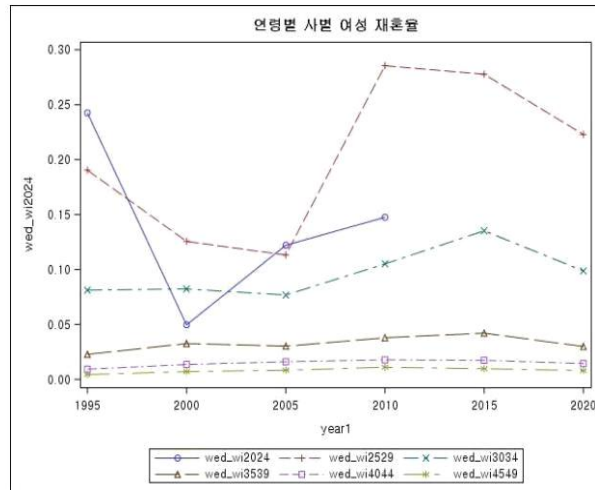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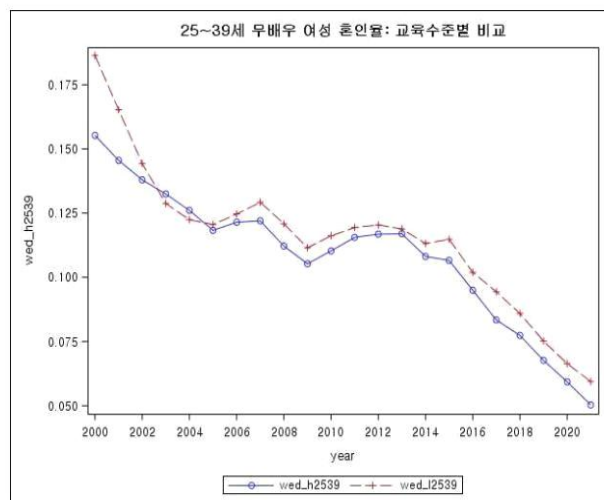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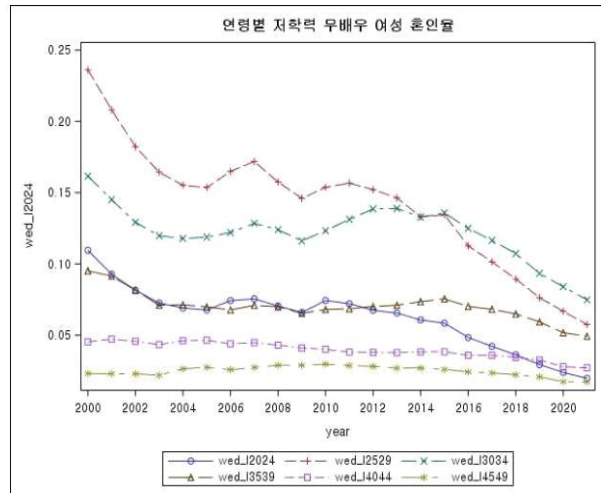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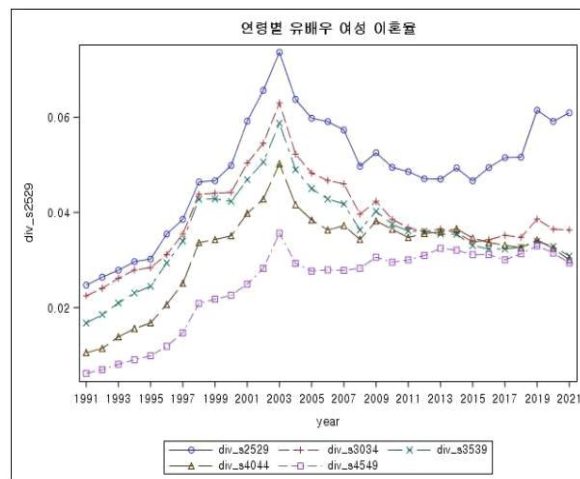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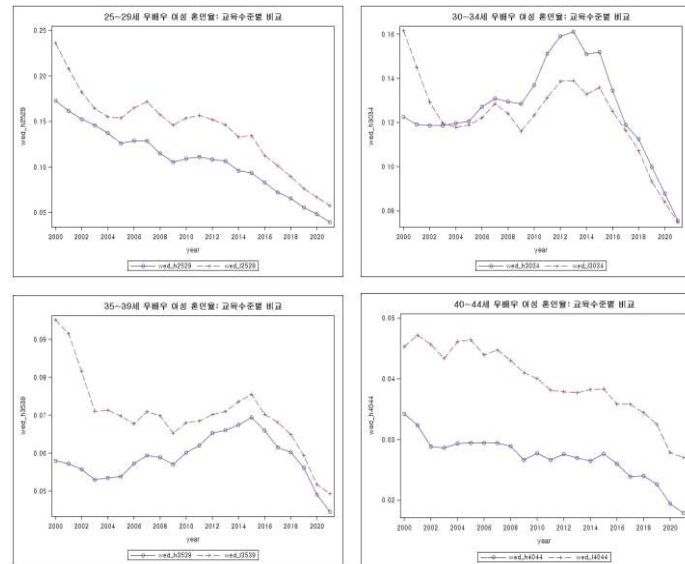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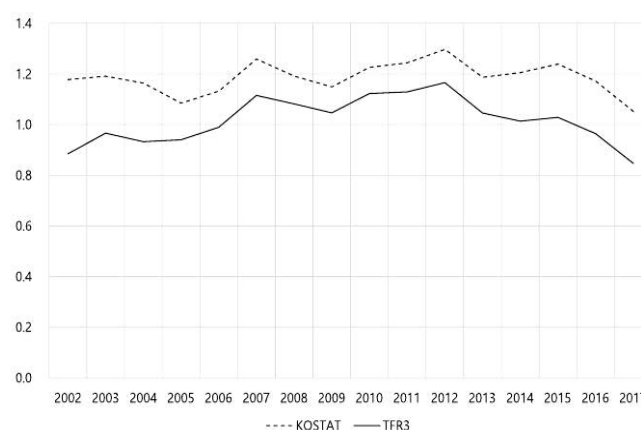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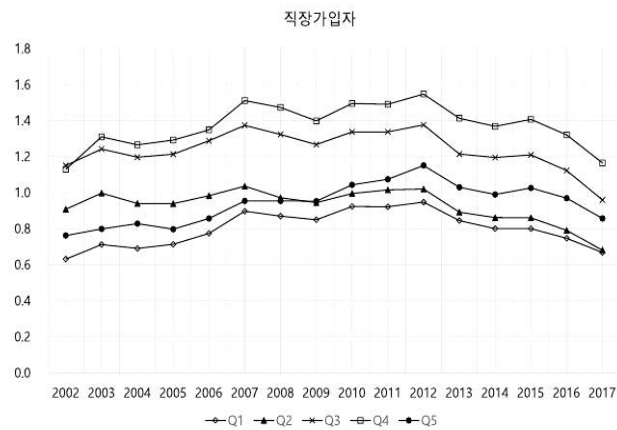
여성 인구 유배우 비율 변화 요인: 요약

- 장기적으로, 미혼/비혼 여성의 초혼율 감소가 여성 유배우 비율 감소의 압도적으로 중요한 요인(100% 이상 설명)
 - 이혼 증가도 여성 유배우 비율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
 - 사별 감소는 여성 유배우 비율을 증가시켜서 이혼 증가의 효과를 상쇄.
- 무배우 여성 혼인율은 연령 및 시기별로 다른 추이 보임.
 - 20대 무배우 여성 혼인율을 일관되게 감소
 - 30대 무배우 여성 혼인율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상승.
- 유배우 여성 이혼율은 1991년~2003년 증가, 2003년~2015년경 하락, 2015년~2021년 20대와 30대 초 여성에게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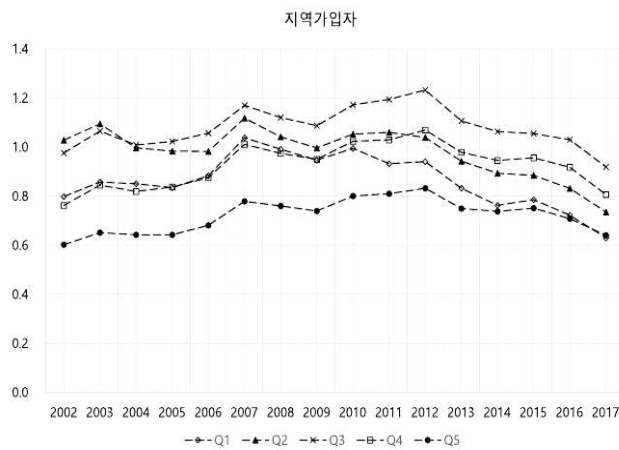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KOSTAT)과
건강보험 DB에서 추정한 합계출산율(TFR3) 비교



직장가입자 소득수준별 합계출산율



지역가입자 소득수준별 합계출산율



건강보험 DB에서 추정한 전국 합계출산율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용하여 추정한 합계출산율보다 낮음. 그러나 시간적인 변화의 패턴은 유사함.
 - 과소추정의 원인은 ① 다태아가 한 명 출산으로 반영, ② 병원 외 분만, ③ 건보자료 누락 등으로 추정됨.
 - 다태아 비율: 2002년 약 2.0% → 2017년 3.9%, 병원 외 출생 비율: 2002년 2.6% → 2017년 0.5%
- 소득분위별 합계출산율 수준: 시간적인 변화의 추이는 유사하지만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 간 합계출산율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남.
 - 직장가입자의 경우 4분위 출산율이 가장 높고, 3분위 출산율이 뒤를 이음. 최하위 분위(1분위) 출산율을 매우 낮음. 최상위 분위 출산율은 2009년 이후 상대적으로 높아짐.
 - 지역가입자의 경우 2004년 이후 3분위 출산율이 가장 높게 유지됨. 최상위분위(5분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최하위분위 출산율은 최근 빠르게 감소.

출생아 수 감소 원인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

- 결혼, 출산, 이혼 등의 변화에 있어서 시간효과(time effect)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분위별 시간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남.
-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중반은 출생아 수와 관련된 인구학적 요인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시기였음.
 - 30대 무배우 혼인을 증가, 전반적인 무배우 혼인을 유지, 유배우 이혼율 감소, 유배우 출산율 증가.
- 2010년대 중반 이후 출생아 수와 관련된 인구학적 요인이 모두 부정적으로 바뀌었음.
 - 무배우 혼인을 감소, 20대와 30대 초 유배우 이혼율 다시 증가, 유배우 출산율 급감. 30대 이하 이혼인구 비중 증가.
- 결혼 및 출생아 수 변화 원인에 대한 진단은 인구동태요인들의 시간적인 변화 패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

출생아 수 장래추이 전망에 대한 시사점

- 2015년 이후 7년 동안 일관되게 모든 출생아 수 결정요인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30대 무배우 여성 혼인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만혼의 비혼화가 실현?
 - 여성 유배우 비율이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인 변동성이 심한 유배우 출산율(특히 무자녀 유배우 여성 첫 자녀 출산율)이 반등한다고 해도, 낮아진 유배우 비율 때문에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움.
- 이혼의 증가는 결혼 감소로 인한 여성 유배우 비율 감소 추이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됨.
 - 사별 위험이 이미 매우 낮아져서 더 이상 사별인구 감소가 이혼인구 증가를 상쇄하지 못할 것.
- 전체 유배우 인구 중 무자녀 인구 비중의 증가 → 자녀를 갖는데 대한 문화적인 규범 변화 가속화될 수 있을 것.



주거비용과 저출산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영욱 연구위원

02



주거비용과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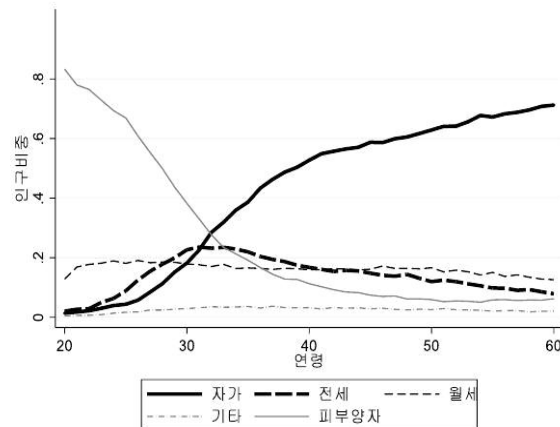
2022.11.24

이명욱

주거와 출산

- 다양한 출산양육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
 - 직접적인 출산양육비용 이외의 경제사회적 요인이 출산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
- 주택가격은 여러 경제적 요인 중에서도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 주거비용은 가족형성과 자녀양육에 있어 필수적이며 규모가 큰 비용
 - 상당수의 청년층이 가족형성과 맞물려 새로운 임차가구로 또는 임차에서 자가가구로 이행
 - 특히, 불안정한 금융시장 하에서 주택가격 변동은 청년층의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연령에 따른 주거형태(여성, 2020년)



주: 자가, 전세, 월세, 기타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여성에 한해 정의되며, 이외 여성은 피부양자로 정의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20

주거비용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
- (주택소유가구) 주택가격 상승은 가구보유자산 또는 담보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자녀출산 증가 기대
 - 재산 효과(wealth effect)
 - 담보 효과(home equity effect): 일시적인 주택가격상승으로 영구적인 재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불완전한 금융시장 하에서 담보가치 상승에 따른 차입가능성 확대
- (가격효과) 주택소유의 어려움이 높아져 가족형성을 지연할 수 있음.
 - 주택소유 계획을 가진 임차가구 및 더 큰 집을 구매계획을 가진 주택소유자 모두에게 적용
- (임차가구) 주택가격 상승 또는 전월세가격 상승은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자녀출산에 부정적인 영향

주택가격과 출산에 대한 해외연구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소유자의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 관찰
 - Lovenheim and Mumford(RES, 2013): 미국 1985-2007년 PSID 자료를 활용한 개인단위 분석에서 \$10,000의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소유자의 출산확률을 1.6~1.8% 증가시킴.
 - Dettling and Kearney(JPubE, 2014): 미국 1990-2007년 MSA 단위 분석에서 \$10,000의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소유자의 출산확률을 5% 증가시키는 반면, 미소유자의 출산확률을 2.4% 감소시킴.
 - Aksoy(EBRD working paper, 2016): 영국 1995-2013년 county 단위 분석에서 10%의 주택가격 상승(평균 £17,200)은 주택소유자의 출산확률을 2.8% 증가시키는 반면, 미소유자의 출산확률을 4.9% 감소시킴.

주택가격의 출산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의 어려움

- 주택가격과 출산효과 간의 단순 관계 분석에는 주택가격의 출산효과 (주택가격 $\Rightarrow$ 출산)와 출산수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출산 $\Rightarrow$ 주택가격)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
 - 출산수요가 높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역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분석 필요
- 이에 여러 연구들에서는 도구변수 활용, 지역단위 주택가격상승 적용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출산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고자 함.
 - Dettling and Kearney(2016)와 Aksoy(2016)은 지리적 특성, 주택 계획제한과 같이 주택공급제약에 대한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주택 수요가 아닌 주택공급부문에 의한 주택가격 변화분을 이용

$$\Delta P_{it} \propto (1 + RDZ_r) \times \Delta P_t$$

주거비용의 출산효과에 대한 분석 개요

- 우리나라에 대해 주택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시군구 단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Han and Lee, 2022)
 - 시군구별 개발제한구역 비중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주택공급제약에 따른 주택가격변화분에 대해 분석
 - 개발제한구역은 196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지정된 후 1999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음.
- 기존 연구들에서 살펴본 매매가격 뿐 아니라 전세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출산시기의 청년층에서 임차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임차가격의 출산효과를 별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의 전세라는 독특한 계약형태를 활용하여 전세가격을 통해 임차가격의 영향을 살펴봄.

분석방법(1)

- 주택가격이 주택소유비중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ln(y_{r,g,t+10}) = (\alpha_1 + \alpha_2 \text{Own}_{rg}) \times \ln(P_{r,(t,t-k)}) + X'_{rgt} \delta + Z'_{rt} \omega + \phi_{rg} + \mu_t + \nu_r \times t + \psi_{r,oc} \times \text{OwnCat}_{rg} \times t + \epsilon_{rgt}$$

- 주택미소유 경우 주택가격의 출산효과= α_1
- 주택소유 경우 주택가격의 출산효과= $\alpha_1 + \alpha_2$

- $y_{r,g,t+10}$: 지역 r, 연령그룹 g에 속하는 여성의 10개월 뒤 출산율
- $P_{r,(t,t-k)}$: t-k기 부터 t기까지 지역 r의 주택가격 평균
- Own_{rg} : 지역 r, 연령그룹 g에 속하는 여성의 주택소유비중(2005년 기준)
- X_{rgt} : 지역 r, 연령그룹 g에 속하는 여성의 평균적인 특성
- Z_{rt} : 지역 r의 지역적 특성

분석방법(2)

-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출산효과를 함께 분석

$$\begin{aligned} \ln(y_{r,g,t+10}) &= (\gamma_1 + \gamma_2 \text{Own}_{rg}) \times \ln(P_{r,(t,t-k)}) + (\gamma_3 + \gamma_4 \text{Own}_{rg}) \\ &\quad \times \ln(D_{r,(t,t-k)}) + X'_{rgt} \delta + Z'_{rt} \omega + \phi_{rg} + \mu_t + \nu_r \times t \\ &\quad + \psi_{r,oc} \times \text{OwnCat}_{rg} \times t + \epsilon_{rgt} \\ &= (\gamma_1 + \gamma_2 \text{Own}_{rg}) \times \ln(P_{r,(t,t-k)} / D_{r,(t,t-k)}) + (\gamma_1 + \gamma_3 \\ &\quad + (\gamma_2 + \gamma_4) \text{Own}_{rg}) \times \ln(D_{r,(t,t-k)}) + X'_{rgt} \delta + Z'_{rt} \omega + \phi_{rg} \\ &\quad + \mu_t + \nu_r \times t + \psi_{r,oc} \times \text{OwnCat}_{rg} \times t + \epsilon_{rgt} \end{aligned}$$

- $D_{r,(t,t-k)}$: t-k기 부터 t기까지 지역 r의 전세가격 평균

분석자료

- 시군구 단위의 여러 행정자료를 연결
 - 출산율: 출생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2005-2018)
 - 주택가격: 한국감정원, 매매·전세가격지수(2005-2017)
 - 개발제한구역 비중: 국토교통통계연보(1999)
 - 주택소유비중, 전세비중: 인구주택총조사(2005)
 - 인구비중, 실업률, 교육수준에 대한 각종 행정자료 활용

분석결과(1) 매매가격의 출산효과

- 매매가격의 증가는 주택소유자의 출산확률을 높이는 반면, 미소유자의 출산확률을 감소시킴.

Dep. Var.: ln(Birth Rates)	(1) OLS	(2) OLS	(3) OLS	(4) OLS	(5) IV	(6) IV	(7) IV
Log HPI	-1.213** (0.242)	-0.974** (0.174)	-0.922** (0.173)	-0.461** (0.092)	-4.314** (0.660)	-3.768** (0.650)	-1.555** (0.441)
Log HPI × Owner	3.353** (0.601)	2.253** (0.386)	2.008** (0.391)	0.954** (0.209)	9.063** (1.069)	8.506** (1.022)	3.722** (0.635)
First stage:							
F-stat.: ln(HPI)					5.6	4.1	3.9
F-stat.(SW): ln(HPI)					(40.5)	(32.2)	(32.7)
F-stat.: ln(HPI) × Owner					15.7	12.1	9.2
F-stat.(SW): ln(HPI) × Owner					(73.2)	(54.0)	(39.5)
Year-by-month FE	Y	Y	Y	Y	Y	Y	Y
Region-by-group FE	Y	Y	Y	Y	Y	Y	Y
Region-specific trends	N	N	Y	Y	N	Y	Y
Region-own category trends	N	N	N	Y	N	N	Y
N	101640	101640	101640	101640	101640	101640	10164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are clustered at the regional level.

+ $p < 0.1$, * $p < 0.05$, ** $p < 0.01$

분석결과(2) 전세가격의 출산효과

- 전세가격의 증가는 전세임차인의 출산확률을 뚜렷하게 감소시킴.

Dep. Var.: ln(Birth Rates)	(1) OLS	(2) OLS	(3) OLS	(4) OLS	(5) IV	(6) IV	(7) IV
Log JPI	5.306** (0.280)	3.777** (0.219)	4.293** (0.271)	2.756** (0.299)	5.668** (0.908)	4.145 (8.423)	2.597 (7.948)
Log JPI × Jeonse-renters	-10.013** (0.620)	-9.116** (0.480)	-10.404** (0.505)	-6.946** (0.613)	-11.935** (0.733)	-14.490** (1.731)	-11.657** (2.794)
Log JPI × Other-renters	-8.307** (0.408)	-4.850** (0.358)	-5.091** (0.405)	-3.075** (0.467)	-7.452** (0.618)	-8.122** (1.554)	-5.130** (1.446)
First stage:							
F-stat.: ln(JPI)					5.9	5.4	5.3
F-stat.(SW): ln(JPI)					(10.3)	(0.1)	(0.1)
F-stat.: ln(JPI) × Jeonse-renter					80.6	165.3	71.9
F-stat.(SW): ln(JPI) × Jeonse-renter					(32.3)	(0.2)	(0.2)
F-stat.: ln(JPI) × Other-renter					95.9	175.6	163.7
F-stat.(SW): ln(JPI) × Other-renter					(136.3)	(0.3)	(0.4)
Year-by-month FE	Y	Y	Y	Y	Y	Y	Y
Region-by-group FE	Y	Y	Y	Y	Y	Y	Y
Region-specific trends	N	N	Y	Y	N	Y	Y
Region-own category trends	N	N	N	Y	N	N	Y
N	101640	101640	101640	101640	101640	101640	101640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are clustered at the regional level.

+ $p < 0.1$, * $p < 0.05$, ** $p < 0.01$

분석결과(3)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출산효과

Dep. Var.: ln(Birth Rates)	(1)	(2)	(3)	(4)	(5)	(6)	(7)
	OLS	OLS	OLS	OLS	IV	IV	IV
Log HPI	0.815** (0.197)	0.340* (0.138)	0.387** (0.113)	0.217* (0.096)	-1.555* (0.685)	-1.844* (0.729)	-1.456* (0.609)
× Owner	-2.101** (0.447)	-0.691** (0.264)	-1.144** (0.258)	-0.696** (0.216)	3.384** (1.082)	3.635** (1.248)	2.829** (1.004)
Log JPI	-3.999** (0.215)	-3.274** (0.162)	-3.224** (0.155)	-1.946** (0.192)	-4.505** (0.748)	-4.093+ (2.240)	-2.776 (2.178)
× Owner	9.580** (0.362)	6.816** (0.305)	7.584** (0.347)	4.583** (0.450)	9.279** (0.565)	10.897** (0.788)	8.247** (0.839)
First stage:							
F-stat.: Ln(HPI)					6.3	3.0	2.9
F-stat.(SW): Ln(HPI)					(29.0)	(4.1)	(4.5)
F-stat.: Ln(HPI)×Owner					15.7	15.2	18.5
F-stat.(SW): Ln(HPI)×Owner					(69.7)	(7.7)	(7.7)
F-stat.: Ln(JPI)					2.9	1.1	1.2
F-stat.(SW): Ln(JPI)					(5.9)	(3.6)	(3.6)
F-stat.: Ln(JPI)×Owner					49.5	129.0	143.6
F-stat.(SW): Ln(JPI)×Owner					(19.1)	(36.6)	(316.2)
Year-by-month FE	Y	Y	Y	Y	Y	Y	Y
Region-by-group FE	Y	Y	Y	Y	Y	Y	Y
Region-specific trends	N	N	Y	Y	N	Y	Y
Region-own category trends	N	N	N	Y	N	N	Y
N	101640	101640	101640	101640	101640	101640	101640

분석결과(4) 출산순위에 따른 출산효과

- 첫째아 출산에 대해서는 전세가격의 영향이 크며, 이후 출산에 대해서는 매매가격도 함께 영향을 미침.

Dep. Var.: ln(Birth Rates)	(1)	(2)	(3)	(4)	(5)	(6)
		First births, IV		Subsequent births, IV		
Log HPI	-4.187** (0.729)	-0.537 (0.593)	-1.019 (0.778)	-5.564** (0.756)	-2.867** (0.684)	-2.605** (0.862)
× Owner	9.694** (0.995)	1.602* (0.793)	1.883* (0.952)	11.121** (1.035)	5.509** (0.949)	6.094** (1.166)
Log JPI		-5.981** (0.919)	-5.369 (3.867)		-4.407** (0.814)	-7.403+ (3.894)
× Owner		13.259** (0.738)	15.616** (0.872)		9.175** (0.663)	10.460** (0.783)
Year-by-month FE	Y	Y	Y	Y	Y	Y
Region-by-group FE	Y	Y	Y	Y	Y	Y
Region-specific trends	N	N	Y	N	N	Y
N	101640	101640	101640	101640	101640	101640

분석결과(5) 연령별 출산효과

-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는 주거비용이 임차인의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관찰되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택소유자의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커짐.

Dep. Var.: ln(Birth Rates)	(1) All	(2) 20-24	(3) 25-29	(4) 30-34	(5) 35-39	(6) 40-44
Log HPI	-1.555*	-0.016	0.410	-0.164	-0.186	0.531
	(0.685)	(0.642)	(0.274)	(0.264)	(0.298)	(1.330)
× Owner	3.384**	-0.430	0.523	1.405*	0.692	-2.567
	(1.082)	(2.265)	(0.552)	(0.587)	(0.510)	(2.423)
Log JPI	-4.505**	-0.670	-1.592**	-1.313**	-1.274*	-1.131
	(0.748)	(1.164)	(0.438)	(0.456)	(0.616)	(1.878)
× Owner	9.279**	1.320	0.544	1.170	2.299**	4.519*
	(0.565)	(1.327)	(1.117)	(0.707)	(0.676)	(2.491)
Year-by-month FE	Y	Y	Y	Y	Y	Y
Region-by-group FE	Y	Y	Y	Y	Y	Y
N	101640	20328	20328	20328	20328	20328

분석결과 종합

- 우리나라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매매가격 증가 시 주택소유자의 출산율은 증가하는 반면, 주택미소유자의 출산율은 감소
 - 전세가격 증가 시 전세임차인의 출산율은 감소
 -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함께 고려한 모형에서는 전세가격의 영향이 매매가격의 영향보다 2~3배 정도 높게 관찰
 - 첫째아 출산은 대부분 전세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이후 출산은 매매가격도 함께 영향을 미침.
- 분석결과를 임대료 지원을 통한 전세부담 경감이 (특히 첫째아)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며, 주택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출산장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자녀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대일 교수

03

자녀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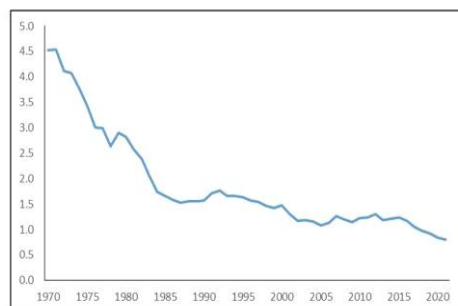
2022. 11. 24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 Motivation

- 출산률 하락 추세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둔화, 그러나 최근까지도 꾸준한 하락세
- 왜 출산률이 하락? 1970~80년대 빠르게 하락하였던 과정에 대한 이해 필요

합계출산률 추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 Motivation

-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는데 출산률은 하락하는 양상

[Gary S. Becker의 fertility model]

- 자녀의 수(quantity)로부터 질(quality)로의 대체(substitution effect)
 -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질적인 수준으로부터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증가
 - 자녀 보육에 투자되어야 하는 시간 비용은 자녀 수에 비례
 - 보육시간의 기회비용은 market activity로부터의 소득
 - 따라서 자녀의 수를 늘리기 보다는 소수의 자녀를 잘 키우는 방향으로 대체가 유발
- 결국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금전적 비용보다 시간적 비용이 더 중요**

1. Motivation

- 횡단면 비교에서도 금전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소득별 자녀수
(KLIPS)

40~45세 유배우자 기혼 여성		부부 소득				
		하위 20%	차상위 20%	중위 20%	차하위 20%	상위 20%
2013년	자녀 수(명)	1.68	1.87	1.77	1.93	1.85
	소득(만원)	183.3	304.0	397.0	523.3	809.0
2020년	자녀 수(명)	1.69	1.75	1.88	1.77	1.85
	소득(만원)	247.2	390.6	484.4	606.6	1,031.2

- 2020년 기준 상위 20% vs 하위 20% 자녀 수 차이는 .16명, 월 소득격차는 784만원
- 자녀 1명을 늘리기 위한 지원액 $\rightarrow 784\text{만} \times 12\text{개월} \times 35\text{년} / .16\text{명} = 205\text{억}8\text{천만원?}$
- **결국 자녀에 대한 시간적 투자의 기회 비용이 높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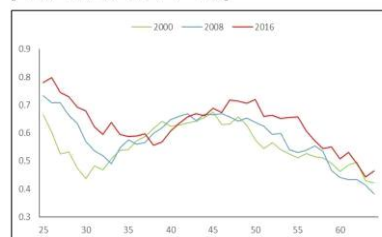
1. Motivation

- 시간적 투자의 기회비용은 부/모의 사회참여, 경제활동과 상충되기 때문
 - 자녀보육에 시간을 쓰는 부/모의 경제활동과 장충
 -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시간 사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
 - 아버지의 임금은 소득효과로, 어머니의 임금은 소득+대체효과로 유발
- 어머니의 자녀 보육에 대한 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핵심
 - 어떤 연령대의 자녀가 문제가 되나?
 - 영유아가 문제라면 보육시설 확충의 이슈
 - 영유아가 아니라면?
- 어머니 경제활동과의 **상충이 심화되는** 자녀 연령대를 식별

2. Key Patterns

- 여성 경제활동은 대체로 확대되고 있으나, 연령별 · 시기별로 그 양상에 차이
- 최저점(M-자형 취업자 비중의 local minimum)이 우측으로(높은 연령으로) 이동하는 양상

[여성 연령별 취업자 비중]



-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M-자형 취업자 비중 양상은 결혼/출산/육아와 연계
- 최저점의 우측 이동은 최근의 만혼/비혼 양상에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
- 2000년 이후 대체로 취업자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나, **30대 후반 및 40대 초반에** 서는 오히려 하락
- Why?

2. Key Patterns

- 최저점(M-자형 고용률의 local minimum)이 우측 이동
- 만혼 및 비혼 추세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

[고용률, 기혼비중 및 초혼 연령 비교]



- 고용률이 최저점인 연령과 기혼 비중이 처음으로 80%를 넘어서는 연령을 비교
- 장기적으로 동반 상승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용률 최저점 연령이 높아짐
- 초혼 연령은 거의 선형 증가(1998~2006년 1.7세, 2006~2016년 2.3세 증가)한데 비해 고용률 최저연령은 각각 3세, 6세 증가
- There's something more than just delayed marriage

2. Key Patterns

- 여성 취업자 비중이 2006~16년 기간 동안 **30대 후반 및 40대 초반**에서 하락한 것은 **유 배우자 기혼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변화를 반영

[기혼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변화]



-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취업자 비중이 모두 증가
- 30대 중반까지는 기혼 여성도 미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
- 결과적으로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예외적인 취업자 비중 하락에 초점을 맞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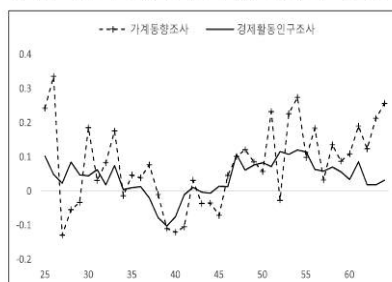
3. What Explains the Age-Pattern in Employment Changes?

- 기혼 여성의 취업 여부를 연도별로 추정하여 비교
- 설명변수로 개인의 학력, 연령, 자녀수, 비근로 소득을 고려
- **어머니 취업에 대한 자녀의 부정적 효과가 어떤 자녀에게서 심화되고 있는지 식별**
- 분석 자료는 가계동향조사(통계청)를 사용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를 식별할 수 없어 자녀 파악이 안되고, 자녀도 15세 이상만 조사되며, 소득변수도 없기 때문에 여성 취업 함수 추정 불가
-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자녀와 비근로 소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만, 표본 수가 적고 분석 대상이 배우자이거나 가구주인 기혼 여성에 국한된다는 제약
- (2016년 가계동향 조사 기준) 25~64세 여성 가운데 기혼/미혼 판정이 불가능한 인구 비중은 1.69%, 미혼은 22.64%, 기혼은 75.67%. 기혼자 가운데 가구주나 배우자로서 노동공급 함수 추정에 포함되는 비중은 97.57%, 따라서 큰 제약은 아니라고 판단

3. What Explains the Age-Pattern in Employment Changes?

- 기혼여성의 연령별 고용률 변화를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비교한 결과 대체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임

[기혼여성의 연령별 취업비중 변화의 자료별 비교(2006~16년)]



- 30대 후반~40대 초반 하락 양상은 동일
- 다만 가계동향조사에서의 변화는 훨씬 noisy한 양상을 보이며, 이는 표본수에 따른 양상으로 판단됨.

[regression of 가계동향 on 경제활동조사]
 가계동향조사 = .029 (.020) + 1.223 (.308) *
 경제활동인구조사

3. What Explains the Age-Pattern in Employment Changes?

[로짓 모형을 통한 취업 결정 함수]

- 자녀변수의 계수에 변화 : 영유아 등 미취학 자녀로 인한 노동공급 억제효과는 감소하는 추세, 그러나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생까지 취학자녀의 계수는 모두 노동공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
- 연령함수의 경우 정점이 2006년 38.6세에서 2016년 41.2세로 2.6세 증가 : 동일 기간 초혼 연령은 2.3세 상승
- 학력변수의 경우 대졸 이상 계수가 두 연도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두 시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2006년 (51.0%)	2016년 (56.3%)
지녀 없음=1	.324 (.095)***	.273 (.118)**
3세 이하 자녀 수	-.938 (.078)***	-.685 (.097)*** (*)
4~6세 자녀 수	-.443 (.070)***	-.323 (.088)***
초등학교 자녀 수	-.172 (.048)***	-.306 (.066)*** (*)
중학생 자녀 수	.122 (.065)	.071 (.091)
고등학교 자녀 수	.135 (.079)	-.001 (.089)
고졸 이상 자녀 수	.131 (.054)***	.240 (.074)***
비근로소득=0	-7.759 (.749)***	-6.640 (.810)***
log(1+인당 비근로소득)	-.497 (.037)***	-.471 (.052)***
연령	.265 (.027)***	.214 (.039)***
연령 ² /100	-.343 (.030)***	-.260 (.039)*** (*)
고졸	-.190 (.067)***	-.058 (.091)
초대졸	-.119 (.108)	-.090 (.116)
대졸 이상	.117 (.080)	-.159 (.101) (**)
상수항	2.259 (.738)***	2.887 (1.015)***
log likelihood	-5,392.42	-3,326.3
관측치	8,400	5,087

3. What Explains the Age-Pattern in Employment Changes?

- 기혼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변화 구성 분해

개인의 고용확률 : $\Pr[i \text{ works in } t | X_{it}] = F(X_{it}\beta_t)$

$p_{at} = \int F(X\beta_t) dH(X|a, t)$, $H(X|a, t)$ 는 t 년도 a 연령 기혼 여성의 X 분포함수

s 와 t 년도 기간의 고용률 변화 구성분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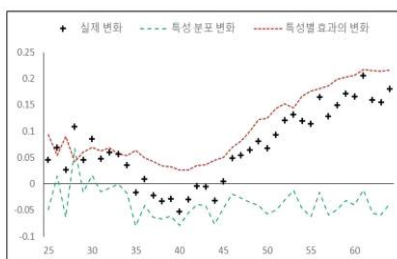
$$\begin{aligned}
 p_{at} - p_{as} &= \int F(X\beta_t) dH(X|a, t) - \int F(X\beta_s) dH(X|a, s) \\
 &= \int F(X\beta_s) d[H(X|a, t) - H(X|a, s)] + \int [F(X\beta_t) - F(X\beta_s)] dH(X|a, t)
 \end{aligned}$$

전체 변화 = 인구구성(X)의 변화 + 각 변수의 효과(β)의 변화

3. What Explains the Age-Pattern in Employment Changes?

- 기혼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변화는 대부분 계수(β) 변화에 의해 설명됨

[기혼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변화 구성분해(2006~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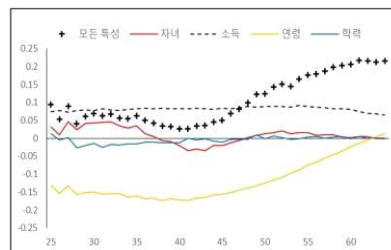


- 기대치 변화는 추정 계수(β)에 기초한 고용률의 predicted value($\hat{p}_{at}$)의 변화를 의미
- 인구구성(X)의 변화는 30대 초반까지 일부 고용률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반면, 그 이상에서는 특이한 연령별 패턴 없이 고용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
- 계수(β)의 변화는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상대적 하락과 40대 중반 이후의 증가세를 잘 반영

3. What Explains the Age-Pattern in Employment Changes?

- 각 변수 그룹별로 계수(β) 변화의 효과를 보면 자녀 효과가 두드러짐
- 소득과 학력 계수의 역할은 거의 없고, 40대 이후의 증가는 연령함수의 변화에 반영

[기혼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변화에 대한 각 변수군의 설명력(2006~16년)]



- 계수변화의 효과 :

$$\text{전체} = \int [F(X\beta_t) - F(X\beta_s)] dH(X|a,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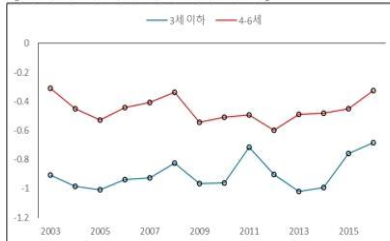
$$\text{변수별} = \int [F(X\beta_t^k) - F(X\beta_s)] dH(X|a, t)$$

- β_t^k 는 β_s 에서 k 변수(군)의 계수만 β_t 값으로 대체한 계수 벡터임.

3. What Explains the Age-Pattern in Employment Changes?

- 미취학 자녀와 취학 자녀의 역할 변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추세적인 것으로 판단됨
- 미취학 자녀의 억제효과는 완화되고, 취학 자녀의 효과는 고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미취학 자녀의 추정계수 추이]



[취학자녀의 추정계수 추이]



4. COVID-19 기간의 변화

- 취학 자녀에 대한 등교 제한 정책
 - 추가적인 돌봄 수요 유발
 - 학습 저하에 대응한 사교육 수요 유발
- 미취학 자녀 어머니 대비 취학 자녀 어머니의 경제활동 변화
 - 사교육 지출은 모든 학령에서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어머니의 노동공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중학생 자녀의 어머니 가운데 노동공급 증가 양상도 관측
 - 고등학생 자녀의 어머니 노동공급 감소한 것으로 추정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4. What Needs Be Done?

- 아동/영아/보육 수당
 - 약 270만명의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월 지급,
 - 2022년부터 0~1세 아동을 위한 영아수당 월 30만원, 2025년 월 50만원
 - 2022년 기준 지출 추산액 5천9백억원/월, 7조1천억원/년
- 육아 휴직
 - 어머니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 대신 가정을 돌보라는 정책?
 - 여성 노동력 수요에 대한 부정적 효과
 - 아버지 육아 휴직은 자녀 비용을 더 상승시키는 부작용

4. What Needs Be Done?

- 무상 보육
 - 2022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은 3.15조원
 -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경제 효과는 대체로 없거나 부정적
 - 기존 취업자에게는 소득효과만 유발하기 때문
- 어머니를 취학 자녀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야 함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 스위스, 칠레의 방과 후 학교 효과(Felfe et al, 2016; Martinez & Peticara, 2017)
 - 멕시코, 칠레 학교시간 연장의 효과(Padilla-Romo & Cabrera-Hernandez, 2019; Contreras & Sepulveda, 2016 ; Berthelon et al, 2022)
 - 일본, 초등학교 시간이 짧을수록 부정적 효과(Takaku, 2019)
 - 입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이소영 연구위원

04

가치관과 저출산

이 소 영 연구위원

(sylvanne@kihasa.re.kr)



목 차

I 논의의 배경: 저출산의 원인으로서의 가치관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III 저출산 대책과 가치관

IV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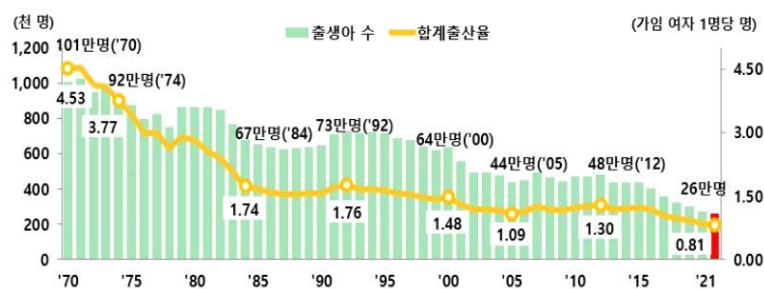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논의의 배경: 저출산의 원인으로서는 가치관

I. 논의의 배경

1. 저출산

- ◆ 저출산 (TFR 2.1명 미만): 1983년부터 시작, 약 40년 간 지속
- ◆ 초저출산 (TFR 1.3명 미만)은 2002년부터 시작
- ◆ TFR 1.0명 미만: 2018년부터 시작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출산율 하락의 크기와 속도, 지속성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
-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고착화되며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

K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논의의 배경

2. 저출산의 원인

◆ (인구학적 요인)

- ❖ 가임기(15~49세) 여성인구의 감소, 특히 주출산 연령대(25~34세) 여성인구 감소
- ❖ 결혼의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로 인한 초산 연령의 상승

◆ (사회경제적 요인)

- ❖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불안정한 고용 증가
- ❖ 교육 경쟁, 교육기회 불평등의 증가
- ❖ 주거비용 증가
- ❖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 ❖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 ❖ 돌봄 공백

◆ (가치관 요인)

- ❖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자녀관의 변화

KIHASA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논의의 배경

3.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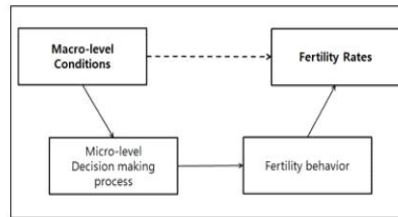
- ◆ 가치관이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평가의 근본적 태도를 의미
- ◆ 인간은 가치관에 따라 인간은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미래의 행위를 계획하므로 가치관은 혼인과 출산, 자녀양육과 이주 등의 인구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님(한국인구학회, 2016, p.39).

KIHASA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논의의 배경

4. 가치관과 출산 이론

◆ REPRO(REPRO: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project model



자료: Philipov, et al., 2015; Philipov, et al., 2011; 이소영 외, 2019에서 재인용

- ❖ 출산력(fertility rates)이라는 결과는 개인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 process)을 거친 출산 행동(fertility behavior)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사회경제적인 요인인 거시적인 조건(macro-level conditions)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음
- ❖ 미시 수준의 의사 결정 과정과 출산 행위를 이해하는 이론적 틀로 계획한 행위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제시
- 출산 의도(intentions)가 의사 결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며, 이는 태도(attitudes),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인지한 행위의 통제(perceived behavioural control)에 의해 결정됨

KIHASA한국미래전략연구소

I. 논의의 배경

4. 가치관과 출산 이론

◆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SDT) theory

- ❖ 제1차 인구변천이론(고전적 인구변천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출산율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 고전적인구변천 이론(classic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 ❖ 근대화, 산업화 이전의 고출생, 고사망 균형에서 비약적인 인구 자연증가 이후 저출생, 저사망이라는 새로운 균형으로의 이행을 논의
- ❖ 출산율의 변동이 궁극적으로 인구가 재생산되는 대체출산율에서 멈추어 장래에는 이 수준을 유지하며 인구 자연증감 수준은 항상성(homeostasis)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
- ❖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사고의 전환(ideational changes)으로 인해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가설이 핵심
- 출산 의도(intentions)가 의사 결정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며,
- 이는 태도(attitudes),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인지한 행위 통제(perceived behavioural control)에 의해 결정됨.

KIHASA한국미래전략연구소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1. 결혼가치관

◆ 결혼의 필요성

〈19~49세 남녀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2021)*〉



주: p = .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KHN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1. 결혼가치관

◆ **결혼의 필요성** 지역별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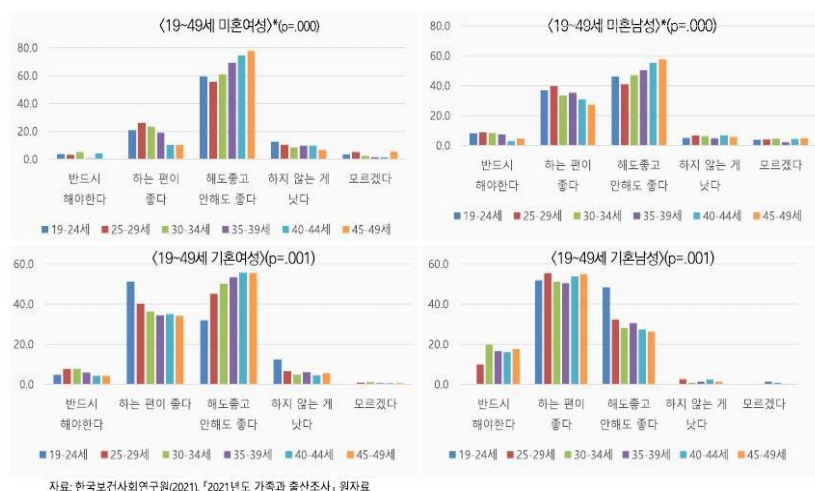


KH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1. 결혼가치관

◆ **결혼의 필요성** : 연령별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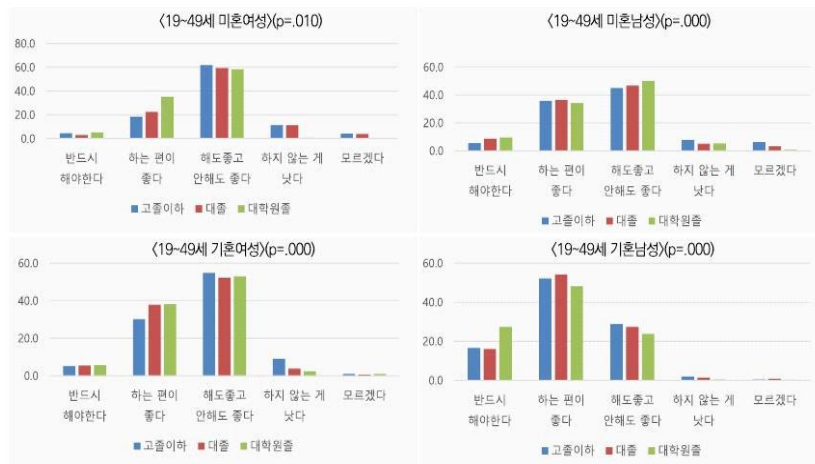
KH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1. 결혼가치관

◆ 결혼의 필요성 : 교육수준별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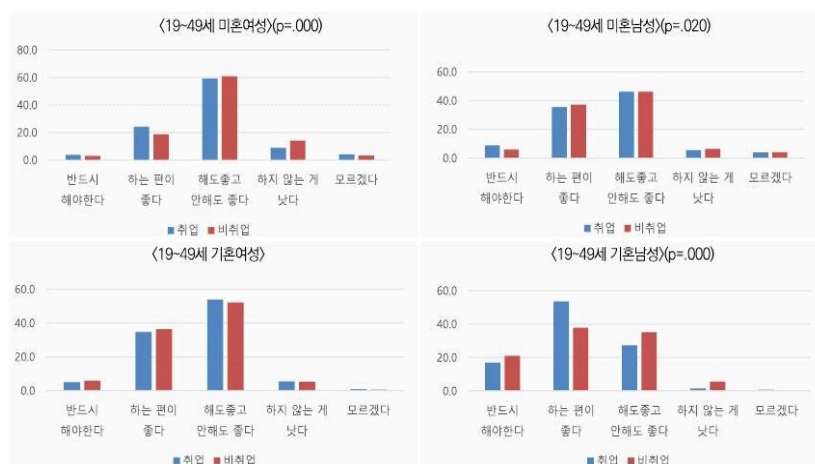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KIH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1. 결혼가치관

◆ 결혼의 필요성 : 취업여부별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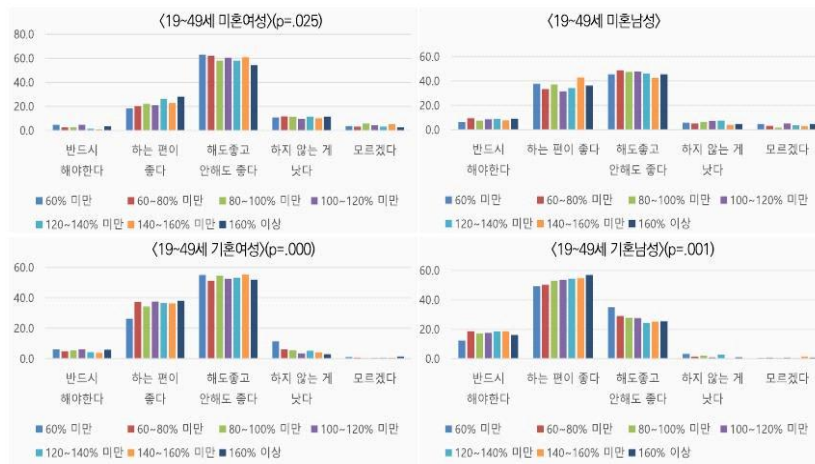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KIH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1. 결혼가치관

◆ 결혼의 필요성 : 기구소득별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2021)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KHN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1. 결혼가치관

◆ 결혼 필요성의 시계열적 고찰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00~2021>

(단위: %)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	계
2000년	19.2	30.5	44.2	5.4	0.8	100
2003년	21.5	29.4	40.8	7.8	0.6	100
2006년	22.1	31.6	42.4	3.9	0.0	100
2009년	22.5	32.5	40.2	4.7	0.0	100
2012년	17.8	42.7	34.8	4.5	0.3	100
2015년	11.5	37.7	44.4	6.0	0.4	100
2018년	9.0	30.4	53.3	6.8	0.3	100
2021년	5.4	35.4	53.2	5.4	0.7	100

주: 2021년은 19~49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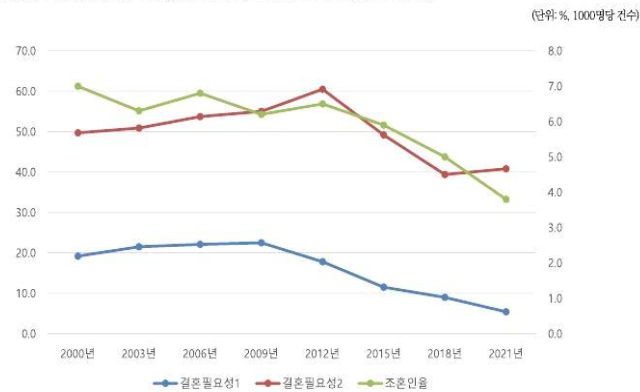
KHN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1. 결혼가치관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조혼인율과의 관계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과 조혼인율과의 관계〉



주: 필요성1은 '반드시 해야한다' 응답 비율; 필요성2는 '반드시 해야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 응답 비율의 합. 2021년은 19~49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2. 자녀가치관

◆ 자녀의 필요성 : 19~49세 남녀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2021)*



주: p= .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2. 자녀가치관

◆ **자녀의 필요성** 지역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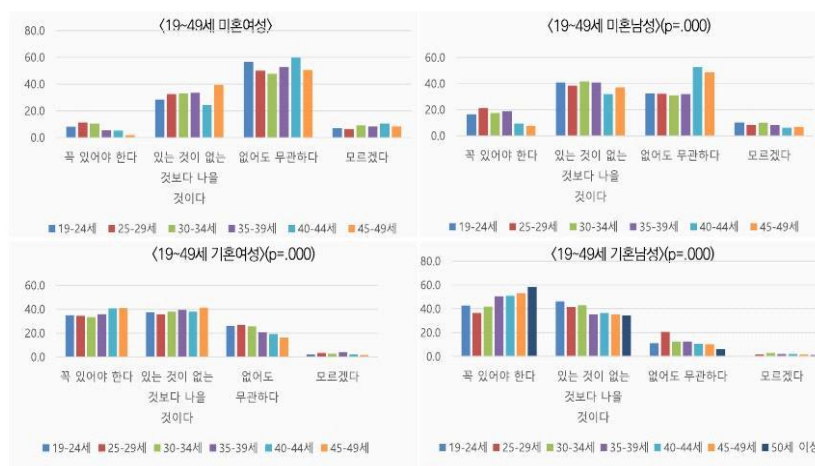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KH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2. 자녀가치관

◆ **자녀의 필요성** 연령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2021)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KH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2. 자녀가치관

◆ 자녀의 필요성 교육수준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2021)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KIH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2. 자녀가치관

◆ 자녀의 필요성 취업유무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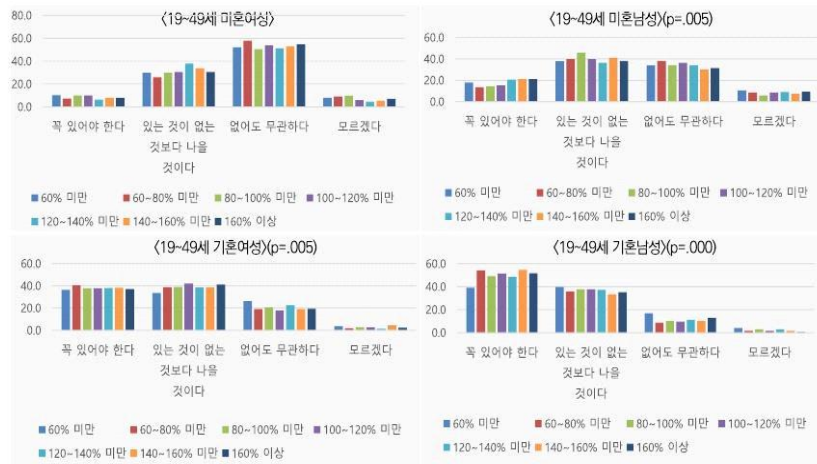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KIH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2. 자녀가치관

◆ **자녀의 필요성** : 소득수준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2021)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KHN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2. 자녀가치관

◆ **자녀의 필요성** : 기혼여성(15-49세)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1985-2021)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관하다	모르겠다	계
1985년	80.9	9.7	8.9	0.5	100.0
1988년	83.0	8.2	8.7	0.2	100.0
1991년	90.3	N/A	8.5	1.2	100.0
1994년	78.4	14.0	7.5	0.2	100.0
1997년	74.4	16.2	9.1	0.3	100.0
2000년	58.1	31.2	10.2	0.6	100.0
2003년	55.2	31.5	12.7	0.5	100.0
2006년	54.7	33.2	12.1	N/A	100.0
2009년	55.4	33.0	11.6	N/A	100.0
2012년	46.4	37.6	15.7	0.3	100.0
2015년	60.2	29.0	10.6	0.1	100.0
2018년	49.9	32.8	16.9	0.4	100.0
2021년	38.0	39.1	20.3	2.6	100.0

주: 2021년은 19-49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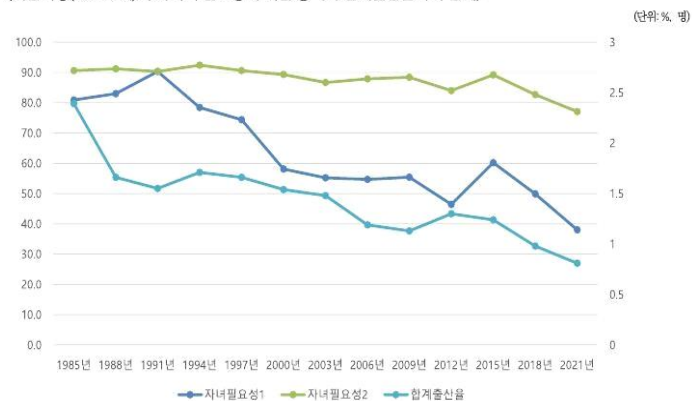
KHN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2. 자녀가치관

◆ 자녀의 필요성: 합계출산율과의 관계

(기혼여성(15~49세)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와 합계출산율과의 관계)



주: 필요성1은 '꼭 있어야 한다' 응답 비율, 필요성2는 '꼭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야' 응답 비율의 합, 2021년은 19~49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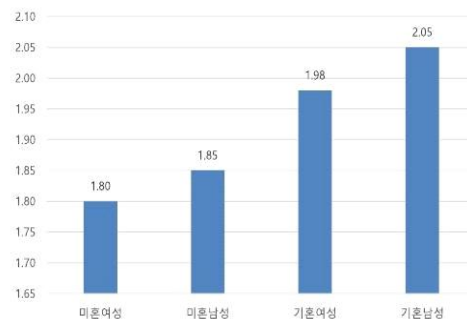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2. 자녀가치관

◆ 이상자녀수

(19~49세 남녀의 이상자녀수(2021)*)



주: p= .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

2. 자녀가치관

◆ 이상자녀수와 기대자녀수

〈기혼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와 합계출산율과의 관계 (2021)〉



주: 2021년은 19~49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년도),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KHN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I. 저출산 대책과 가치관

III.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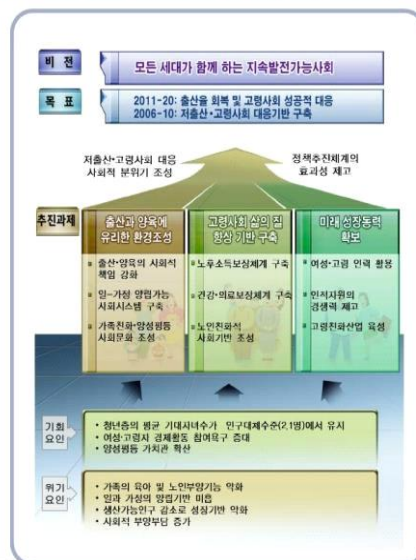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장	절	주된 내용
총칙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 다른 법률과 관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방향	저출산대책	인구정책,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
	고령사회정책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보장,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평생교육과 정보화, 여가·문화·사회 활동의 장려,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업무의 협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국회보고
보칙		전문인력의 양성, 조사 및 연구, 민간의 참여, 지원, 국제교류의 활성화 지원

KIHANSA 연구보고서 제2014-001호

I. 논의의 배경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KIHANSA 연구보고서 제2014-0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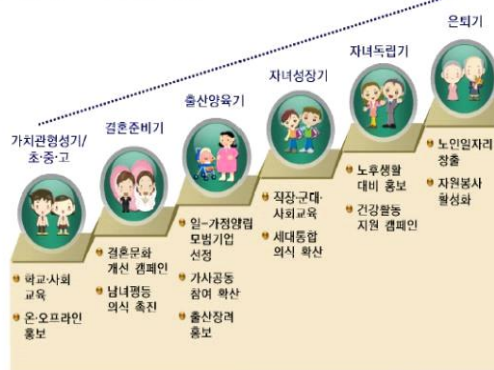
저출산의 원인

- ◆ 경제적 요인:
 - ❖ 영유아 보육비,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 부담
 - ❖ 결혼·출산연령층(25~34세)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
- ◆ 사회적 요인: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 ◆ 가치관 변화: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

I. 논의의 배경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 추진 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교육 홍보 실시
- 저출산·고령화 실태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정책에 대한 수용성 제고와 국민 인식을 전환하는 기반 마련
-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교육과 홍보 필요



KHNSA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I. 출산 정책

◆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 추진배경

사회문화 및 가치관 변화와 연관된 인구정책의 특성상,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

➢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수립이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홍보·교육을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국민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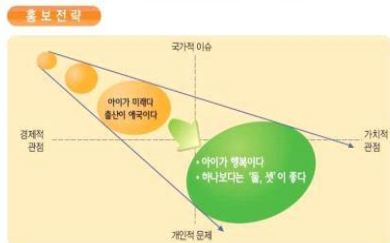
✓ (정책 추진 방향) 경제적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강화, 가치관 변화 대응 등이 적절히 어우러진 정책 조합을 구사

KHNSA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논의의 배경

◆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의 홍보 목표 및 전략

비전 출산관련 직접주제 및 사회 각계의 긍정인식 형성 원년화



◆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범 사회적 운동과 생애주기별 교육과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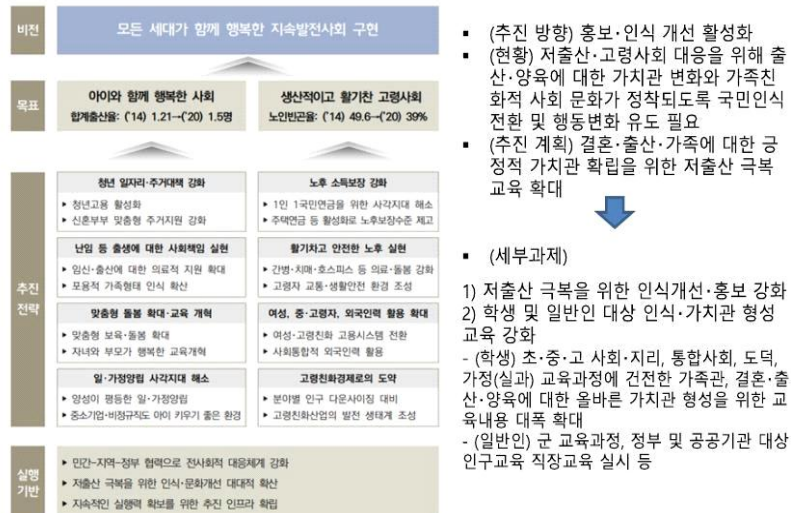
❖ (관점의 이동)
저출산이 초래할 심각성 강조하는 '국가적, 애국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개인적, 감성적' 방향의 긍정적 가치관 조성

❖ (구체적인 가치관 확산 목표)
가족 및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생명존중의식 제고, 양성평등 의식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등
인식과 환경변화에 주력

KIHASA 전국보건사회연구원

III. 출산 정책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KIHASA 전국보건사회연구원

I. 논의의 배경: 재생산 건강

◆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KHANS(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논의의 배경

◆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 ◆ 저출산의 원인 진단
 - ❖ 문화가치관 측면의 원인
 - 전통적·경직적인 가족규범 및 제도의 지속
 -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결혼과 출산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현재 청년들은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 수반
- ◆ 추진기반 강화 영역의 정책 방향: 사회·경제·구조·가치관의 총체적 결과로서의 저출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사회 구조적 접근 필요
 - ❖ 사회변화를 반영한 가족문화 모색
 - : 가족 가치관 및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족관계, 부모-자식 관계와 소통 방식 등 상호존중하고 평등한 가족 문화의 모색
 - ❖ '온 사회가 함께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분위기 조성
 - :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등 인식 및 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KHANS(한국보건사회연구원)

IV. 시사점

IV. 정책 시사점

1. 결혼 결정에 고려하는 항목의 중요도

: '전혀 중요하지 않다'-'매우 중요하다'의 5점 척도로 평가한 중요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KHN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V. 정책 시사점

1. 결혼 결정에 고려하는 항목의 중요도

◆ 미혼남녀(19~49세)의 결혼 결정에 고려하는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매우 중요하다'의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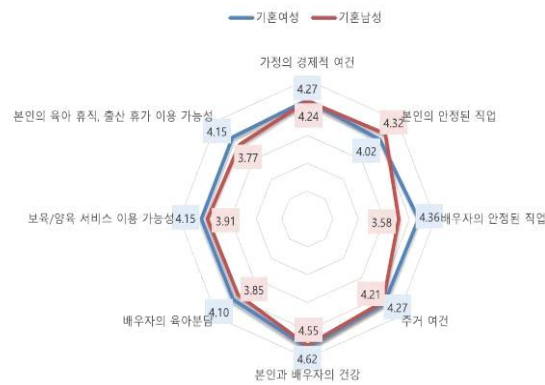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KHAN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V. 정책 시사점

2. 출산 결정에 고려하는 항목의 중요도

◆ 기혼남녀(19~49세)의 출산 결정에 고려하는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매우 중요하다'의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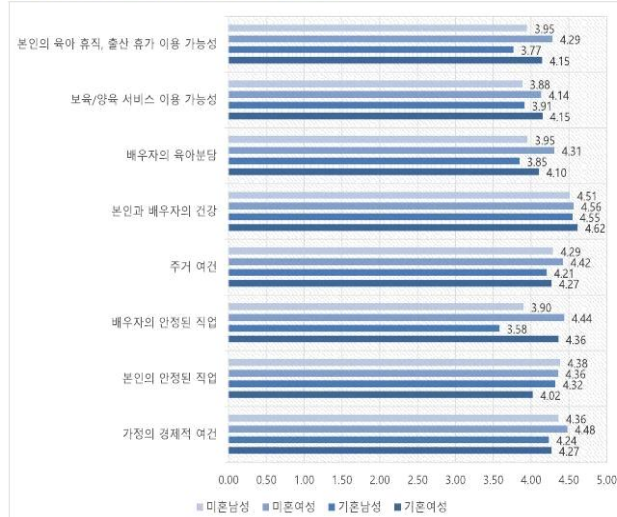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KHAN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V. 정책 시사점

2. 출산 결정에 고려하는 항목의 중요도('전혀 중요하지 않다'-'매우 중요하다'의 5점 척도로 평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합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인구변화와 돌봄 서비스의 미래



- ▲ **일시** 2023년 4월 3일(월) 14:00-16:45
- ▲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 대형강의실(107호)
- ▲ **주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인구변화와 돌봄 서비스의 미래

- ▲ **일시** 2023년 4월 3일(월) 14:00-16:45
 ▲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 대형강의실(107호)
 ▲ **주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3:30-14:00	등 록	
14:00-14:15	개 회 식	
환영사	김병연(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경제학부 교수)	
인사말	윤영호(서울대 기획부총장)	
14:15-15:30	주 제 발 표	
발표1	미래사회 인구 · 가구구조 · 노동공급 변화와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	이철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지혜(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발표2	미래사회 인구 · 건강 변화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김홍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권정현(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3	미래사회 인구 · 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신경인지장애(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강상경(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5:30-15:45	휴 식	
15:45-16:4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좌 장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패 널	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환(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제철웅(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석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목 차 |

1	미래사회 인구·가구구조·노동공급 변화와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	03
----------	---------------------------------------	----

2	미래사회 인구·건강 변화와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25
----------	----------------------------	----

3	미래사회 인구·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 -치매(신경인지장애)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43
----------	---	----



1 미래사회 인구·가구구조·노동공급 변화와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지혜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미래사회 인구 · 가구구조 · 노동공급 변화와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

2023년 4월 3일(월)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지혜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1. 연구 배경(1)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족 기능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 변화 가능성은 돌봄, 교육, 고용, 주거 등 생애주기 전반의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설계에 도전이 되고 있어, 인구 및 가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 추정은 중요한 문제임.
 - 1인가구의 증가, 2인 이상 가구 내에서도 주된 비공식돌봄 제공자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구 내 돌봄 필요 가구원(5세 미만, 65세 이상 등)의 포함 여부 등에 따라서 사회서비스 수요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가구 유형 및 맞벌이 가구 비중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2020-2050년)에서는 가구 유형별 가구수는 제공하고 있으나, 맞벌이/외벌이 가구수, 돌봄 필요 가구원 포함 가구수 등은 확인이 어려워 가구 유형별 변화 양상을 고려한 향후 가구유형별 가구수, 맞벌이 가구수, 돌봄 필요 가구원 포함 가구수 등을 추계할 필요가 있음.

2

1. 연구 배경(2)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맞벌이 가구의 비중의 증가 등으로 부부+미혼자녀 가구 등 영유아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들의 공적 돌봄의 필요도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출산율 하락 및 결혼 감소 등으로 영유아 아동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맞벌이가구의 증가 등 영유아 아동을 포함하는 가구의 특성도 변화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향후 영유아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추계가 필요함. 특히, 향후 가구 내 여성(아동의 어머니)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한다면 영유아 아동의 돌봄서비스 수요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의 아동돌봄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추계는 미미한 상황으로, 가구추계 및 가구별 서비스 이용률(선택확률)을 반영한 추계가 필요함.
-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영유아 아동 돌봄서비스 수요 추계를 진행한 바 있으나 현재 돌봄서비스별 이용률을 기반으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적용한 결과들이 주로 제시되고 있어, 가구 유형의 변화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구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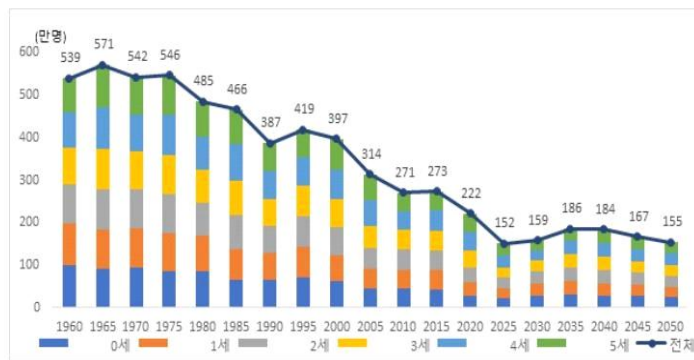
1. 연구 개요

- 가구 유형별 변화 패턴을 반영한 장래가구추계를 수행하고 이 중 5세 이하의 영유아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를 추계하는 한편, 이들 가구의 아동 돌봄서비스 결정요인을 고려한 서비스 이용률을 추정하고자 함. 이를 기반으로 장래 가구추계를 기반으로 한 영유아 대상 아동돌봄서비스 수요를 추계하고자 함.
- 현재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에서는 가구 유형별 가구수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동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가구인 만5세이하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나, 이들 가구 중 아동의 어머니의 경제활동참여여부를 반영한 맞벌이/비맞벌이 가구수 등은 확인이 어려워 이에 대한 추정이 필요함.
- 또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서비스별 이용률은 전체 집계 현황으로 다양한 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률은 확인이 어려움. 아동의 특성 및 맞벌이 여부 등 가구 및 부모의 특성 등 가구의 영유아 아동 돌봄서비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선택확률(이용률)을 산출하여, 장래 가구추계결과에 적용 및 장래 수요추계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4

2. 아동수 및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그림] 5세이하 아동수(1960-2050년)



5

2. 아동수 및 아동돌봄서비스 현황

<표> 영유아 대상 아동서비스 현황

구 분	내 용
(1) 가정양육수당	-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무관 전계층) - 지원 내용: 20만원(0~11개월)~10만원(36~86개월)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지원
(2)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반)(소득 무관 전계층) - 지원 내용: 기본보육료(106.9만원(0세)~28만원(3~5세), 이 중 부모보육료 49.9만원(0세)~28만원(3~5세)) 긴급보육바우처(15시간, 시간당 4천원)
	유치원 -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만3~5세 유아 - 지원 내용: 교육비(국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 방과후과정비(5~7만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최대 15만원(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
	시간제 보육 - 지원 대상: 가구당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 시, 시간당 일정 비용(1천원)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연장형 보육 - 지원 대상: 만12세 이하 아동, 양육 공백(맞벌이/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등) 발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내용: 시간제(생후3개월~만12세이하, 기본형 10,550원/시간, 종합형 13,720원/시간, 8,968원~1,583원 지원), 영아종일제(생후3개월~만36개월, 10,550원/시간)로 구분됨. 서비스비용은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중위소득 75%(가형), 120%(나형), 150%(다형), 150% 초과(라형) 등 가구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3) 아이 돌봄서비스	- 지원 대상: 만12세 이하 아동, 양육 공백(맞벌이/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등) 발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내용: 시간제(생후3개월~만12세이하, 기본형 10,550원/시간, 종합형 13,720원/시간, 8,968원~1,583원 지원), 영아종일제(생후3개월~만36개월, 10,550원/시간)로 구분됨. 서비스비용은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중위소득 75%(가형), 120%(나형), 150%(다형), 150% 초과(라형) 등 가구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4) 기타: 영아수당(만0~1세 아동(2022년생부터), 아동수당(만8세미만 모든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6

3. 선행 연구 - 돌봄 서비스 수요 추계

- 영유아 대상 돌봄서비스 수요 추계: 장래인구추계 아동수와 각 서비스별 이용률을 적용하여 장래 서비스별 대상자수 추계 방식
 - 박진아 외(2015)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3-2040년) 자료의 0~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 영유아수와, 2003~2014년까지의 시도별 연령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로 2015~24년까지의 이용률을 추계하여, 2015~24년까지의 시도별, 연령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0~5세 영유아수 예측
 - 이정원 외(2018) -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 2011~17년까지의 현황자료(이용자수, 이용률)를 활용하여 2018-19년 단기 수요 예측
 - 김동훈 외(2021) - 양육정책의 재정추계를 위해, 통계청 장래추계와 주민등록인구 2015-2020년의 자료로 2021-2026년 영유아수 추정, 아동돌봄서비스별 2018-2020년 평균 이용률을 적용하여 2026년까지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대상자수를 추계

→ 본 연구에서는 아동 돌봄의 대상이 되는 (1) 영유아(만5세이하) 아동을 포함하는 가구수를 추계하고, (2) 돌봄유형(서비스)별 이용률/선택확률을 추정하여, (3) 가구수와 이용률을 곱하여 전체 가구 중 돌봄유형/서비스별 수요 가구수를 추계하는 방식을 적용함.

7

3. 선행 연구 - 장래가구수 추계(1)

- 장래가구수 추계 - 전이행렬을 적용하는 가구추계방법론 적용
 - 우리나라는 장래가구추계 방법론으로 준-동적(Semi-Dynamic) 가구추계법을 적용하고 있음.(통계청, 2019) 통계청의 가구추계는 인구 추계치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구의 생성, 성장, 축소, 해체라는 동적인 변화양상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김유경, 1995)
 - 가구의 동적 변화양상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마코프 연쇄모형(Markov chain Model, MCM)에 근거한 전이행렬을 활용하는 가구전이율법(Household transition methods)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전이확률 계산을 위해 방대한 양의 자료 축적과 규모가 큰 전이확률 계산의 어려움으로 활용 제한적
 - 황지은 외(2011) - 2000-2005년 인구총조사자료 활용, 가구유형 및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하여 10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도별 가구 변화 전이확률을 계산, 2030년까지의 가구유형별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가구수 예측함. 그러나, 구체적 도출 방법 및 가정 등의 설명 미흡

→ 본 연구에서는 전이확률 계산이 비교적 용이한 인구패널과 노동패널을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변화양상을 반영한 장래가구수 추계 수행(5세이하 가구원 포함 가구)

8

3. 선행 연구 - 장래가구수 추계(2)

- 마코프체인에 근거한 전이행렬을 가구수 추계에 적용하는 방법론
 -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전이확률이 일정한 경우를 정상 마코프 체인이라고 함. 정상 마코프 체인에서 전이확률은 t-1기에 상태(i)에서 t기에서 상태(j)로의 변화할 확률 P_t 에 따라 결정됨.

$$P_{i,j}(H_t = j | H_{t-1} = i) = P_t^{ij}, \quad 0 \leq P_t^{ij} \leq 1$$

$$P_t = \begin{bmatrix} P_t^{11} & \dots & P_t^{1k} \\ \vdots & \ddots & \vdots \\ P_t^{k1} & \dots & P_t^{kk} \end{bmatrix}, \quad \sum_{j=1}^k P_t^{ij} = 1$$

- 이를 가구수 추계에 적용하면, 가구수 $Y(t)$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Y_t^*(t) = \sum_{j=1}^k Y_t^*(t-1) \times P_t^{ij} + \mu_t(t)$$

- 전이확률 P 가 미래에도 일정할 것으로 가정하면, 초기가구수 $Y(0)$ 에 전이확률을 t 번 곱하면 t 기 후의 가구수인 $Y(t)$ 도 계산이 가능함.

9

3. 선행 연구 - 돌봄서비스 이용률 결정요인 분석

- 영유아 아동돌봄과 관련하여 부모의 노동공급, 특히 어머니의 노동공급과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음. 아동돌봄유형 및 서비스 결정요인은 주로 다음과 같음.

- (1) 가구 특성 - 가구 유형(부부+미혼자녀, 가구 소득, 맞벌이 여부, 영유아/6-17세 자녀수, 18세 이상 가구원수
- (2) 부모 특성 - 모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근로시간, 근로 여건(형태) 등
- (3) 아동 특성 - 연령, 성별, 출생순위, 출생분기 등
- (4) 거주지-시군구 등

- 아동돌봄유형/서비스 결정요인 분석 방법론 - 로짓, 프로빗, 다항로짓, 다항프로빗 등 활용

10

4. 장래가구추계

- (방법론) 가구유형을 6개로 나누고, 가구유형별 2015-2020년간 전이확률을 도출, 전이행렬을 적용하여 가구수 추계

$$I(2020) = I(2015) \times P^{2015-2020}$$

- t기의 가구유형별 가구수는 가구유형별로 t-1기 가구 중 해당 유형을 유지한 가구, 타 유형에서 전이해온 가구, 그리고 t기의 해당 유형의 신규가구(N)의 합에서, 타 유형으로 전이된 가구와 소멸가구(E)수를 제외하여 산출됨.

$$H_i(t) = H_i(t-1)P_{ii} + N_i(t) - E_i(t)$$

- (자료) 가구유형별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이행렬 구성이 가능한 패널데이터인, 통계청의 인구패널조사 2015년과 2020년의 자료를 활용함.
 - 2015-2020년간 전이확률을 계산하고, 이 전이확률을 활용하여 향후 가구수 및 가구유형별 비중 등을 산출함. 추가로, 맞벌이가구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동패널 2015년과 2020년 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함.

11

4. 장래가구추계

- (가구유형의 정의)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에서의 가구 유형 등을 고려하여, 1인가구, 1세대, 2세대, 3세대로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맞벌이가구를 정의하기 위해 부부를 포함한 가구를 설정함.

가구 유형(6가지)		세부 구성	부부가구 포함여부
(1) 1인가구		1인가구	-
1세대	(2) 부부가구	부부가구	0
2세대	(3) 부부+미혼자녀가구	부부+미혼자녀	0
	(4) 한부모+미혼자녀가구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
3세대	(5) 3세대 가구	조부모/조부/조모 +부부+미혼자녀	0
(6) 기타		기타 구성 전체	-

- 맞벌이가구에 대한 분석은 부부를 포함하고 있는, 부부가구, 부부+미혼자녀, 3세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의 취업/미취업 여부에 따라 맞벌이와 비맞벌이 2개의 상태로 구분함.

12

4. 장래가구추계

■ 전이확률 도출 - 2가지 방법 활용

- (1) 패널데이터 2개년도를 횡단면으로 구성하여 가구유형별 변동률을 구하고, 이를 전이 확률로 활용
- (2) 가구유형 결정모형 구축하여, 가구주 연령 및 성별 등 가구유형의 선택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는 다항로짓모형으로 전이확률 도출

- 전이확률 계산을 위한 다항로짓모형 추정 - 종속변수는 6개의 가구유형(1=1인가구, 2= 부부가구, 3=부부+미혼자녀가구, 4=한부모+미혼자녀가구, 5=3세대 가구, 6=기타가구) 과 7=소멸가구이며, 독립변수 X는 지난 기의 가구유형, 가구주의 연령, 성별, 거주지 등

$$\log\left(\frac{P_i^z}{P_i^{base}}\right) = \beta_0^z + \beta_i^z X_i + u_i^z, \quad \text{where } u_i^z \sim N(0, \sigma_u^2)$$

기존 가구유형(base)가 아닌 가구유형(s)을 선택하는 확률 계산은 다음과 같음.

$$P_i^s = \frac{\exp(\beta_0^s + \beta_i^s X_i + u_i^s)}{\sum_{j=1}^s \exp(\beta_0^j + \beta_i^j X_i + u_i^j)}$$

13

4. 장래가구추계

<표> 가구유형 이행에 관한 모형 추정결과(다항로짓모형)

구분	다음 기(t+1) 가구유형1(1인가구) 로 이행 (base: 부부가구)			다음 기(t+1) 가구유형3(부부+미혼 자녀)으로 이행 (base: 부부가구)			다음 기(t+1) 가구유형4(한부모+미 혼자녀)로 이행 (base: 부부가구)			다음 기(t+1) 가구유형5(3세대가구) 로 이행 (base: 부부가구)			다음 기(t+1) 가구유형6(기타가구) 으로 이행 (base: 부부가구)			다음 기(t+1) 가구유형7(소멸가구) 로 이행 (base: 부부가구)		
	추정 계수	s.e.	dy/dx	추정 계수	s.e.	dy/dx	추정 계수	s.e.	dy/dx	추정 계수	s.e.	dy/dx	추정 계수	s.e.	dy/dx	추정 계수	s.e.	dy/dx
가구유형(기준=1) 1인가구																		
(2) 부부가구	-4.40***	0.00	-0.50	-0.49***	0.00	0.11	-3.41***	0.01	-0.01	-1.05***	0.01	0.00	-1.99***	0.00	0.02	-2.72***	0.00	-0.06
(3) 부부+자녀	-3.78***	0.00	-0.54	2.38***	0.00	0.57	-0.60***	0.00	0.02	1.05***	0.01	0.01	-0.88***	0.00	0.01	-1.82***	0.00	-0.15
(4) 한부모+자녀	-0.63***	0.01	-0.39	1.73***	0.01	0.04	3.41***	0.01	0.40	1.53***	0.02	0.00	1.03***	0.01	0.02	0.24***	0.01	-0.06
(5) 3세대 가구	-3.20***	0.01	-0.54	2.08***	0.01	0.24	-1.00***	0.01	-0.01	4.85***	0.01	0.32	0.71***	0.01	0.08	-1.22***	0.01	-0.14
(6) 기타 가구	-2.50***	0.00	-0.44	0.61***	0.00	0.07	-0.31***	0.01	0.03	1.80***	0.01	0.02	1.30***	0.00	0.28	-1.18***	0.00	-0.03
가구주 성별(남성)	-1.27***	0.00	-0.08	0.17***	0.00	0.17	-1.65***	0.00	-0.04	-0.40***	0.01	0.00	-1.00***	0.00	-0.01	-1.35***	0.00	-0.17
가구주 연령	-0.01***	0.00	0.00	-0.07***	0.00	-0.01	-0.03***	0.00	0.00	-0.05***	0.00	0.00	-0.01***	0.00	0.00	-0.02***	0.00	0.00
거주지(광역시·시· 상)	0.08***	0.00	0.01	0.09***	0.00	0.01	0.05***	0.00	0.00	-0.03***	0.00	0.00	-0.02***	0.00	0.00	0.00*	0.00	-0.01
상수	4.23***	0.00		2.83***	0.01		2.13***	0.01		-0.50***	0.01		1.06***	0.01		3.97***	0.00	
# of obs.=378,717 Pseudo R2 =0.3085 *** p<0.01, ** p<0.05, * p<0.1																		

14

4. 장래가구추계

<표> 2015~2020년간 가구유형 전이확률

구분		2020년						소멸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미혼 자녀가구	한부모+ 미혼자녀 가구	3세대 가구	기타가구	
2015년	1인가구	0.57	0.03	0.03	0.03	0.00	0.03	0.31
	부부가구	0.07	0.56	0.11	0.01	0.00	0.04	0.20
	부부+ 미혼자녀가구	0.03	0.12	0.67	0.03	0.01	0.03	0.11
	한부모+ 미혼자녀가구	0.18	0.02	0.06	0.46	0.00	0.04	0.24
	3세대가구	0.04	0.08	0.30	0.01	0.30	0.11	0.15
	기타가구	0.14	0.12	0.10	0.05	0.02	0.30	0.27
	신규	0.44	0.11	0.18	0.11	0.02	0.13	0.00

* 3세대 가구는 조부모/부/모+부모+미혼자녀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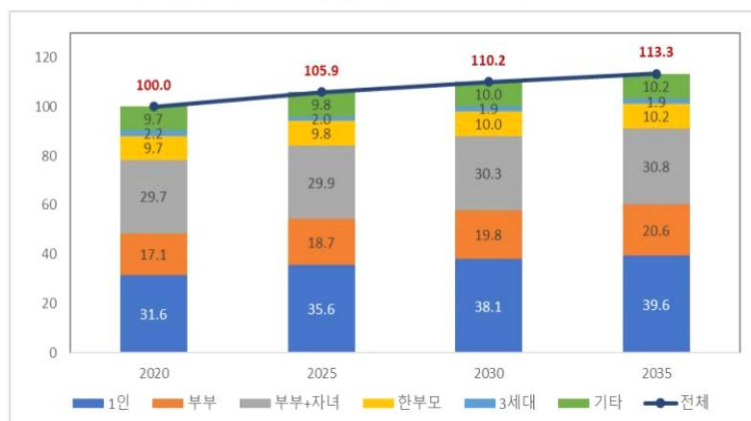
**2020년 가구유형별 신규가구는 모형의 결과값으로 계산이 불가하여, 표본에서 2020년 신규 가구의 가구유형별 비중으로 제시함.

자료: 통계청 인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5

4. 장래가구추계

[그림] 전체 가구수 추계결과(2020~2035년) (2020년=100)



16

4. 장래가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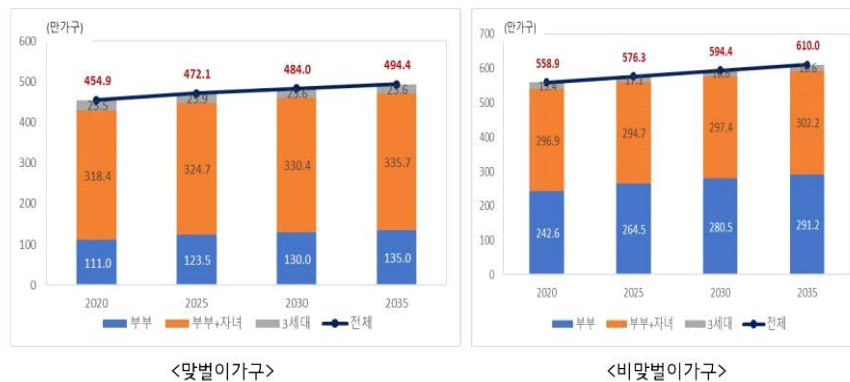
[그림] 가구주 연령별 가구수 추계결과(2020~2035년) (2020년=100)



17

4. 장래가구추계

[그림] 맞벌이 가구수 추계결과(2020~2035년)



18

4. 장래가구추계(5세아동 포함 가구수)

[그림] 5세이하 아동 포함 가구수 추계결과(2020~2035년)



구분	전체 (만가구)	부부+미혼자녀가구			한부모 +미혼자녀 가구	3세대가구			기타가구
		소계	맞벌이	비맞벌이		소계	맞벌이	비맞벌이	
2020년	159.6 (100.0%)	125.1 (78.4%)	57.1 (35.8%)	68.1 (42.6%)	11.3 (7.1%)	9.7 (6.1%)	1.5 (0.9%)	8.3 (5.2%)	13.6 (8.5%)
2025년	109 (100.0%)	85.8 (78.7%)	39.9 (36.6%)	45.9 (42.1%)	7.6 (7.0%)	6.4 (5.9%)	0.8 (0.7%)	5.6 (5.1%)	9.2 (8.4%)
2030년	114 (100.0%)	89.8 (78.8%)	41.6 (36.5%)	48.2 (42.3%)	8.0 (7.0%)	6.6 (5.8%)	0.8 (0.7%)	5.8 (5.1%)	9.5 (8.3%)
2035년	134.1 (100.0%)	105.9 (79.0%)	48.8 (36.4%)	57.1 (42.6%)	9.4 (7.0%)	7.7 (5.8%)	0.9 (0.7%)	6.8 (5.1%)	11.1 (8.3%)

5. 아동(영유아)돌봄서비스 이용률 추정

■ (방법론) 가구의 영유아 아동돌봄서비스(유형) 결정요인 분석

■ 다항프로빗모형을 활용하여 가구의 아동돌봄에 대한 결정요인 및 선택확률 분석

- 가구 i 의 아동돌봄서비스 유형 j 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가능한 범주($j=1, 2, \dots, J$) 중에서 잠재효용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j 를 선택할 때의 효용 Y 는 다음과 같음.

$$Y_{ij} = \beta_j X_i + \epsilon_{ij}$$

$$\text{Where } y_i = j \quad \text{if } y_{ij} = \max(y_{i1}, y_{i2}, \dots, y_{iJ})$$

- X_i 는 가구 및 부모/개인의 특성, ϵ_{ij} 는 가구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나타내며 평균 0, 분산 1, 공분산 0인 다변량 표준정규분포로 가정함. 또한, 돌봄 유형 j 의 요소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iid가 위반됨을 가정함.

■ (자료) 가족과 출산조사(2021년) 활용

- 돌봄유형/방법을 나타내는 변수의 구성(돌봄제공주체 중심)

- (1) 어린이집: ① 국공립 어린이집 ② 가정, 민간 어린이집 ③ 직장 어린이집 ④ 기타 어린이집
 (2) 유치원: ⑤ 국공립유치원 ⑥ 사립 유치원 / (3) 학원: ⑦ 반일제 이상 학원 ⑧ 기타 사설학원 방문교육 교사
 (4) 부모돌봄: ⑨ 본인 또는 남편 / (5) 친인척: ⑩ 친정부모님 ⑪ 시부모님 ⑫ 기타 친인척
 (6) 돌보미: ⑬ 아이돌보미 ⑭ 출퇴근 베이비시터 ⑮ 입주 베이비시터

20

5. 아동(영유아)돌봄서비스 이용률 추정

■ (기초통계) 돌봄유형(1순위)

아동수(명)	부모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친인척	돌보미
3,015 (100%)	547 (18.1%)	1,586 (52.6%)	774 (25.7%)	48 (1.6%)	45 (1.5%)	15 (0.5%)

■ 가구유형별 돌봄유형(1순위)

구분	아동수 소계(명)	부모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친인척	돌보미
부부+ 미혼자녀	2,805 (93.0%)	516 (18.4%)	1,468 (52.3%)	721 (25.7%)	45 (1.6%)	41 (1.5%)	14 (0.5%)
한부모+ 미혼자녀	57 (1.9%)	2 (3.5%)	40 (70.2%)	14 (24.6%)	-	-	1 (1.8%)
3세대가구	127 (4.2%)	24 (18.9%)	66 (52.0%)	30 (23.6%)	3 (2.4%)	4 (3.2%)	-
기타가구	26 (0.9%)	5 (19.2%)	12 (46.2%)	9 (34.6%)	-	-	-

* 괄호안은 각 가구유형별 비중(행 기준)이며, 아동수 소계 열은 전체 가구 중 해당 가구유형의 비중(열 기준)

■ 부부+미혼자녀가구 중 맞벌이여부에 따른 돌봄유형(1순위)

구분	아동수 소계(명)	부모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친인척	돌보미
맞벌이	1,194 (42.6%)	144 (12.1%)	653 (54.7%)	327 (27.4%)	20 (1.7%)	39 (3.3%)	11 (0.9%)
비맞벌이	1,611 (57.4%)	372 (23.1%)	815 (50.6%)	394 (24.5%)	25 (1.6%)	2 (0.1%)	3 (0.2%)

21

5. 아동(영유아)돌봄서비스 이용률 추정

■ 아동돌봄유형 결정요인 분석모형의 추정결과(다항 프로빗 모형) - 2021년

구분	종속변수 = 돌봄유형(1=부모돌봄, 2=어린이집, 3=유치원, 4=대리양육)								
	어린이집 (base:부모돌봄)			유치원 (base:부모돌봄)			대리양육 (base:부모돌봄)		
	추정 계수	s.d.	dy/dx	추정 계수	s.d.	dy/dx	추정 계수	s.d.	dy/dx
아동 특성									
남성	0.24**	0.10	0.00	0.28**	0.12	0.01	0.31**	0.14	0.01
연령(보육나이)	0.96***	0.05	-0.06	1.67***	0.06	0.15	0.87***	0.05	-0.01
출생순위	0.03	0.09	0.02	-0.05	0.11	-0.01	-0.16	0.13	-0.01
출생분기	-0.08*	0.04	0.00	-0.14**	0.06	-0.01	-0.04	0.06	0.00
가구/부모 특성									
5세이하 아동수	0.29***	0.10	0.06	-0.01	0.12	-0.05	0.21	0.13	0.00
가구주 연령	0.01	0.01	0.00	0.02	0.01	0.00	0.00	0.01	0.00
가구주 교육연수	-0.05*	0.02	-0.02	0.03	0.03	0.01	0.08**	0.04	0.01
가구소득	-0.03	0.03	-0.02	0.06	0.04	0.01	0.17***	0.04	0.01
맞벌이여부	0.86***	0.12	0.07	0.66***	0.14	-0.02	0.99***	0.16	0.02
가구유형(기준: 한부모가구)									
-부부+미혼자녀	-1.04**	0.51	-0.07	-0.59	0.58	0.07	-1.28*	0.69	-0.04
-3세대 가구	-1.11*	0.57	-0.09	-0.75	0.66	0.04	-0.95	0.76	0.00
-기타 가구	-1.20	0.76	-0.06	-0.71	0.87	0.08	-11.28	-	-0.08
상수항	0.45	0.70	-	-4.17***	0.85	-	-3.21***	1.00	-

*** p<0.01, ** p<0.05, * p<0.1
Number of obs = 3,097 / Log likelihood = -2350.30 / Prob > chi2 = 0.0000

22

5. 아동(영유아)돌봄서비스 이용률 추정

- 돌봄유형 선택확률(다른조건이 평균일때) - 2021년

구분	부모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대리양육
전체	0.1895	0.5336	0.2549	0.0220
아동 연령 (보육 나이)	만0세	0.6183	0.3238	0.0008
	만1세	0.3377	0.6029	0.0140
	만2세	0.1243	0.7683	0.0843
	만3세	0.0213	0.7288	0.2433
	만4세	0.0011	0.5510	0.4469
가구 유형	만5세	0.0000	0.3468	0.6531
	(1) 부부+미혼자녀	0.1915	0.5319	0.2552
	(2) 한부모+미혼자녀	0.0535	0.6889	0.2254
	(3) 3세대 가구	0.2083	0.5184	0.2389
가구주 연령	(4) 기타 가구	0.1840	0.4468	0.3692
	(1) 34세 이하	0.3335	0.5048	0.1314
	(2) 35-44세	0.1582	0.5415	0.2794
	(3) 45-54세	0.0987	0.5415	0.3467
맞벌이 여부	(4) 55세 이상	0.1437	0.5495	0.2853
	맞벌이	0.1415	0.5402	0.2706
	비맞벌이	0.2488	0.5042	0.2410

23

6. 아동(영유아)돌봄서비스 수요추계

- 5세이하 가구수에 돌봄서비스(유형) 선택확률을 적용하여, 수요 추계

<표> 5세이하 아동포함 가구수 및 가구유형별 돌봄서비스 선택확률 요약

구분	가구수 (만가구)				돌봄서비스 선택확률(2021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부모돌봄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대리양육 (돌보미)
전체가구	159.6 (100%)	109 (100%)	114 (100%)	134.1 (100%)	0.1895	0.5336	0.2549	0.022
부부+미혼자녀가구	125.2 (78.4%)	85.8 (78.7%)	89.8 (78.8%)	105.9 (79.0%)	0.1915	0.5319	0.2552	0.0215
- 맞벌이가구	57.1 (35.8%)	39.9 (36.6%)	41.6 (36.5%)	48.8 (36.4%)	0.1450	0.5388	0.2688	0.0475
- 비맞벌이가구	68.1 (42.6%)	45.9 (42.1%)	48.2 (42.3%)	57.1 (42.6%)	0.2615	0.4924	0.2419	0.0042
한부모+미혼자녀가구	11.3 (7.1%)	7.6 (7.0%)	8 (7.0%)	9.4 (7.0%)	0.0535	0.6889	0.2254	0.0323
3세대 가구	9.8 (6.1%)	6.4 (5.9%)	6.6 (5.8%)	7.7 (5.8%)	0.2083	0.5184	0.2389	0.0344
- 맞벌이가구	1.5 (0.9%)	0.8 (0.7%)	0.8 (0.7%)	0.9 (0.7%)	0.0705	0.5678	0.3076	0.0541
- 비맞벌이가구	8.3 (5.2%)	5.6 (5.1%)	5.8 (5.1%)	6.8 (5.1%)	0.3584	0.4769	0.1492	0.0155
기타가구	13.6 (8.5%)	9.2 (8.4%)	9.5 (8.3%)	11.1 (8.3%)	0.184	0.4468	0.3692	0.0000

24

6. 아동(영유아)돌봄서비스 수요추계

- 부모돌봄(양육수당) 수요가구는 2020년 30.2만가구(전체의 19.0%) → 2035년 25.4만가구, 어린이집 수요가구는 85.2만가구(전체의 53.4%) → 71.6만가구, 유치원 수요가구는 40.7만가구(전체의 25.5%) → 34.2만가구 등으로 나타남.

[그림] 아동돌봄서비스 수요 추계(2020-2035년)



<전체가구 선택확률 적용>

- 전체 가구수에 돌봄서비스별 선택확률을 곱하여, 돌봄서비스별 가구수 계산
- 서비스별 비중은 부모돌봄 19.0%, 어린이집 53.4%, 유치원 25.5%, 대리양육 2.2%임.

<가구유형별 선택확률을 가중치로 적용>

- 가구유형별 가구수에 돌봄서비스 선택확률을 곱해, 가구유형별 돌봄서비스별 가구수 계산 및 서비스별 합산
- 서비스별 비중은 부모돌봄 20.2%, 어린이집 51.9%, 유치원 25.7%, 대리양육 2.2%임.

25

6. 아동(영유아)돌봄서비스 수요추계

- 가구주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가구내 영아(만0~1세)가 속할 확률이 높아, 부모돌봄(양육수당) 수요가 전체의 33.4%로 전체가구(19.0%) 및 다른 연령대의 해당 수요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아동돌봄서비스 수요 추계(2020-2035년) - 가구주 연령 34세 이하



<전체가구 선택확률 적용>

- 서비스별 비중은 부모돌봄 33.4%, 어린이집 50.5%, 유치원 13.1%, 대리양육 3.0%임.

<가구유형별 선택확률을 가중치로 적용>

- 서비스별 비중은 부모돌봄 34.3%, 어린이집 49.4%, 유치원 12.9%, 대리양육 3.5%임.

26

6. 아동(영유아)돌봄서비스 수요추계

- 가구주 연령 35~44세인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요가 합산 82.1%로 가구주 34세 이하 가구보다 시설돌봄 수요가 높게 나타남.

[그림] 아동돌봄서비스 수요 추계(2020-2035년) - 가구주 연령 35~44세



<전체가구 선택확률 적용>

- 서비스별 비중은 부모돌봄 15.8%, 어린이집 54.2%, 유치원 27.9%, 대리양육 2.1%임.

<가구유형별 선택확률을 가중치로 적용>

- 서비스별 비중은 부모돌봄 15.7%, 어린이집 53.5%, 유치원 28.6%, 대리양육 2.2%임.

27

6. 아동(영유아)돌봄서비스 수요추계

- 가구주 연령 45~54세인 경우, 시설돌봄수요가 약 88.9%임.

[그림] 아동돌봄서비스 수요 추계(2020-2035년) - 가구주 연령 45~54세



<전체가구 선택확률 적용>

- 서비스별 비중은 부모돌봄 9.9%, 어린이집 54.2%, 유치원 34.7%, 대리양육 1.3%임.

<가구유형별 선택확률을 가중치로 적용>

- 서비스별 비중은 부모돌봄 7.7%, 어린이집 50.5%, 유치원 40.4%, 대리양육 1.4%임.

28

6. 아동(영유아)돌봄서비스 수요추계

[그림] 아동돌봄서비스 수요 추계(2020-2035년) - 부부+미혼자녀가구



<부부+미혼자녀가구 전체> · 부모돌봄 19.2%, 어린이집 53.2%, 유치원 25.5%, 대리양육 2.1%



<맞벌이가구> · 부모돌봄 14.5%, 어린이집 53.9%, 유치원 26.9%, 대리양육 4.8%



<비맞벌이가구> · 부모돌봄 26.2%, 어린이집 49.2%, 유치원 24.2%, 대리양육 0.4%

29

6. 아동(영유아)돌봄서비스 수요추계

[그림] 아동돌봄서비스 수요 추계(2020-2035년) - 부부+미혼자녀가구 X 가구주 34세 이하



<전체> · 부모돌봄 38.5%, 어린이집 47.2%, 유치원 10.8%, 대리양육 3.5%



<맞벌이가구> · 부모돌봄 29.3%, 어린이집 51.8%, 유치원 11.4%, 대리양육 7.5%



<비맞벌이가구> · 부모돌봄 45.4%, 어린이집 43.8%, 유치원 10.3%, 대리양육 0.6%

30

6. 아동(영유아)돌봄서비스 수요추계

[그림] 아동돌봄서비스 수요 추계(2020-2035년) - 부부+미혼자녀가구 X 가구주 35~44세



<전체> • 부모돌봄 17.1%, 어린이집 52.3%, 유치원 28.4%, 대리양육 2.2%



<맞벌이가구>

• 부모돌봄 11.4%, 어린이집 54.4%, 유치원 29.9%, 대리양육 4.3%



<비맞벌이가구>

• 부모돌봄 21.9%, 어린이집 50.5%, 유치원 27.2%, 대리양육 0.5%

31

6. 아동(영유아)돌봄서비스 수요추계

[그림] 아동돌봄서비스 수요 추계(2020-2035년) - 부부+미혼자녀가구 X 가구주 45~54세



<전체> • 부모돌봄 9.3%, 어린이집 53.3%, 유치원 36.3%, 대리양육 1.1%



<맞벌이가구>

• 부모돌봄 5.1%, 어린이집 54.6%, 유치원 38.1%, 대리양육 2.2%



<비맞벌이가구>

• 부모돌봄 12.5%, 어린이집 52.4%, 유치원 34.9%, 대리양육 0.2%

32

7. 결론 및 후속연구 과제

-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맞벌이 유무 등을 고려하여 아동돌봄서비스 수요 추산
 - (수요) 5세이하 가구원 포함 가구 전체 기준, 부모돌봄(양육수당) 수요가구는 2020년 30.2만가구(전체의 19.0%) → 2035년 25.4만가구, 어린이집 수요가구는 85.2만가구(전체의 53.4%) → 71.6만가구, 유치원 수요가구는 40.7만가구(전체의 25.5%) → 34.2만가구 등
 - (맞벌이 유무에 따른 수요) 부부+미혼자녀가구 - 가구주 연령대 34세 이하의 경우 2035년 맞벌이 가구는 118,573가구(47.7%), 비맞벌이 가구는 130,021가구 (52.3%)로 비맞벌이 가구가 많으나 시설돌봄 수요는 맞벌이가구가 74,961가구 (맞벌이 가구 전체의 63.2%), 비맞벌이 가구는 70,299가구(비맞벌이가구 전체의 54.1%)로 맞벌이가구가 높음.
 - ➔ 본 연구에서의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2020년 45.6%에서 46.1%로 0.5%p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으나, 향후 돌봄정책 등이 강화되어 영유아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면 시설돌봄 수요도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 있음.
 - ➔ OECD 기준 맞벌이가구의 비중인 62.5% 수준까지 올라간다면(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2), 시설돌봄수요는 2020년 전체 가구의 76.8%에서 2035년 78%(82.6만가구)로 증가함.(baseline: 81.3만가구)
 - 가구주의 연령대별 맞벌이 여부 외에, 출산연령이 높아지면 가구주 연령대별 돌봄유형 변화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33

7. 결론 및 후속연구 과제

- (연구의 한계) 동 연구의 5세이하 포함 가구의 가구유형별 비중 및 맞벌이비중의 변화가 2020~2035년간 크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양적 측면을 고려한 가구구조 및 노동공급 변화에 따른 돌봄수요 가구수 추계 결과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 (1) 2015-20년 데이터에서 COVID-19 등으로 여성 고용 감소 가능성, 2015-2020년 가구유형 전이확률이 2035년까지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인해 혼인 및 출산 감소 등 가구 구조 변화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노동패널의 5세 이하 포함 가구의 비중이 크지 않아 이들 가구의 맞벌이 비중 변화 등이 잘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2) 보육료 지원 확대(무상보육)로 인한 모든 가구에서의 시설돌봄 수요 증가로, 돌봄서비스별 이용률 기반의 가구 특성에 따른 돌봄수요 추계 결과 차이가 크지 않음.
- ➔ 돌봄 이용보다 돌봄 시간 및 돌봄의 질 등을 고려할 필요 있음.

34

7. 결론 및 후속연구 과제

■ 가구유형별/돌봄유형별 돌봄 비용(2021년)

구분	돌봄유형별 월평균 돌봄비용(만원)					
	총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친인척	돌보미
전체가구	10.5	6.7	15.5	113	60.1	48.6
부부+미혼자녀가구	10.5	6.6	15.7	108.4	62.8	51.9
- 맞벌이가구	13.0	6.7	17.0	125	60.9	70.7
- 비맞벌이가구	8.6	6.5	14.5	95.6	100	-
한부모+미혼자녀가구	5.3	5.0	7.7	-	-	-
3세대 가구	11.5	7.3	12.4	182.5	17.5	-
- 맞벌이가구	14.3	8.7	11.8	200	35	-
- 비맞벌이가구	8.3	5.6	15.7	165	-	-
기타가구	10.4	5.9	20.5	-	-	-

자료: 가족과 출산조사(2021), 관측수는 3,015가구

35

7. 결론 및 후속연구 과제

■ 가구유형별/돌봄유형별 돌봄 비용(2020년)

구분	돌봄유형별 월평균 돌봄비용(만원)					
	총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친인척	돌보미
전체가구	15.6	10.8	15.5	27.7	18.5	97.5
부부+미혼자녀가구	17.0	10.6	15.4	27.3	23.2	97.5
- 맞벌이가구	20.9	10.3	15.3	25.9	28.1	80
- 비맞벌이가구	14.1	10.8	15.5	28.4	2.3	150
한부모+미혼자녀가구	3.0	7.2	22			
3세대 가구	15.0	17.1	22.3	80	12.7	
- 맞벌이가구	11.3	12.5	22.5		5	
- 비맞벌이가구	17.7	19.7	21	80	22	
기타가구	4.3	13.4	10.4	10		

자료: 여성가족패널(2020), 관측수는 736가구이나 다수의 missing 포함

36

7. 결론 및 후속연구 과제

■ 가구유형별/돌봄유형별 돌봄 시간(2020년)

구분	돌봄유형별 주중 하루 평균 돌봄시간(단위: 시간)					
	평균시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친인척	돌보미
전체가구	5.5	6.5	6.6	2.1	3.6	4.3
부부+미혼자녀가구	5.9	6.6	6.6	2.1	3.8	4.3
- 맞벌이가구	6.9	7.0	6.9	2.0	3.9	
- 비맞벌이가구	5.1	6.2	6.2	2.0	3.1	
한부모+미혼자녀가구	2.4	7	8		1	
3세대 가구	4.1	5.6	6.7	5	3.6	
- 맞벌이가구	5.0	6.3	7			
- 비맞벌이가구	3.3	5.3	6			
기타가구	2.8	6	7.1	1	1.6	

자료: 여성가족패널(2020)

37

감사합니다

2 미래사회 인구·건강 변화와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김홍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권정현(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미래사회 인구·건강 변화와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2023.04.03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인구변화와 돌봄 서비스의 미래

권정현·김홍수

목차

1. 노인돌봄 서비스 현황과 정책 환경
2. 노인돌봄 서비스 필요 유형별 분류와 유형별 특성
3. 인구 전망에 기반한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전망
4. 노인돌봄의 범위 관련 정책 대응 방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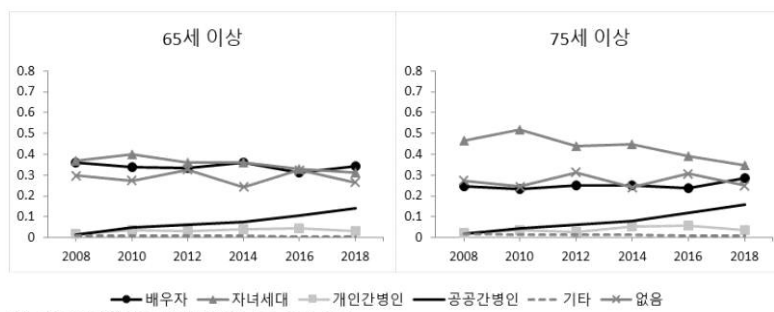
노인돌봄 서비스 현황과 정책 환경

노인돌봄 서비스 현황과 정책 환경

- 공식적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중심
 - 공식적 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기반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구성되며, 대상자는 확대 추세
 -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2019년 65세 이상 인구 10.9% → 2021년 11.7%
 - 공적 제도를 통해 노인돌봄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는 고령 인구는 2021년 기준 155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17% 수준
 - 2021년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105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0만명
 -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약 117만명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13% 수준
 -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중 약 83%가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약 30만명이 서비스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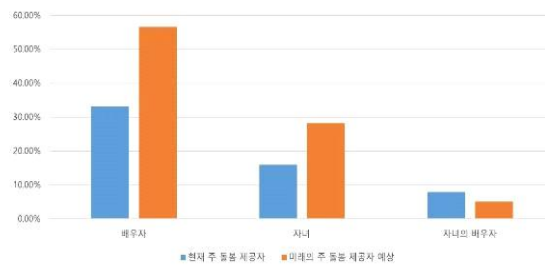
노인돌봄 서비스 현황과 정책 환경

- 비공식적 노인돌봄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공식적 돌봄서비스로 대체되는 양상
- 공식적 노인돌봄과 비공식 돌봄 간 전면적, 부분적 대체가 지속



노인돌봄 서비스 현황과 정책 환경

- 비공식적 노인돌봄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공식적 돌봄서비스로 대체되는 양상
- 가구 구성의 변화로 주로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공식 돌봄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



노인돌봄 서비스 현황과 정책 환경

▪ 서비스 대상자 규모의 확대 필요

▪ 서비스 대상 규모의 국가별 비교

-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수요의 증가 시 공적 돌봄 대상자의 확대 필요 예상

	한국	일본	독일
65세 이상 인구 %	15.7	28.6	21.9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수급자 %			
재가	7.4	13.2*	15.6
시설	2.6	2.6	4
OECD statistics, 2020; * Stat. in 2018 (Ogasawara (2021))			

▪ 다른 국가의 장기요양 대상 기준과 우리나라의 차이

-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한 공적 장기요양 보장 중심
 - 많은 OECD 국가들은 연령제한이 없거나 보다 포괄적 기준 적용
- 장기요양 예방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는 맞춤형돌봄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 노인에 국한

노인돌봄 서비스 현황과 정책 환경

▪ 제한적인 서비스 내용 다양성

▪ 노인장기요양보험

- 요양 필요도 평가 기반 등급별 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제한적 - 요양보호사 인력을 활용한 일상생활 지원 중심, 이로 인해 의료 니즈 동반 시 요양 병원 선택
- 지역사회 서비스의 양과 질, 다양성의 향상 필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및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나,
- 소득 기준이 서비스 대상 기준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점

노인돌봄 서비스 현황과 정책 환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제공 서비스 유형

구분	대분류	중분류		
직업 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 분야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 점검)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보건·복지 정보 제공) - 말초(정서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전화 안전지원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보건·복지 정보 제공) - 말초(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 ICT 데이터 확인·점검 - 유사 시 방문 확인 - 유사 시 전화 확인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 체험여행활동
			▶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지원	
		▶ 가사지원	- 식사, 청소관리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연계서비스(민간후원자)				

노인돌봄 서비스 현황과 정책 환경

- 제한적인 돌봄서비스 다양성
- 돌봄에 대해 다양한 욕구와 필요가 있는 고령자를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
-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은 서비스 이용 욕구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포함한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규모가 크게 확대
 - 돌봄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제도 마련을 통해 현실화
- 다양한 돌봄 필요를 기준으로 고령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합한 돌봄 서비스 마련 필요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분류와 유형별 특성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분류와 유형별 특성

▪ 노인 돌봄 필요 유형 분류

- 유형 1: 현 공적 서비스 이용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및 등급 인정 신청자, 맞춤돌봄 이용자, 신청자 [default]
- 유형 2: 신체 기능 저하자 –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ADL/IADL)
- 유형 3: 정신·인지 기능 저하자 – 치매의심, 인지기능 제한, 중증 우울증
- 유형 4: 동반 질병으로 인한 의료관리 필요자 – 복합만성질환
- 유형 5: 한국 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만성기·요양 서비스 이용군 – 요양병원 입원경험자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분류와 유형별 특성

■ 노인 돌봄 필요 유형 분류

- 향후 돌봄·요양 서비스 수요 전망을 위해 **건강·기능 상태에 따른 돌봄 서비스 필요군**을 분류
- 요양·돌봄 서비스 (잠재적) 필요군을 분해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유형 간의 관계를 고려한 수요 전망을 해 보고자 함
 - 전통적인 신체(유형2)와 정신·인지(유형3) 기능 저하군
 - 노인 복합만성질환자의 경우 요양·돌봄 필요의 위험이 높고, 필요 발생 시 강도와 복잡성을 높일 수 있음(유형 4)
 - 요양병원 입원 결정(경험) 그 자체가 한국 제도 하에 노인과 가족이 “인지”한 만성기 의료 및 요양의 복합적 필요에 대한 proxy로 보고 분석에 포함함 (유형5) -적정성 여부는 별도의 논의 요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분류와 유형별 특성

■ 분석자료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 5~7차연도 자료(2014~2018년)
- 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한 시기로 분석 대상을 한정
- 조사자료의 한계로 시설 입소자 등 고도의 돌봄이 필요한 조사 대상자는 누락되는 한계 존재
 - 고령화패널 자료와 행정자료 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격차 존재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분류와 유형별 특성

■ 노인 돌봄 필요의 복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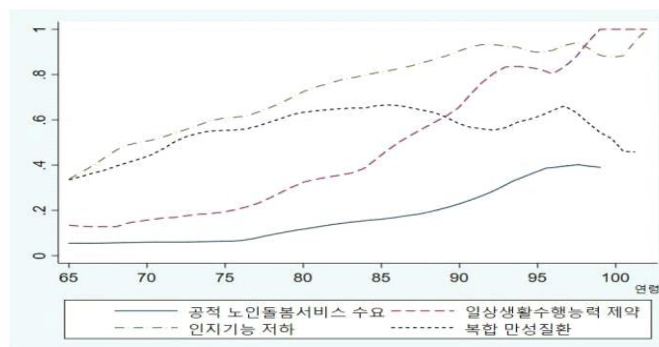
- 각각의 돌봄 필요 유형은 다른 유형의 특성을 함께 보유
-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동반하고 있는 주요 특성은 '인지기능저하'와 '복합 만성질환'

	65세 이상 고령자	세부 유형별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	인지기능저하	요양병원 입원	복합 만성질환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0.079	-	0.2	0.11	0.362	0.102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	0.24	0.608	-	0.323	0.857	0.311
인지기능저하	0.596	0.828	0.803	-	0.932	0.666
요양병원 입원	0.025	0.114	0.089	0.039	-	0.035
복합 만성질환	0.521	0.675	0.676	0.582	0.733	-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분류와 유형별 특성

■ 연령별 돌봄 필요 유형별 분포

- 인지기능저하와 복합만성질환은 중증도의 차이는 있으나 초기 고령자 시기부터 40% 이상이 보유
- 본격적인 초기 고령자 시기부터 해당 고령 인구의 40% 정도가 인지기능저하와 복합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분류와 유형별 특성

- Health Transition 분석 결과
 - 전기의 특성 및 상태와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및 신체기능 저하 간 관계 분석
 - 건강지원, 예방적 관점에서 노인돌봄 대상 범위를 확대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
- 주요 분석 결과
 - 인지기능저하 및 중증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신체기능 저하 및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수요와 높은 관련성
 - 만성질환은 유형에 따라 신체기능 저하 및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수요와 관련성 차이
 - 독거 여부는 등급 인정이 필요한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이용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으나 신청과는 유의한 관계

노인돌봄 필요 유형별 분류와 유형별 특성

VARIABLES	(1) ADL 제한 3개 이상	(2) IADL 제한 3개 이상	(3)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4)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신청
연령	0.0501*** (0.00325)	0.0477*** (0.00224)	0.0386*** (0.00593)	0.00771** (0.00340)
가족 형태 독거 여부	-0.358*** (0.0722)	-0.306*** (0.0523)	0.108 (0.104)	0.156** (0.0734)
전기의 인지 및 만성질환 상태				
당뇨	0.127** (0.0576)	0.0781* (0.0427)	0.205** (0.0942)	0.0988 (0.0656)
고혈압	0.0200 (0.0539)	0.0307 (0.0382)	0.0406 (0.0934)	0.0437 (0.0588)
심장질환	0.128* (0.0705)	0.124** (0.0532)	0.111 (0.118)	0.0917 (0.0828)
간질환	0.142 (0.129)	0.207** (0.0909)	-0.243 (0.248)	-0.307* (0.183)
폐질환	-0.0595 (0.124)	0.0327 (0.0904)	0.267 (0.181)	0.0650 (0.147)
암	-0.0491 (0.104)	-0.0108 (0.0731)	0.314** (0.144)	0.0300 (0.113)
뇌질환	0.651*** (0.0703)	0.586*** (0.0577)	0.317*** (0.118)	0.111 (0.0957)
치매 의심	0.469*** (0.0668)	0.784*** (0.0529)	-0.221* (0.122)	0.0886 (0.0934)
인지능력 제약	-0.0506 (0.0668)	0.181*** (0.0458)	0.129 (0.104)	0.0843 (0.0711)
우울증	0.0861*** (0.0103)	0.0651*** (0.00796)	0.0401** (0.0180)	0.0517*** (0.0122)
ADL 제한 1개			0.148 (0.206)	0.0413 (0.185)
ADL 제한 2개			0.120 (0.273)	-0.0101 (0.255)
ADL 제한 3개 이상			0.450*** (0.153)	0.304** (0.130)
IADL 제한 1개			-0.362 (0.406)	-0.0108 (0.203)
IADL 제한 2개			-0.121 (0.388)	0.271 (0.182)
IADL 제한 3개 이상			0.684*** (0.129)	0.613*** (0.0927)
Observations	14,156	14,156	14,156	14,156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인구전망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변화

인구전망 기반 노인돌봄 수요 변화

▪ 수요 추계 방법 (cell-based approach)

- 현재 고령자의 돌봄 서비스 수요 및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을 적용
- 해당 특성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미래 인구 전망에 적용해, 미래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를 전망
- 공적 노인돌봄서비스 수요와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기반한 수요를 전망
- 추산의 기본 산식

- N_t^j : t 연도의 돌봄서비스 유형 j 수요 인구 규모
- 각 연도의 추계 인구(P_t)에 연령별(a), 성별(s) 서비스 수요 확률(u_j) 적용

$$N_t^j = \sum_a \sum_s U_j^{as} P_t^{as} \quad , j = \text{서비스 종류}$$

인구전망 기반 노인돌봄 수요 변화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전망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자 전망

- 현재 장기요양 등급 인정 수준이 지속될 때, 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인정자 규모는 2050년 298만 명으로 2022년 인정자 규모의 세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등급 인정 확대 시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규모는 더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
 - 장기요양보험 급여 인정률과 서비스 이용률 제고는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 확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노인돌봄 수요 전망 시 정책 변화를 고려한 전망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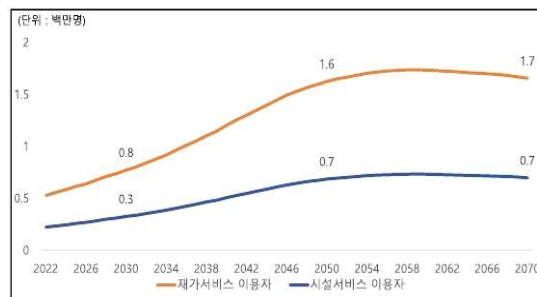


주: 2020년, 2021년은 실제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등급신청자, 미인정자 수
자료: 장기요양동계연보(2021년)

인구전망 기반 노인돌봄 수요 변화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전망

장기요양서비스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전망

- 성별, 연령별 서비스 이용률을 적용해 장기요양서비스(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 이용자 수 전망 결과
-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규모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 이용 가능 등급 인정 등 정책의 영향에 따라 차이



주: 2020년과 2021년은 실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장기요양실태조사(2019년)

인구전망 기반 노인돌봄 수요 변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전망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전망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았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급 인정자는 전체 등급 인정자 중 22.5%이며, 미이용자 비율은 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장기요양실태조사, 2019).
- 서비스 미이용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유는 병원 입원(30.1%), 가족 외 사람의 도움을 꺼림(23.4%), 가족 돌봄으로 충분(12.2%), 요양병원 선호(10.0%) 순
- 각 등급에 따라 서비스 미이용 원인은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등급별 미이용 이유에 대한 정보 파악에는 제약이 존재
- 각 등급별 서비스 미이용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등급별 서비스 내용 조정을 고려할 필요
 - 예컨대 인지지원 등급이나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5등급, 그리고 높은 의료 필요도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1등급에서 높은 서비스 미이용률은 서비스 내용 조정 필요성을 시사

<표>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서비스 미이용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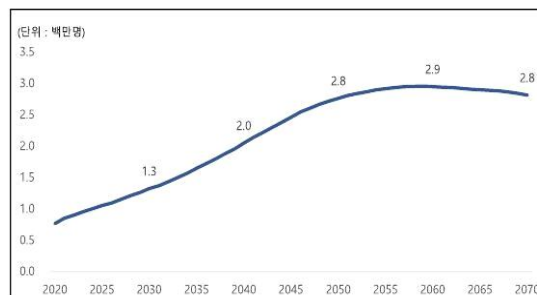
등급	비율(%)
1등급	39.66%
2등급	24.06%
3등급	19.75%
4등급	17.79%
5등급	30.18%
인지지원등급	80.99%

자료: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자료 이용 재구성

인구전망 기반 노인돌봄 수요 변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전망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전망

- 실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미이용자 중 적합한 서비스 제공 시 이용의사가 있는 개인의 규모를 적용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실수요자 규모를 전망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이용자(77.5%)와 미이용자 중 이용 의사가 있는 66.5%를 적용해 전망
- 2021년 84만명에서 2050년 276만까지 증가 전망



주: 2020, 2021년은 실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이용자(77.5%)와 미이용자(22.5%) 중 이용의사가 있는 66.5%를 환산한 수치
자료: 장기요양통계연보(2021년), 장기요양실태조사(2019년) 자료 이용

인구전망 기반 노인돌봄 수요 변화: 돌봄 필요 유형별 수요 규모 전망

■ 돌봄 필요 유형별 수요 규모 전망

- 각 노인 돌봄 필요 유형별 돌봄 수요 전망 결과
- 치매 의심,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등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확대 시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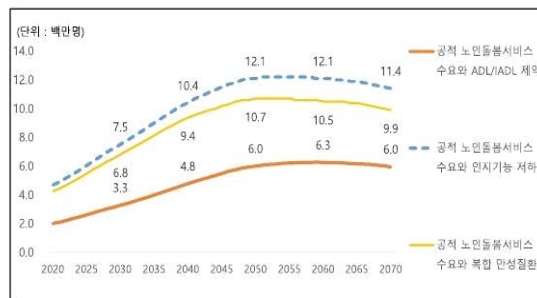


주: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수요는 고령화연구패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규모를 이용해 전망한 결과로 조사자료의 한계상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서 확인되는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및 서비스 이용자 규모와 차이 존재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인구전망 기반 노인돌봄 수요 변화: 돌봄 필요 유형별 수요 전망

■ 돌봄 필요 유형별 수요 규모 전망

- 복합적 노인돌봄 서비스 필요를 전망한 결과
- 현재의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수준에서 각 유형으로 돌봄 대상 확대 시 돌봄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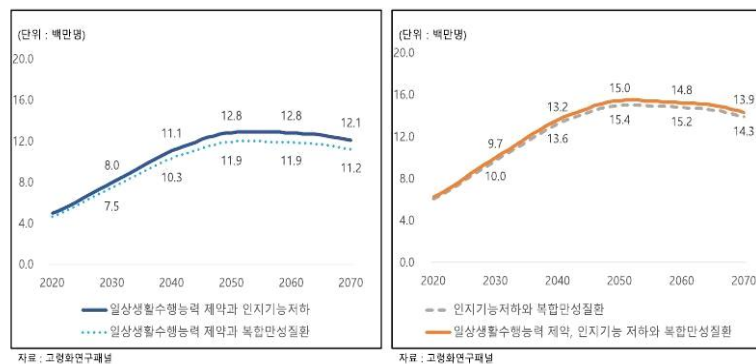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인구전망 기반 노인돌봄 수요 변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전망

■ 돌봄 필요 유형별 수요 규모 전망

-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외 복합적인 노인돌봄 수요 현제의 공적노인돌봄서비스 수준에서 각 유형으로 돌봄 대상 확대 시 돌봄 수요 전망



노인돌봄 대상 범위 관련 정책 방향

노인돌봄 정책 대응

- 대상자 범위의 충분성과 확대 가능성
- 노인돌봄의 보장성 확대 시 우선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요인
- 노인돌봄과 의료 필요 간 조정 필요성 및 방법

감사합니다.

3 미래사회 인구·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 -치매(신경인지장애)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강상경(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미래사회 인구·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

- 치매(신경인지장애)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강 상 경 (서울대학교)

1

발표 개요

1. 배경
 -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 증가
2. 필요성
 - 가족구조 변화와 사적 대응의 한계
3. 대안
 - 다차원적 노년기 통합 사회서비스 체계
4. 우리나라 현황 및 발전방향
 - 현황
 - 발전방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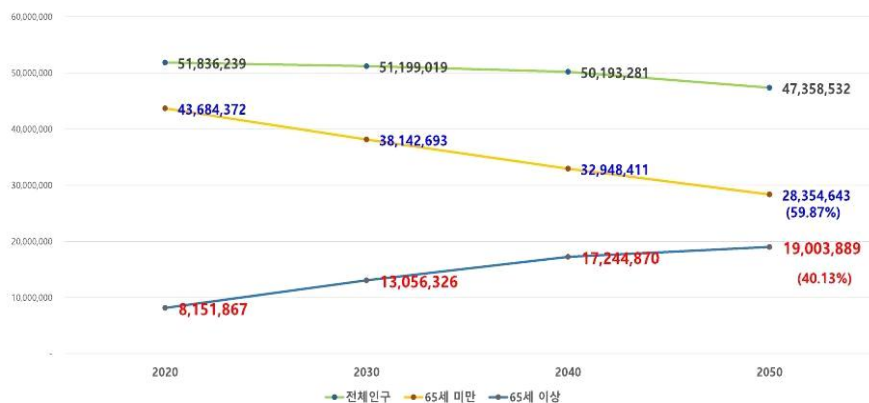
1. 배경 :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 증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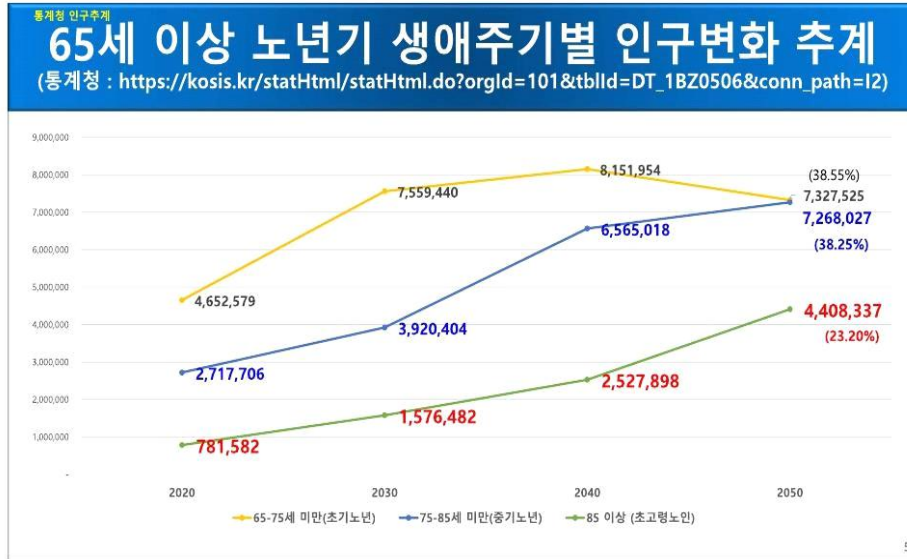
통계청 인구추계

인구변화 추계 : 65세 이상 vs. 미만

(통계청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6&conn_path=I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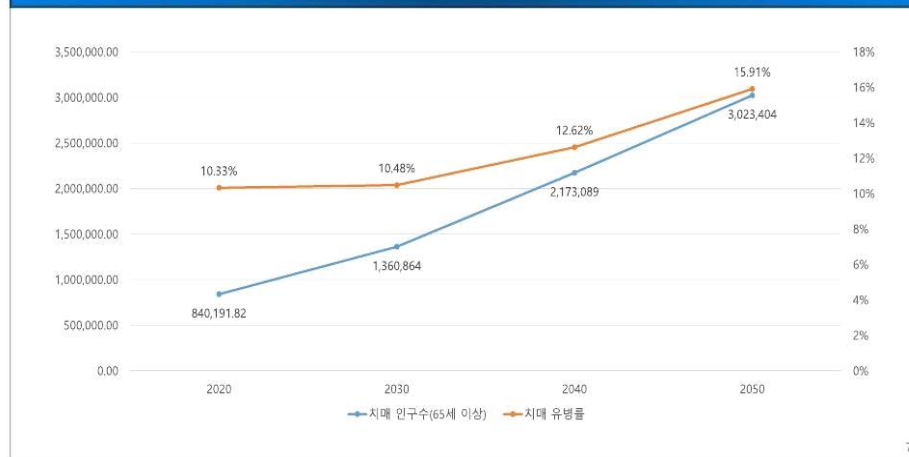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추계
 (중앙치매센터 : https://www.nid.or.kr/info/ub_2018.aspx?no=35443#a)

	2020년	2050년
치매 (신경인지장애)	10.33%	15.91%
	840,192명	3,023,404명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및 인구수 추계(2020~2050)

(중앙치매센터 : https://www.nid.or.kr/info/ub_2018.aspx?no=35443#a)



7

2. 필요성 : 가족구조 변화와 사적 대응의 한계

9

치매 (Neurocognitive Disorders: 신경인지장애) 특징

DSM-5의 치매 :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Neurocognitive Disorders)

1. 예전 상황과 비교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지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기능 저하**의 증거 (Evidence of **significant cognitive decline** from a previous level of performance in one or more cognitive domains)
2. 인지결손이 **일상생활(예: 신상관리 및 재산관리)의 독립성을 방해** (The cognitive deficits **interfere with independence in everyday activities**)
3. 인지결손은 오직 섬망이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 (The cognitive deficits do not occur exclusively in the context of a delirium)
4. 인지결손은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음 (The cognitive deficits are not better explained by another mental disorder)
5. 병인에 따라서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Specify whether due to):
 -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전두측두엽 퇴행성 (Frontotemporal lobar degeneration), 루이소체병 (Lewybody disease), 혈관 질환 (Vascular disease), 외상성 뇌손상 (Traumatic brain injury), 물질/지표 약물 사용 (Substance / medication use), HIV 감염 (HIV infection), 프리온병 (Prion disease), 파킨슨병 (Parkinson's disease), 헌팅턴 병(Huntington's disease), 다른 의학적 상태 (Another medical condition), 다중 원인 (Multiple etiologies), 명시되지 않은 경우 (Unspecified)

중양치매센터

1. 치매란?
 -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의 뇌손상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난 상태**
2. 치매의 인지기능
 - 기억력 장애,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에 아는 능력)장애, 언어능력 장애, 시공간능력 장애, 실행능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
3.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
 - 망상과 의심, 환각과 착각, 우울, 무감동, 배회, 초조, 공격성,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 : 재산관리 영역의 예

- 부동산 관련
 -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 소비활동 지원
- 금융업무
 - 예금 관리
 - 보험계약 체결 관련 사무, 등
- 통신서비스 이용
 - 휴대전화 구매,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
- 상속 관련
 - 상속재산 조회, 관리, 처분
 - 상속재산 분할 협의, 포기 등,
 - 상속재산 회복,
 - 상속등기 등 기타 상속 관련 업무

10

일상생활 : 신상관리 영역의 예 1

• 주소 및 거소의 결정

- 주거 마련 관련 계약(임대차 등) 체결, 변경, 해지,
- 영구임대주택 입주 관련 계약 체결, 해지, 변경, 종료,
- 장애인 거주시설 등 이용 계약 체결, 해지, 변경, 등,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 장애인 연금제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기요양서비스

11

일상생활 : 신상관리 영역의 예 2

• 의료서비스

-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이용 신청, 계약체결;
- 병원 입원, 치료 등 동의 업무;
-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
-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격리 시설 입소, 퇴소 행위,

• 근로 활동

-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 구직 및 근로계약 체결 단계,
-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근로자
- 근로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 이직을 하는 경우, 등

12

일상생활 : 신상관리 영역의 예 3

• 공법상 신청 행위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 갱신, 분실신고;
- 전입신고, 등

• 학대 피해 등 구제 사안

- 피해 확인,
- 형사사건 피해자 대리,
- 민사사건 대리,

• 피 후견인 사후 사무

-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
-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 상속재산 청산 방법, 등

13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노인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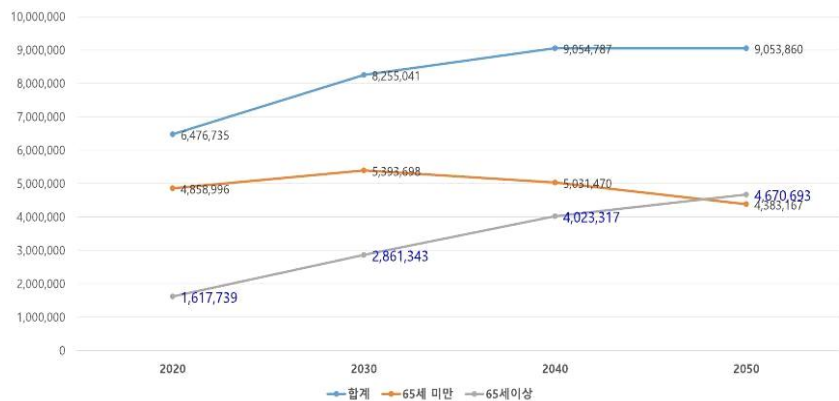
(중앙치매센터 : https://www.nid.or.kr/info/ub_2018.aspx?no=35443#a)

	2020년		2050년		(2020 → 2050) 환자수 변화(율) 추계
	유병률	환자수	유병률	환자수	
65-69세	1.39%	36,621	1.41%	54,414	17,793명 증가 (+48.59%)
70-74세	3.86%	77,237	3.9%	146,166	68,929명 증가(+89.24%)
75-79세	11.83%	189,627	11.58%	458,400	268,773명 증가(+141.74%)
80-84세	20.96%	232,892	20.46%	696,523	463,631명 증가(+199.08%)
85세 이상	38.71%	303,816	41.16%	1,667,901	1,364,085명 증가(+448.98%)
65세 이상 전체	10.33%	840,193	15.91%	3,023,404	2,183,211명 증가(+259.85%)

14

1인 가구 증가 (2020~2050)와 사적대응의 한계

2050년 기준 전체 인구의 39.6%, 65세 이상의 41.1%



12

노인 1인 가구 : 현황 및 추계

(통계청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6&conn_path=I2)

	2020	2050	2020 → 2050
	1인 가구수	1인 가구수	1인 가구수 변화(율) 추계
65-69세	439,116	790,267	351,151 가구 증가 (+79.97%)
70-74세	372,520	770,166	397,646 가구 증가 (+106.75%)
75-79세	347,876	893,401	545,525 가구 증가 (+156.82%)
80-84세	274,091	873,282	599,191 가구 증가 (+218.61%)
85세 이상	184,136	1,343,577	1,159,441 가구 증가 (+629.67%)
65세 이상	1,617,739	4,670,693	3,052,954 가구 증가 (+188.72%)
65세 미만	4,858,996	4,383,167	475,829 가구 감소 (- 9.73%)
전체 인구	6,476,735	9,053,860	2,577,125 가구 증가 (+39.79%)

16

치매장애 1인 가구수(추계) 급증과 사적 대응의 한계							
(*통계청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Z0506&conn_path=12) (**치매유병률 : https://www.nid.or.kr/info/ub_2018.aspx?no=35443#a-중앙치매센터)							
	2020년			2050년			2020 → 2050 치매 장애 1인 가구수 변화(율)
	1인 가구수*	연령대별 유병률**	치매 장애 1인 가구수	1인 가구수*	연령대별 유병률**	치매 장애 1인 가구수	
65-69세	439,116	1.39%	6,104	790,267	1.41%	11,143	5,039가구 증가 (+82.55%)
70-74세	372,520	3.86%	14,379	770,166	3.9%	30,388	16,009가구 증가 (+111.34%)
75-79세	347,876	11.83%	41,154	893,401	11.58%	103,456	62,302가구 증가 (+151.39%)
80-84세	274,091	20.96%	54,450	873,282	20.46%	178,673	124,223가구 증가 (+228.14%)
85세 이상	184,136	38.71%	71,279	1,343,577	41.16%	553,839	482,560가구 증가 (+677.00%)
65세 이상 전체	1,617,739	11.58%	187,366	4,670,693	18.79%	877,499	690,133가구 증가 (+368.33%)

3. 대안

: 다차원적 노년기 통합 사회서비스 체계

장애 서비스 패러다임 구성의 영향 요인들

- **외재적 요인**
 - 장애 외부환경을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 요인
 - 인구, 가족구조, 생산양식, 산업화, 현대화,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 국제적 기준, 등
- **내재적 요인**
 - 장애 내부 환경을 구성하는 인식, 장애 정책 및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제반 요소
 - 장애관련 가치관의 변화, 장애관련 서비스의 적용 범위, 급여방식, 대상, 재정, 등
- **매개적 요인**
 - 내외적 조건들에 대한 장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주체적 인식과 요구 및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상호작용 관련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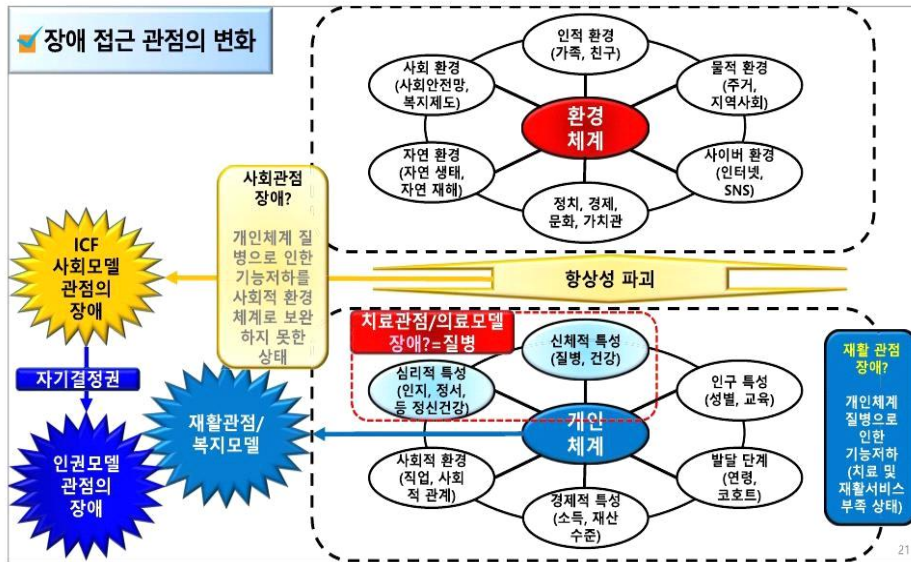
19

국제인권법에서의 장애* 접근 관점의 변화

*치매는 정신장애 중 신경인지장애로 분류됨.

관점/모델	치료관점/의료모델	재활관점/재활모델	회복관점/사회모델	인권관점/인권모델
국제적 기준 (WHO)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 WHO(1954)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 - WHO(1980)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ICF) - WHO(2001)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 WHO(2006)
주요 특징	- 장애 : 질환 - 주요접근 : 질환 치료 - 장애인 : '치료'의 대상	- 장애 : 질환으로 인한 손상 및 사회 적률리 - 주요접근 : ① 손상에 대한 치료와 ② 사회적 불리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재활 - 장애인 : '재활'의 대상	- 장애 : 질환과 같은 개인체계 요인과 사회안전망 같은 환경체계요인들 간 항상성 저하로 구성되는 상대적 개념 - 주요접근 : 치료, 재활 및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임상적 편의제공) - 장애인 : '사회통합'의 대상	- 장애 : 항상성 저하. 단, 항상성 저하 판단 및 의사결정의 주체는 장애인 당사자임 - 주요접근 : 항상성 균형의 주체인 장애인의 회복 및 의사결정 지원 - 장애인 : '회복 및 의사결정' 주체

20



장애인 등 소수자 관련 인권조약의 특징

• 평등과 차별금지

- 법 앞에서의 평등 – 기존 법적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평등하게 처우 받아야 함
- 법 아래서의 평등 – 정책 입안을 통한 법 제정 또는 법개정에서도 평등하게 처우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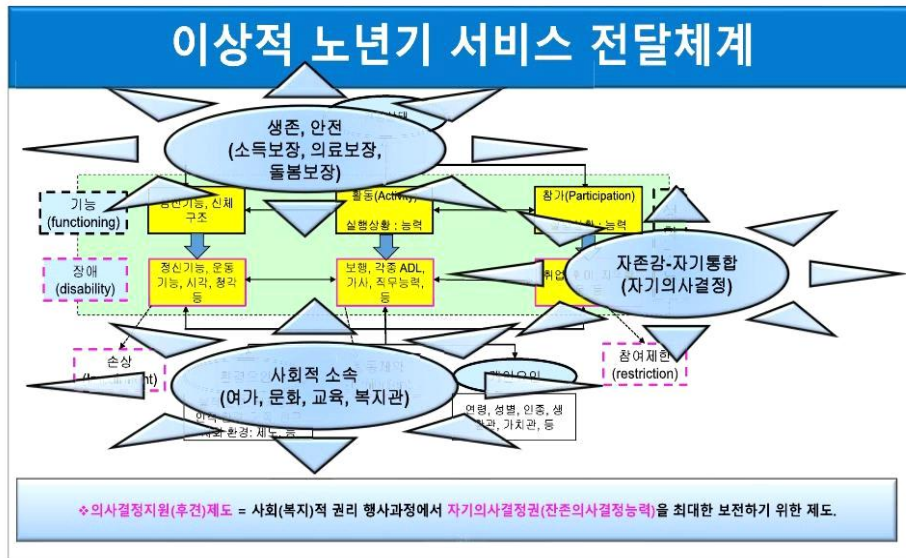
• 정당한 편의제공

- 차별적 처우가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편의를 제공함.

• 접근권

- 시설, 정보, 정차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정책)환경을 개선해야 함.

22



미래사회 변화와 노인 인권보장 방안

- 노인 관련 외재적, 내재적, 매개적 요인 변화에 따른 변화
 -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 노인 인권 상황 변화
 - 노인 연령 기준 (WHO 최근 권고 : 80세?)
- 치매장에 노인 관련 변화
 - 치매 장애 노인 급증
 - 치매노인 1인 가구 급증
 - 일상생활 상 치매장애로 인한 제약 노인 급증
- 미래사회 노인인권 보장방안?
 - 재산관리 및 신상관리 등 일상생활 상 필요한 개인맞춤형 서비스 지원
 - 치매노인 등 특수 욕구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24



의사결정지원제도 필요성

- **의사결정지원(후견)제도의 필요성**
 - 인권 실현의 필요조건
 - 사회복지 이념 실현의 필요조건
- **의사결정지원(후견)제도**
 -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의사결정능력한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계약으로 선임된 의사결정지원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26

4. 우리나라 현황 및 발전방향

9

한국 후견제도

한국의 성년* 후견제도**

(* 여기서는 미성년 후견제도는 따로 논의하지 않음; **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후견제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성년후견(의사결정지원)제도 시행

- 법적 근거 : 2011년 개정 민법
- 시행 : 2013년 7월
 -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 뿐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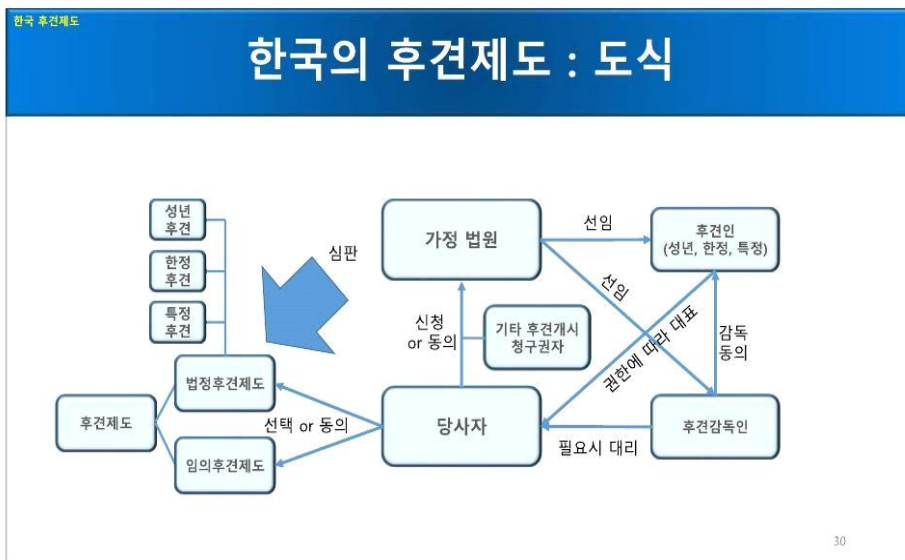
• 치매공공후견사업

- 시행 : 2018년 9월

28

한국의 후견제도				
분류	법정후견			임의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관련조항	민법 제9조	민법 제12조	민법 제14조의 2	민법 제959조의 14
개시사유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광범위한 기능제약)	원칙적 행위능력자 (민법상 사무처리능력 부족)	행위능력자 (기능보다 필요 사무 유무로 판단)	행위능력자 (현기능 OK, 나중 대비)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29



30

치매 공공후견사업

-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17.9)
 - 단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 공공후견 대상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저소득 60세 이상 치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 기타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 후견인의 역할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범위 결정됨)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 거소관련 사무지원
 - 공법상의 신청행위 지원
 -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사무지원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 (월 최대 40만원)
 -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31

치매 공공후견사업

- 신청
 -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
- 후견대상자 선정
 -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노인의 독거여부, 소득수준, 후견 사유에 대한 고려 후 후견대상자와 후견인 후보자 선정
- 후견심판청구 준비
 -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후견대상자와 후견인 후보자로부터 받고,
 - 중앙치매센터 소속 변호사는 청구서를 작성함
- 후견활동 시작
 - 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로부터 관리감독 받음
- 후견심판 결정
 - (가정)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 선임 결정 내림
- 후견심판 청구
 - 중앙치매센터 소속 변호사는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함.

32

치매 공공후견사업

· 내용

- 후견대상자 발굴 및 선정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 공공후견인 선발 및 추천 : 광역지원단
- 후견심판청구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 중앙지원단
- 후견감독 : 치매안심센터

· 사업흐름도



33

치매 공공후견 현황*

* 출처: 2020 치매공공후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원지역	후견심판청구 진행상황			
	청구 접수	청구 인용	법원심리 중	청구취하
계	289	249	21	19
서울	69	65	3	1
부산	46	37	5	4
인천	8	7	1	
대구	2	2		
광주	4	4		
대전	13	12		1
울산	6	4		2
세종	5	5		
강원	13	12		1
경기	72	57	9	
충북	12	11	1	
충남	16	14		2
전북	4	4		
전남	4	4		
경북	8	6	2	
경남	9	9		
제주	1	1		

34

치매 (공공)후견사업 현황 및 한계

- 후견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후견인 업무수행에 한계 (예, 은행, 관공서, 등)
 - 가족중심 전통으로 후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노인 당사자가 더 심함
-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개 중 60여 곳 만 참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용 수준이 낮음
 - 센터당 평균청구 건수가 1.5건 수준임.
 - 8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치매노인 중 249명 대상 공공후견 진행 중 –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 사적영역 후견 이용자 수?
- 지속가능한 후견감독체계 부재
 - 보건복지부와 가정법원간 협조체계 : 후견 전담기관?
 - 분절적 후견감독체계 – 특히 공공후견의 경우 영역별로 후견감독 주체가 상이함
 - 지자체별 관심도와 인프라 차이
- 의사결정지원을 통한 당사자 자기의사결정권 반영의 한계
 - 후견제도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대리제도라서 당사자 자기의사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음.

35

치매 후견제도 발전방향

- 후견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 홍보 및 인식개선
 - 국가차원의 후견인식 개선 :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후견은 미래사회 필수적 제도
- 후견보다는 의사결정지원서비스로 제공되어야...
 - UN 권고처럼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후견이 아니라 의사결정지원서비스로 제공될 필요
 - 당사자 관점에서 의사결정지원을 하려면 후견은 치매환자의 삶과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함.
- 통합적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후견서비스 체계가 형성되어야 함.
 - 사법부(가정법원)에 의한 법률서비스가 아닌 사법적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로 정착 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와 가정법원간 협조체계 형성 - 후견전담기관 신설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전국적 통합 전달체계 기반위에 지자체 내 지역내 유관기관 간 유기적 체계 형성

36

감사합니다

16

3. 기사

- (1) 2022 동아일보 뉴센테니얼 포럼(동아일보, 2022.10.26.)
- (2)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저출산 문제 관련 포럼
(베리타스 알파, 2022.11.24.)
- (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저출산 문제 관련 포럼
(동아일보, 2022.11.25)
- (4)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돌봄 서비스 관련 포럼
(베리타스 알파, 2023.03.31.)
- (5)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강원일보, 2022.08.17.)
- (6)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중앙선데이, 2022.09.17.)
- (7)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한국경제, 2022.09.20.)
- (8) 이철희 인구 클러스터장(연합뉴스, 2022.09.22.)
- (9)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경향신문, 2022.09.26.)
- (10)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동아일보, 2023.01.03.)
- (11)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동아일보, 2023.03.21.)
- (12)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한국경제, 2023.03.29.)
- (13)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동아일보, 2023.04.06.)
- (14)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KBS NEWS, 2023.04.28.)

(15)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한국경제, 2023.05.15.)

(16) 이철희 인구클러스터장(이데일리, 2023.05.16.)

(17) 권정현 KDI 연구위원(청년의사, 2022.12.09.)

23. 5. 26. 오후 5:37

팝업 - 실시간뉴스 프린트

동아일보

2022-10-26 03:00:00 편집

프린트

닫기

“韓 생산인구 비중 30년간 24%p 감소… 경제성장 순풍 끝났다”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 기조강연 나선 데이비드 웨일 교수 “인구 늘어 ‘한강의 기적’ 토대됐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성장에 역풍”
“인구감소, 경제 잠재력 떨어뜨려 금융-공적연금 구조개혁 검토를”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 데이비드 웨일 미국 브라운대 교수가 '저출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화상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한국 초고속 고령화 대응하려면…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 0.81명으로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5년에는 0.7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인구 감소 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구경제학과 금융산업,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충격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향후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에 ‘역풍(Headwind)’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5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데이비드 웨일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출산율의 급감으로 인해 현재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

<https://www.donga.com/news/View?gid=116154958&date=20221026>

1/3

23. 5. 26. 오후 5:37

팝업 - 실시간뉴스 프린트

은 67%에서 43%로 감소한다"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성장률을 높이는) '즐거운 휴가(pleasant vacation)'가 끝났다"고 진단했다.

○ '한강의 기적' 밑었던 '순풍' 끝나웨이일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1975년 46%에서 2000년까지 64%로 증가했다. 이처럼 생산가능인구가 늘면서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는 '인구 배당 효과'를 그는 '순풍(Tailwind)'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런 경제적 순풍으로 한국은 정부와 가계 예산에 여유가 생겨 교육과 투자를 늘릴 수 있었다"며 "'한강의 기적'이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폭발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인구 배당'이라는 수혜는 끝나가기 시작했다고 웨일 교수는 진단했다. 향후 경제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웨일 교수는 "인구 증가 속도가 줄어들면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고령자 증가는 저축의 증가로 이어진다"며 "이는 저금리를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으로 발생한 고금리는 향후 고령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웨일 교수는 당장 출산율을 높인다고 사회적 후생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을 경제 활동인구로 키워내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학적으로 출산율 증가의 혜택이 나타나려면 20, 30년이 걸린다"며 "그래서 정치인들이 출산 장려에 크게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일제히 쏟아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포럼 축사에서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초고속 경제성장을 했던 우리나라가 저출산도 초고속인 것 같다"며 "그동안 너무 느슨하게 정치적 표 계산을 하면서 방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 3년만 지나면 성장률이나 노동시장 부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저출산 문제가 정치권에서 싫어하는 주제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축사에서 "현재 한국의 급선무는 팬데믹도 지정학적 위기도 아닌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대비일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경제의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부터 청년 지원, 노후 보장 등 예상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3. 5. 26. 오후 5:37

팝업 - 실시간뉴스 프린트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은 0.81명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급격히 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고령인구 비율이 17.5%인 한국은 2025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자 인구가 40%를 넘어선다.

○ “지금 당장 연금개혁 공론화 필요”인구구조 변화로 금융산업과 공적연금 체계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고령자 친화적인 상품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중심인 가계금융자산 구조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개인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진 만큼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산과 소득이 낮고 부채부담이 큰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도 제시됐다. 연금학회장을 지낸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내년 3월 도출할 5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57년에서 2~3년 정도 당겨질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해 국민적 관심을 공론화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연금 정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은 점진적 모수개혁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구구조가 더 급격히 변화한다면 스웨덴과 같은 연금 구조의 개혁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VERITAS^α

HOME > 대학 > 대학뉴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개최

✎ 박원석 기자 | ⓒ 승인 2022.11.24 15:37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가?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 주제

[베리타스알파=박원석 기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24일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가?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를 주제로 '인구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한다. 축사 후에는 4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4인의 토론을 통해 가파른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는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이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를,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주거비용과 저출산'을,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자녀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을,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가치관과 저출산'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진미정 서울대 아동학과 교수,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식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의 인구문제 연구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는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의 수량적으로 추정하고,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주거비용, 보육의 기회비용, 가치관 변화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가?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를 주제로 '인구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한다. /사진=서울대 제공



박원석 기자 pws@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 5. 28. 오전 9:45

팝업 - 실시간뉴스 프린트

동아일보

2022-11-25 03:00:00 편집

프린트

닫기

“집값-전세가 상승이 출산율 낮출 수 있어”

서울대 주최 ‘인구클러스터 포럼’ “임대료 지원 등이 출산 장려에 도움”

집값과 전세 가격 상승이 출산율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2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한 ‘인구클러스터 포럼’에서 ‘주거비용과 저출산’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장은 “주택가격은 여러 경제적 요인 중에서도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며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또는 전·월세 가격 상승은 주거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 소유자의 출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무주택자의 출산 확률을 감소시켰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집값이나 전세가격이 오르면 무주택자와 전세 임차인의 출산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대료 지원을 통한 전세 부담 경감이 특히 첫아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어머니를 취학 자녀의 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야 출산율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혼 증가 등 배우자가 있는 여성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전망이 밝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변화와 돌봄 서비스의 미래' 주제 포럼 4월 3일

✎ 이정원 기자 | ㉠ 승인 2023.03.31 16:31

[베리타스알파=이정원 기자] 서울대는 본교 국가미래전략원이 '인구변화와 돌봄 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인구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환영사와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의 인사말로 시작한다. 개회식 후에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코어 연구자들이 지난 한 해동안 수행해 온 연구결과를 담은 3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관련 분야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진다.

이 포럼에서 발표될 연구들은 인구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 가구 구조/여성의 노동공급/건강상태의 변화와 같은 인구의 질적인 변화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포럼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인구의 양적/질적 변화가 미래 사회의 돌봄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현행 시스템이 직면할 도전을 실증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기초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 발표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소속의 연구자들이 맡아서 진행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지혜 연구원은 '미래 사회 인구/가구 구조/노동 공급 변화와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를,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사회 인구/건강 변화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를,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래 사회 인구/가족 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신경인지장애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윤환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경제일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출산율 향상에 효과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입력: 2022-08-17 16:11:37 수정: 2022-08-17 18:05:41 (07면)

한국경제학회 발간 경제학연구에 논문 게재
"현금지원정책이 출산율 저하 추이 완화 기대"



◇사진=강원일보DB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결혼한 여성(이하 유배우)의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최근 발간한 경제학연구 제70집에 실린 연구 논문을 통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효과를 기반으로 정부의 현금지원정책이 출산율 저하 추이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사례로부터의 증가'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논문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강원도내 출산율 지표가 타 시도와 유사한 추세로 감소했지만 2018년부터 2020년 기간에는 강원도 합계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유배우 출산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유배우 출산율을 실제로 높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 등은 "2019년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 유배우 출산율이 대조군 광역시도에 비해 평균 14~20% 높아졌다"면서 "자녀를 낳는 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도는 2019년 1월부터 육아기본수당을 지급, 지난 6월까지 모두 6만9,004명에게 2,242억원을 지급했다. 2019년부터 2020년에는 월 30만원, 지난해 월 40만원, 올해 월 5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10세까지 확대 지급 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입력: 2022-08-17 16:11:37 수정: 2022-08-17 18:05:41 (07면)

[결혼 빙하시대] 작년 결혼 19만건 사상 최저, 집도 없는데 출산·양육 부담…“혼자 즐기며 살겠다”

중앙선데이 수정 2022-09-17 02:32:43

SPECIAL REPORT

“내 몸 하나 책임지고 살기도 버거운데 결혼은 어불성설, 언감생심입니다. (최지수·27·직장인)”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굳이 결혼해서 누군가와 돈·시간·공간을 공유할 마음이 없어요. (이정민·23·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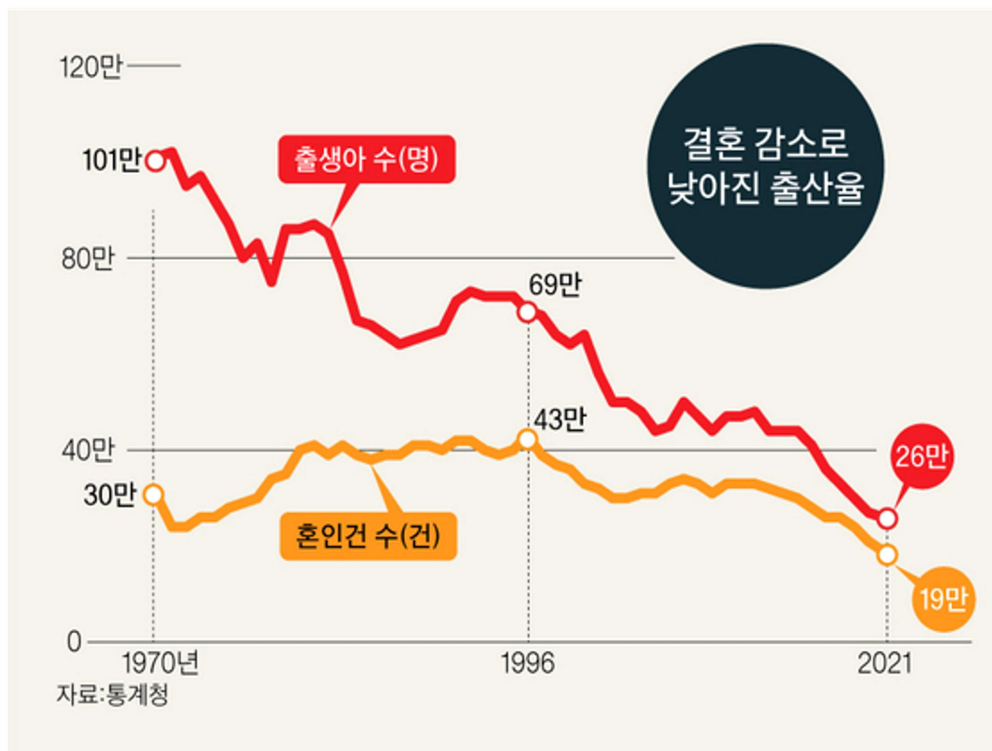
결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해 결혼은 19만건으로 1970년 집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혼연령은 지난해 남성 33.4세, 여성 31.1세로 10년 새 2년 정도 늦어졌다. 결혼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늦게 해서 아이를 적게 갖는다. 그 결과가 지난해 0.81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다. 43만쌍이 결혼한 1996년 신생아는 69만명이었다. 지난해에는 19만명에 그쳤다. 결혼과 출산은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현재 30대 미혼인구는 42.5%로 2000년(13.4%)의 3배다. 결혼하지 않으려는 MZ세대 분위기가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관련기사

- ▶ 결혼 빙하시대, 10년 새 42% 줄었다 …“아이가 살아갈 세상 너무 험난” 혼인·출산 포기
- ▶ “한국 일·가정 양립 힘든 노동 문화부터 바뀌야 출산율 올라갈 것”
- ▶ 비혼모에 대한 냉대·차별도 출산 막는 장벽…가족 재정의하고 사회적 지원 체계 세워야
- ▶ 작년 신생아 12명 중 1명 난임 시술 지원 받아 태어났다
- ▶ 산부인과 사라지고, 명절 대목에도 장난감 거리 썰렁

▶ 출산율 높은 프랑스, 결혼·비혼 가리지 않고 보육 지원

결혼으로 인한 부담과 손해 크다고 느껴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솔직한 속내를 듣기 위해 중앙SUNDAY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밝힌 20여 명의 청년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의 주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굳이’였다. 결혼을 안 하려는 이유는 달라도 모든 이들의 말에서 이 단어가 빠지지 않았다. 특별히 결혼을 해야 할 이유를 못 느낄뿐 더러, 결혼해서 좋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결혼으로 인한 안정감, 행복감보단 당장 잃을 게 더 많다고 말했다. 장점은 추상적인 반면 결혼함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과 손해가 크다는 것이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부담’과 ‘잃을 것’은 무엇일까.

공통적으로 손꼽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지난 5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감소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내 집 마련 등 결혼비용 증가’가 1위에 올랐다. ‘출산·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2위,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3위로 뒤를 이었다. 미혼 응답자 역시 결혼을 안 한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예체능계 대학생 장하진(26·여)씨는 “앞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데 결혼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전했다.

맨 손으로 시작해 같이 재산을 불러갈 생각은 할 수 없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는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과는 달리 이전 세대에는 대학 졸업 후 정규직 일자리를 쉽게 가질 수 있었고, 몇 년간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많았다”며 “현재 세대는 평균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소득 및 자산을 불러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적이고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입사 시기도 점차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결혼을 고려하기는 힘들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취업준비생 김영주(26·여)씨는 “예전에는 단칸방에서 시작해 아파트로 옮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며 “남녀 모두 경제력을 갖추고 결혼하는 게 당연해졌다”고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결혼 감소 이유 단위:%

※ 복수응답(최대 3개까지, 1~3순위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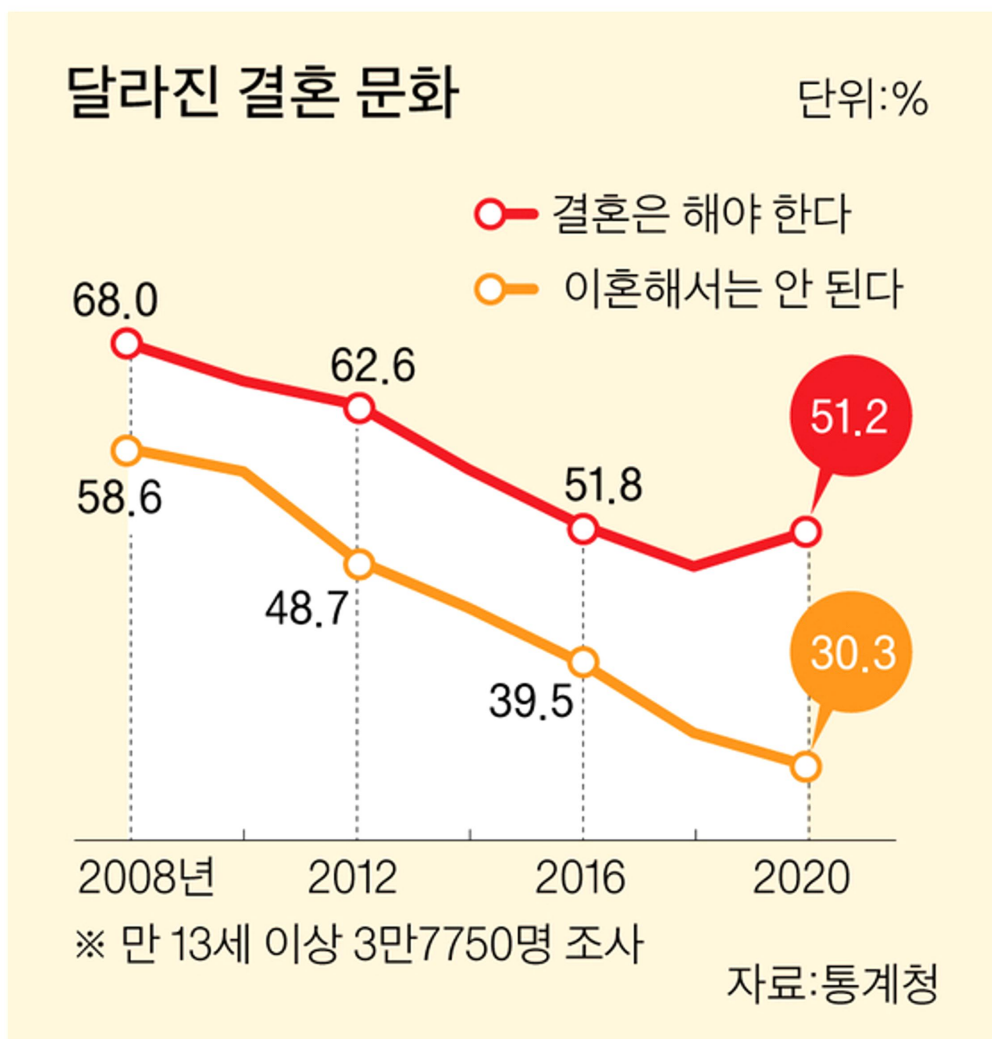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직장인 이동선(30)씨는 특히 남성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아직은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 같아 부담이 큰데 근로소득으로 집을 사거나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는 어렵다”며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혼을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당장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고 혼자 여유롭게 살면서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만으로는 지금의 결혼 감소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만 13세 이상 3만775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에서 ‘결혼은 해야 한다’에 동의한 응답자는 51.2%로 2010년(64.7%) 대비 13.5% 포인트 감소했다. 2명 중 1명은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셈이다. 그럴만하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밀레니얼 세대를 ‘미미미 제네레이션(Me Me Me

Generation)’으로 정의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세대라는 의미다. ‘자유’가 중요한 MZ세대가 자유가 제한되는 결혼을 기피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실제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은 20대가 꿈은 두 번째 결혼 기피 사유다. 직장인 김성진(29)씨는 “요즘 골프, 낚시, 바이크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기는데 결혼하면 이런 취미 생활 때문에 갈등을 빚고 이혼하는 사례가 많더라”며 “다양한 취미나 환경을 경험해보니 혼자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결혼하지 말아야” 여성이 남성의 두 배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흥미로운 점은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성별 시각차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미혼 남성은 40.8%인 반면 미혼 여성은 22.4%에 그쳤다. 반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미혼 여성은 10.5%로 미혼 남성(5%)의 두배를 넘었다. 어떤 점이 미혼 여성으로 하여금 더욱 더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었을까. 결혼 감소 이유 2위에 오른 ‘출산·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비단 심리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역할 가중 등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된 현실’이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 김영주(26)씨가 결혼 생각이 없는 주된 이유도 ‘경력 단절’과 ‘가사·양육 부담’이다. 가까이서 지켜본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영향을 미쳤다. 김씨의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했다. 그 부담으로 직장도 그만뒀다. 재취업에 도전했지만 직장 규모도, 임금도 모두 줄었다. 명절은 물론 평소에도 ‘며느리’ ‘엄마’라는 이름으로 많은 희생과 책임을 감당했다. 김씨는 “과거에 비해 남녀가 많이 평등해졌다고 해도 아직 채용 시장에선 남성을 더 선호하고, 결혼 후 가사·양육에 있어서도 여성의 부담이 더 큰 게 사실”이라며 “눈앞에 보이는 희생은 뚜렷한데 어른들이 말하는 결혼 후 안정감, 양육의 기쁨은 너무 모호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정민(23·여)씨 역시 “일 욕심이 큰데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고, 육아를 하다보면 일할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위험 요소를 만들고 싶지 않아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결혼하지 않아도...”

단위:% 동의 반대

“함께 살 수 있다”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내가 결혼을 안 한 이유

단위:%, 복수응답(최대 3개)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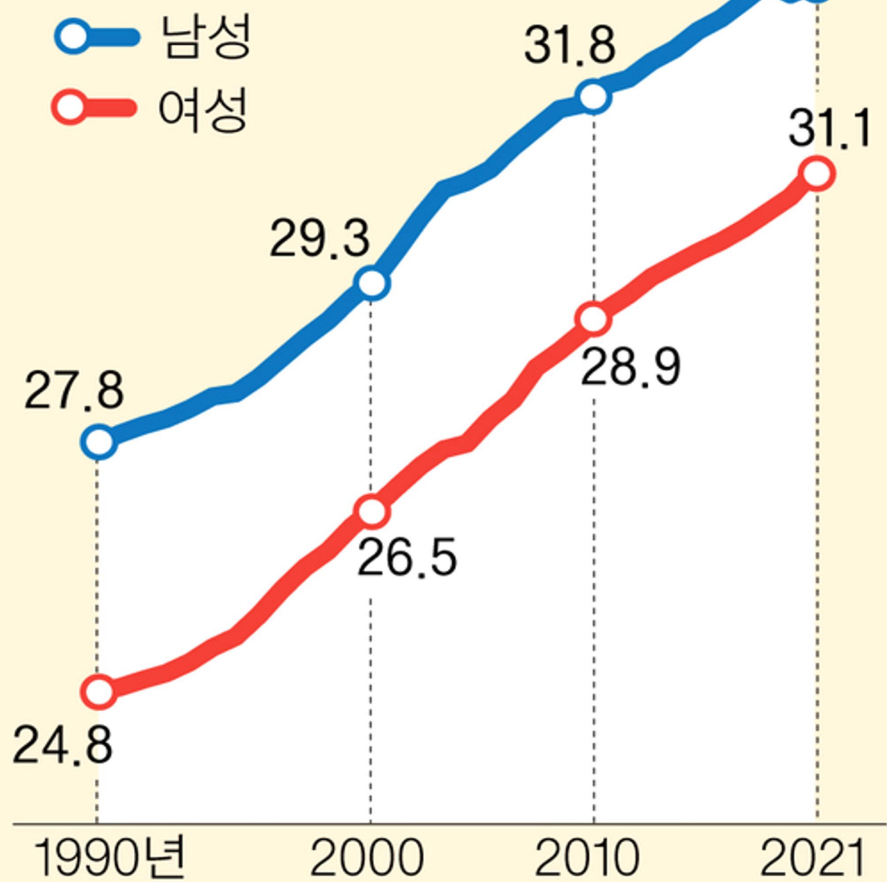
‘가정과 가정의 만남’으로 통용되는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도 MZ세대가 결혼을 꺼리는 원인이다. 대학생 장하진(26)씨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 개인과 개인 간의 만남이 아니다”라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가족으로 묶이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장씨는 연애를 지향하지만, 다른 가족과 서류상으로 묶이는 것에 거부감이 들어 비혼을 결심했다. 그에게 결혼은 만남의 결실이 아닌 선택일 뿐이다. 직장인 최지수(27·여)씨 역시 “단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보는 어른들과 가족이 돼야하고 챙겨야 할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족들과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양가 가치관·종교 등이 달라 갈등을 빚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일례로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로 살 것임을 합의해도, 그들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연적이다. 장씨 역시 “출산으로 인해 몸 상하는 것도 싫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던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답습할까 두려워 아이를 낳기 싫어 남자친구와 합의한다고 해도 손자를 원하는 가족이 한마디씩 었을 때마다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아이 출산 연령 갈수록 높아져

갈수록 높아지는 초혼연령

단위:세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결혼을 안하는 만큼 신생아도 줄어 든다. 한 여성이 일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최저치를 갱신하며 지난해 0.81명을 기록했다. 결혼한

부부들도 아이를 안 갖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2016년 2.23명까지 늘었던 유배우 출산율은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교수는 “결혼이 계속 줄어드는 장기 추세에,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 최근 경향이 겹치면서 지난 5년 동안 출생아 수가 급락한 것”이라며 “비혼과 출산 기피의 영향을 분석해야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텐데 현재 공식 통계조차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지난 2월에야 유배우 출산율을 포함한 세부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MZ세대가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유도할 방법은 없을까. 무엇보다 이들의 가족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조사에서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2010년 40.5%에서 2020년 59.7%로 10년 새 급격히 증가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문항에 동의한 응답자도 2010년 20.6%에서 2020년 30.7%로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7%가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다양한 관계를 가족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차우규 한국인구교육학회장(교원대 초등교육과 교수)은 “양육 책임을 전적으로 엄마에게 전가하는 가부장적 유교 문화가 남아있는 한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며 “우리 사회가 전적으로 양육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혜인 기자 yun.hyein@joongang.co.kr

23. 5. 26. 오후 5:50

자동화 기술 사무직 고령 근로자 퇴직위험 36배 높인다 | 한경닷컴

한국경제

자동화 기술, 사무직 고령 근로자 퇴직 위험 3.6배 높인다

입력 2022-09-20 12:00 수정 2022-09-20 12:00

한은 보고서...IT 장비, 고령 근로자 비자발적 퇴직위험 높여



자동화 기술 도입은 사무직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3.6배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근로자 대비 퇴직위험이 1.3배 높았다.

정종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20일 '기술도입이 고령자 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BOK 경제연구)에서 이같이

<https://www.hankyung.com/print/202209202362Y>

1/1

23. 5. 26. 오후 5:50

자동화 기술 사무직 고령 근로자 퇴직위험 36배 높다 | 한경닷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초 기준 3천33개 기업에 종사 중인 25~69세 근로자 96만2천404명을 대상으로 기업별 기술도입 후 3년간(2015~2017년) 근로자의 고용상황을 추적조사한 결과, 기술도입은 사무직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화 기술이 도입된 회사에서 사무직 고령 근로자는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지 않은 회사의 사무직 고령 근로자와 비교해 퇴직 위험이 3.62배 높았다.

이는 젊은 근로자와 비교해서도 1.3배 높은 수치다.

정 과장은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기술도입으로 모든 근로자의 퇴직위험이 커졌는데, 젊은 근로자보다도 고령 근로자에 대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칙성을 갖춘 반복 노동이 기술로 대체된 것일 수 있고, 근로자들이 기술이 도입되면서 변경된 업무수행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도 퇴직위험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IT 관련 장비 구매는 고령 근로자들의 비자발적 퇴직위험을 1.48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젊은 근로자의 퇴직 위험에는 영향이 없었다.

비자발적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고된 경우를 말하는데, IT 관련 장비 구매가 고령 근로자의 퇴직 위험만 높였다는 의미다.

정 과장은 "비자발적 퇴직은 사용자 측에서 해당 근로자를 더 고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노동수요 측면에서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높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직종과 퇴직 종류를 나누지 않고 봤을 때, 기술 도입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hankyung.com/print/202209202362Y>

2/2

23. 5. 26. 오후 5:50

자동화 기술 사무직 고령 근로자 퇴직위험 36배 높인다 | 한경닷컴

그러나 이 역시 5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위험 하락 폭이 젊은 근로자에 미치지 못했다.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은 0.88배로, 젊은 근로자는 0.77배로 낮아졌다.

IT 관련 장비 구매 역시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0.51배로, 젊은 근로자의 퇴직위험은 0.45배로 낮췄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에 대비해 노동력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술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근로자 연령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기술 도입 시 고령자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인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초저출산, 실질적 극복방안 모색해야"...27일 국회 토론회 개최

송고시간 | 2022-09-22 16:24



메타버스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황보승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현 기자 =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1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초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덕흠 박대수 황보승희 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초저출산 대책 마련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획기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 국회의정연수원 차인순 겸임교수가 참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인구정책기획단장이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황보 의원은 "초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교육, 근로, 의료, 연금 등 우리 일상 전반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라며 "실질적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22 16:24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경향신문

초저출산 극복 위한 국회토론회 열린다

박효준 기자 anytoc@kyunghyang.com
2022.09.26 23:18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이달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박덕흠·박대수·황보승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남기만 하면 알아서 크나요?'가 주제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홍콩(0.75명)을 제외하고 전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2070년 대한민국 인구는 5300만명에서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민의힘

"남기만 하면
알아서 크나요?"

2022.
9. 2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좌장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
발표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함정규 다둥이아빠, 100인의 아빠 멘토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공동주최]
 국민의힘 박덕흠 박대수 황보승희 국회의원

[문의] 02-6788-7486 (황보승희의원실)

아빠 육아유직
 태아보험
 경력단절
 교육비
 육아유직
 양육비
 복직 불안
 산후 조리원
 육아돌봄 공공서비스
 기사병행
 육아기 재택근무

토론회 발제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함정규 씨(100인의 아빠단 멘토, 다둥이아빠),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가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은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맡는다.

황보 의원은 “초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교육, 근로, 의료, 연금 등 우리 일상 전반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라며 “실질적인 극복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그동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매년 출산율이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대수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여러 지원책이 있지만,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만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

동아일보

2023-01-03 03:00:00 편집

프린트 닫기

[동아시론/이철희]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의 ‘표피’를 건드릴 뿐이다

현금 지원 확대, 단기적 효과 거둘 수 있지만 불안한 소득과 고용 등이 저출산 근본 요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푸는 청사진 마련해야

해가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출산 추이를 받아들이고 고령사회에 적응·대응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향성이 읽힌다. 또한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에서 벗어나 효과성이 높은 방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저출산 대응에 있어서는 특히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둔 듯하다. 새해부터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모급여’ 제도는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준다.

이제까지 드러난 현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 우선 저출산 완화와 고령화 대응을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고 무게 중심의 이동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나이 든 인구의 절대적인 증가보다는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인해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주로 반영한다. 출생아 수를 늘리지 못해도 그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인구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적응 혹은 대응해야 할 미래가 현재의 노력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저출산 완화와 인구변화 대응에는 적절한 균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글러스터장·경제학부 교수

저출산 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각각의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하고, 단기 및 장기 대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전략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현상에는 다양한 층위의 요인이 존재한다. 가족의 경제학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처럼 자녀에 대한 수요는 선호(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사), 소득(경제적 여건), 가격(양육 비용)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양육 비용은 금전적 비용, 자녀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소득, 여가나 성취 등을 반영하는 기회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을 정책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요인부터 그렇지 않은 근본적·구조적 요인까지의 순으로 나열한다면 아마도 금전적 비용, 기회비용, 경제적 여건, 자녀에 대한 선호 순서일 것이다.

부모급여는 최근 시행된 아동수당,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의 금전적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표피’를 건드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 지원 확대는 출산을 저하 추이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 효과는 출산 의사가 있고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진 계층에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월 18만6000원에 불과한 만큼, 출산 후에도 일을 그만둘 수 없고 육아휴직을 쓰기도 어려운 맞벌이 부부가 체감할 비용경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필자는 이처럼 ‘표피’를 건드리는 단기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산의 ‘경계’에 있는 유배우(有配偶) 인구를 대상으로 한 출산 지원 정책은 비교적 빠르게 그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출생아 수 감소세를 다소나마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근본적 대책만을 고집하는 정책 기조는

23. 5. 28. 오전 9:48

팝업 - 실시간뉴스 프린트

지금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표피를 건드리는 정책만으로는 결코 저출산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일자리에서의 성공을 양보하는 데서 발생하는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은 금전적 비용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불안정한 고용 여건, 불안한 소득 전망,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은 결혼이나 출산처럼 전 생애를 내다보아야 하는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일 것이다. 무엇보다 저출산 현상의 심층에는 자녀가 행복하지 않아서 더 이상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있다. 태어날 세대가 교육과 노동시장의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자칫 영구히 2등, 3등 시민으로 추락할지 모르는 위험하고 비정한 사회에서, 아이가 걱정되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상은 놀랍지 않다.

필자는 이번 정부가 저출산 현상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구조적인 문제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업이다. 그 성과가 먼 미래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도 인기 있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요구한다.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경제학부 교수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동아일보

2023-03-21 03:00:00 편집

프린트 | 닫기

노인 고용시장 양극화… 저학력 대책도 필요

[저출산 고령화 적응 사회로] 고학력 숙련-저학력 단순 인력 분화 韓 소득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저소득층에 복지형 일자리 공급해야”

고학력 고령층이 늘어갈수록 노인 고용시장에서도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노인 구직 인력 안에서 고학력 숙련 인력과 상대적으로 저학력에 단기·단순노무직을 선호하는 인력이 분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인 이철희 경제학부 교수의 장래 학력별 노인 인구 추산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노인은 전체 노인의 68.7%지만 2040년에는 23.0%, 2051년 9.2%, 2070년 2.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등학교까지 마친 노인 비율은 21.7%에서 43.6%까지 늘었다가 점차 39.7%, 27.9%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에도 전체 노인 2명 중 1명이 고졸 이하 학력으로 그 수가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계속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고령층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더 고령층인 70대 이상은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30~50%에 불과한 50, 60대보다 높았다. 6·25전쟁 전후로 태어난 이들은 학력 수준이 낮고 노후 대비가 되지 않은 탓에 노동 부담이 작고 생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벌이가 되는 단기·단순노무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형 일자리’ 수요는 꾸준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21년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곤율 조사 결과 국내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조사 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13.1%)보다도 3배 이상으로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연금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이 빈곤율을 당장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노인 중 절반을 조금 넘는 인원만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평균 수급액은 58만6112원(지난해 12월 기준)에 불과하다. 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고학력·숙련 인력’과 ‘저학력·미숙련·저소득 인력’이 나뉘는 등 다변화될 것”이라며 “전자를 위한 일자리만큼 후자를 위한 복지형 일자리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23. 5. 26. 오후 5:51

주거지원 더 강화...생산인구 늘릴 대책 내놔야 | 한경닷컴

한국경제

"주거지원 더 강화...생산인구 늘릴 대책 내놔야"

입력 2023-03-29 17:57 수정 2023-03-30 02:28 지면 A4

전문가 '저출산대책' 평가

"남녀 동반 육아휴직 의무화와
획기적인 저금리 대출 지원 등
보다 강력해야 인구 반등효과"

윤석열 정부의 첫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전날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 해결이 급한 시기인데 정책에 절박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책이 아이가 있는 가구에 집중돼 있다"며 "당장 결혼할 사람들과 청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 평가를 강화해 효과가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이번 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되는 것"이라며 "그간 인구 정책의 효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진 문제점을 짚은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교육, 불평등, 일자리의 질 개선

급격히 낮아진 합계출산율

(단위:명)



23. 5. 26. 오후 5:51

주거지원 더 강화...생산인구 늘릴 대책 내놔야 | 한경닷컴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데 단기적 처방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위기 수준에 걸맞은 더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호용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해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에 이른 마지막 세대인 에코붐세대(1990년대 초·중반생)가 30대에 접어든 지금이 인구 반등의 마지막 기회"라며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 동반 육아휴직 의무화' 등 강력한 신호를 주는 정책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절한 규모의 새로운 세대가 생산가능인구로 지속 편입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결혼과 출산의 경계선에 있는 세대에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기존 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 자체는 가정 내 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도 한계가 있다"며 "미래세대에 떠넘겨질 복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금을 만드는 식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육아휴직, 단축근로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대기업 수준이 아니면 현실화되기 어려워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공교육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공 영역의 대안을 더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권을 초월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한 인구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교수는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대통령에서부터 톱다운 식으로 지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처 간 조율이 안 되는 구조"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효과적인 인구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23. 5. 28. 오전 9:48

팝업 - 실시간뉴스 프린트

동아일보

2023-04-06 03:00:00 편집

프린트

닫기

[동아시론/이철희]노동시장, ‘파워시니어’ 시대에 대비해야

청년 인력 감소에 파워시니어 필요성 커져 이미 미국, 유럽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세 능력에 따른 처우, 고령 친화적 환경 필요하다

고령인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가장 대표적인 인구변화 대응책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정책적인 논의에서 노동시장의 여러 부문이나 다양한 인력 유형 사이의 이질성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인구변화가 가져올 노동시장 충격은 전반적인 노동 부족이 아닌 특정한 일자리의 특정한 인력 부족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고령인력 정책을 수립하려면 어떠한 노동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며 어떤 유형의 고령자들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경제학부 교수

장래의 노동시장 변화를 내다보건대 특히 주목할 만한 유형의 고령자는 학력과 직업의 전문성이 높고 건강한 소위 ‘파워시니어’이다. 우선 인구의 질적인 변화와 함께 이들이 전체 고령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의 추계에 따르면 현재 약 10%인 65세 이상 인구의 대졸자 비율은 2040년 33%, 2050년 약 50%로 높아질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빠르게 개선되어 온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냈고, 자기 관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세대는 과거나 현재의 고령자들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머지않아 급격하게 감소할 고학력 청년 인력의 빈자리를 채워 줄 수 있는 파워시니어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의 연령별·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 35세 미만의 대졸 경제활동인구는 2025년경부터 빠르게 감소하여 2030년대 말에는 현재 수준의 약 70%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일자리 질이 높은 일부 업종 및 직종은 고학력 청년 취업자의 급감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만약 이 부문에서 늘어나는 파워시니어가 젊은 인력의 공백을 메워 준다면 노동 수급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파워시니어의 노동시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필자는 두 가지 방향의 노동시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age-blind) 고용·임금제도 도입이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기회와 처우가 결정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파워시니어의 생산적인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 예컨대 생산성과 무관하게 나이만을 기준으로 퇴직과 임금이 결정되는 현재의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가 잘되어 있고 노동시장 참여에 요구되는 임금(유보임금) 수준이 높은 파워시니어가 더 강한 은퇴 유인에 직면할 것이다. 나이가 아닌 개인을 보고 기회와 처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정보를 체계화하여 기업의 인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고령 친화적인(age-friendly) 노동 조건과 작업 환경 마련이다. 최근 발표된 일련의 국내외 연구들은 고령자가 선호하는 일자리 특성으로 높은 자율성과 유연성, 낮은 스트레스와 신체적·인지적 난이도, 재택근무 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자들이 이러한 성격의 일을 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임금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도 보였다.

<https://www.donga.com/news/View?gid=118705097&date=20230406>

1/2

23. 5. 28. 오전 9:48

팝업 - 실시간뉴스 프린트

물론 고령자들 다수가 생계를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은 선진국의 경우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고령자들의 경제적 여건과 은퇴 준비 상태가 나아지고 여가와 일의 만족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 고령 친화적인 방향의 일자리 질 개선 없이 우수한 고령인력을 노동시장에 유인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고령 친화적인 작업환경은 고령인력의 생산성을 높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외국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는 여성과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장기적으로 줄곧 감소해 오던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90년경을 기점으로 반등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파워시니어의 고용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고령자 노동시장이 나이와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모하였고, 약 4분의 3의 직종에서 고령친화성지표(age-friendliness index)가 개선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미래의 고령자는 현재의 고령자와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어야 장차 베이비붐 이후 세대, 더 나아가 MZ세대가 나이 든 후에도 생산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경제학부 교수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23. 5. 26. 오후 5:55

KBS NEWS

KBS NEWS

현금 지원 출산을 제고 한계...“인구 유출 줄여야”

입력 2023-04-28 07:38:49 수정 2023-04-28 09:07:09

뉴스광장(청주)



[앵커]

충청북도가 파격적인 출산육아수당과 임신부 우대책을 통해 출산을 올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환 지사는 후보 시절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지방 소멸 위기 등 인구 불균형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김영환/지사/지난 1월 :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한발 더 나아가 임신부를 국가 유공자에 준해 대우하겠다는 정책 기초마저 세웠습니다.

about:blank

1/2

23. 5. 26. 오후 5:55

KBS NEWS

전국 최초로 임신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충북의 합계출산율을 0.87명에서 1.4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조덕진/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4년 동안 저희가 달성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거든요. 이런 좀 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목표를..."]

그러나 현금 지원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9년 육아기본수당 1,440만 원을 도입한 강원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출산 의향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결혼한 여성의 출산을 제고에는 현금 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전반적인 출산율 제고나 인구 증가에는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낮은 출산율이 아닌 인구 유출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철희/교수/서울대 경제학과 : "특히 인구 중에서도 주로 젊은 인구가 그런 방식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인구 불균형이 확대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특히, 현금 지원은 자치단체 간 출혈 경쟁을 부를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이만영 기자의 기사 모음

저작권©KBS뉴스(http://news.kb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3. 5. 26. 오후 5:49

노동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려면 여성·청장년 경제활동 늘려야 | 한경닷컴

한국경제

"노동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려면 여성·청장년 경제활동 늘려야"

입력 2023-05-15 18:10 수정 2023-05-16 01:27 지면 A4

이철희 서울대 교수

고학력자 증가까지 감안하면

2070년 노동 투입 70% 유지 가능

청장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고학력자 증가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까지 감안하면 2070년에도 노동 투입량을 2020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15일 한국경제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행정학회 등 5대 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46.5%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가 반토막 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 같은 단편적인 분석으로는 노동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구가 줄지만 노동인력의 질이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지 못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가 고학력자 증가와 영양상태 개선 등을 감안해 생산성을 조정한 2070년 노동

23. 5. 26. 오후 5:49

노동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려면 여성·청장년 경제활동 늘려야 | 한경닷컴

투입량은 2020년 대비 58.0%로, 같은 기간 줄어든 생산연령인구 비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여성과 장년(50~64세), 청년(20~34세)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0년 일본 수준으로 높아지고, 여성과 장년인구의 생산성이 개선되는 등 모든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시나리오에서는 노동 투입량이 2070년 71.2%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됐다. 기존 대비 13.2%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다만 직업 간 불균형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유연해지고 이동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일부 산업에서 심각한 노동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소매업(자동차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 농림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이 2040년까지 취업인력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5개 업종의 감소 규모는 약 114만 개로 추산됐다.

이날 '인구 고령화와 장기 경제성장률'을 주제로 발표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고령화로 인해 2050년 경제성장률은 0.5%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성 개선이 부진할 경우 같은 해 성장률은 0%를 기록해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게 정 실장의 전망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23. 5. 26. 오후 5:53

이데일리-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취소

인쇄하기

"이대로 가다간 '0%' 성장"...암울한 미래 해법은?

경제학회 등 사회과학 분야 5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하는 정책 필요

여성·장년층 노동 늘리는 게 해결책

"이민청 설립 등 외국인 인력도 받자"

등록 2023-05-16 오전 8:27:10

수정 2023-05-16 오전 9:44:37

최정희 기자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취업자 수가 47만명 가까이 늘면서 10개월 만에 증가폭이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20대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한 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령화로 205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에 불과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를 타개할 해법으로 여성과 장년층의 노동 투입 강화가 제시됐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고 한국경제학

23. 5. 26. 오후 5:53

이데일리-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회·경영학회·사회학회·정치학회·행정학회 등 5대 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2010년대 경제성장률 하락은 주로 생산성 증가 둔화에서 기인하는데 2010년대 흐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0년에는 0%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정점을 찍고 2020년대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생산성을 개선하고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교육·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기술력을 갖춘 신생·혁신기업을 지원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출산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어려운 여성이나 고령층,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경 배재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민 정책의 제도적 일관성과 정책적 연계성을 위해 이민정책을 주도할 독립적 부처가 필요하다”며 이민청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가 줄어들지만 고학력자가 증가하고 영양 상태가 개선되면서 노동 인력의 질이 변화하고 있다”며 “여성고 장년인구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노동투입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46.5% 수준으로 쪼그라드는데 고학력자 증가와 영양상태 개선 등을 감안하면 이 비율은 58.0%까지 높아진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또 여성고 50~64세의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등 노동투입이 증가할 경우 이 비율을 71.2%까지 경충 된다. 즉, 여성고 장년층 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청년의사

HOME > 뉴스 > 기관·단체

'저수가'로 "악당된 의사"..."비급여 문제, 원가 이하 급여 때문"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 Ⓞ 승인 2022.12.09 12:12

KDI 권정현 연구위원, 현실적인 보장률 지표 마련 필요 강조
"전체 의료비 관리의 첫 단계 '비급여 관리'...고민 필요해"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수 있는 비급여 항목 급여화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보험연구원이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KIRI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비급여가 실손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국민 의료비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바라보는 것은 보장성 문제를 너무 단순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보장률 지표는 명확한 근거 없이 70~80%라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고 하다보니 의료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비급여가 급여화 되기 보다 보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항목들이 우선적으로 급여화되는 폐해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물론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료가 국민 의료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긴 하지만 의료적 필요성을 따졌을 때 시급하지 않은 항목인데도 우선적으로 급여된 측면도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현실적인 보장률 지표를 마련해 비용 효과성이 확인된 비급여를 급여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체 의료비 관리 관점에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가 ‘비급여 관리’라고도 했다.

권 연구위원은 “건보 보장성이 어떻게 확대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덜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 보장률 지표를 마련하고 비급여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비용 효과성이 확인된 비급여를 급여로 포함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비급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데 의료적 적정성이 낮은 비급여의 시장 공급 여부를 파악하고 이런 비급여 의료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수가’를 꼽았다. 특히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는 등 소비자 행동을 변화하기보다 의료 서비스 공급자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연구위원은 “(비급여에 대해) 의사들을 모두 악당으로 보는 공급자에 대한 시각도 있다”며 “결국 충분한 수익 창출이 어려운 문제점이 실제 있다고 생각된다. 급여 서비스만 제공해서는 원가를 충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전체 의료비 관점에서 비급여를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가입자 부담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한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공급자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4. 사진

(1) “인구변화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비교적인 시각”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2022
Korean Economic History Society
Summer International Conference
Population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Comparative Perspectives

Date Friday, August 26th, 2022
Time 8:30 am - 13:00pm
Venue Zoom(Online)
Host Korean Economic History Society
Co-Host Chung-Ang University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Pre-BK21 Education and Research Tea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Organizer Sun Go (Chung-Ang University)
Registration <https://sites.google.com/view/kehs2022>

*All dates and times are in Korea Standard Time (KST +09:00)

08:30am - 09:30am Special Lecture

○ **The Population Dimension in East Asian Development**
 Speaker **David N. Weil** (James and Merrill Tisch Professor of Economics, Brown University, USA)
 Moderator **Chulhee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of the Korean Economic History Society, Korea)
 Discussants **Myung Soo Cha** (Yeungnam University, Korea) and **Duol Kim** (Myongji University, Korea)

09:40am - 11:10am SESSION 1

Chair **Kyungro Par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Protestantism, Human Capital, and Female Empowerment: Evidence from South Korea's Past Century**
 Presenter **Sangyoon Park** (Hong Kong University, Hong Kong)
 Discussant **Yeonha Jung**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Women's Wages and Empowerment: Japan, 1600-1910**
 Presenter **Yuzuru Kumon** (Toulouse School of Economics, France)
 Discussant **Jisoo Hw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The Mission to Educate Women: a Protestant Legacy in China**
 Presenter **Se Yan** (Peking University, China)
 Discussant **Hyunjoo Yang** (Sogang University, Korea)

11:20am - 12:50pm SESSION 2

Chair **Hyuk Chung** (Chung-Ang University,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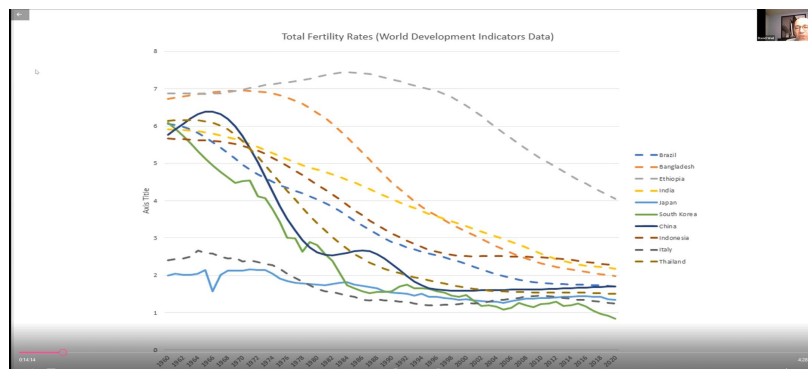
○ **The Layered Colonialism and Korea's Terms of Trad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Presenter **Chuanlong Xiang** (Cambridge University, UK)
 Discussant **Sang-Yun Ryu** (Ulsan University, Korea)

○ **Industrial Distric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Meiji Japan**
 Presenter **Asuka Imaizumi** (Saitama University, Japan)
 Discussant **Sohyun Park**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Korea)

○ **Military Investment and the Rise of Industrial Clusters: Evidence from China's Self-Strengthening Movement**
 Presenter **Cong Liu** (Jinan University, China)
 Discussant **Changkeun Lee** (KDI School, Korea)

The Population Dimension in East Asian Development

David N. Weil
Brown University
Prepared for the Korean Economic History Society
August 2022



Efficacy of Policies to Raise Fertility

- Best policy: provision of high quality child care
- Other policies: cash payments, longer (and better paid) parental leaves, incentives to employers to provide more flexible working hours, and subsidies to assisted reproduction.
- Cost: Average estimated efficacy from various studies, applied to the US case.
- Raising the TFR from the 2019 level of 1.7 up to replacement would cost \$5,300 per year per child under 18. (total of \$387 billion, or about half of the defense budget in that year.)

Stone, Lyman, "Pro-Natal Policies Work, But They Come With a Hefty Price Tag," Blog Post,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March 5, 2020.

Population Multipliers 1820-2010 (Maddison data)

- France 2.0
- United Kingdom 3.0
- Spain 3.5
- China 3.6
- Japan 4.0
- S. Korea 5.3
- India 6.3
- Netherlands 7.0
- Iran 11.9
- Thailand 14.6
- Egypt 21.7
- Ethiopia 31.4

Very low values for France and UK reflect the fact that they started the demographic transition before 1820.

Overall, east Asian countries have among the lowest multipliers in the world, reflecting both lack of unused land as of 1820 and rapid fertility transitions.

Main Findings

Short-run results (in 1930)

- Protestant churches are associated with higher literacy and employment for women, but no such evidence for men
- No relationship between Catholic churches and literacy

Potential mechanism: Missionary activities, including missionary schools and Korean bible women, directed at educating women

Long-run results (in 2010)

-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historical Protestant churches and women's education nor economic and political participation
-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istorical Protestant churches and gender-equal norms among females
- Lack of persistence may be due to education expansion and compulsory education policy in early-mid 1900

Zoom Meeting

Participants:

- Sangyoon Park
- Se Yan
- Sohyun Park
- 김도현(Dohyun...)
- Youngju Lim
- 2020-23602 JaeY...
- 왕한
- Bruna Yoshimi H...
- 이지혜

Zoom Meeting

Participants:

- Sangyoon Park
- Se Yan
- Sohyun Park
- 김도현(Dohyun...)
- Youngju Lim
- 2020-23602 JaeY...
- 왕한
- Bruna Yoshimi H...
- 이지혜

(2) 2022 동아일보 뉴센테니얼 포럼 공동조직 및 참여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

- 인구 감소 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 -

동아일보와 채널A가 '인구 감소 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을 개최합니다. 데이비드 웨일(David N. Weil)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금융산업 및 인구경제학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개요

- 일시: 2022년 10월 25일(화) 오전 8시 55분 ~ 11시 35분
- 장소: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 주제: 인구 감소 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
- 홈페이지: www.dongainsight.com
- 규모: 100여 명
- 주최: 동아일보 · 채널A
- 후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 주요 초청연사

축사 1	축사 2	기조강연	주제발표 1	주제발표 2	주제발표 3	주제발표 4
						
윤한홍 국회정무위원회 간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데이비드 웨일 (David N. Weil) 브라운대 교수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및 주제	강연자
08:40~08:55('15)	내외빈 환담회 및 참가자 등록	
08:55~09:00('05)	개회사	•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
09:00~09:05('05)	축사 1	• 윤한홍 국회정무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국회의원)
09:05~09:10('05)	축사 2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09:10~09:45('35)	[기조강연] 동아시아 인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데이비드 웨일(David N. Weil) 브라운대 교수
09:45~10:10('25)	[주제발표 1]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파급 효과와 대응	•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10:10~10:35('25)	[주제발표 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인력 수급	•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10:35~10:45('10)	Break Time	
10:45~11:10('25)	[주제발표 3]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
11:10~11:35('25)	[주제발표 4]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개혁 방향	•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인구 감소 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

「저출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데이비드 웨일
(David N. Weil)
브라운대
교수

The Economic Impact of Low Fert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David N. Weil
Brown University
Prepared for Dong-A New Centennial Forum
25 October 2022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어서 기쁩니다.

인구 감소 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대응」



이 철 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022년 동아뉴센테니얼 포럼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대응

2022년 10월 25일
서울대 경제학부 · 국가미래전략원
이 철 희

동아일보 CHANNEL 후광: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감소 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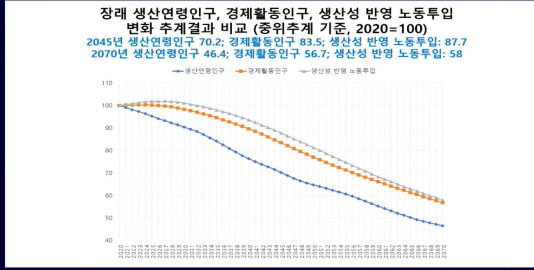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대응」



이 철 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래 생산연령인구, 경제활동인구, 생산성 반영 노동투입 변화 추세결과 비교 (중위추계 기준, 2020=100)

2045년 생산연령인구 70.2; 경제활동인구 63.5; 생산성 반영 노동투입: 87.7
2070년 생산연령인구 46.4; 경제활동인구 56.7; 생산성 반영 노동투입: 58



동아일보 CHANNEL 후광: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감소 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김 홍 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2 동아 뉴센테니얼포럼

-인구 감소 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2022. 10. 25

김 홍 수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국가미래전략원

동아일보 CHANNEL 후광: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감소 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 목적: 고령이나 노년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 시작년도: 2008년도 시행
- 대상자: 한국인 대상 (신청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자)
- 운영주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 종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물품), 시설급여 (장기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 주요 제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그러나 독립회계 관리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율 (2022년 기준 12.27%)

국가 및 지자체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대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지원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의료수급자 등 저소득자 40~60% 감면)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김홍수 (2022) 인구변화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1

동아일보 CHANNEL 후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감소 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2022 동아 뉴센테니얼 포럼

인구구조 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2022.10.25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도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동아일보 CHANNEL 후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 감소 시대, 금융산업 및 노동시장의 변화
2022 동아뉴센테니얼포럼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개혁 방향」

2022.10.25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개혁 방향

Presenter
성주호
(영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FNU, FNU)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동아일보 CHANNEL 후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3)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저출산 문제 관련 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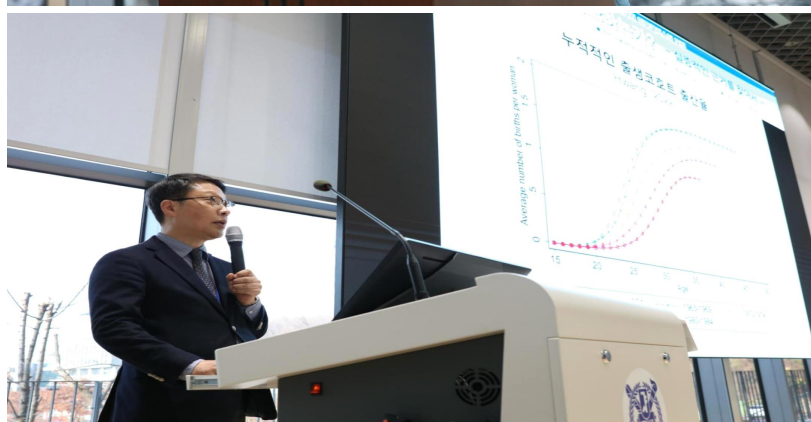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가?

— 실증적인 근거를 찾아서 —

-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14:00~17:00
-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 107호(대형강의실)
- 주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3:30 - 14:00	등록	
14:00 - 14:15	개회식	
사회	황지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환영사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경제학부 교수)	
축사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4:15 - 15:45	주제발표	
발표1	출생아 수 감소의 인구학적 분해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경제학부 교수)
발표2	주거비용과 저출산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발표3	자녀 보육의 기회비용과 저출산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발표4	가치관과 저출산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
15:45 - 16:00	휴식	
16:00 - 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널	진미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식 (전 국회의원,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4)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돌봄 서비스 관련 포럼 개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

인구변화와 돌봄 서비스의 미래

▲ **일시** 2023년 4월 3일(월) 14:00-16:45
 ▲ **장소**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 대형강의실(107호)
 ▲ **주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3:30-14:00	등 록	
14:00-14:15	개 회 식	
환영사 인사말	김병연(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경제학부 교수) 윤영호(서울대 기획부총장)	
14:15-15:30	주 제 발 표	
발표1	미래사회 인구·가족구조· 노동공급 변화와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	이철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지혜(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발표2	미래사회 인구·건강 변화와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김홍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권정현(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발표3	미래사회 인구·가족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 신경인지장애(치매) 의사결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강상경(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5:30-15:45	휴 식	
15:45-16:4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좌 장	권순만(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패 널	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환(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제철웅(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석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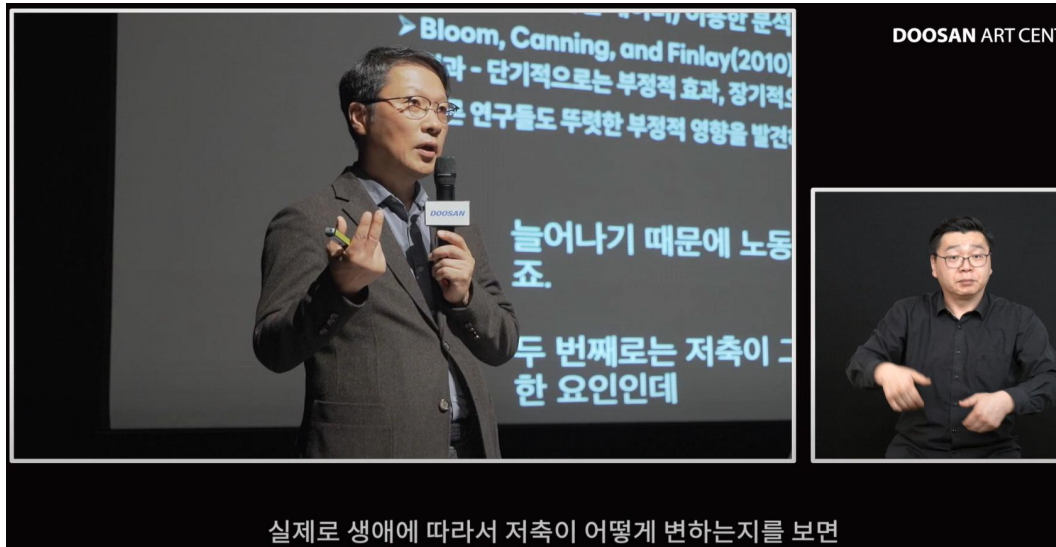






5. 동영상

(1) 클러스터장 두산인문강좌 동영상(DOOSAN ART CENTER, 2023.04.17.)



<https://www.youtube.com/watch?v=aw5nbJu6u0g&t=11s>

(2) 클러스터장 인터뷰 동영상(삼프로 TV_경제의 신과 함께, 2023.05.24.)



<https://www.youtube.com/watch?v=aw5nbJu6u0g&t=11s>